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239-01

최종보고서

---

#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 연구

---

2020. 07.

**KMA**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자체조직진단 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07.

## ■ 연구 기관

한국능률협회

## ■ 연구 수행 기간

2020. 03. 02 ~ 2020. 07. 10

## ■ 연구진

팀 장	주 현 도
수석컨설턴트	조 수 민
책임컨설턴트	김 태 욱
선임컨설턴트	이 준 성
선임컨설턴트	하 선 호

(사)한국능률협회  
대표 최 권 석

# 요 약 문

## I.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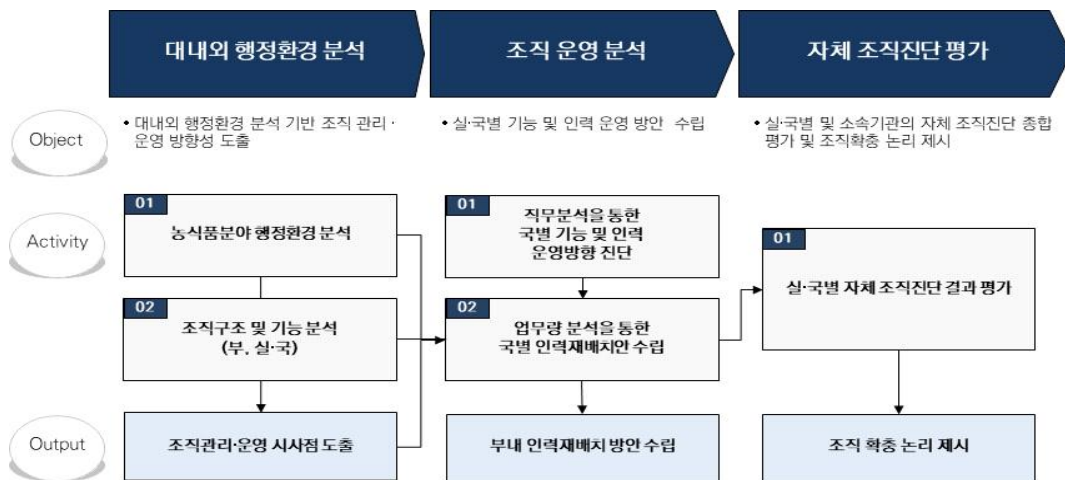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뿐 아니라 식품산업의 신수요 및 안전관리 필요성 강화, 축산업 환경 개선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관련 산업에서의 동태성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산업적 환경 변화 속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본격화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인 인력의 효과적 관리가 필요함
- 본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자체 조직진단 연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션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임무 수행과 비전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연구 추진 절차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을 주요한 목적으로 필요한 과업 간 구조화를 통해 3단계의 추진 체계를 설정하고, 세부 과업영역 간 연계성(Alignment) 확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였음

<그림 1>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 3. 연구 방법

- 인력재배치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업무량 산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실제 투입되고 있는 업무량과 단기적으로 예측되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업무량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합리적으로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투입된 업무량 뿐 아니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동태성, 업무 난이도에 따른 질적 관점의 업무량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양적 및 질적 관점의 고려할 수 있는 업무량 산정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인터뷰, 직무분류체계 기반 직무조사, 기능 동태성을 고려한 업무량 분석, 부서간 업무강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표 1〉 연구 방법 및 세부 활동

주요 활동	목적	세부 활동		일시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단위 부서별 핵심 이슈 및 업무강도 기준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인터뷰</li> </ul>		2020. 4. 20-29
직무분류체계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량 분석 기준을 위한 단위 업무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M 체계 기반 1차 작성</li> <li>• 사업부문 43 개 과 단위 부서 회람 검토</li> </ul>		2020. 4. 29~5.8
업무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관점 부서별 투입 업무량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조사 설명회</li> <li>• 직무조사표 배포 작성</li> </ul>		2020. 5. 1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변동성 추가 조사</li> </ul>		2020. 6. 11~17
직무밀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적 관점 부서별 업무강도 편차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회 구성</li> <li>• 업무강도 영향요인 기준 평가 시행</li> </ul>	2020. 5. 2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 기준 결정 및 부서 간 편차 분석</li> </ul>	2020. 6. 11~17

## II. 대내외 행정환경 분석

### 1. 농식품 행정환경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과 관련된 농업, 식품산업, 축산업, 종자산업 각 산업의 주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성 및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어촌 복지,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환경 변화의 활용 등의 변화 요인이 존재하며,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 고려가 필요함
- 식품 산업의 경우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식품산업 변화 및 신수요 증대 촉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FTA 타결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이슈를 고려한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이슈가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축산업 부문은 축산업의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한 축산업 환경개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내실있는 성장 유도, 가축 질병의 예방 중심 전략과 실행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
- 종자 산업은 검정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 식물 검역 및 유통관리 강화,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차원 지원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농·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 주요 국가별 정책동향 및 조직개요

구분	주요정책동향	조직개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소득안정과 다원적 가치 중시</li> <li>• 유통 관리뿐 아니라 농촌 주민 복지,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의 식품 소비까지의 영역을 관장</li> <li>• 생산자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DA(미국 농무부)</li> <li>•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국립산림지 감독, 농촌 지역의 발전 연구,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및 기술 연구의 중점적 역할을 수행</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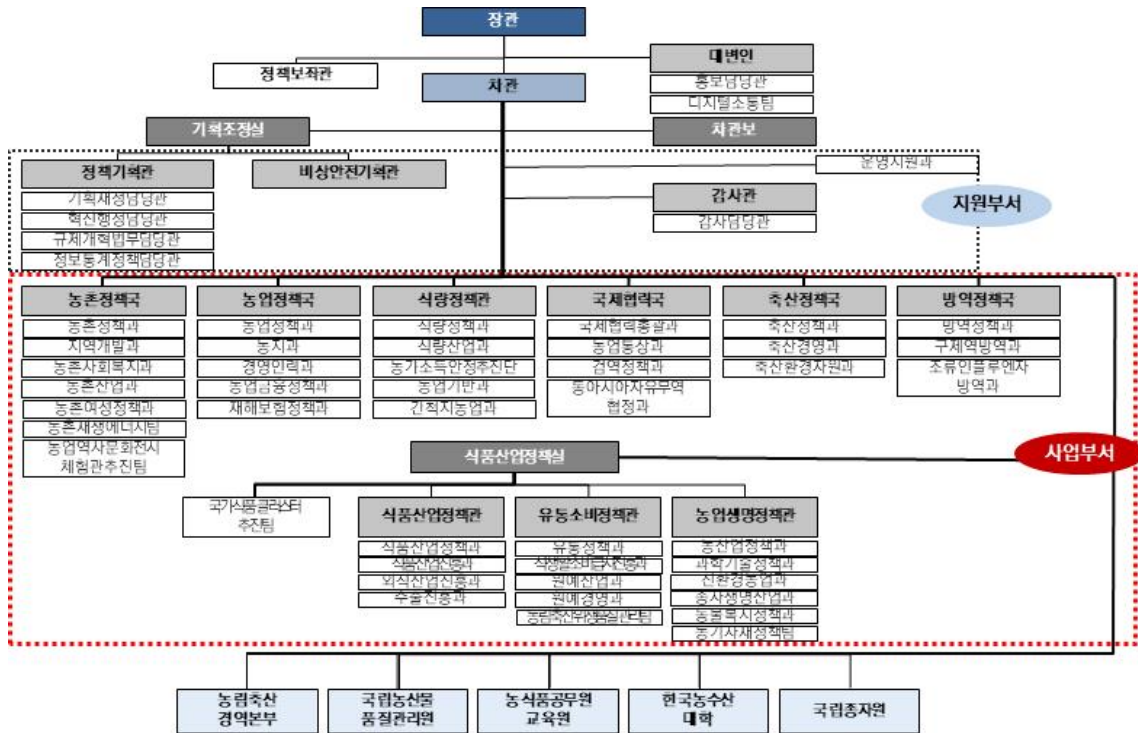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에 대한 지원을 영역적 (Territorial)관점에서 제시, 통합적 농촌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 방식으로 운영하며 환경변화에 대응</li> <li>• 농업과 비농업 및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개발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FRA(영국 환경식품농무부)</li> <li>• 환경규제를 농촌관점에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서 창설</li> <li>•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식품 및 농업 산업을 지원하며 농촌 경제 발전 등의 관련 업무를 관장</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을 신성장동력 중심축 중 하나로 설정</li> <li>• 생산 현장 강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구축, 수요 확대를 주요 정책의 목표로 설정</li> <li>•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적 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FF(일본 농림수산성)</li> <li>• 생활을 유지하는 음식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계승하는 것에 사명을 설정</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화 동보(四化同步)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서 농업현대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 문건의 키워드로 설정</li> <li>• 4차 산업혁명의 농업분야 적용을 위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의 성장 전략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A(중국 농업농촌부)</li> <li>• 농업관련 각종 산업과 농촌경제 발전정책, 발전전략, 중장기 발전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농업과 관련된 재정 및 세무, 가격, 금융보험, 수입, 수출 등 정책 제정 참여 및 농업행정 추진</li> </ul>

## 2. 조직 구조·기능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과 복지 증진 기여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조직과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과 복지 증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기본 방향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기본 방향(2019~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분야 정책의 비전 및 중점추진 과제 실행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함
- 특히 조직 미션을 달성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기능 및 인력관리 방안의 선제적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공익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의 5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 실행을 위해 정합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이 필요함
- 현재 부 조직은 2실 5국 8관 51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인 9개 국 단위 상위 조직과 43개 과 단위 하위 조직을 직무분석의 대상으로 함

<그림 2>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구조



- 사업부문을 관장하는 9개 국 단위 조직의 기능 및 인력운영 관점에서는 전략적 중요기능 강화, 기능 신설 필요성, 기능 축소, 전담인력 운영 등의 이슈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능 동태성 이슈를 고려한 적정 인력 산정이 필요함
- 국 단위 부서별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현업에서 체감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동태성은 강화 이슈가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적정 인력 산정이 필요함

<표 3>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문 조직별 기능변화 요인

부서	기능 변화 요인
농촌정책국	-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강화 - 농촌지역 난개발 대응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법제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관련 사업 전담인력 필요</li> <li>- 재정 관련 지자체 연계 강화</li> <li>-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li> <li>-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강화</li> <li>-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대응</li> </ul>
국제협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한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기능 필요</li> <li>- 농업 ODA 추진 효과성 제고 기능</li> <li>- 국제통상환경 대응 및 국제사회 공동 문제 참여 기능 필요</li> <li>- 메가FTA 확대 추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대응</li> <li>- SBS/TBT 서비스 및 지적권 등 규범 협상 기능 강화</li> <li>- FTA 이행 및 시장조사 기능 강화</li> </ul>
식품산업정책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분야 R&amp;D 지원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기능 필요</li> <li>-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원료 발굴 기능 필요</li> <li>- 온라인 유통망 지원 기능</li> <li>-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li> </ul>
농업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업분야 일자리 기능 강화</li> <li>- 차세대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li> <li>-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기능 강화</li> <li>- 농협경제 업무 대응 강화 필요</li> </ul>
축산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유통과 축산환경 업무 인력 및 기능 보강 필요</li> <li>- 양봉농가 등록제 도입 등 대응 기능 필요</li> <li>-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및 가공 기능 강화 필요</li> </ul>
유통소비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공급 확대 및 소비체계 확산 기능 강화</li> <li>- 농산물 가격안정 체계 구축</li> <li>- 유통구조 개선 강화</li> <li>- 농산물 소비기반 지원 기능 강화</li> </ul>
식량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불제 통합·개편됨에 따른 새로운 기능(업무)확대</li> <li>- 국제곡물 조달체계 강화</li> </ul>
방역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기능 강화</li> <li>- 동물진료 체계 개선 및 기능 강화</li> <li>- 수출혁신품목 육성 기능 강화</li> <li>-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기능 강화</li> </ul>
농업생명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실증 지원 기능 강화</li> <li>- 타 분야 융합의 사업발굴 기능 필요</li> <li>- 미래산업 육성 기능 필요</li> </ul>

※ 2020. 4. 20~29 국 단위 부서별 서면인터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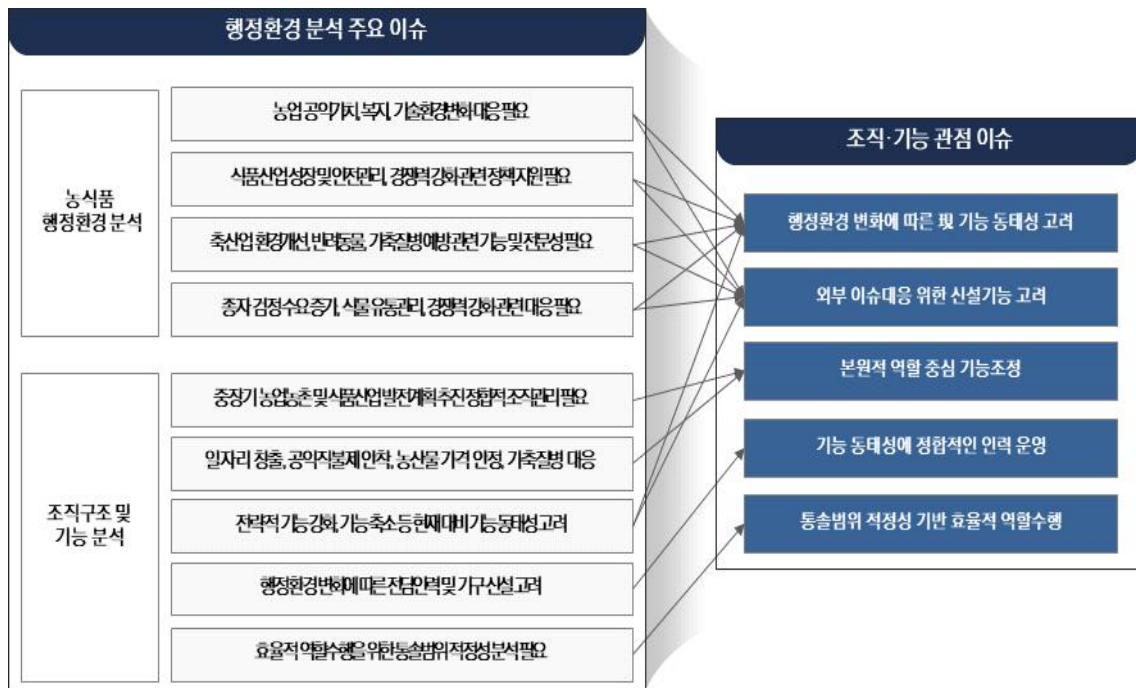
- 직무분석 대상이 되는 사업 부문 9개 국 단위 조직의 인력은 2020년 현원 기준 464명이며, 각 부서별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해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9개 국 단위 조직의 SOC는 51.3명, 43개 과 단위 조직의 SOC는 6.7명~ 13.3명의 편차로 나타났으며, 현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과 단위 조직을 직무분석의 실질적 대상으로 고려함



### 3. 주요 시사점

-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미션 실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본원적 역할 수행을 동시에 충족가능한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환경 분석 결과 조직 및 기능 관점에서는 첫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동태성 고려, 둘째, 관련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신설 기능 고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션 실현을 위한 각 부서의 본원적 역할 집중, 넷째, 기능 동태성에 적합한 인력 운영, 다섯째, 정부 부처로서의 인력운영의 효율성 고려의 주요 이슈가 도출되었음
- 결론적으로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본원적 역할 수행을 동시에 충족 가능한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3〉 행정환경 분석 주요 이슈 및 조직·기능 관점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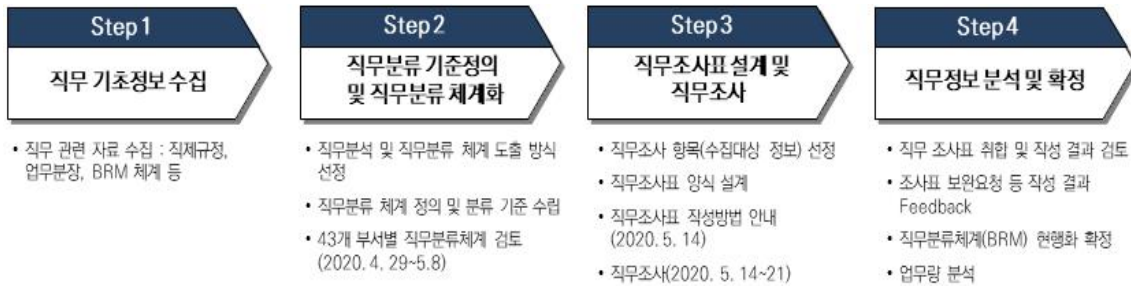


### Ⅲ. 조직운영 분석

#### 1. 직무분석

- 직무분석(Job Analysis)이란 조직·인력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타당한 직무정보를 획득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본 연구에서는 4단계의 절차로 진행하였음
- 직무분석은 경영을 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타당한 직무정보를 획득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며, 조직 진단 및 조직설계, 인력관리 기반을 확립하는데 활용됨
- 직무분류, 직무관리의 기초자료로 직무분류체계 수립을 통해 조직관리 및 인사제도 설계의 근간을 수립할 수 있음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부처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목적별로 분류한 BRM(Business Reference Model) 체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행화하여 직무분류체계를 완성하였음

〈그림 4〉 직무분석 절차



- 직무분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당 평균 연간 투입 업무량은 2,135시간이며, 유지와 강화 업무가 각각 68.1%, 31.3%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본원적 업무인 공통업무 투입 비중은 전체 업무량의 19.4%에 달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인당 평균 연간 투입 업무량은 2,135시간이며, 국 단위 조직별 인당 평균 업무량은 2,076~2,239시간으로 조직별 편차가 크지 않는데 이는 조직별 업무 속성의 편차가 크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본원적 업무 중 유지 업무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능 동태성이 크지 않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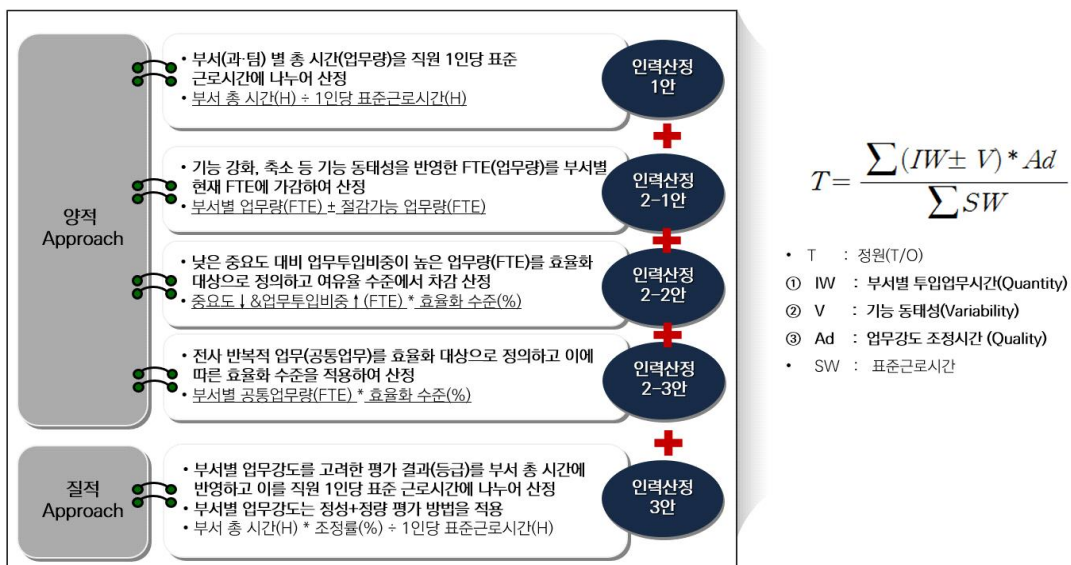
- 다만 강화 31.3%, 축소 0.2%, 폐지 0.1%로 나타나는 기능 동태성에 대해서는 전략적 강화 및 효율화 관점을 반영한 인력관리 방안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통업무 투입 비중은 전체 업무량의 19.4%이며, 국 단위 조직별 공통업무 비중은 11.7%~27.5%로 다소 편차가 존재함
- 공통업무 중 서무,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예산회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원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통업무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 2. 인력재배치 방안

### 1) 업무량 분석 기반 인력재배치 방안 도출

- 2019년 1년 간의 표준근로시간은 1,864시간으로 산출되었음
  - 표준근로시간 산출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의 연간 표준 근로가능 일수는 233일이며, 표준근로시간은 1,864시간으로 산출하였음
- 양적 업무량 관점의 직무분석 결과에 기능 동태성 및 질적 업무량 관점의 업무 강도 분석을 더하여 업무의 양적·질적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업무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 인력을 산정함

〈그림 5〉 업무량 분석 방법론



※ FTE(Full Time Equivalent) : 투입 업무량(인원)

□ 기능 동태성 및 질적 측면의 업무강도 고려로 업무량 산정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업무량 분석을 진행하였음

○ 첫째,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539.5명 (현원 대비 68.5명 부족)으로 나타남

- 표준근로시간 대비 투입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현원 유지 시 표준근로시간 기준 68.5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함

- 국 단위 9개 부서별 필요 인력은 최소 5.2명 ~ 최대 9.4명의 편차가 존재함

〈표 4〉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 기준 인력산정 결과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농촌정책국	125,905	60	67.5	7.5
농업정책국	127,765	60	68.5	8.5
식량정책관	122,261	58	65.6	7.6
국제협력국	99,015	46	53.1	7.1
축산정책국	95,521	44	51.2	7.2
방역정책국	85,095	38	45.7	7.7
식품산업정책관	95,486	46	51.2	5.2
유통소비정책관	125,335	59	67.2	8.2
농업생명정책관	129,332	60	69.4	9.4
<b>총 합계</b>	<b>1,005,715</b>	<b>471</b>	<b>539.5</b>	<b>68.5</b>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2) 현원 : 2020년 5월(직무조사 시점) 기준 각 부서별 실제 업무 투입 현원  
 3) 표준근로시간 : 1,864(H)

- 둘째, 기능 동태성을 고려한 인력산정은 3가지 방안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직무조사에서 응답한 기능조정 의견에 대한 중요도-업무비중 일치성 분석 결과 도출된 방안과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투입 업무 비중이 높은 단위업무의 효율화 방안, 조직 역할 대비 비본원적 업무에 해당하는 공통업무의 효율화 방안 3가지가 해당됨
- 직무조사의 기능조정 응답 대비 중요도-업무비중 일치성 분석 결과, 강화 요인이 축소 및 폐지의 효율화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547.6명(현원 대비 76.6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5〉 기능조정 응답 대비 중요도-업무비중 일치성 분석 인력산정 결과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강화		축소	폐지						
	일치	불일치								
농촌 정책국	21,857	14,281	1,141	212	125,905	127,922	2,017	60	68.6	8.6
농업 정책국	11,755	21,630	0	0	127,765	129,571	1,806	60	69.5	9.5
식량 정책관	19,825	13,382	263	0	122,261	124,382	2,121	58	66.7	8.7
국제 협력국	8,493	1,568	0	0	99,015	99,757	742	46	53.5	7.5
축산 정책국	8,426	6,243	0	0	95,521	96,445	924	44	51.7	7.7
방역 정책국	9,726	10,318	0	0	85,095	86,286	1,191	38	46.3	8.3
식품산업 정책관	9,143	12,459	0	161	95,486	96,539	1,053	46	51.8	5.8
유통소비 정책관	20,024	11,341	268	0	125,335	127,373	2,038	59	68.3	9.3
농업생명 정책관	24,791	28,817	0	0	129,332	132,468	3,136	60	71.1	11.1
<b>총 합계</b>	<b>134,040</b>	<b>120,039</b>	<b>1,672</b>	<b>373</b>	<b>1,005,715</b>	<b>1,020,733</b>	<b>15,018</b>	<b>471</b>	<b>547.6</b>	<b>76.6</b>

- 1) 추정근로시간:19년1월~12월실제근로시간(OT포함,휴가제외)
- 2) 표준근로시간:1,864(H)
- 3) 강화업무 대상업무 중기능 조정일치 비율은 53%, 불일치 비율은 47%임
- 4) 축소 및 폐지 대상업무는 기능조정 일치비율 100%임
- 5) 조정근로시간(인력산정기준시간)=추정근로시간+신설+(강화일치\*8%)+(강화불일치\*4%)+(축소\*-4%)-폐지

-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투입 업무 비중이 높은 단위업무의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2,246시간의 업무량 효율화 효과가 반영되어 538.3명(현원 대비 67.3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6〉 중요도-업무비중 효율화 적용 인력산정 결과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농촌 정책국	8,952	125,905	125,189	-716	60	67.2	7.2
농업 정책국	7,752	127,765	127,145	-620	60	68.2	8.2
식량 정책관	0	122,261	122,261	0	58	65.6	7.6
국제 협력국	5,589	99,015	98,568	-447	46	52.9	6.9
축산 정책국	0	95,521	95,521	0	44	51.2	7.2
방역 정책국	1,771	85,095	84,953	-142	38	45.6	7.6
식품산업 정책관	3,060	95,486	95,241	-245	46	51.1	5.1
유통소비 정책관	0	125,335	125,335	0	59	67.2	8.2
농업생명 정책관	947	129,332	129,256	-76	60	69.3	9.3
<b>총 합계</b>	<b>28,072</b>	<b>1,005,715</b>	<b>1,003,469</b>	<b>-2,246</b>	<b>471</b>	<b>538.3</b>	<b>67.3</b>

-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 2) 표준근로시간 : 1,864(H)
- 3) 연구팀 효율화 시간은 III 영역에 해당하는 단위업무 시간
- 4) 기능 조정시간은 효율화 대상시간 중 -8%(여유율) 적용한 시간
- 5) 조정근로시간(인력산정 기준시간) = 추정근로시간 - 기능조정시간

- 비본원적 업무인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518.7명(현원 대비 47.7명 부족)으로 나타남
- 다만, 이는 부 차원의 공통업무 효율화 추진이 전제되는 목표절감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음

〈표 7〉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인력산정 결과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	공통 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촌정책국	33,189	20%	125,905	6,638	119,267	60	64	4.0
농업정책국	21,864	20%	127,765	4,373	123,392	60	66.2	6.2
식량정책관	29,693	20%	122,261	5,939	116,322	58	62.4	4.4
국제협력국	17,331	20%	99,015	3,466	95,549	46	51.3	5.3
축산정책국	14,290	20%	95,521	2,858	92,663	44	49.7	5.7
방역정책국	23,424	20%	85,095	4,685	80,410	38	43.1	5.1
식품산업 정책관	23,054	20%	95,486	4,611	90,875	46	48.8	2.8
유통소비 정책관	16,774	20%	125,335	3,355	121,980	59	65.4	6.4
농업생명 정책관	15,119	20%	129,332	3,024	126,308	60	67.8	7.8
<b>총 합계</b>	<b>194,738</b>	<b>20%</b>	<b>1,005,715</b>	<b>38,948</b>	<b>966,767</b>	<b>471</b>	<b>518.7</b>	<b>47.7</b>

-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 2) 표준근로시간 : 1,864(H)
- 3)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은 공통업무 시간 중 20% 비중 적용시간
- 4) 조정근로시간(인력산정 기준시간)= 추정근로시간-공통업무 효율화시간

- 셋째, 업무량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부서별 편차가 존재하는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539.9명(현원 대비 68.9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8〉 업무강도 고려 인력산정 결과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농촌정책국	4	102%	중	100%	중	100%	125,905	127,919	60	68.6	8.6
농업정책국	5	100%	약	92%	중	100%	127,765	126,743	60	68.0	8.0
식량정책관	3	104%	약	92%	중	100%	122,261	125,195	58	67.2	9.2
국제협력국	9	92%	중	100%	약	92%	99,015	91,886	46	49.3	3.3
축산정책국	6	98%	약	92%	중	100%	95,521	93,228	44	50.0	6.0
방역정책국	2	106%	강	108%	약	92%	85,095	89,180	38	47.8	9.8
식품산업정책관	8	94%	강	108%	중	100%	95,486	91,667	46	49.2	3.2
유통소비정책관	1	108%	중	100%	중	100%	125,335	133,356	59	71.5	12.5
농업생명정책관	7	96%	강	108%	강	108%	129,332	127,263	60	68.3	8.3
<b>총 합계</b>							<b>1,005,715</b>	<b>1,006,437</b>	<b>471</b>	<b>539.9</b>	<b>68.9</b>

-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 2) 표준근로시간 : 1,864(H)
- 3) 정성 80%, 정량 20%(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비율로 여유율 수준인 -8% ~ +8%을 차등하여 적용함



## 2) 업무량 분석 기반 인력재배치 방안 종합

- 업무량 기반 적정인력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단편적 적용을 지양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량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양적 관점의 과거에 투입된 업무량에 미래에 발생할 기능 동태적 이슈를 추가 반영하고, 본원적 업무 강화를 위한 효율화의 고려 뿐 아니라 질적 관점의 업무강도 요인을 적용하여 종합적 업무량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 특히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단편적 요인에 근거한 인력산정 분석보다, 복합적 업무량 분석에 기반한 인력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적정인력은 526명(현원 대비 54.9명 부족)으로 나타나 부의 본원적 역할 수행과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5명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표 9〉 관점별 종합 적정 인력 산정 결과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촌정책국	127,919	6,638	2,017	716	125,905	122,581	60	65.8	5.8
농업정책국	126,743	4,373	1,806	620	127,765	123,556	60	66.3	6.3
식량정책관	125,195	5,939	2,121	0	122,261	121,378	58	65.1	7.1
국제협력국	91,886	3,466	742	447	99,015	88,714	46	47.6	1.6
축산정책국	93,228	2,858	924	0	95,521	91,294	44	49.0	5.0
방역정책국	89,180	4,685	1,191	142	85,095	85,544	38	45.9	7.9
식품산업정책관	91,667	4,611	1,053	245	95,486	87,864	46	47.1	1.1
유통소비정책관	133,356	3,355	2,038	0	125,335	132,040	59	70.8	11.8
농업생명정책관	127,263	3,024	3,136	76	129,332	127,299	60	68.3	8.3
<b>총 합계</b>	<b>1,006,437</b>	<b>38,948</b>	<b>15,018</b>	<b>2,246</b>	<b>1,005,715</b>	<b>980,260</b>	<b>471</b>	<b>525.9</b>	<b>54.9</b>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2) 표준근로시간 : 1,864(H)

3) 조정근로시간(인력산정 기준시간) = 업무강도 - 공통업무효율화 + 기능조정 - 연구팀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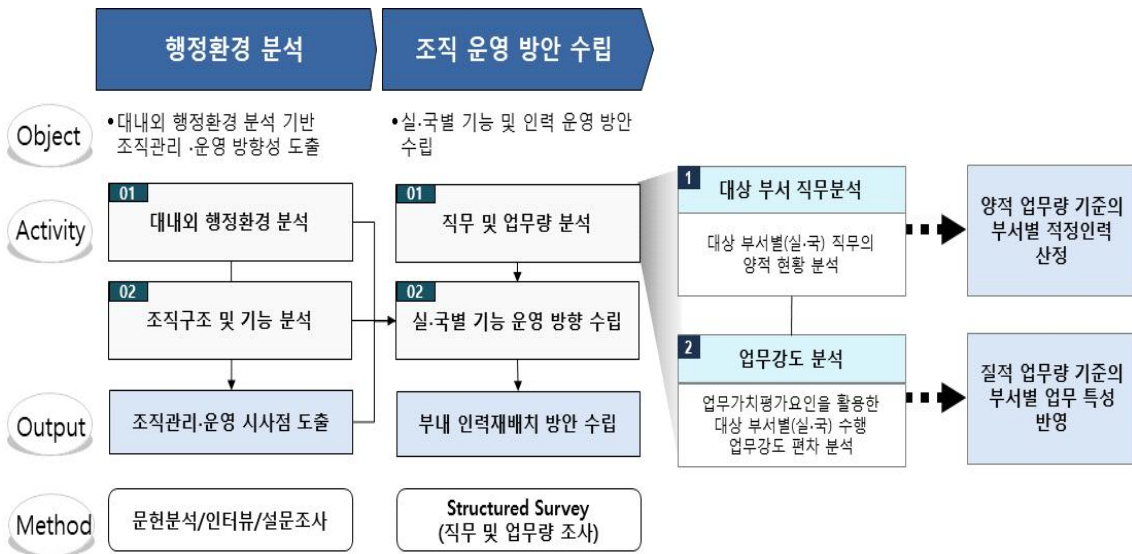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9개 국 단위 조직의 적정인원은 526명으로 부 미션 실현 및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현원 대비 55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함
- 다만 각 국 단위 조직별로 산출된 업무량에 따라 적정인력의 편차가 존재하며, 농촌정책국은 현원 대비 5.8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0.2~1.5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농업정책국은 현원 대비 6.3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0.7~1.6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식량정책관은 현원 대비 7.1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0.8~2.5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국제협력국은 현원 대비 1.6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농업통상과는 0.4명의 효율화가 가능하고 그 외 0.1~1.0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축산정책국은 현원 대비 5.0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1.1~2.3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방역정책국은 현원 대비 7.9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2.3~3.0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식품산업정책관은 현원 대비 1.1명이 필요하며, 식품산업진흥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이 각각 0.1명과 0.2명의 효율화가 가능하고 그 외 0.4~1.1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유통소비정책관은 현원 대비 11.8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1.2~3.3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원 대비 8.3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0.7~1.7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 종합 결과와 같이 각 조직 단위별 양적·질적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 편차가 존재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 단위 또는 계 단위의 세부 조직 간 인력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현재도 표준근로시간 대비 투입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상황으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IV. 자체 조직진단 평가

## 1. 자체 조직진단 결과 제언

- 농식품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기능에 따른 조직/인력 개선(안)에서는 대부분의 단위조직이 업무 기능강화의 사유로 조직 신설과 전담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근거 및 논리적인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력 증원의 논리적 구조는 대내외 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업무량에 기반한 양적 요소와 업무난이도 및 업무밀도를 고려한 질적 요소를 포함한 부서 인력의 과부족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내부화하여 향후 자체 조직진단의 소요정원 산출 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6〉 조직진단 방법론



## 2. 조직진단 당위성 강화 방안

- 농식품부의 자체 조직진단의 방법론 구조화를 통하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소요정원 요구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농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영역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조직구조 상의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하고, 조직의 미션 달성과 조직 기능이 극대화할 수 조직구조 개편안을 선제적으로 도출한 후, 이에 따른 적정 인력의 배치가 논리적인 구조임

〈그림 7〉 조직진단 프로세스

Phase 1. 직무 분석	Phase 2. 기능 분석	Phase 3. 조직개편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특성에 따른 업무량 평가</li> <li>• 업무유형별 적정인력 규모 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기능 상세 조정안 복수 도출</li> <li>• 평가기준을 토대로 최종안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조직재설계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기초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직무조사(전직원)</li> <li>- 직무 대분류별 인력규모 산출</li> </ul> </li> <li>• 직무기술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량 및 직무특성 조사</li> <li>- 업무 우선순위 조사</li> </ul> </li> <li>• 업무량 산정 및 직무특성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별 업무량 및 우선순위 파악</li> <li>- 투입인력 산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조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능 및 신규 수요 검토</li> <li>- 기능효율성 평가</li> <li>- 정책중요도 등에 의거 확대, 유지, 축소</li> <li>- 복수의 기능 재설계안 도출</li> </ul> </li> <li>• 기능조정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목적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li> <li>- 최종 조직 재설계안 도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재설계에 따른 산정인력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재설계에 따른 산정인력 재배치</li> <li>- 현 인력 범위 내 부서간 적정인력 제시</li> <li>- 인력관리 위한 업무별 정원비용 제시</li> </ul> </li> </ul>

- 더불어, 기능조정 부문에서 분석을 위해 현행 기능검토, 정책방향의 연계성,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과 함께 한정된 조직자원(인력)활용을 위한 요구기능에 중요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기능 재조정의 준거를 정책 중요성, 기능 목적성, 기능 적합성 및 적정성의 구조로 분류하여 서술 시 논리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음

### 3. 소요정원 논리 강화 방안

- 소요정원 요구서의 현황, 필요성, 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참고자료의 5개 항목 구조별로 기술된 내용을 내용 적합성과 구조적 타당성을 고려한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1) 현황 분석 부문

- 현황 부문의 경우, 대외적인 환경, 정책 등의 변화와 더불어 업무 발생 배경, 현황 및 특성의 경우 잘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 인력별 업무분장과 향후 업무 운영 및 예측 부분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2) 요구 필요성 부문

- 필요성 부문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규조직 전환, 조직 신설 및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서술하되, 거시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제언함
- 예컨대 국가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제시와 더불어 정책적 대응 및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 관련 기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성 서술 구조를 순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3) 요구내용 부문

- 미시적으로 업무기능 강화 등 업무개선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인력요구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요구내용 명확화를 위해 As-is vs To-be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음

#### (4) 산출근거 부문

- 산출근거 부문은 소요정원 요구의 2가지 유형별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한시 정원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조직 및 기능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의 경우임

- 한시 정원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첫째,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과거부터 예측되는 미래까지 연도별 업무, 예산 등을 시계열적 표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둘째, 정규조직 전환에 대한 유사 사례 또는 전례를 제시하여 논리를 보강하는 2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조직 및 기능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의 경우는 현재 인력의 재배치 한계, 즉 현재 인력의 총 업무량 대비 현재 총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하며,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미시적(업무량) 관점에서 기술하여야 함
- 즉, 인원 증원은 첫째, 현재 업무량과 추가 발생 예측되는 업무량 산출 결과가 제시되고, 둘째, 이로 인한 업무량 기반의 필요인력을 제시하는 정량적인 논리적 타당성의 근거가 필요함

## (5) 기대효과 부문

- 기대효과 부문은 조직 신설, 인력 보강 등의 효과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의 업무 질적 기대효과를 아래와 같이 분리 서술하는 방안과 단기/장기 측면의 단계적 구조로 효과를 서술하는 방안을 고려될 수 있음

# 목 차

I. 연구 개요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	1
3. 연구 추진 절차 .....	2
4. 연구 방법 .....	3
II. 농림축산식품부 행정환경 분석 .....	6
1. 농식품 행정환경 분석 .....	6
2. 조직구조 및 기능분석 .....	66
3. 종합 시사점 .....	103
III. 조직 운영 분석 .....	105
1. 직무분석 .....	105
2. 업무량 분석 기반 적정인력 산정 .....	115
IV. 자체 조직진단 평가 .....	347
1. 자체 조직진단 관련 제언 .....	347
2. 소요정원 요구서 관련 제언 .....	352
3. 조직·기능 재설계 위한 제언 .....	360

# 표 목 차

〈표 1-1〉 연구방법 .....	4
〈표 2-1〉 농가소득 추이 .....	6
〈표 2-2〉 8대 선도 사업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	12
〈표 2-3〉 고령자 가구 추이 .....	17
〈표 2-4〉 주요 소비지출 항목 비중 비교 .....	18
〈표 2-5〉 부류 및 기간별 세계 식품시장 증가 규모 .....	20
〈표 2-6〉 세계 지역·기간별 식품시장 규모와 수출액 변화 .....	20
〈표 2-7〉 세계시장 식품의 건강 관련 Top 15 표시 사항 .....	22
〈표 2-8〉 국가별 식품안전 강화제도 .....	23
〈표 2-9〉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	24
〈표 2-10〉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	24
〈표 2-11〉 핵심 고율관세 농축산물의 관세 감축 .....	26
〈표 2-12〉 축종별 경영 및 생산비 비교 .....	29
〈표 2-13〉 국내외 가축사육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비교 .....	32
〈표 2-14〉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월평균 지출규모 비교 .....	34
〈표 2-15〉 최근 10년 간 국내 가축질병 발생 건수 .....	36
〈표 2-16〉 국내 종자업체의 종자 작목군별 판매액 .....	41
〈표 2-17〉 국내 종자업체 매출규모 .....	42
〈표 2-18〉 18년 대비 19년 검정량 확대 추이 .....	42
〈표 2-19〉 주요 종자 수출국 및 수입국 .....	44
〈표 2-20〉 주요 산업별 행정 환경 시사점 .....	47
〈표 2-21〉 미국 농무부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	52
〈표 2-22〉 일본 농림수산성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	55
〈표 2-23〉 중국 농업농촌부 조직 .....	57
〈표 2-24〉 중국 농업농촌부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	58
〈표 2-25〉 프랑스 식품농수산부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	60
〈표 2-26〉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	63
〈표 2-27〉 주요 국가별 정책 분석 .....	64
〈표 2-28〉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	66
〈표 2-29〉 소관 사무 .....	67
〈표 2-30〉 2019~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기본 방향 .....	68
〈표 2-31〉 2020년 업무추진방향 목표 및 기대효과 종합 .....	69
〈표 2-32〉 농림축산식품부 단위조직별 주요 업무 .....	71
〈표 2-33〉 농촌정책국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	73
〈표 2-34〉 농촌정책국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	74
〈표 2-35〉 농업정책국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	74



<표 2-36> 농업정책국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	75
<표 2-37> 식량정책관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	76
<표 2-38> 식량정책관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	77
<표 2-39> 축산정책국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	77
<표 2-40> 축산정책국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	78
<표 2-41> 식품산업정책관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	78
<표 2-42> 식품산업정책관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	79
<표 2-43> 유통소비정책관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	80
<표 2-44> 유통소비정책관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	81
<표 2-45> 농업생명정책관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	82
<표 2-46> 농업생명정책관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	82
<표 2-47> 대상 조직 기능 및 인력 운영 이슈 .....	83
<표 2-48>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인력구성 .....	87
<표 2-49> 인력구조 현황 .....	89
<표 2-50> 인터뷰 질의사항 .....	91
<표 2-51> 농촌정책국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92
<표 2-52> 농업정책국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93
<표 2-53> 식량정책관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94
<표 2-54> 국제협력국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94
<표 2-55> 축산정책국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97
<표 2-56> 방역정책국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98
<표 2-57> 식품산업정책국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99
<표 2-58> 유통소비정책국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100
<표 2-59> 농업생명정책국 주요 환경 및 기능변화 .....	100
<표 2-60>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101
<표 3-1> 업무구분 및 주요활동 .....	108
<표 3-2> 직무분류체계 예시(농업정책과) .....	110
<표 3-3> 국 단위 조직별 연간 투입 업무량 현황 .....	112
<표 3-4> 국 단위 조직별 기능 동태성 현황 .....	113
<표 3-5> 국 단위 조직별 공통업무 현황 및 유형 .....	114
<표 3-6> 근로 제외 일수 .....	117
<표 3-7> 농촌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	118
<표 3-8> 지역개발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	119
<표 3-9> 농촌사회복지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	121
<표 3-10> 농촌산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	122
<표 3-11> 농촌여성정책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	123
<표 3-12> 농촌재생에너지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	124
<표 3-1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	125
<표 3-14> 농업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	126

<표 3-15> 농지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28
<표 3-16> 경영인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29
<표 3-17> 농업금융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30
<표 3-18> 재해보험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32
<표 3-19> 식량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33
<표 3-20> 식량산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34
<표 3-21>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35
<표 3-22> 농업기반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37
<표 3-23> 간척지농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38
<표 3-24> 국제협력총괄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40
<표 3-25> 농업통상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42
<표 3-26> 검역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43
<표 3-27>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45
<표 3-28> 축산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46
<표 3-29> 축산경영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47
<표 3-30> 축산환경자원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49
<표 3-31> 방역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50
<표 3-32> 구제역방역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52
<표 3-33>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53
<표 3-34> 식품산업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54
<표 3-35> 식품산업진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55
<표 3-36> 외식산업진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57
<표 3-37> 수출진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58
<표 3-38>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60
<표 3-39> 유통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61
<표 3-40>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63
<표 3-41> 원예산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64
<표 3-42> 원예경영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66
<표 3-43>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68
<표 3-44> 농산업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69
<표 3-45> 과학기술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70
<표 3-46> 친환경농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72
<표 3-47> 종자생명산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74
<표 3-48> 동물복지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75
<표 3-49> 농기자재정책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176
<표 3-50> 농촌정책국 업무량 기반 FTE(명)	178
<표 3-51> 농업정책국 업무량 기반 FTE(명)	180
<표 3-52> 식량정책관 업무량 기반 FTE(명)	182
<표 3-53> 국제협력국 업무량 기반 FTE(명)	184

<표 3-54> 축산정책국 업무량 기반 FTE(명) .....	186
<표 3-55> 방역정책국 업무량 기반 FTE(명) .....	187
<표 3-56> 식품산업정책관 업무량 기반 FTE(명) .....	188
<표 3-57> 유통소비정책관 업무량 기반 FTE(명) .....	189
<표 3-58> 농업생명정책관 업무량 기반 FTE(명) .....	191
<표 3-59>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	193
<표 3-60>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	193
<표 3-61>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	194
<표 3-62>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	194
<표 3-63>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	195
<표 3-64>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	195
<표 3-65>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	195
<표 3-66>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	196
<표 3-67>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	196
<표 3-68>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 종합 .....	197
<표 3-69> 농촌정책국 기능조정 영역 분포 .....	199
<표 3-70> 농업정책국 기능 조정 영역 분포 .....	200
<표 3-71> 식량정책관 기능 조정 영역 분포 .....	200
<표 3-72> 국제협력국 기능조정 영역 분포 .....	201
<표 3-73> 축산정책국 기능조정 영역 분포 .....	202
<표 3-74> 방역정책국 기능조정 영역 분포 .....	202
<표 3-75> 식품산업정책관 기능조정 영역 분포 .....	203
<표 3-76> 유통소비정책관 기능조정 영역 분포 .....	203
<표 3-77> 농업생명정책관 기능조정 영역 분포 .....	204
<표 3-78> 농촌정책과 일치성 분석 .....	205
<표 3-79> 지역개발과 일치성 분석 .....	206
<표 3-80> 농촌사회복지과 일치성 분석 .....	207
<표 3-81> 농촌산업과 일치성 분석 .....	207
<표 3-82> 농촌여성정책팀 일치성 분석 .....	208
<표 3-83> 농촌재생에너지팀 일치성 분석 .....	209
<표 3-8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일치성 분석 .....	209
<표 3-85> 농업정책과 일치성 분석 .....	210
<표 3-86> 농지와 일치성 분석 .....	211
<표 3-87> 경영인력과 일치성 분석 .....	212
<표 3-88> 농업금융정책과 일치성 분석 .....	213
<표 3-89> 재해보험정책과 일치성 분석 .....	214
<표 3-90> 식량정책과 일치성 분석 .....	215
<표 3-91> 식량산업과 일치성 분석 .....	216
<표 3-92>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일치성 분석 .....	217

<표 3-93> 농업기반과 일치성 분석 .....	217
<표 3-94> 간적지농업과 일치성 분석 .....	219
<표 3-95> 국제협력총괄과 일치성 분석 .....	220
<표 3-96> 농업통상과 일치성 분석 .....	221
<표 3-97> 검역정책과 일치성 분석 .....	222
<표 3-98>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일치성 분석 .....	223
<표 3-99> 축산정책과 일치성 분석 .....	224
<표 3-100> 축산경영과 일치성 분석 .....	225
<표 3-101> 축산환경자원과 일치성 분석 .....	226
<표 3-102> 방역정책과 일치성 분석 .....	227
<표 3-103> 구제역방역과 일치성 분석 .....	228
<표 3-104>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일치성 분석 .....	229
<표 3-105> 식품산업정책과 일치성 분석 .....	230
<표 3-106> 식품산업진흥과 일치성 분석 .....	231
<표 3-107> 외식산업진흥과 일치성 분석 .....	232
<표 3-108> 수출진흥과 일치성 분석 .....	232
<표 3-109> 국가클러스터추진팀 일치성 분석 .....	234
<표 3-110> 유통정책과 일치성 분석 .....	235
<표 3-111>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일치성 분석 .....	237
<표 3-112> 원예산업과 일치성 분석 .....	238
<표 3-113> 원예경영과 일치성 분석 .....	240
<표 3-114>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일치성 분석 .....	241
<표 3-115> 농산업정책과 일치성 분석 .....	242
<표 3-116> 과학기술정책과 일치성 분석 .....	243
<표 3-117> 친환경농업과 일치성 분석 .....	244
<표 3-118> 종자생명산업과 일치성 분석 .....	245
<표 3-119> 동물복지정책과 일치성 분석 .....	246
<표 3-120> 농기자재정책팀 일치성 분석 .....	247
<표 3-121> 농촌정책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48
<표 3-122> 농업정책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49
<표 3-123> 식량정책관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51
<표 3-124> 국제협력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53
<표 3-125> 축산정책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54
<표 3-126> 방역정책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55
<표 3-127> 식품산업정책관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56
<표 3-128> 유통소비정책관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57
<표 3-129> 농업생명정책관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258
<표 3-130>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	260
<표 3-131>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	261

<표 3-132>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	262
<표 3-133>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	263
<표 3-134>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	264
<표 3-135>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	265
<표 3-136>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	266
<표 3-137>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	267
<표 3-138>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	268
<표 3-139>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 종합 .....	269
<표 3-140> 농촌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1
<표 3-141> 지역개발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2
<표 3-142> 농촌사회복지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3
<표 3-143> 농촌산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4
<표 3-144> 농촌여성정책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5
<표 3-145> 농촌재생에너지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6
<표 3-14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7
<표 3-147> 농업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8
<표 3-148> 농지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79
<표 3-149> 경영인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0
<표 3-150> 농업금융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1
<표 3-151> 재해보험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2
<표 3-152> 식량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3
<표 3-153> 식량산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4
<표 3-154>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5
<표 3-155> 농업기반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6
<표 3-156> 간척지농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7
<표 3-157> 국제협력총괄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8
<표 3-158> 농업통상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89
<표 3-159> 검역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0
<표 3-160>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1
<표 3-161> 축산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2
<표 3-162> 축산경영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3
<표 3-163> 축산환경자원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4
<표 3-164> 방역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5
<표 3-165> 구제역방역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6
<표 3-166>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7
<표 3-167> 식품산업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8
<표 3-168> 식품산업진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299
<표 3-169> 외식산업진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300
<표 3-170> 수출진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	301

<표 3-17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02
<표 3-172> 유통소비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03
<표 3-173>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04
<표 3-174> 원예산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05
<표 3-175> 원예경영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06
<표 3-176>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07
<표 3-177> 농산업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08
<표 3-178> 과학기술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09
<표 3-179> 친환경농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10
<표 3-180> 종자생명산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11
<표 3-181> 동물복지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12
<표 3-182> 농기자재정책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313
<표 3-183>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314
<표 3-184>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315
<표 3-185>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315
<표 3-186>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316
<표 3-187>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316
<표 3-188>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317
<표 3-189>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317
<표 3-190>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318
<표 3-191>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318
<표 3-192> 국 단위 조직별 공통업무 현황 및 공통업무 유형	319
<표 3-193>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320
<표 3-194>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321
<표 3-195>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321
<표 3-196>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322
<표 3-197>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322
<표 3-198>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323
<표 3-199>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323
<표 3-200>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324
<표 3-201>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324
<표 3-202>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	325
<표 3-203> 정성적 업무강도 영향요인 분석	326
<표 3-204> 정량적 업무강도 영향요인 분석	327
<표 3-205> 보도자료 및 브리핑 건수 합계	328
<표 3-206> 2020년 예산별 운영 사업 개수	329
<표 3-207>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	330
<표 3-208>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331
<표 3-209>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332
<표 3-210>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333

<표 3-211>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334
<표 3-212>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335
<표 3-213>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335
<표 3-214>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336
<표 3-215>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336
<표 3-216>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337
<표 3-217>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종합 결과	338
<표 3-218>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339
<표 3-219>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340
<표 3-220>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341
<표 3-221>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342
<표 3-222>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343
<표 3-223>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344
<표 3-224>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344
<표 3-225>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345
<표 3-226>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346
<표 4-1> 자체 조직진단 결과	347
<표 4-2>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1	352
<표 4-3>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2	353
<표 4-4>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3	354
<표 4-5>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4	356
<표 4-6>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5	357
<표 4-7>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6	359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
<그림 1-2> 연구추진 절차 .....	3
<그림 2-1> 귀농·귀촌 가구 동향(1990~2018) .....	5
<그림 2-2>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	6
<그림 2-3> 도시와 농촌 주민의 부문별 정주만족도 비교(2019년) .....	7
<그림 2-4>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 .....	8
<그림 2-5>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	8
<그림 2-6> 농업인 직접지원 연간 예산 .....	10
<그림 2-7>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 전망 .....	11
<그림 2-8> 스마트팜 생산성분석 결과 .....	11
<그림 2-9> 에너지원 전력생산량 비중 .....	13
<그림 2-10> 식품 산업 및 식품 일자리 규모 .....	15
<그림 2-11> 가정간편식(HMR)시장 규모 .....	16
<그림 2-12> 유통 채널별 HMR 판매액 비중 추이 .....	17
<그림 2-13> 세계 식품시장 규모추이 .....	19
<그림 2-14> 지역별 세계 식품시장 규모 변화 전망 .....	21
<그림 2-15> 연도별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	23
<그림 2-16> 농축산물 수입액 .....	25
<그림 2-17> 가축 사육두수 추이 .....	29
<그림 2-18> 축산관련약취 민원 .....	30
<그림 2-19> 국내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변천 .....	31
<그림 2-20> 반려동물 보유가구 및 반려동물 시장 규모 .....	32
<그림 2-21> 반려동물 용품 관련 소매업 및 동물병원 카드결제 금액 .....	33
<그림 2-22>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	34
<그림 2-23> 돼지 매몰처분 현황 .....	36
<그림 2-24> 국내 종자산업 규모 .....	41
<그림 2-25> 세계 종자시장 규모 .....	43
<그림 2-26> 작목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비중 및 권역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비중 .....	44
<그림 2-27>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조직도 .....	52
<그림 2-28>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조직도 .....	60
<그림 2-29>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조직도 .....	63
<그림 2-30> 연혁 .....	67
<그림 2-3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구조 .....	70
<그림 2-32> 농림축산식품부 정원과 현원 비교 .....	85
<그림 2-33> 일반직 대상 (현원) .....	86
<그림 2-34>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인력구성 (현원) .....	87
<그림 2-35> 조직진단 대상 부서별 4년간 인력운영 추이 .....	88



<그림 2-36> 농림축산식품부 통솔범위(Span of Control)분석 단위 .....	89
<그림 2-37> 행정 환경 대응 위한 조직·기능주요 시사점 .....	104
<그림 3-1> 직무분석 Process .....	106
<그림 3-2> 직무분석 방법론 .....	106
<그림 3-3> 직무분류의 정의 및 목적 .....	107
<그림 3-4> 직무분류체계 개념 .....	107
<그림 3-5> 직무분류체계 도출 방법 .....	109
<그림 3-6> 직무 가분류 프로세스 .....	110
<그림 3-7> 업무량 분석 방법론 .....	116
<그림 3-8> 업무량 분석 가감요인 .....	116
<그림 3-9> 표준 근로시간 산출 .....	117
<그림 3-10>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198
<그림 3-11> 단위업무 기능조정 Matrix .....	270
<그림 4-1> 조직진단 방법론 .....	351
<그림 4-2> 조직진단 프로세스 .....	360
<그림 4-3> 기능연계 매트릭스 분석 .....	361
<그림 4-4> 기능 재조정 준거 구조 .....	361

# I.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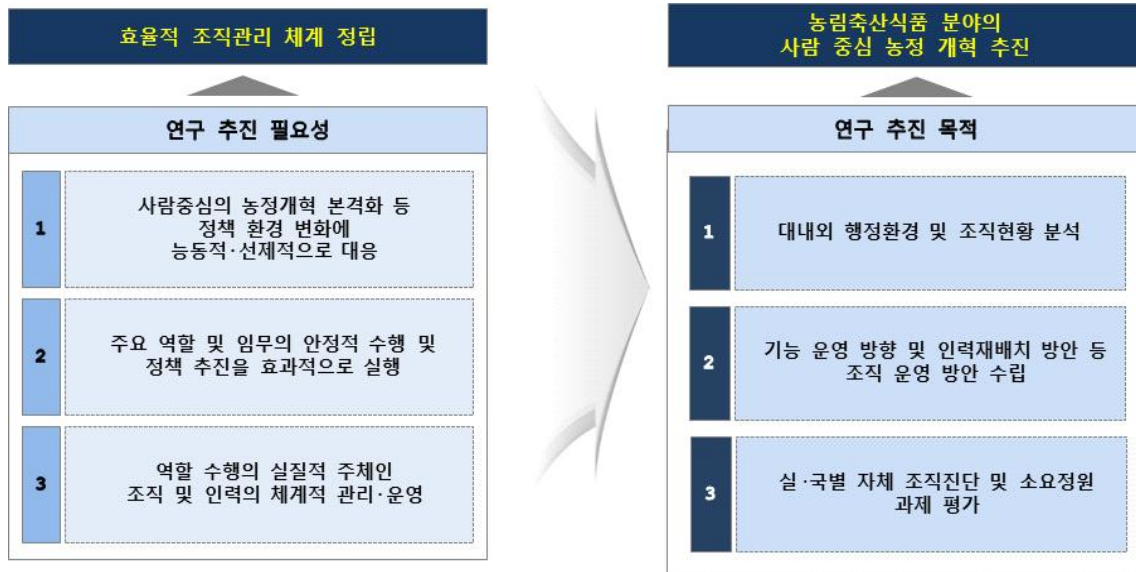
- 시장개방 폭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소비 생활 패턴 등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 고령화, 농업 농촌의 악순환 구조, 지속적인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은 성장 정체와 소득 부진이라는 오래된 숙제 이외에도 환경·식품 안전·식량·지역·에너지·자원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왔으며, 이와 같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전략적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 관련 변화와 정책 수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어 농식품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필요함
- 이처럼 농식품부는 글로벌 및 국내 농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 및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업무 기능 중심의 조직 진단과 이를 통한 기능재조정 및 인력의 재배치가 실행되어야 함

## 2. 연구 필요성 및 범위

- 본 연구는 농식품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선제적 대응과 주요 역할 및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주체인 조직 및 인력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수행 범위는 첫째, 대내외 행정환경 및 조직현황을 분석하여 조직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조직 기능운영 방향 및 인력재배치 방안 등 조직 운영 방안을 수립하며, 셋째, 실·국별 자체 조직진단 및 소요 정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농식품부의 미션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농식품부의 임무 수행과 비전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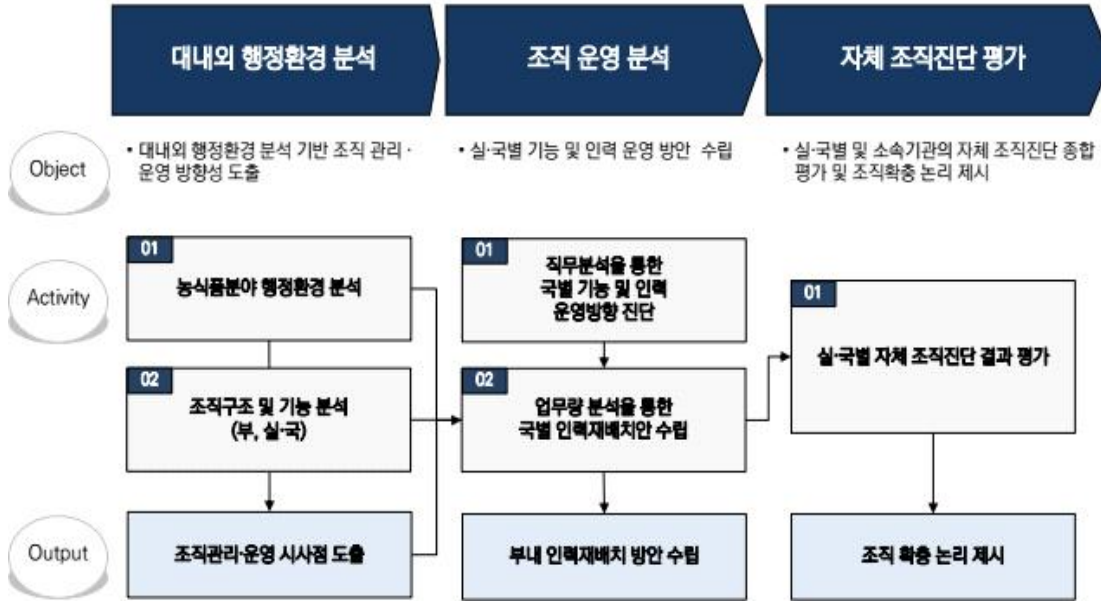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연구 추진 절차

- 본 연구는 과업 수행 범위를 기반으로 한 구조화를 통해 추진 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과업영역 간 연계성(Alignment) 확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음
- 본 연구의 과업 수행 범위에 따른 연구 추진 절차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내외 행정환경 분석 단계에서는 농식품분야 행정환경을 분석하고, 실·국 단위별 조직구조 및 기능 분석을 통해 조직관리 및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조직운영 분석 단계에서는 직무분석을 통한 국별 기능 및 인력 운영방향 진단과 업무량 분석을 통해 국별 인력 재배치안을 수립함
  - 마지막으로, 자체 조직진단 평가는 실·국 및 소속기관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향후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함

〈그림 1-2〉 연구추진 절차



#### 4.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주요 활동의 목적에 따라 질적 및 양적 관점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터뷰, 직무분류체계 현행화, 업무량 분석, 직무밀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실시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전인터뷰는 농식품부 조직 내의 핵심이슈의 확인과 업무밀도 기준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실·국별 조직, 기능, 인력 등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슈와 부서별 업무밀도 편차 기준을 추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질의서를 기반으로 진행함
- 둘째, 직무분류체계 현행화는 업무량 분석의 기준이 되는 단위업무의 정립과 현행화를 위한 목적으로, BRM자료와 업무분장표 기준 1차 안을 연구팀에서 현행화하였으며, 그 결과를 43개 과 단위 부서에 회람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셋째, 업무량 분석은 양적관점의 부서별 투입 업무량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1년간 근태시간(초과근로, 휴가 고려)을 수집하고 표준근로시간 기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3개 과 대상 직무조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워크시트 작성을 통해 업무비중과 단위업무의 기능변동성을 조사하였음

- 넷째, 직무밀도 분석은 질적 관점의 부서간 업무밀도 지수개발 및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 정량적 방법으로는 사업수행 건수, 홍보건수 등 수집된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국 단위 조직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업무밀도 차이에 따른 레인지를 설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 정성적 방법으로는 업무밀도 정성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조사표를 설계하여 실·국 단위 주무과장을 대상으로 평가 인터뷰 실시하여 조직별 상대적 밀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량과 정성의 직무밀도 가중치 의견도 조사하였음

〈표 1-1〉 연구방법

구분	목적	주요 활동	주요 내용	일시
사전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 단위 부서별 핵심 이슈 및 업무강도 기준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면인터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실 /국별 조직 /기능 /인력 영향 이슈 도출</li> <li>부서별 업무밀도 편차 기준 추정</li> </ul>	2020. 4. 20~29
직무 분류 체계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량 분석 기준을 위한 단위 업무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RM 체계 기반 1차 작성</li> <li>사업부문 43 개 과 단위 부서 회람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RM 자료 및 업무분장표 기준 1 차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능은 고정 , 중기능 및 소기능 , 단위과제 보완</li> <li>- 공통업무 별도 분류</li> </ul> </li> <li>작성된 1 차안을 43 개 과 단위 부서에 배포 후 회람 검토</li> <li>검토안 수령 후 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능 단위 표현 및 범위 적정성</li> <li>- 소분류 단위 표현 및 범위 적정성</li> </ul> </li> </ul>	2020. 4. 29~5.8
업무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 관점 부서별 투입 업무량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조사 설명회</li> <li>직무조사표 배포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1 년간 근태시간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T, 휴가 , 지각 및 조퇴</li> </ul> </li> <li>직무조사표 항목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비중 작성 기준 : 직무분류체계 상소기능 또는 단위과제 기준</li> <li>- 기능변동성 (이관 , 강화 , 축소 , 폐지 , 유지 )</li> <li>- 기능변동 사유</li> </ul> </li> <li>43 개 과 대상 설명회 진행 및 과 단위 부서 워크시트 작성</li> <li>작성 결과 검토 및 확인 필요 시 추가 인터뷰 진행</li> </ul>	2020. 5. 1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변동성 추가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변동성 수정 사항 조사</li> <li>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신설기능 조사</li> </ul>	2020. 6. 11~17
직무 밀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적 관점 부서별 업무강도 편차 분석</li> </ul>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서간 업무밀도 정량평가 가능 기준 결정 (예 : 사업수행 건수, 홍보건 등)</li> <li>부서별 해당 기준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li> <li>업무밀도 레인지 설정 및 가중치 부여</li> </ul>	2020. 5. 27, 29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서간 업무밀도 정성평가 기준 결정</li> <li>평가 조사표 설계</li> <li>실 /국 단위 주무과장 대상 조사 인터뷰</li> <li>평가기준 가중치 및 정량 +정성 가중치 결정</li> </ul>	2020. 6. 11~17

## II. 농림축산식품부 행정환경 분석

### 1. 농식품 행정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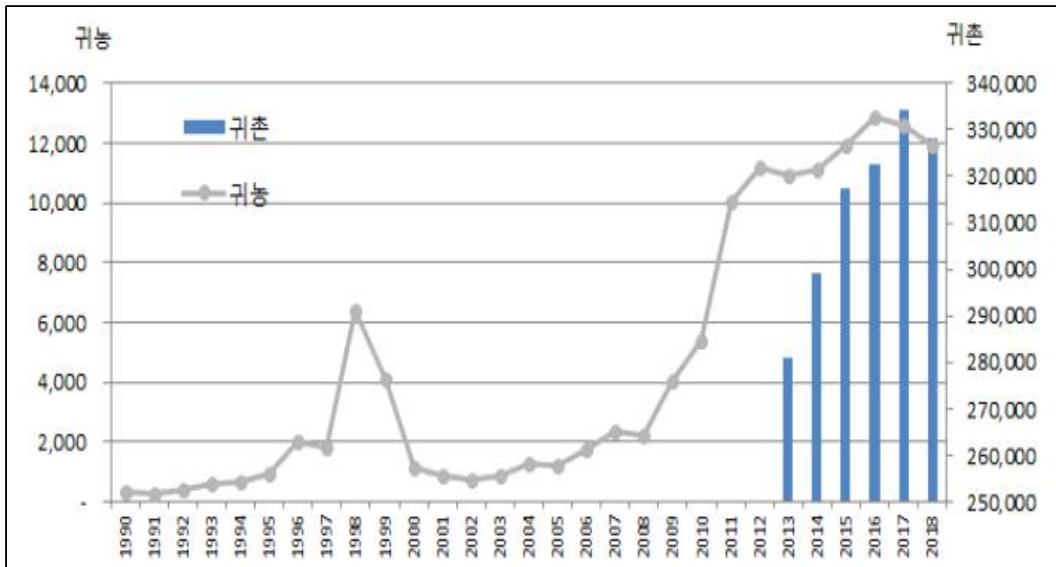
#### 1) 주요 산업별 행정환경

##### (1) 농업

##### 가. 국내 산업 현황

- 농업은 단순한 한 분야의 산업이 아닌 사회·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심각한 고령화와 과소화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어 왔음
- 하지만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생태가치 선호, 농촌관광 등으로 귀농·귀촌이 2010년 이후 급증하면서 농촌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음

<그림 2-1> 귀농·귀촌 가구 동향(1990~2018)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귀농·귀촌통계(2019)

\* 귀농귀촌 가구 (천호) : ( '13) 291 → ( '14) 310 → ( '15) 329 → ( '16) 335

\* 농촌인구 (만명) : ( '90) 1,110 → ( '00) 938 → ( '10) 876 → ( '15) 939

\* 30대 이하 귀촌가구(천 호) : ( '14) 130 → ( '15) 142 → ( '16) 144(전체 귀촌가구의 51.1%)

- 다만 농가소득 정체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더불어 빈발하는 자연재해 등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여건이 여전히 존재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담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표 2-1〉 농가소득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 '18/' 17)
농가소득	34,950	37,135	37,197	38,239	42,066	10.0
농업소득	10,303	11,257	10,068	10,047	12,920	28.6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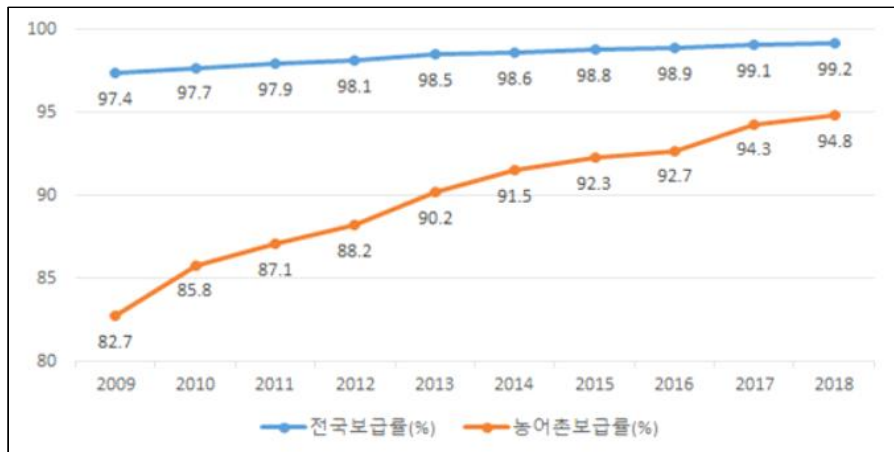
\*농가소득(38,239천원)은 도시가구 소득(60,452천원)의 63.3%에 불과(' 17)

\*농가소득 : '10) 32,121천원 → ' 15) 37,215 → ' 16) 37,197 → ' 17) 38,239 → ' 18) 42,036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 '10) 10,121천원 → ' 16) 10,068 → ' 17) 10,047 → ' 18) 19,920

- 농촌은 도시에 비해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농업인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2-2〉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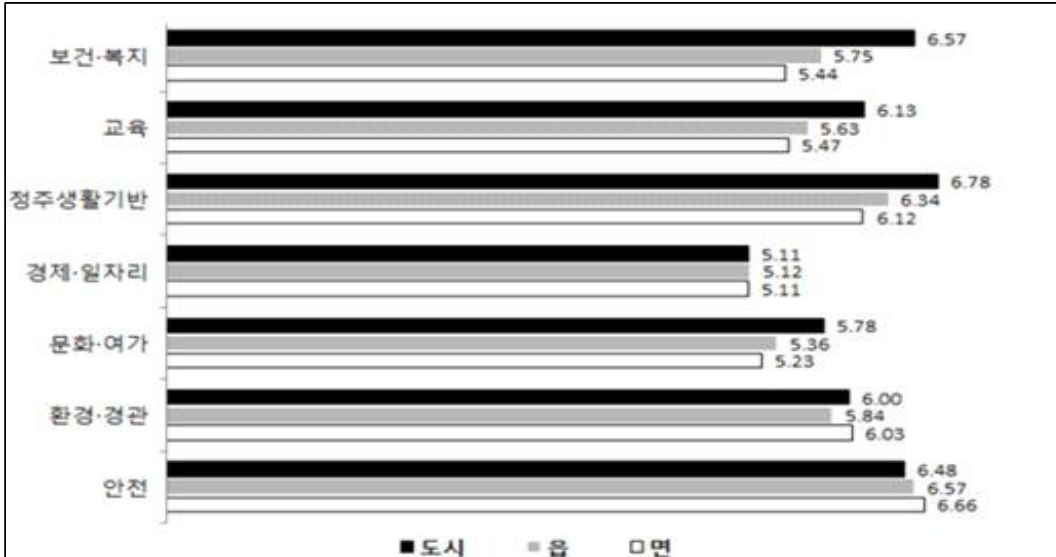
출처 : 환경부

\* 상수도 보급률(전국/농어촌보급률) : '10) 97.7%/95.8% → ' 15) 98.8%/92.3%  
→ ' 16) 98.9%/92.7% → ' 18) 99.2%/94.8%

\* 어린이집(농어촌/전국) : '10) 7,759개소/38,021(20.4%) → ' 17) 97,964/40,238(19.8%)

〈그림 2-3〉 도시와 농촌 주민의 부문별 정주만족도 비교(2019년)

(단위 : 점)



출처 : 농림식품부

-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담보를 위한 국가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한국농어민신문의 최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급한 농정 과제로 1순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2순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3순위 ‘농어촌 지역 균형 발전 및 복지 향상’ 을 언급하였음

\* 2020년 3월 26일~4월 1일 농업계 전문가 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나. 국내외 주요 환경 변화

### ① 농정지원 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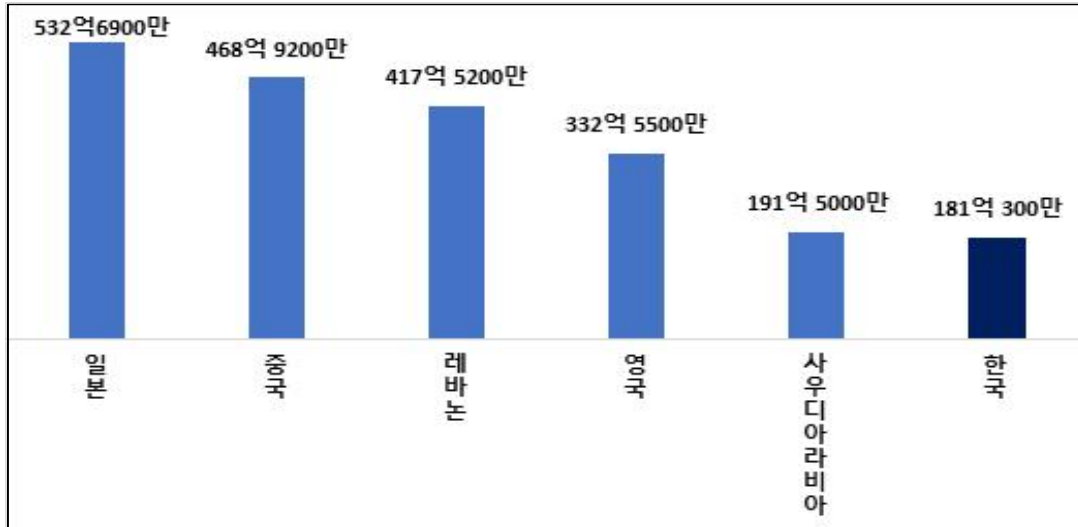
- EU, 미국, 일본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기농업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농업환경 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환경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1987년 농촌환경관리 협약을 시행하였고, 스위스는 1993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다원적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농업직불제 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은 단순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전환하고 생산연계를 최소화 하는 추세임

〈그림 2-4〉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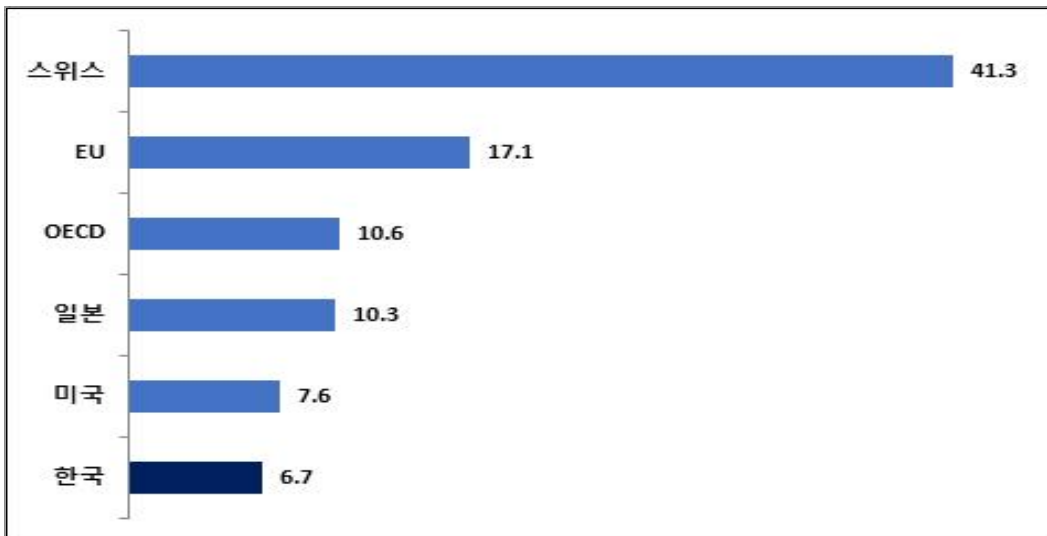
(단위 : 달러)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년 기준)

〈그림 2-5〉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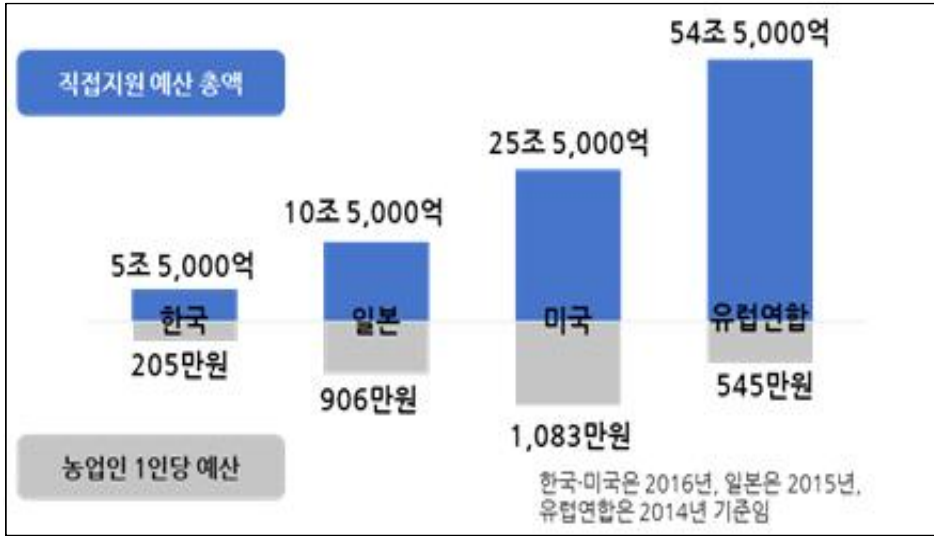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년 기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 선진국은 우리보다 정부가 지출하는 농업보조금 비중이 컸으며, OECD 평균은 10.6%였고, 유럽연합(EU)은 이보다 더 높은 17.1%임
- 더불어, EU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강화된 농업 지원정책을 펼치는 스위스는 41.3%로 우리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의 농업보조금 비율을 보임
- 또한, EU는 보상지불제에 교차준수제를 도입하여 품목간 보상지불액 차이를 해소하는 등 생산과 연계하더라도 생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활동의 변화를 통하여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정책 전환이 진행 중임
- 한편 농업직불제의 효과적 제도 시행을 위해 농업경영체 자료 등의 데이터 관리 중요도가 제고되고 있음
- EU 등은 농업기본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공정한 보조금 집행에 활용하는 등 각종 농업인 지원을 위한 기본 자료로써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의 활용도 및 중요도가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소득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농가소득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실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의 밀도 있는 운영이 필요함
- 쌀값 안정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증가로 2018년 기준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20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농가소득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실정임
  - \* 농가소득 5분위 배율 : ('09) 8.9 → ('12) 12.4 → ('15) 9.5 → ('17) 9.4 → ('18) 11.1
  - \* 도농소득 격차 : ('16년) 62.5% → ('17) 64.1 → ('18) 65.5
- 직불금을 비롯한 농업 보조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변동직불금만으로 총AMS 한도에 이르는 상황으로 직불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19.10.25.)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적 대응정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 필요성 증대로 인해 쌀 중심의 직불체계에서 공익적 기능(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창출을 위한 직불제 개편을 예정하고 있음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공 및 직불 이행점검 방식의 변경검토 필요

〈그림 2-6〉 농업인 직접지원 연간 예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8)

- 또한,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운영( '20.4월 시행)에 따라 직불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심의, 기금의 운영, 강화된 준수 의무 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 공익형직불제의 보다 밀도있는 운영이 필요함

## ② 농업 기술환경 변화

□ 4차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에서도 미래산업으로 발전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스마트 산업화,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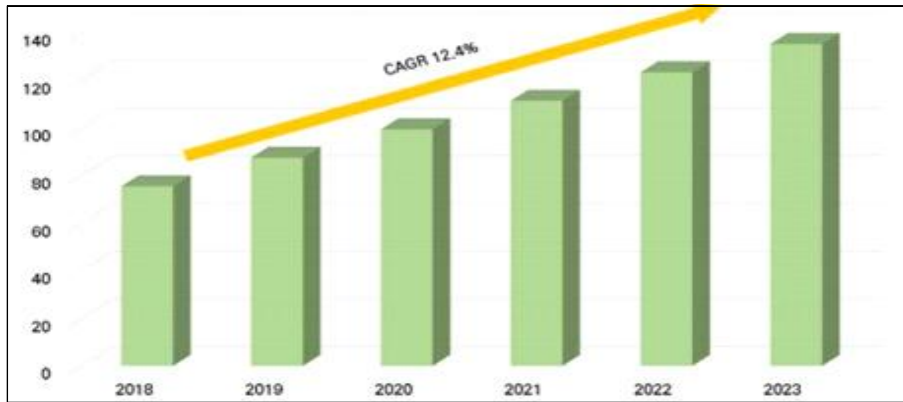
- 전방위적으로 각 산업에 확산 적용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정보화는 향후 더욱 심화되는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중심의 과학화·계측화·효율화 요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됨
- 과거 개별 처리하던 업무·정보·시스템을 통합적 수행·연계·관리로 전환하고, 이를 통한 빅데이터 확보로 농림부의 업무 효율화 뿐 아니라 새로운 농정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 정부 집권 3년차로 농업인들의 주요 농정공약에 대한 가시적 성과 요구 증가

- 실제로 농정기술을 고도화한 스마트팜 세계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에 대한 국내 수요 역시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정책적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의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그림 2-7〉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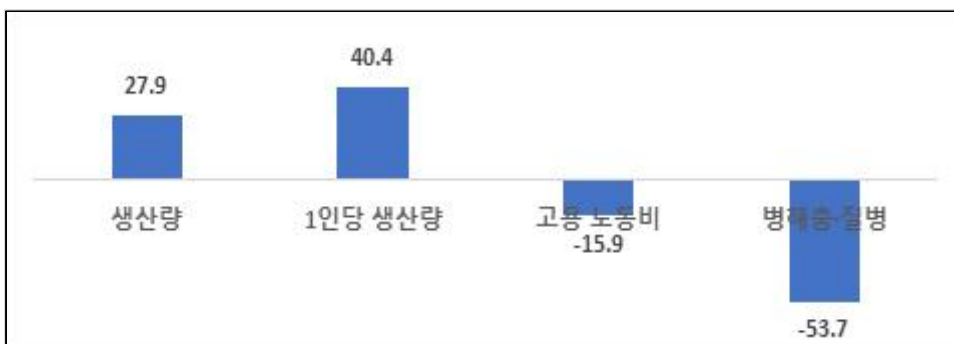


출처 : MarketsAndMarkets(2018)

- \* 스마트팜 관련 수출액은 연간 5억불 수준으로 총액은 정체 상태이나 CIS(최근 3년간 4배↑)·중국 시장은 성장세, 대부분(91%)의 기업이 50만불 이하이나 최근 계약규모 증가
  - \* (수출사례) 실용화재단에서 카자흐스탄 테스트베드 구축 → 나래트랜드 등 기업이 1,720만불 계약체결
-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전성·품질 등 잠재력이 높아 유능한 청년 농업 인력 유입과 농업 전후방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2-8〉 스마트팜 생산성분석 결과

(단위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량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 \*1인당 생산량 : 1인당 생산량 증가율
- \*고용 노동비 : 고용 노동비 감소율
- \*병해충·질병 : 병해충·질병 감소율

- 이러한 기대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관련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 스마트팜은 국정과제(83-3)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관계 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방안’ ( ‘18.4월)을 마련하였음

〈표 2-2〉 8대 선도 사업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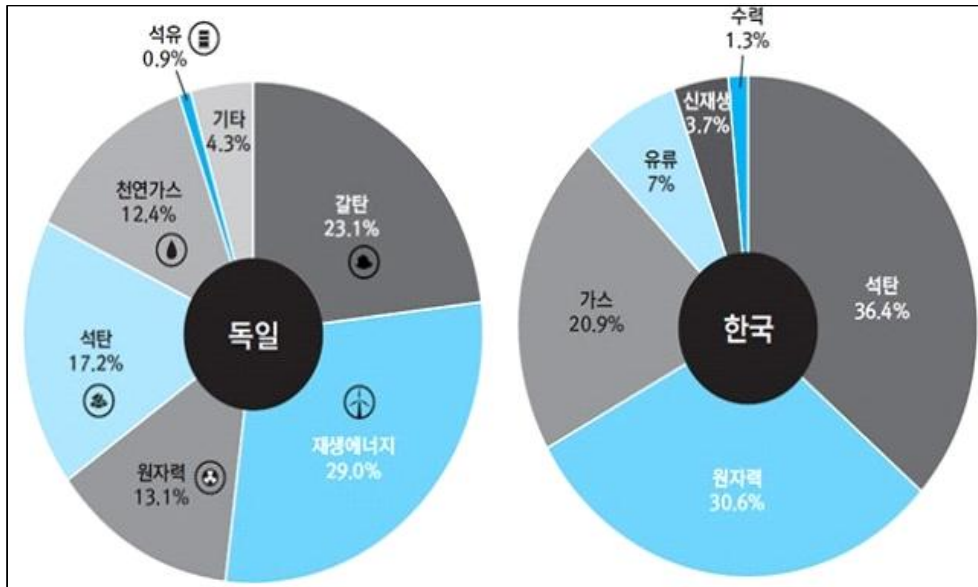
선도사업	주관부처	주요추진과제
스마트공장	중기부	4,000개 공장 보급 + 공급기업 육성
핀테크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창출개시 + 新업종 제도기반 마련
미래자동차	산업부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구축 + 자율차 상용화 기반마련
스마트시티	국토부	시범도시 착공('19.하반기) + 샌드박스 도입
스마트팜	농식품부	혁신밸리 차질없이 조성 + 기반기술 확보
에너지신산업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력중개시장 개설
드론	국토부	도심 등 상용화 확대 + 전용 인프라 구축·운영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이처럼 기술환경 변화가 농업에 접목되면서 최근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에 대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농식품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가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우리나라는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 기능 없이 업무 내용에 따라 농식품부 소속기관별 해당되는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총괄적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생명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유전자원 확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품종 출원·등록과 식물신품종보호심판 제도를 담당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식품 지리적 표시를, 국립종자원에서 식품신품종보호제도를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 내에 전담부서인 지적재산과를 두고 있으며, 국립농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에 지적재산부를 두고 2개실 1개 과를 전담조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농촌지역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공급원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공간으로 주목되고 있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독일 등 주요 유럽 선진국에는 탈원전을 가속화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 중임
  - \* 독일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 '11) 20.2% → ( '18) 35.2%

-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키로 하면서 태양광 등 농촌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 농촌지역에서 ‘18~’ 30년까지 태양광 10GW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48.7GW)의 20% 수준

〈그림 2-9〉 에너지원 전력생산량 비중



출처 : BMWi(2017)

-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일조하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의 촉진이 필요함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른 농촌에너지 활용 주민참여형 모델 구축·확산을 위한 조직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방안

- 주요 정책환경 부문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어촌 복지’, 스마트팜 등 ‘기술환경 변화의 활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동시 기대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기금 운영, 준수 의무 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 밀도있는 운영을 위한 기능 강화가 필요함

-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 및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관리 등 관련 데이터 구축 기능 강화가 필요함
-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유효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농업재해·안전사고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 강화, 정책보험 제도개선의 지속 추진이 필요함
  - 재해보험 미적용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 신설 \*( '18.12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업인 안전보험의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강화 상품 보급·홍보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재해보험 지급) ' 18년 91천호/8,235억원, (안전보험 가입률) ' 17: 54.3% → ' 18: 63.3
    - \* (' 18) 재해 현황: 124,198호, 135,020ha, 복구비 지원(보조·융자): 133,182백만원
    - \* (인상) 농약대 등 25개(실거래가의 70%→80), (신설) 과수, 식용곤충, 곤충사육사 등 10개
- 한편 스마트팜 확대 추진, 농업 공간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성 제고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팜 확산' 추진과 성과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팀' 신설 등 전문조직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농촌태양광 주민참여형 모델 구축·확산 등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
  - 더불어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효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및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임
  - 이와 같은 기술환경 변화 요인의 산업 접목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관점의 다소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구축 기능이 요구됨

## (2) 식품산업

### 가. 국내 산업 현황

- 농림어업 생산액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정체되고 있으나, 후방산업인 농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어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미래산업임
- 국내 5대 식품산업의 규모는 2018년 12조 4,400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22년 16조 9,600억 원, 2030년 24조 8,500억 원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이 예측됨
-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중 식품·외식산업에 투입되는 비중이 43.4%에 달하고 있어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큰 소비기반 산업에 해당됨
- 한편 고용효과는 관련 산업의 일자리 규모로 가늠할 수 있는데, 5대 식품산업 일자리 규모는 2018년 5만 1,000명이며, 2022년 7만 4,700명, 2030년 11만 5,800명으로 산업 규모 성장과 함께 일자리 규모의 동반 확대가 예측되고 있음
- 식품·외식 산업으로 확대 시 일자리 규모는 더욱 확장되어 2017년 기준 233만 명으로, 2012년 대비 28만 명으로 13.6% 증가하였으며, 국내 산업의 전체 일자리 규모 2,126만 명 중 11%를 차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
- 더불어 기계공업, 운수산업, 포장산업 등 타 산업과 연계성이 높아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유발할 수 있음

<그림 2-10> 식품 산업 및 식품 일자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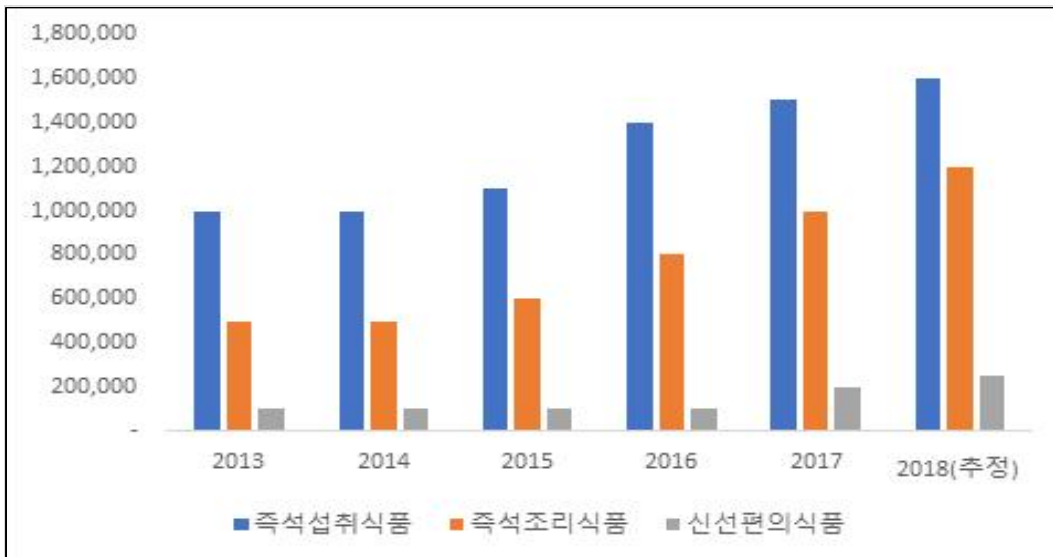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구 구조 및 생활 방식의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시장이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총 인구 연령 비중의 변화, 가계 구조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간편성이 높은 제품, 소포장 제품, 외식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급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2016년부터 관련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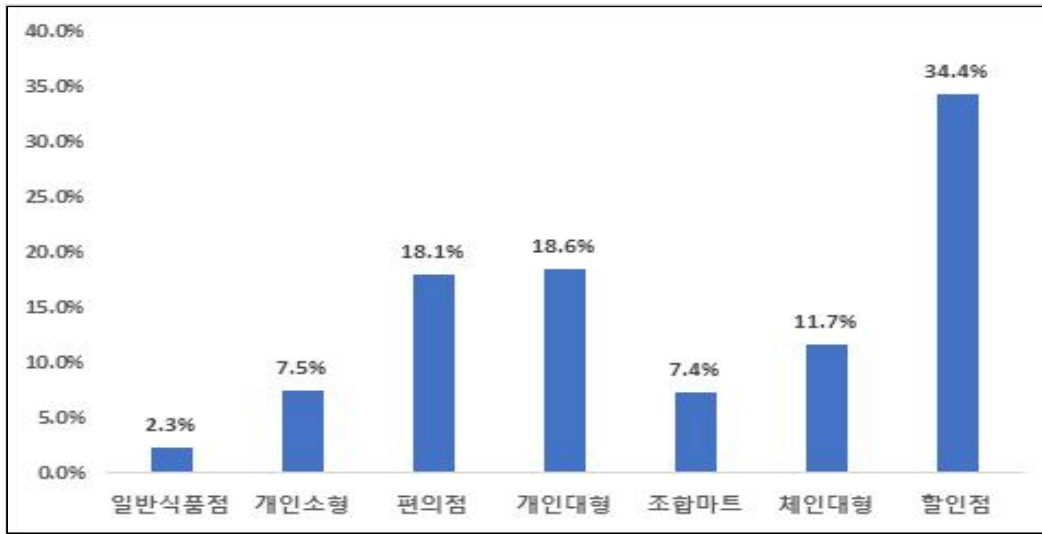
〈그림 2-11〉 가정간편식(HMR)시장 규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의하면, 2018년 HMR 국내 판매액은 출하액 기준 전년 대비 29.0% 증가한 3조 2천억 원 수준이며, (주)닐슨코리아 POS데이터에 의하면, HMR 국내 판매액은 실제 판매액 기준 2017년 2조 9,081억 원, 2018년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HMR 주요 유통 채널은 할인점(34.4%)이며, 다음으로 개인대형(18.6%), 편의점(18.1%), 체인대형(11.7%) 순임
- 2015년부터 3년 연속 할인점이 33%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했으며, 편의점 비중은 3년 연속 증가세, 일반식품점 및 개인소형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12〉 유통 채널별 HMR 판매액 비중 추이



출처 : (주)닐슨코리아 Retail Index & ScanTrack(2019)

-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총 인구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인구 연령별 구성 비중 변화와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로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등 맞춤형·특수식품도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임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7~2065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 구성비는 다소 증감을 반복하기도 하나, 65세 이상의 1~2인 가구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35년에는 고령자 가구의 약 3.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3〉 고령자 가구 추이

(단위 : 천가구, %)

구분	총가구		고령자 가구 유형				
	고령자가구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부부 가구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184	1.3	573	3.9
2005	15,971	2,432	15.2	249	1.6	822	5.1
2010	17,359	3,087	17.8	297	1.7	1,038	6.0
2015	18,705	3,852	20.6	352	1.9	1,280	6.8
2020	19,878	4,772	24.0	437	2.2	1,569	7.9
2025	20,937	6,172	29.5	587	2.8	2,028	9.7
2030	21,717	7,690	35.4	719	3.3	2,533	11.7
2035	22,261	9,025	40.5	791	3.6	2,919	13.1

출처 : 통계청

-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료품·비주류음료’로 나타남에 따라 식료품에 대한 소비는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식품, 자연주의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 소비자 인식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임

〈표 2-4〉 주요 소비지출 항목 비중 비교

구분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주요 소비 지출 항목	1위	교통(15.0%)	교육(17.9%)	음식·숙박(14.4%)	식료품·비주류음료 (18.9%)
	2위	음식·숙박(13.6%)	음식·숙박(13.2%)	식료품·비주류음료 (13.2%)	주거·수도·광열 (14.1%)
	3위	식료품·비주류음료 (12.4%)	식료품·비주류음료 (12.8%)	교통(12.5%)	교통(13.2%)

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 식품산업의 성장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가계 구성 변화 등의 여건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여 편의식품이나 고령친화식품 이용자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이를 고려한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나. 환경 여건 변화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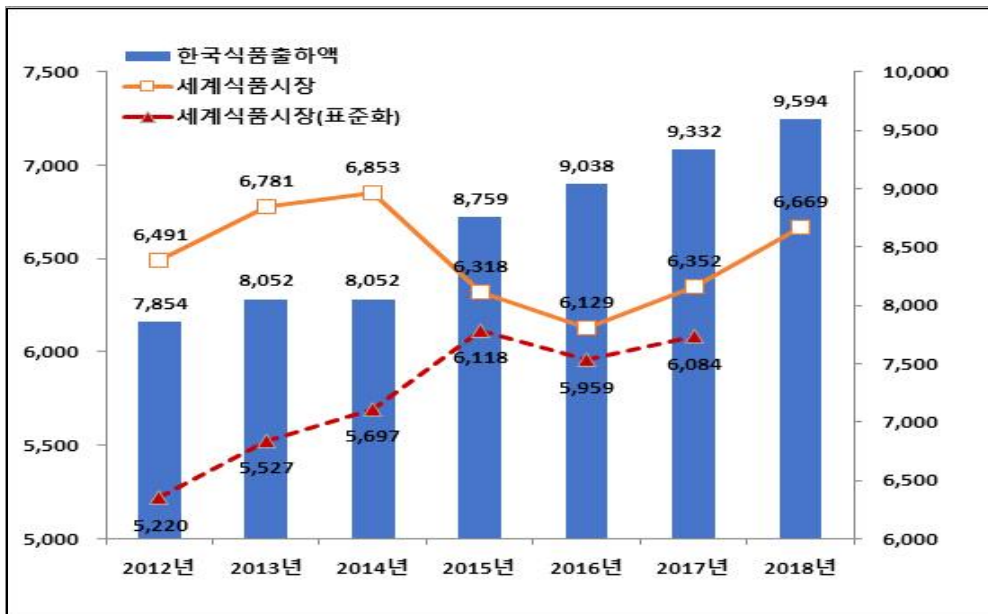
### ① 세계식품산업 여건 변화

-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20년 7조 달러(약 7,813조 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 세계 식품산업은 자동차시장(1.5조\$), IT시장(1.4조\$), 철강시장(1.0조\$)보다 4~6배 큰 규모의 시장으로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식품시장은 최근 5년 간 연 3.2% 성장했으며, 2017년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6조 352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에는 7조 달러 (약 7813조 원)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그림 2-13〉 세계 식품시장 규모추이

(단위 : 세계식품시장(십억 달러), 한국식품출하액, 백억 원)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이와 같은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은 ‘편의성’ 과 ‘건강’ 을 강조한 식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음료 제품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식품 부류별 세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식료품 3조 4,000억 달러, 음료 2조 6,900억 달러, 담배 6,200억 달러 수준으로, 특히 음료의 비중이 증가하고 담배는 감소하는 추세임
- 그 중 청량음료, 증류주, 맥주 등의 음료류와 제과제빵 및 시리얼류 등은 시장 규모가 각 3,000억 달러 이상이면서 향후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할 품목으로 나타났음
- 반면 시장규모는 각 2천억 달러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성장률이 높은 식품은 파스타와 면류, 유지류, 해산물, 아이스크림 등으로 나타남

〈표 2-5〉 부류 및 기간별 세계 식품시장 증가 규모

(십억 달러, %)

기간	식품 전체	식료품	음료	담배
2012 ~2017 (표준화)	864(16.5)	382(15.1)	450(21.2)	32(5.6)
2017 ~ 2020	798(12.6)	350(11.5)	395(14.7)	53(3.6)

주 1) 2020~2017년에는 달러인덱스로 표준화하여 계산함

2) 괄호 안은 기간내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aTFIS(원자료 GlobalData), NTSE dollar index

□ 지역별 식품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지역별 식품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아시아·태평양 4,290억 달러(26.7%), 북미 2,480억 달러(24.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식품시장 증가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순으로 나타남

〈표 2-6〉 세계 지역·기간별 식품시장 규모와 수출액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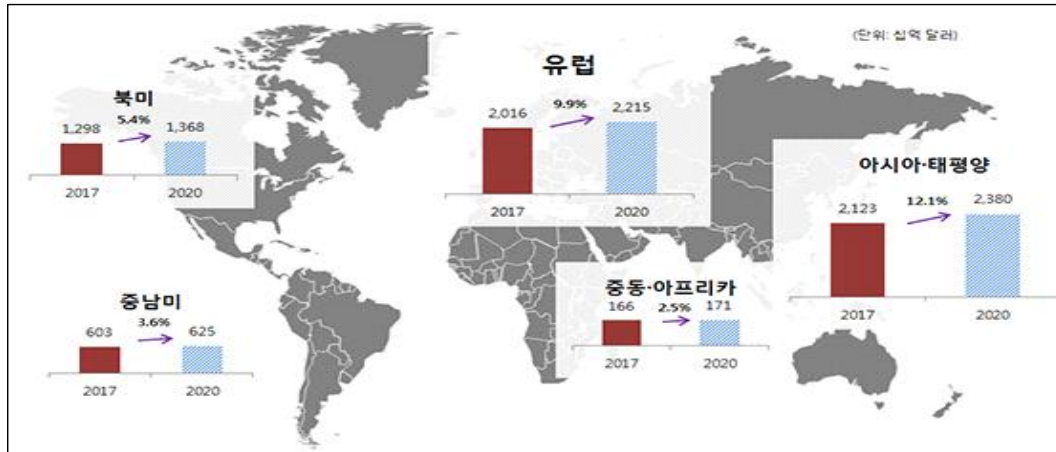
구분	세계 지역별 식품시장 증가액(십억 달러)		국내 수출 증가액 (백만달러) 2020년~2017년
	2012년~2017년	2017년~2020년	
유럽	101(5.5)	199(9.9)	202(54.3)
아시아·태평양	429(26.7)	257(12.1)	703(23.6)
북미	248(24.9)	70(5.4)	24(7.0)
중남미	-69(-10.6)	22(3.6)	251(54.0)
중동·아프리카	15(10.6)	4(2.5)	54(123.3)

주 1) 2020~2017년에는 달러인덱스로 표준화하여 계산함

2) 괄호 안은 기간내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aTFIS(원자료 GlobalData), NTSE dollar index

○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아세안 등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22년에는 7.5조 달러까지( '18~' 22, 연평균 3.6% 증가)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연평균 5.2%↑)

〈그림 2-14〉 지역별 세계 식품시장 규모 변화 전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 특히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한식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국내 농식품 수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음
- 먹을거리의 소비는 단순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한국의 식문화 전파 및 저변 확대의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한국 농식품의 안전·고급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킴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② 농식품안전 환경 변화

- 농업의 환경 책임 및 농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강화의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의 식품 선택 시 첨가물 및 보존제 이용 여부, 유기농 여부, 지방 및 트랜스지방 함량, 칼로리 수준 등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식품생산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식품DB 전문 업체인 Innovadatabase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품정보 중 ‘식품첨가제 및 합성보존제의 미사용’이라는 문구가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유기농(17%), 저지방(16.7%), 천연(16.1%), 글루텐 불포함(14.5%) 등의 제품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나, 세계 소비자들의 건강과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7〉 세계시장 식품의 건강 관련 Top 15 표시 사항

표시 사항	비중(%)
No Additives/Preservatives	31.53
Allergy	19.9
Organic	16.99
Low Fat	16.73
Natural	16.07
Gluten Free	14.47
No Trans Fats	8.34
Digestive/Gut Health	6.1
Low Calorie	5.84
Wholegrain	5.55
No Added Sugar	4.94
Low Cholesterol	4.78
Vitamin/mineral Fortified	4.7
Sugar Free	4.31
Low Sodium	4.24

출처 : Innovadatabase.com

- 더불어, 경제성장으로 인한 양질의 식품 수요 증가 및 각국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관련사고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인된 식품안전규격을 준수한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에 따른 방사능 오염식품 수출 파동 등의 사례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음
- 또한, 미국 등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 생산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자와 제품은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코셔와 할랄 인증식품의 수요·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 유럽은 새로운 식품과 식재료들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노벨푸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유럽 내에서 기존에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을 식품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새롭게 인증된 식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 또한, 세계적으로 생산 및 가공을 강조하는 로컬푸드 개념이 확대되면서 1차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식품가공 및 관광산업 부문 등으로 산업적 확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로컬푸드는 먹거리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거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으로 농식품에 대한 투명성 요구 정도가 증가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
- o 이처럼, 인구구조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미국, 중국 등 전세계적인 식품안전 관련 강화 제도가 증가하고 있음

〈표 2-8〉 국가별 식품안전 강화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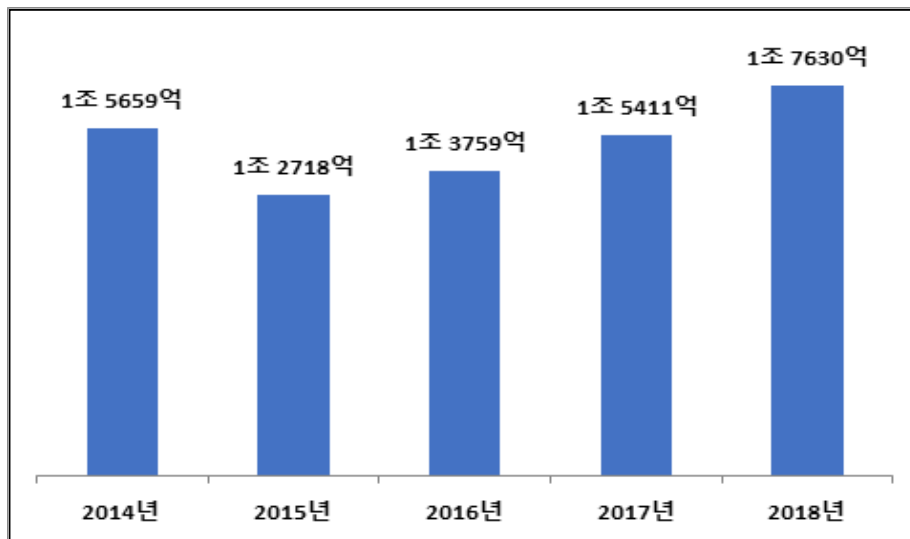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 기준 강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수입식품 규정 강화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행정 간소화·라벨링 강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라벨링 규정 시행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9)

-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심 먹거리,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친환경 농식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친환경농식품 판매장/매출액 : ( '10) 4,122개소/7,544억원 → ( '16) 5,446/14,723

〈그림 2-15〉 연도별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별·품목별 시장규모 추세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연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25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조 1,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표 2-9〉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5
곡 류	4,627	6,903	7,147	7,391	7,636	8,614
채소류	3,295	4,317	4,348	4,379	4,411	4,536
과실류	1,103	1,516	1,594	1,672	1,749	2,059
서 류	628	827	851	875	899	996
특작·기타	3,955	4,291	4,414	4,538	4,661	5,156
<b>총 계</b>	<b>13,608</b>	<b>17,853</b>	<b>18,354</b>	<b>18,855</b>	<b>19,356</b>	<b>21,360</b>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기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3.6%씩 증가하여 2025년 5,7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무농약 농산물 시장 규모는 유기농산물보다 빠른 연평균 6.7%씩 증가하여 2025년 1조 5,6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10〉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8
유기농	4,342	4,311	4,516	4,721	4,925	5,745
무농약	9,266	13,543	13,839	14,135	14,431	15,615
<b>전체</b>	<b>13,608</b>	<b>17,854</b>	<b>18,355</b>	<b>18,856</b>	<b>19,356</b>	<b>21,360</b>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또한, 도시민 경우 가장 중요한 농정과제로 농식품 안전(32.4%)을 인식(농경연, '17년)하고 있음
  - \* 특히, '17년 8월 계란 안전사고, '19년 PLS 본격 시행 등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책 변화 강화됨
  - \* 국내 「잔류농약기준 강화(PLS)」 전면 시행 ('19.1.시행)으로 소비자 먹거리 안전관리 확대 강화
- 전 세계의 안전 먹거리 트렌드와 국내 소비자의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보전형 농업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확대가 예측됨에 따라 친환경 및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함께 인증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강화 등 엄정한 생산·유통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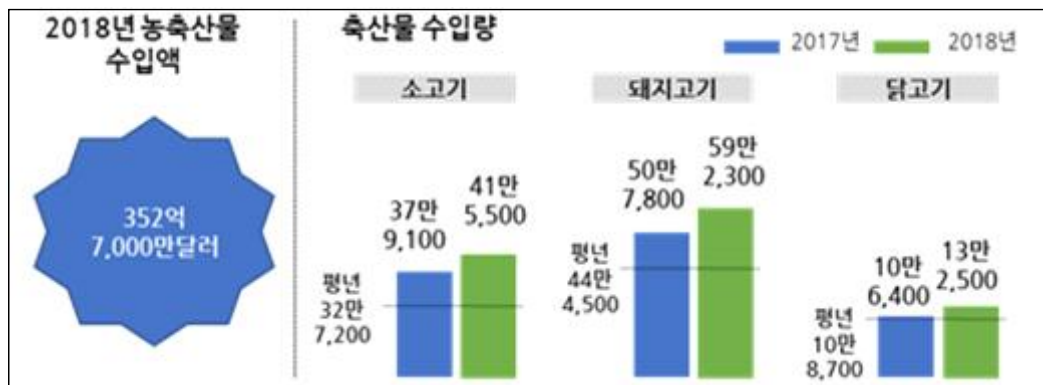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CPTPP가입, RCEP타결, 한·인니 CEPA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증대될 개연성이 높음
- 국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농식품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함

### ③ FTA 환경 여건 변화

- FTA 체결 확대 및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수입 농축산물 증가는 국내·외 농축산물 시장의 자율 경쟁을 야기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그림 2-16〉 농축산물 수입액

(단위 : 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9)

- 관세감축 완화, 특별품목 허용, 특별세이프가드 등 개도국 우대 조치를 상실할 경우 대폭적인 관세 감축으로 인한 국내 농업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개도국 지위 상실시 전반적인 농산물 관세 감축이 불가피함
- 개도국에는 농산물 전체 세 번의 12% 내에서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도 가능한 특별품목을 허용하나,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쌀·고추·마늘·양파·감귤·인삼·감자·유제품 등 특별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는 핵심작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함
- 또한, 농산물 보조감축에서도 선진국의 의무 이행 시 향후 농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은 감축대상보조인 AMS를 5년 동안 45%를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최소허용보조(DM:de minimis)도 생산액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8년에 걸쳐 30%를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최소허용보조도 6.7% 수준 유지가 가능함
- 이에 따라, 국내 산업에 선진국 의무 이행을 적용할 시 감축보조는 현행 1조 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축소되며, AMS 지급상한이 8,195억 원에 묶일 경우 쌀 가격 급락 시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표 2-11〉 핵심 고율관세 농축산물의 관세 감축

품목	양허 관세율 (%)	감축 이후 관세율(%)						
		선진국 의무 이행			개도국지위 유지			
		일반 품목	민감품목		일반 품목	특별 품목	민감품목	
쌀	513	154	393	국내	274	513	433	국내
고추	270	81	207	소비량	228	270	228	소비량
마늘	360	108	276	의	304	360	304	의
양파	135	41	104	4%를	114	135	114	2.7%를
감귤	144	43	110	TRQ로	122	144	122	TRQ로
인삼	754	226	578	제공할	637	754	637	제공할
분유	176	53	135	의무	149	176	149	의무

출처 : 서진교 등(2019),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또한, 기체결 FTA의 관세감축 효과 본격화 및 한-미 FTA 개정협상, 한-메르코수르 협상 등 주요 수출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 증가가 우려됨
  - \* 과일수입량 : ( '10) 602천톤 → ( '15) 724천톤 → ( '18) 853천톤
- 전방위적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중간의 대립, 자국 우선주의 및 일방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RCEP, CPTP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등 다수가 참여하는 메가 FTA가 국제통상 질서의 새로운 틀로 부상하는 상황임
  - \* 특히 국내 농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메 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증가 우려
- 또한, 구체적인 지역화, 투명성 절차 마련(2008년), 기술협의 지침 제정(2014년) 등 회원국이 SPS 협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강화하는 추세이며, RCEP(실질타결), CPTPP 등 메가 FTA에서 수입국의 절차적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허용 가능성이 확대됨
  - \* FTA 체결국과 대부분 SPS 위원회/작업반을 구성하여 매년/격년 마다 회의 개최

- EU-일본('19.2 발효), EU-메르코수르('19.6 타결)는 수출국 위생안전시스템에 대한 인정·보증을 기반으로 CPTPP plus 도입 중임에 따라 한-메르코수르 TA 등 최근 협상 상대국들은 우리 시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을 위한 규정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RCEP-CPTPP Plus)
- 결론적으로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로 수출국으로부터의 SPS 이슈 제기\*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시장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고려가 필수적임
  - \* 정상회담 계기 SPS 이슈 : ①EU산 쇠고기( '06년부터 13개국이 수입허용 요청), ②아세안 각국 및 콜롬비아 등은 열대과일의 신속한 수입허용을 요청 등
- 국민들의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축산물 소비의 상당 부분의 수입산으로 대체되어 자급률은 하락되고 있음
- FTA 타결 확대에 따른 국내 이행과 SPS 현안 등이 국내 시장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한 관련 정부 기능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다.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필요 기능

- 식품산업의 주요 정책환경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인구구조 및 식생활 패턴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편의식품이나 고령친화식품 등의 수요 증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대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FTA 타결 확대에 따른 국내 이행과 SPS 현안 등의 시장 개방 이슈를 고려한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약화의 효과적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
- 식품산업의 성장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고령친화식품 등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전 세계적인 안전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대와 식품 안전 관련 국민 요구에 따라 식품 친환경 및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기관간 협업이 필요함
- 한편, FTA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 수급 안정 정책 관련 기능 강화가 필요함

- FTA 농업협상의 안정적인 대응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FTA 이행의무, 국내 SPS 조치의 WTO 통보 및 대응, 국외 SPS 통보문의 국내 제공 및 대응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SPS 규범이행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구조 차원에서 이들 기능 수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마케팅 기능 및 국내 식품 산업 소비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함
- 국내 식품산업을 확대하고 수입 식품과 경쟁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적인 마케팅 기능 강화를 고려할 수 있음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 단계적 확산 등 수입 식품 증가에 대비한 국내 식품산업 소비기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구축 마련이 필요함

### (3) 축산업

#### 가. 국내 산업 현황

##### ① 축산업 환경 여건 변화

-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국민소득과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여 축산물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축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발전과 축산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음
-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14년 45.4kg 이후 연평균 2.7%씩 증가하였으며, 육류 생산량은 매년 2.3%씩 증가하였음
- 2010년 말 구제역 발생 이후 소, 돼지 매몰 처분으로 2011년 국내 육류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수입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서,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8조 82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기준 19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축산물 생산비는 계란을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표 2-12〉 축종별 경영 및 생산비 비교

축종별	구 분		'17		'18		전 년 대 비	
							증감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증감률(%)	증감률(%)
송아지 (천원/마리)	2,164	3,225	2,212	3,378	48	153	2.2	4.8
한우비육우(천원/100kg)	879	1,018	955	1,106	76	88	8.6	8.7
육 우 (천원/100kg)	524	656	554	686	30	30	5.7	4.5
우 유 (원/l)	650	767	650	775	0	8	0.1	1.1
비육돈 (천원/100kg)	272	284	272	284	0	0	0.0	0.1
계 란 (원/10개_)	1,062	1,117	868	910	-193	-208	-18.2	-18.6
육 계 (원/kg)	1,179	1,237	1,204	1,262	25	25	2.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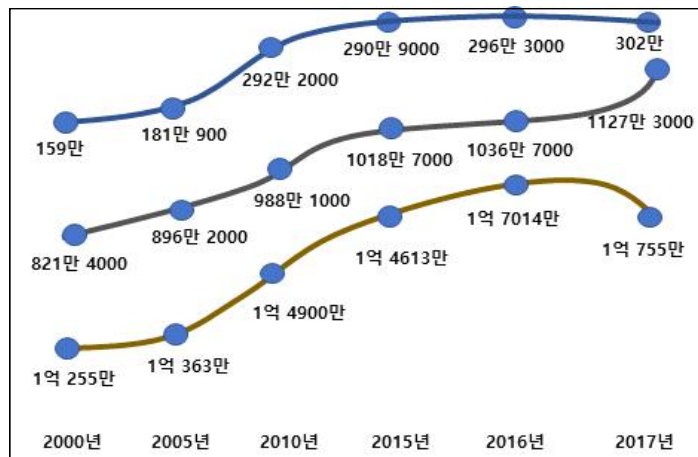
출처 : 2018년 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

- 뿐만 아니라, 농림업 생산액 52.5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5.3%에서 2018년 38%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5개 품목이 축산물로 나타남

\* 축산물 생산액( '18) : 돼지 7.1조원, 한우 4.8, 닭 2.3, 우유 2.1, 계란 1.3

- 다만, 생산량 및 소비량 확대 반면에 가축질병, 악취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어 이는 축산 생산기반 잠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축산 생산량 및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축질병과 축산물 안전 문제, 일부 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 등으로 야기된 환경 문제는 가축 사육거리 제한 확대 등 생산기반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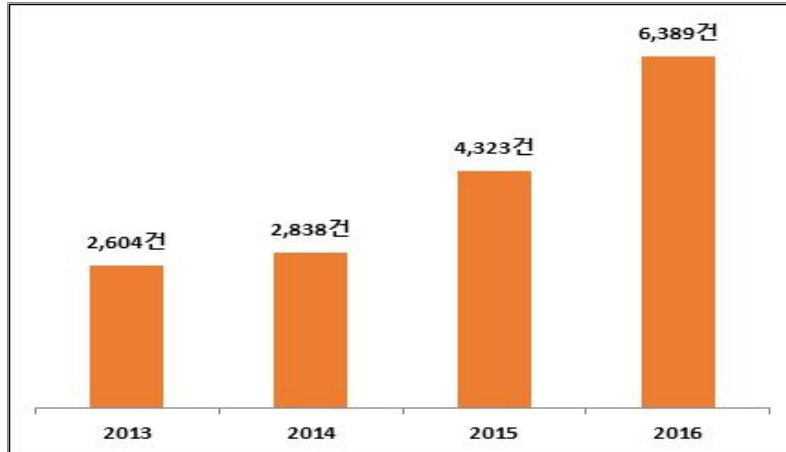
〈그림 2-17〉 가축 사육두수 추이



출처 : 농식품부 및 통계청

\* 가축사육두수 : 한우우 ( '17) 302만, 돼지 ( '17) 1,127만 닭( '17) 1억 755만

〈그림 2-18〉 축산관련악취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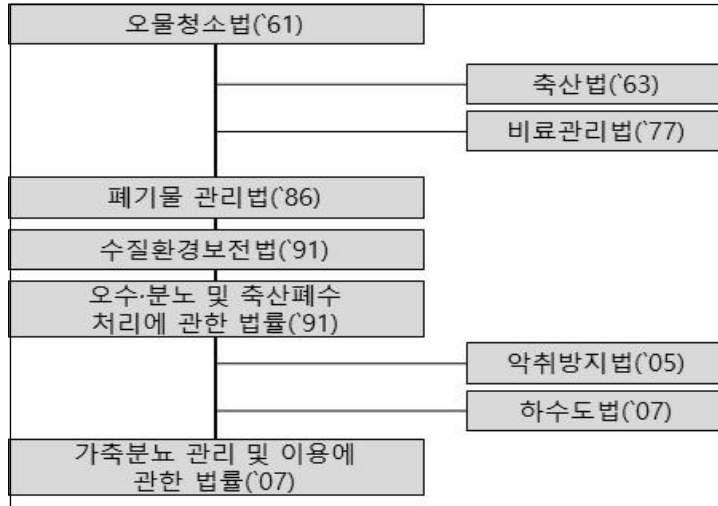


출처 : 한국환경공단

\* 축산악취 민원 : ('14) 2,838건 → ('15) 4,323 → ('16) 6,389 → ('17) 6,112

- 축산물 공급이 부족한 과거에는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 특히, 근래에는 협소한 국토에서의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악취(메탄 및 암모니아 가스 등)를 중심으로 경관/미관, 소음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
- 또한, 축산폐수(가축분뇨)는 일반적으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환경 유해성이 약 90~100배가 높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60%로 알려져, 수환경 측면에서도 적절한 처리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축산업에 따른 환경 영향으로 축산업의 규제가 시작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축산업의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 환경·생활환경에 대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쾌적한 (자연·생활)환경 조성’과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각 개별 법령 내 규정된 입법목적에 의거하여 축산업의 규제가 시작되었음
  - 그간 환경부와 농림부 등 국가기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자원화 이용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여전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그림 2-19> 국내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변천



출처 : 친환경자연순환농협회(2017) 재인용

- 현재, 국내 실정은 상당수의 사육농가 및 공공처리,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원화된 퇴·액비의 살포지 부족, 기준량 이상 과대 살포 등 처리·관리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상기의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제도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도’가 있으나, 사육시설의 설치 면적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현행 제도는 적정 사육두수 관리에 일부 어려움이 존재함
- 효과적으로 환경 문제를 대응하면서 축산 생산기반과 축산업 성장을 계속 담보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 축산 환경이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가축사육 이전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 내 토양양분, 수질, 악취 등의 환경용량 수용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처리가능 용량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 발생의 최소화와 최대 자원화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한 시설의 유지개보수 및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거·처리 단가 증대 또는 정부의 보조지원 확대를 고려야 하며, 이로 인한 해당 부서의 관련 기능의 신설 및 강화는 필수적임
- 또한, 기존 시설을 확대하거나 신규 대상지를 정해야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대상 부지의 확보 계획 시에는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정확한 수요예측, 재정지원 기능의 마련이 필요함



〈표 2-13〉 국내의 가축사육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비교

축종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덴마크
		Missouri	Illinois				
			주거 밀집	기타주거			
돼지	1,000마리 미만	400m	300m (2,500마리 이상)	800m (125마리 이상)	400m (125마리 이상)	500m (20인 이상 거주지)	500m
	1,000 ~ 3,000마리	700m	600m (7,500마리 이상)	800m 이상 (7,500마리 이상)	400m 이상 (2,500마리 이상)	750m (100인 이상 거주지)	2,000m (도시 거주지역)
	3,000마리 이상	1,000m	900m (1만7,500마리 이상)	1,600m (1만7,500마리 이상)	800m (1만7,500마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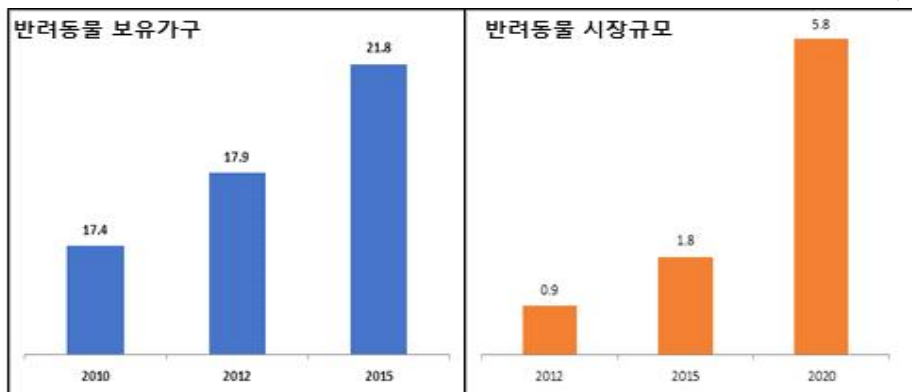
출처 : 성낙원 외(2015) 재인용

## ② 반려동물 산업 환경 변화

-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2015년 1조 8,000억 원 규모에서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세가 높은 산업으로 꼽히고 있음
-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5년 동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도 2012년 9,000억 원에서 2015년에는 두 배 증가한 1조 8,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5조 8,000억 원,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까지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2-20〉 반려동물 보유가구 및 반려동물 시장 규모

(단위 :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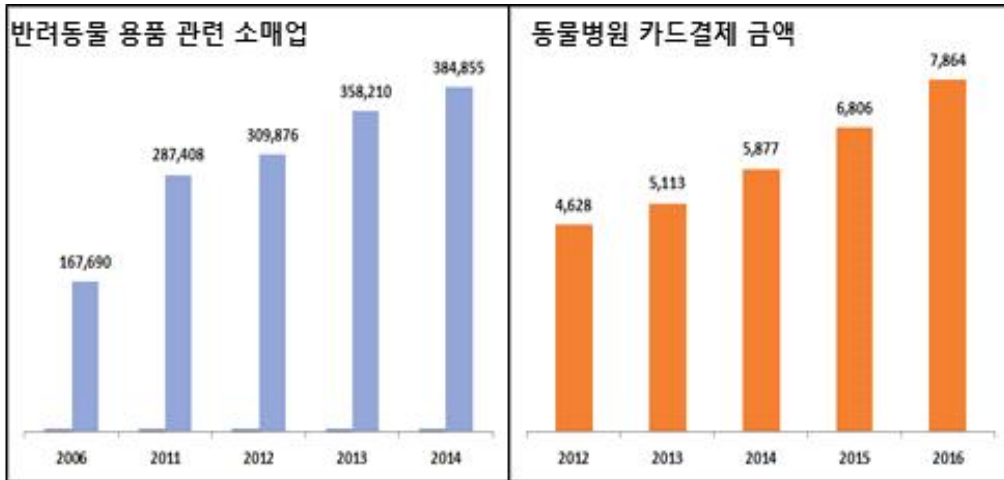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7)

-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용품 관련 소매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14년 반려동물 용품 관련 소매업의 매출액은 3,84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12.6% 증가함

<그림 2-21> 반려동물 용품 관련 소매업 및 동물병원 카드결제 금액

(단위 : 백만원, 억 원)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우)

- 또한, 2016년 동물병원에서 사용한 연간 카드결제액은 7,864억 원으로 2015년의 6,806억 원보다 1,058억 원 늘어났으며, 이는 결제 총액뿐만 아니라 연간 증가액으로도 역대 최대치임
- 가구당 연평균 반려동물 관련 용품 지출비용은 3만 7,440원으로 10년 동안 10.1% 증가하였음
- 특히 1인가구와 4인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월평균 지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1인가구의 지출 비중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 중 반려동물 관련 용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0.27%로 4인가구 0.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4〉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월평균 지출규모 비교

(단위 :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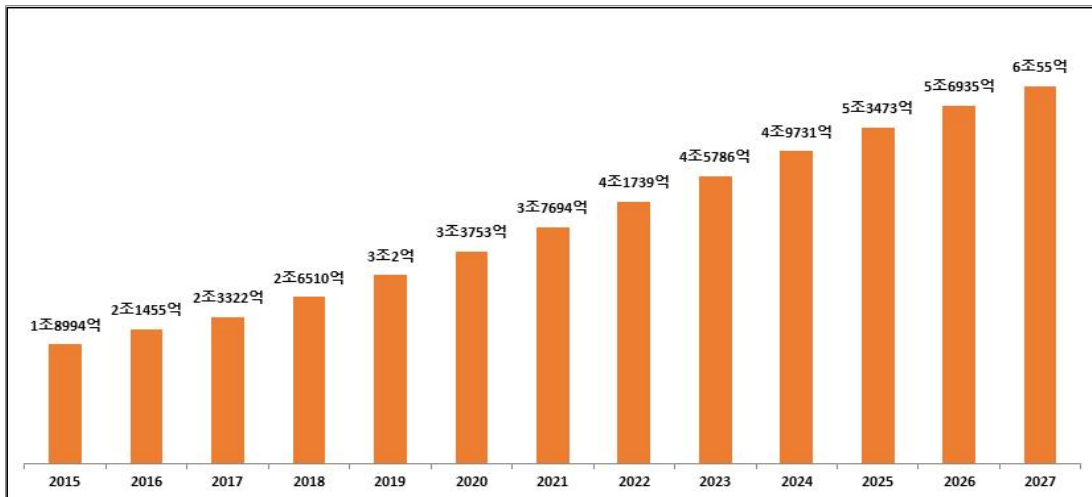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2006	2016	연평균 증가율	2006	2016	연평균 증가율
소비지출(원)	737,598 (100.0)	1,041,519 (100.0)	3.5	2,285,751 (100.0)	3,195,470 (100.0)	3.4
애완동물 관련 물품	739 (0.10)	2,862 (0.27)	14.5	996 (0.04)	3,437 (0.11)	13.2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397 (0.05)	1,946 (0.19)	17.2	875 (0.04)	2,775 (0.09)	12.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자료

- 다만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먹거리인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70%를 외국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해있는 상황임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먹거리에도 신경을 쓰면서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2-22〉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단위 : 억 원)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10)

\*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억 원) : ' 17) 23,322 → ' 20) 33,753 → ' 27) 60,055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가구당 월평균 13만 5,632원으로, 이 중 40%가 사료와 간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프리미엄, 유기농 등의 상품으로 고급화되는 추세임

- 다만, 국내 펫푸드 시장의 70%는 네슬레 퓨리나, 시저, 로얄캐닌 등 외국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수입량은 2011년 3만 6,308톤에서 2016년 5만 3,292톤으로 8.0% 증가하였음
- 이에 비해 국산 사료 수출 물량은 2011년 5,094톤에서 2016년 6,613톤으로 5.4% 증가하였으나 수입량 대비 절대물량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2011~2016년 동안 사료 수입물량은 25만 6,458톤으로 같은 기간 수출물량 3만 5,368톤의 7.3배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수입이 수출보다 약 10.1배 더 많아 수입품이 국산 수출품에 비해 단위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주로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고급상품에 대한 국내시장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은 오래전부터 수입품에 익숙해져 있고 국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낮아 미국이나 유럽 등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
- 반려동물 보유 및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
- 외국 브랜드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등 국내 기업들은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를 내어줄 개연성이 존재함
-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능과 전문인력의 적절한 강화가 필요함
-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형성’ 추진을 위하여 반려동물 학대행위 수사, 사인 규명, 동물복지 농장 관리 등 동물보호업무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능이 신설 강화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확대 등 동물보호 관련 국민 공감대 형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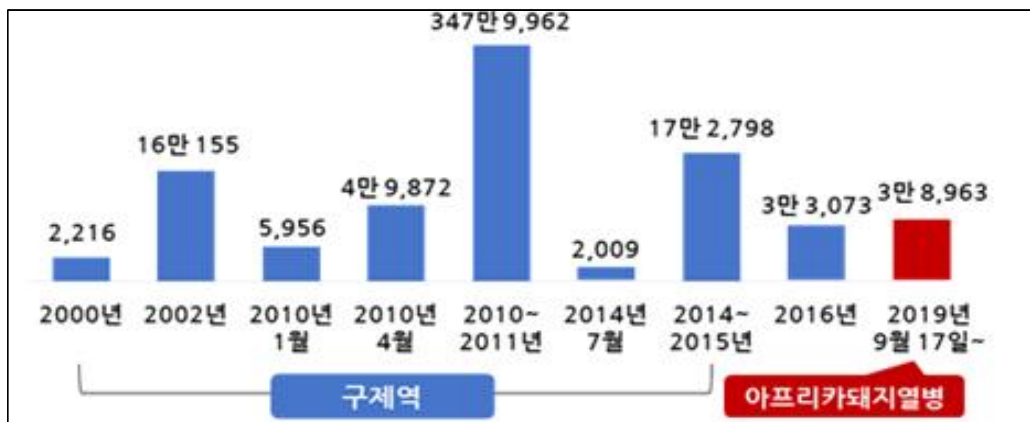
## 나. 환경 여건 변화 및 요인

- 2000년대 중반 이후 AI, 구제역, 브루셀라병, 소결핵, 돼지열병 등 고병원성 질병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상존하는 ASF·구제역·AI 발생 위험에 대하여 국산백신 개발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 등 질병 청정화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2008년~2017년 10여년 간 가축질병 발생 건수는 총 13,731건, 6천 4백여 마리의 가축이 동물질병에 감염되어 살처분·치료 등의 처리가 실시되었음
- 최근 가축질병 발생동향 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의 발생이 많으며 피해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 질병 종류별로는 결핵병의 발생 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발생 두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23〉 돼지 매몰처분 현황

(단위 : 마리)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표 2-15〉 최근 10년 간 국내 가축질병 발생 건수

(단위 : 발생 건수)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가금티푸스	24	58	27	57	52	51	34	54	25	6	388
결핵병	549	578	713	900	684	718	886	777	857	256	6,918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50	0	0	252	138	334	140	14	0	0	928
구제역	85	0	0	29	159	21	11	2	3	0	310
뉴캐슬병	0	0	0	0	0	12	0	0	0	0	12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3	59	80	60	56	52	31	35	29	12	467
돼지열병	0	0	1	0	0	2	6	0	0	0	9
브루셀라병	803	484	190	129	78	87	152	124	107	50	2,204
사슴만성소모성질병	0	0	0	0	0	11	0	9	6	0	26
<b>총합계</b>	<b>1,564</b>	<b>1,179</b>	<b>1,011</b>	<b>1,427</b>	<b>1,167</b>	<b>1,288</b>	<b>1,260</b>	<b>1,015</b>	<b>1,027</b>	<b>324</b>	<b>11,262</b>

출처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2020년도는 6월 30일까지 발생 건수를 집계)

- 가축질병은 지난 10년 간 11,262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2017년 가축질병과 관련된 피해액은 830억 원으로 전체 사회재난 피해액 1,092억 원 대비 76% 비중으로 심각한 수준임
  - 구제역의 경우 2000년 이후 9차례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은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여 평균 1,153억 원 재정이 지출되었으며,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연계되어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음
- 또한, AI·구제역·ASF 등 가축 전염병은 주변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주변국 고위험 가축질병 확산 추세에 따른 국내 유입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임
  - \* '19년 발병 현황 : (AI) '19년 대만 등 110여건, (구제역) '19년 19개국 520여건, (아프리카돼지열병) : '19년 베트남, 중국 등 주변국에서 8,800여건 발생
  - 유럽 일부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 중국 전지역, 베트남 등 한반도 주변국가에 확산됨에 따라 남북교류 시 인적·물적 자원 이동에 따른 육로 전파의 우려가 가중됨
-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변화에 따른 신종 및 변종 병원체 출현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가축질병, 매개 동물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동물 질병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해 매년 위험질병을 지정하여 중점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간 정부 차원에서 수차례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관련 R&D를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AI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가축전염병의 연례적 발생·확산은 축산업뿐만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가축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환경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과학기술적 대응 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조사에 모든 자원 우선 투입, 전파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 따라서 구제역 백신 개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발생 바이러스에 특화된 국산백신 개발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또한, 식물의 경우에도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및 병해충의 국내 정착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전 대응을 위한 식물검역 연구개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제교역량 및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 병해충 유입 위험 요인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해외여행객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석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래식물병해충의 국내 침입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상존하여 사전대응을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 수입검역건수 : '00) 230천건 → '10) 3,797 → '18) 4,488(1,851%↑)
  - \* 병해충 검출 : ('00) 360종 6,233건 → ('10) 605, 9,731 → ('18) 764, 13,779(121%↑)
  - \* 붉은불개미 : 컨테이너 등 비식물성 화물 / '17.9월 이후 8회 발견
  - \* 과실과리류 : 해외여행국 휴대품 / '00년 이후 휴대품 검역과정에서 82건 발견
- 그간 동식물 질병에 대한 수비적 전략 관점을 사전적인 예방적 관점으로 전환한 전략 수립과 실행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함
- 그동안 동물 및 식물 질병 대응은 발병 후 대응하는 수비전략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경제적 피해 경감, 산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과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가축질병 예찰·예방 중심 기술개발과 비상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의 전문성 강화 및 비상제도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가축질병 연구개발은 국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행정관리 체계 속에 있어 독립적인 연구개발 총괄 역할 수행이 어려울 개연성이 존재함
  - 검역본부의 기능을 현안대응연구에 집중하여 보다 신속히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구 및 예측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전담조직을 신설 육성하고 관련 전문인력 보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긴급 상황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연구개발 중인 기술들을 자가백신이나 시험백신의 형태로 제조하여 신속히 방역에 사용하도록 동물용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개선 등 동물백신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관련 기능

- 주요 정책환경 고려 사항은 축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련 ‘가축분뇨 발생의 최소화와 최대 자원화 촉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내실있는 성장 유도’, 축산업 뿐 아니라 인체와 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 질병의 예방 중심 전략과 실행’ 과 ‘관련 거버넌스 전문성 강화 및 비상제도 마련’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
- 축산 생산기반과 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축산업 환경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수거·처리 단가 증대 또는 정부의 보조지원 확대, 신규 대상부지의 확보 계획 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정확한 수요예측, 재정지원 등의 기능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적 기능과 전문인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가축전염병의 연례적 발생·확산의 통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그간 발병 후 대응하는 수비적 전략 관점에서 사전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예방 중심 전략 수립과 실행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능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가축질병 예찰·예방 중심 기술개발과 비상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연구 개발 총괄과 현안대응 연구 역할 명확화 관련 거버넌스 전문성 강화 및 동물백신 패스트트랙 등의 비상제도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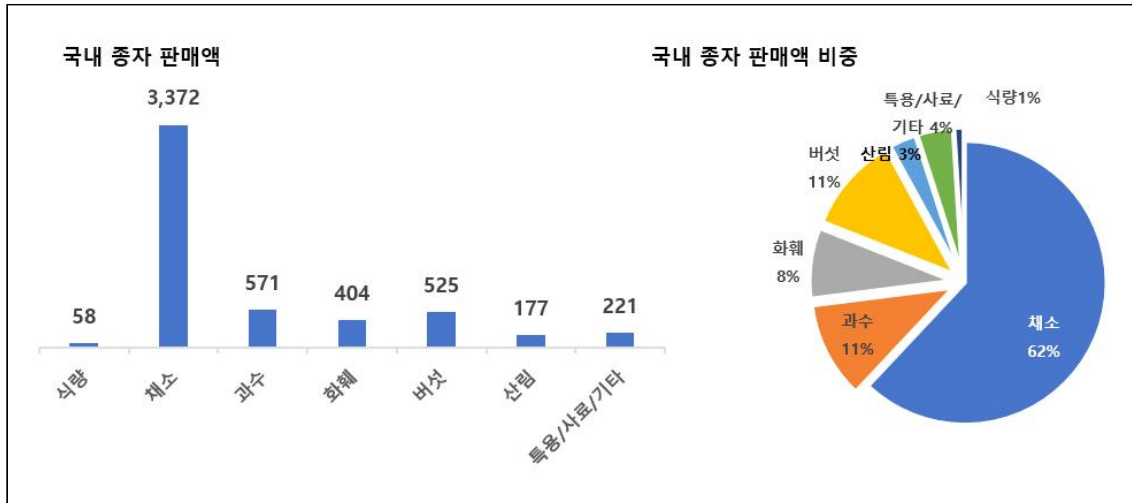
## (4) 종자산업

### 가. 국내 산업 현황

-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품목부류에 따라 육종과 보급체계가 다른 것이 특징적이며, 품종 보호제도 정착으로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를 갖추게 된 이후, 매년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종자산업 산업구조는 종자산업법 개정을 통해 품종 보호제도가 정착되고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 등이 이루어진 후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종자의 품목부류에 따라 육종과 생산 및 보급체계가 다른 특징이 있음
  - 채소류의 경우 완전민간주도형으로서 육종은 물론, 생산·보급을 전적으로 민간이 담당하는 대표적인 상업용 종자임
  - 반면, 벼, 보리, 콩, 우수수, 감자의 5대 식량작물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체의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여 담당하는 완전관주도형에 해당함
  - 기타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전매작물, 과수와 화훼의 경우 관민혼합주도형으로 정부와 민간이 육종이나 생산·보급을 공동으로 담당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형태임
- 2017년 「종자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자 생산 판매업으로 등록한 종자업체의 2016년 종자 판매액은 5,408억 원으로 전년 5,008억 원 대비 8% 증가하여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 판매액은 채소종자가 3,371억 원(62.3%)으로 가장 많고, 벼 605억 원(11.2%), 과수 571억 원(10.6%), 화훼 404억 원(7.5%), 산림 177억 원(3.3%), 식량 58억 원(1.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4〉 국내 종자산업 규모

(단위 : 억 원, %)



출처 : 국립종자원, 2018

〈표 2-16〉 국내 종자업체의 종자 작목군별 판매액

(단위 : 억 원, %)

구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산림	특용/사료/기타
종자판매액	58.0 (1.1)	3,370.9 (62.3)	571.2 (10.6)	404.0 (7.5)	605.1 (11.2)	177.5 (3.3)	220.9 (4.1)

출처 : 국립종자원, 2018

- 다만, 판매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1,175개(87.9%)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97개(7.3%), 15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업체는 46개(3.4%), 4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9개(1.4%)로 소규모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형태별로 구분하면 개인 사업체가 895개(66.9%), 회사법인 295개(22.1%), 회사 이외의 법인 146개(10.9%), 비법인단체 1(0.1%)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7〉 국내 종자업체 매출규모

구분		업체수	비율(%)
계		1,337	100.0
판매액 규모별	소규모(5억 원 미만)	1,175	87.9
	중소규모(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97	7.3
	중규모(15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46	3.4
	대규모(40억 원 이상)	19	1.4
조직 형태별	개인사업체	895	66.9
	회사법인	295	22.1
	회사 이외의 법인	146	10.9
	비법인단체	1	0.1

출처 : 국립종자원, 2018

- 이러한 산업적 특성과 양적 확산에 비례하여 품종보호 및 민간종자 등에 대한 검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기능과 더불어 식물 검역 및 유통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산업의 양적 확산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이 다소 증가하면 출원 작물·품종다양화 등에 따른 심사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며, 민간종자 검정 신청 확대(화훼·수목류 증가),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 LMO 모니터링 업무 강화 등 이에 대한 관련 업무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연도별 출원 건수: ('16) 657 → ('17) 693 → ('18) 713

〈표 2-18〉 18년 대비 19년 검정량 확대 추이

구분	검정량('18)	검정량('19.11.)
민간종자 검정	60작물, 1,574점(876건)	91작물, 2,241점(1,652건)
과수묘목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414주(103건)	580주(90건)
LMO (의심)종자 정밀검정	235점	43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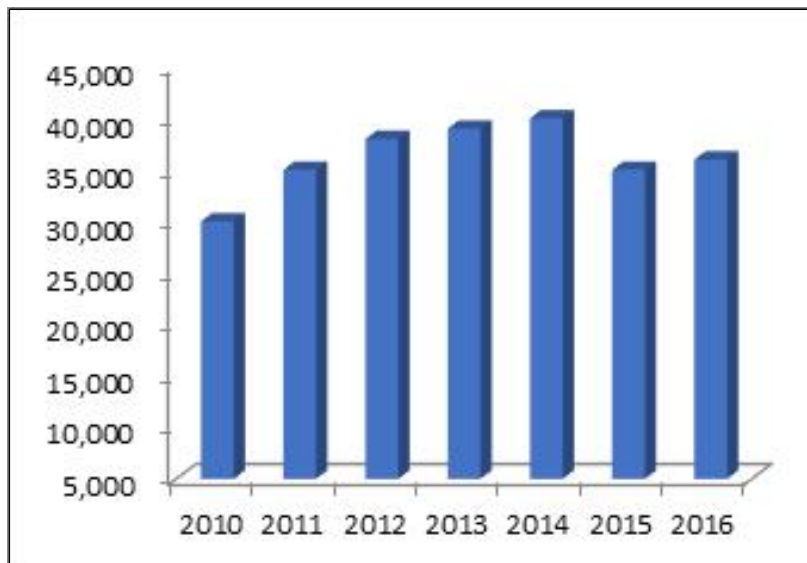
-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배용으로 승인된 GM 종자는 없기 때문에 (비)의도적 GM 종자의 유통 예방을 위한 검사·관리는 필수적임
- 또한, 과수묘목 무병화 총괄 관리, 무병묘 인증제도 운영 및 바이러스 검정기관 지정·관리 업무, 불법·불량 묘목 유통관리 강화 등 핵심 기능의 강화는 필수적임

## 나. 환경 여건 변화 및 요인

- 세계 종자시장은 2010년 307억 달러에서 2017년 394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세계 농작물 종자시장은 기후변화,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2010년 307억 달러에서 2014년 410억 달러로 급성장하였으며, 2017년 394억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세계 종자가격의 소폭 하락 및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재배면적 감소 등을 원인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종자 작목별로는 옥수수 41%, 콩 21%, 채소류 14%, 곡류 6%, 쌀 5% 등으로 곡물 종자 비중이 70%이상이며, 권역별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지역(NAFTA) 44%, 남미 21%, 유럽 18%, 아시아 16%, 중동/아프리카 2%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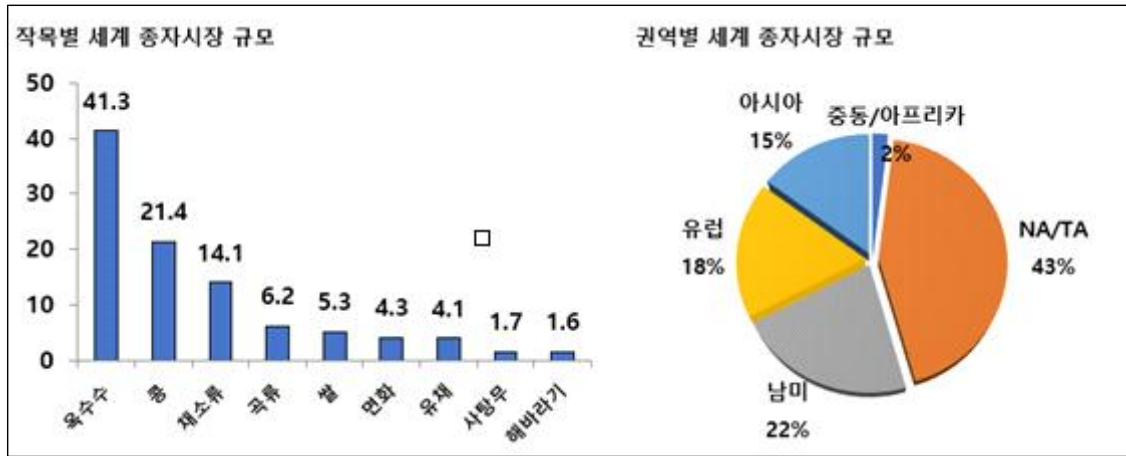
〈그림 2-25〉 세계 종자시장 규모

(단위 : 백만달러)



〈그림 2-26〉 작목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비중 및 권역별 세계 종자시장 규모 비중

(단위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7)

- 세계종자협회(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ISF)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종자 교역량은 식량작물이 63%, 채소가 34%, 화훼가 3%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글로벌 기업을 소유한 국가인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이며, 주요 수입국 역시 글로벌 기업을 소유한 국가로 국제 종자교역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음

〈표 2-19〉 주요 종자 수출국 및 수입국

구분	순위	국가	식량·사료 (백만\$)	화훼(백만 \$)	총액(백만 \$)	총액(백만 \$)
주요 수출국	1	프랑스	1,198	409	16	1,623
	2	미국	901	624	71	1,596
	3	네덜란드	244	1,221	60	1,525
	.	.	.	.	.	.
	30	한국	13	46	0	59
주요 수입국	1	미국	544	381	56	981
	2	네덜란드	311	420	39	770
	3	프랑스	542	143	7	692
	.	.	.	.	.	.
	21	한국	36	76	6	118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7)

- 세계 시장은 다국적 기업이 70% 이상 점유하는 편중 현상이 존재하며,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 등을 통한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10대 다국적 기업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다국적 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10대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6년의 경우 소폭(1%) 증가하였으며, 2011년 240억 달러에서 2015년 26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266억 달러로 성장하였음
  - 이들 기업은 최근 M&A 진행으로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기술 기반의 원천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투자확대 및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은 10대 다국적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2011년 69.6%에서 2016년 73.1%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종자산업의 첨단생명과학 산업화로 상당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선점과 타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 확대, 인수 합병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2015년 말 듀폰과 다우케미컬이 합병했으며, 중국 화학 회사인 켐차이나는 2016년 2월 신젠타를 인수 계획임을 발표
- 한편 종자교역량 증가로 고품질 수입 종자의 유통 관리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종자교역량 증가에 따라 고품질 수입 종자의 유통을 위해 수입종자에 대해 공인품질증명서를 요구하는 종자 수입국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 등 종자산업 선진국은 자국 개발 품종·종자의 해외 무단유출이나 해외 품종 미등록에 따른 자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강구 추진 중임
    - 일례로, 일본 현지 언론은 자국개발 포도(샤인머스켓), 딸기(육보, 장희 등) 품종의 한국과 중국 유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18.8) 등 유전자원 관련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도 대두되었음

## 다.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관련 기능

- 이러한 산업적 특성과 양적 확산에 비례하여 품종보호 및 민간종자 등에 대한 검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기능과 더불어 식물 검역 및 유통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산업의 양적 확산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이 다소 증가하면 출원 작물·품종다양화 등에 따른 심사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민간종자 검정 신청 확대(화훼·수목류 증가),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 LMO 모니터링 업무 강화 등 이에 대한 관련 업무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배용으로 승인된 GM 종자는 없기 때문에 (비)의도적 GM종자의 유통 예방을 위한 검사·관리는 필수적임
  - 또한, 과수묘목 무병화 총괄 관리, 무병묘 인증제도 운영 및 바이러스 검정기관 지정·관리 업무, 불법·불량 묘목 유통관리 강화 등 핵심 기능의 강화는 필수적임
- 주요 정책 고려 사항은 국내 산업의 양적 확산에 비례하는 ‘검정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 및 ‘식물 검역 및 유통관리 강화’ 와 더불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차원의 ‘R&D 투자 확대’ 로 요약할 수 있으며,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성장세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출원 작물 증가 및 품종다양화에 따른 심사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검사·관리 등 관련 기능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과수묘목 무병화 등을 위한 총괄관리 및 인증제도 운영과 불법·불량 종자 유통 관리를 위한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불법·불량 종자 유통 시 농업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상시적인 유통조사가 필요하나 전담팀이 없어 효율적인 유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육묘산업 제도 신규 시행, 종자용 LMO 조사·검정 확대 등 신규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조직체계로는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해당 기능과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임
  - 다국적 기업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등의 국가 차원 지원이 필요함
    -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 내 외국 과수종자 수입신고 의무제 도입 방침과 우량 종자(품종)의 수출확대로 수출 가능한 우수품종의 무단복제 방지 장치 기능과 관련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함

- 더불어, 신속한 현장 대응 및 변화된 여건에 따른 수급대책 지원에 대한 기능 마련이 요구됨
- 앞서 살펴본 농업, 식품산업, 축산업, 종자산업별 현황 및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농업은 공익적 가치 확산,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어촌 복지, 스마트팜 등 기술 환경 변화의 활용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식품산업의 경우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식품산업 변화 및 신수요 증대 촉진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FTA 타결 확대에 따른 시장 개방 이슈를 고려한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약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능 및 전문성이 마련되어야 함
  - 축산업은 산업 내 위협 요인 제거 위한 축산업 환경개선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내실있는 성장 유도하고 가축 질병의 예방 중심 전략과 실행 관련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종자산업은 검정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와 식물 검역 및 유통관리 강화가 필요하여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산업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표 2-20〉 주요 산업별 행정 환경 시사점

〈농업 주요현황 및 시사점〉	〈식품산업 주요현황 및 시사점〉
<b>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b>	<b>식품 산업 성장세 촉진 위한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동시 기대할 수 있는 공익형직불제의 밀도 있는 운영을 위한 기능 강화 필요(기본계획 수립, 기금 운영, 준수 의무 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li> <li>●효과적인 관리 및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담보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관리 등 관련 데이터 구축 기능 강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산업의 성장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령친화 식품 등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 강화 필요</li> <li>●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통합적 마케팅 기능 및 국내 식품산업 소비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지원 기능 강화 필요</li> </ul>
<b>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추진</b>	<b>국제적 수준 안전 관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유효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계적인 안전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대와 식품 안전 관련 국민 요구 및 관심도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컨대 농업재해·안전사고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 강화, 정책보험 제도개선의 지속 추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친환경 및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 강화 및 관련 부서·기관간 협업 필요</li> </ul>
<b>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의 적극적 활용</b>	<b>국내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팜확대 추진, 농업 공간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성 제고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의 적극적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들의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FTA 등 시장 개방으로 농축산물 소비의 상당 부분의 수입산으로 대체</li> <li>•FTA 타결 확대에 따른 국내 이행과 SPS 현안 등이 국내 식품시장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하여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②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가소득 안정 및 농어촌 복지, ③ 스마트팜 등 기술 환경 변화의 활용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식품산업 변화 및 신수요 증대 촉진, ②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③ FTA 타결 확대에 따른 시장 개방 이슈를 고려한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약화의 효과적 대응 위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고려</li> </ul>
---	---

<b>&lt;축산업 주요현황 및 시사점&gt;</b>	<b>&lt;종자산업 주요현황 및 시사점&gt;</b>
<b>축산 생산 기반 및 지속 성장 위한 환경 개선</b>	<b>종자산업 성장세 촉진 위한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 생산기반과 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축산업 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법 필요</li> <li>•축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축 분뇨 관련 가축분뇨 발생의 최소화 및 최대 자원화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세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출원 작물 증가 및 품종다양화에 따른 심사 부담 확대 대응을 위한 검사·관리 등 관련 기능 강화 필요</li> <li>•국내 산업의 양적 확산에 비례하는 검정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 수요 대응 필요</li> </ul>
<b>반려동물 시장 내실 있는 성장 유도</b>	<b>식물 검역 및 유통관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적 기능과 전문인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수묘목무병화 등을 위한 총괄관리 및 인증 제도 운영과 불법·불량 종자 유통 관리를 위한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 필요</li> <li>•육묘산업 제도 신규 시행 및 종자용 LMO 조사·검정 수요 확대 대응 필요</li> </ul>
<b>가축 질병의 예방 중심 전략과 실행</b>	<b>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가축전염병의 연례적 발생·확산의 통제 필요성이 증대로 사전적 관점에서 예방 중심 전략 수립과 실행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관련 기능 및 인력 강화 필요</li> <li>•가축질병 예찰·예방 중심 기술개발과 비상 신속 대응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국적 기업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R&amp;D 투자 확대 등의 국가 차원 지원 필요</li> <li>•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 내 외국 과수종자 수입신고 의무제도입 방침과 우량 종자(품종)의 수출확대로 수출 가능한 우수품종의 무단복제 방지 장치 기능과 관련 전문 인력 확보 필요</li> </ul>

① 축산업의 위협 요인 제거 위한 축산업 환경개선, ②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내실있는 성장 유도, ③ 가축 질병의 예방 중심 전략과 실행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 고려

① 검정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  
② 식물 검역 및 유통관리 강화,  
③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차원 지원 관련 기능 및 전문성 강화 고려

## 2) 주요 국가별 정책 동향

### (1) 미국

#### 가. 주요 정책 동향

- 미국의 농업 정책은 농가 소득안정과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산물의 유통 관리뿐 아니라 농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그리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의 식품 소비까지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USDA)의 사업 중 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실상 복지기능을 하는 것이 많음
  - 재정적자 압박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은 생산자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계된 관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소득보전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정보관리시스템(CIM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제도, 보조금 지급 등에도 활용되고 있음

## 나. USDA(미국 농무부)

### 가) 조직 개요

- USDA는 농지 개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의 부처이며, 공공 정책, 최고의 과학 및 효과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식품, 농업, 천연 자원, 농촌 개발, 영양 및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사업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나) 주요 역할

-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국립산림지 감독, 농촌 지역의 발전 연구,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및 기술 연구의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 주요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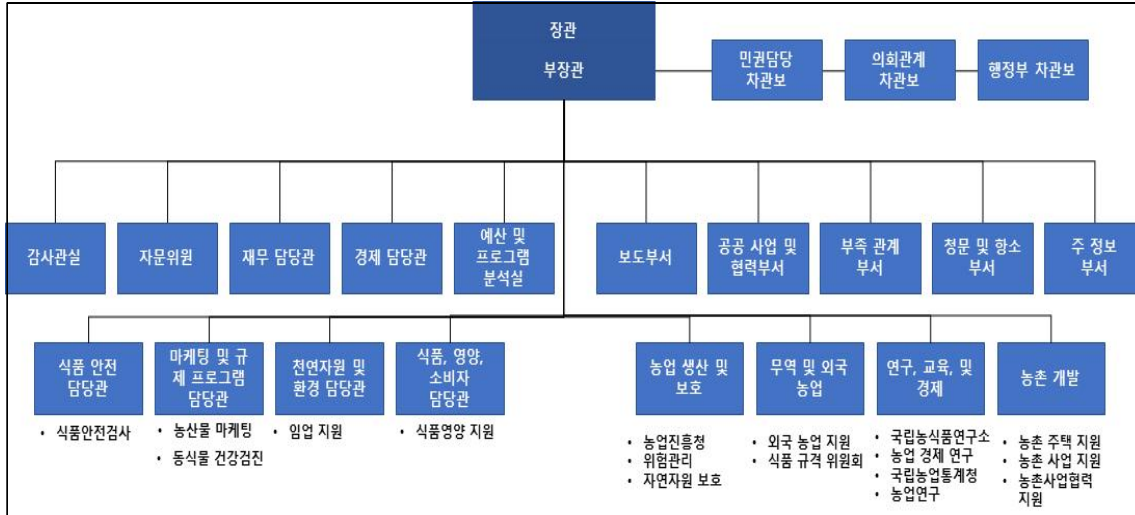
- USDA는 공공 서비스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18-2022년 전략계획을 세웠으며,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7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략 목표의 첫 번째는 대국민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며, 두 번째는 미국 농업 생산자가 역량을 함양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또한, 세 번째 전략 목표는 미국 농산물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며, 네 번째는 농촌 번영과 경제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모습이며, 다섯 번째는 기술과 연구를 통한 사유지 관리체계의 강화임
  - 여섯 번째 전략 목표는 국가 산림 시스템을 통한 생산적인 토지 사용 촉진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함

- 또한,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농가지원의 중점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품목별 정부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예작물 지원을 위한 예산 및 특수작물과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증액하고 있음
  - 고소득 부농에 대한 지원 제한을 위해 품목별 지원합계로 수혜한도를 규정하고, 통합된 농가 소득으로 품목별 지원제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미국 농산물의 해외시장 접근 제고를 위해 수출시장개발, 수출 신용보증, 직접 수출 보조 등 다양한 수출지원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국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지원청(FAS)과 미국 무역 대표부(USTR)를 통해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 라) 조직 기능

- 각 단위 조직별로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 농가 및 해외농업 지원, 농촌개발, 식품·영양 및 소비자 지원, 식품안전관리,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 유통·검역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USDA 산하에는 산림청(FS), 자연자원보전청(NRCS), 농업지원청(FSA), 해외농업청(FAS), 위험관리청(RMA), 농촌기업청(RBS), 농촌설비청(RUS), 농촌주택청(RHS), 지역개발사무소(OCD), 식품 및 영양청(FNS), 영양정책홍보센터(CNPP), 농업연구청(ARS), 식량농업국립연구소(NIFA), 농업경제연구소(ERS), 국립농업도서관(NAL), 국립농업통계청(NASS), 농업유통청(AMS), 동식물검역청(APHIS), 곡물검사 및 관리청(GIPSA)의 19개 소속기관이 편제되어 있음

<그림 2-27>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조직도



자료: 미국 농부부([www.usda.gov](http://www.usda.gov))

□ 주요 기능인 농촌 지원,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등의 주요 업무별 운영구조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2-21> 미국 농부부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구 분	담당기관	기관유형	운영조직	주요 업무	주요특징
농촌 지원	농무부 농업 지원청 (FSA)	정부소속	FSA 본부 지원부서와 51개 주 사무소, 2,124개 군 사무소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가격, 농가소득, 안정, 환경보전, 재해지원, 국제식량지원, 직불제 사업	농업지원청 (지급), 현장활동관리부 (신청, 점검)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환경 보호청 (EPA)	정부소속	본부, 12개 연구소, 10 지역사무소 (14,000여 명)	식품안전 및 검사업무 신규농약 등록, 잔류농약기준설정	농식품안전관리 다수 부처에서 다원화 체계
농산물 유통 관리	농무부 주정부	정부소속	농관원 8과 1팀, 시험소, 9 지원, 117 사무소 (1,433명)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교육·홍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FAT 관세특례법

방역	동식물 위생 검사처	중앙행정 기관	수의국 1,800여명	가축방역업무의 콘트롤 타워	가축방역비상관리센터를 운영 중으로, 질병 발생 시 방역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조정하고 필요 장비 및 민간수의사 동원 등 역할 수행
검역	APHIS (동식물 검역청)	정부소속 부서	2,700여명	동식물국경검역 및 가축방역	중앙정부가 주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는 구조 이외 여러 부처에 검역기능과 인력이 산재되어 있음
	CBP (국경보 호기관)	주정부 소속			

## (2) 일본

### 가. 주요 정책 동향

- 일본은 금융완화, 재정지출, 신(新)성장동력 만들기 등 국가적 차원에서 성장주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을 신성장동력의 중심축 중 하나로 설정하여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이라고 하는 농정개혁의 큰 비전하에서 생산 현장 강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구축, 수요 확대를 주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수출 확대, 6차산업화 촉진, 경영소득안정, 농지중간관리기구, 미곡 정책 개혁, 다면적기능지불제도, 집락(集落)기능 유지 등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적 정책을 제시하고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기업의 자본과 기술·노하우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에 적합한 새로운 기반정비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나. MAFF(일본 농림수산업성)

### 가) 조직 개요

- MAFF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일본의 중앙 행정부의 부처이며, 농산어촌 및 중산간 지역 등의 진흥,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림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 식품의 안정제공 확보, 삼림의 보속배양 및 삼림 생산력의 증진,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사업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나) 주요 역할

- 생활을 유지하는 음식과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계승하는 것에 사명을 갖고 있으며, 정책의 커다란 추진전략을 ‘공격적 농림수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 주요 정책방향

-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의 주요 정책 내용은 식문화·식품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통한 국내외 수요확대와 지역의 장점을 살린 특산물 생산 및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농업·도시농업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또, 감산정책 폐지 및 논농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자본 활용 및 농지·농협 정책 개혁을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협개혁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집약화하는 생산현장의 강화하고 농지 중간관리기구(농지은행) 활용을 통한 규모화·단지화 지원, 농협개혁에 의해 농자재·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임

- 이와 함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기업의 출자 비중을 2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지역농협이 지역의 특성을 맞는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특히,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정농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산어촌의 인구감소 및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한 다면적 기능 지불교부금 등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라) 조직 기능

- 각 단위 조직별로 식료의 안정공급의 확보,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림어업자의 복지의 증진, 농산어촌 및 중산간지역의 진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발휘, 삼림의 보존육성 및 삼림 생산력의 증진,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의 관할사무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는 임야청과 수산청이 있음
- 주요 기능인 농촌 지원,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방역, 검역 등의 주요 업무별 운영구조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2-22〉 일본 농림수산성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구 분	담당기관	기관유형	운영조직	주요 업무	주요특징
농촌 지원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지방정부	지방농정국 7과, 347개 지역거점 (13,210여명)	농정기획업무, 식품표시 조사, 농산물검사, 농촌농업 정비사업 등, 지방농정사무소 지도·감독	지방농정국 (지급), 시정촌 (신청)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후생노동성	지방정부	검역소, 지방후생국, 지방자치단체 등 (32,000명)	농장이후관리 농산물 중 농약 MRL 설정	'06년부터 PLS 시행
농산물 유통 관리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 산하	정부소속	중국 세관총서와 세관: 원산지 조례의 관리 및 집행 기관	농식품 표시의 관리감독, 규법화, 품질사기방지, 농식품기업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안함



식량	농림수산성	중앙행정기관	정책총괄관(1부, 1참서관, 4과, 5실), 농촌진흥부(1부, 5과, 8실)	미국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및 비축제도 운영,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소비 촉진, 두류·맥류 등 밭 작물 육성, TRQ운영 등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을 비롯해 식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 농촌의 진흥 등을 관장한다. 광의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농수성소비안전국도 관여
방역	농림수산성	중앙행정기관	소비안전국 동물방역과	가축방역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	'01년 BSE 발생계기로 '04년 축산 진흥과 방역 분야 분리 운영 지방방역조직은 인력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양호 축산 여건도 오리사육규모가 적고, 가금 사육 밀도가 낮아 SI예방 여건 유리
검역	동물검역소, 식물검역소	정부 및 지자체 소속	900여명	동식물국경검역 및 가축방역	검·방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이나, 연구기능은 따로 독립된 기구로 분리되어 있음

### (3) 중국

#### 가. 주요 정책 동향

-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4화 동보(四化同步)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서 최우선 국정 과제 문건의 키워드로 등장하여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농업 현대화 계획은 농정의 4대(경쟁력, 소득, 복지, 수급·유통) 축과 관련된 추진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의 농업분야 적용을 위한 농업의 첨단 산업화, 인터넷과 농업의 결합, 농업의 6차산업화, 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내수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농민재산권제도 개혁도 중요시하고 있음

## 나. MOA(중국 농업농촌부)

### 가) 조직 개요

- 농업농촌부는 중국 정부 내의 중앙행정 기관이며, 농업, 어업, 축산, 원예, 동물 복지, 식료품 관리 등 관련된 환경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사업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나) 주요 역할

- 재배업, 목축업, 어업, 농업기계화, 농촌기업, 농지개간 등 농업관련 각종 산업과 농촌경제발전정책, 발전전략, 중장기 발전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농업과 관련된 재정 및 세무, 가격, 금융보험, 수입, 수출 등 정책제정에 참여하여 그에 따른 농업행정을 추진하는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 조직 기능

- 각 단위 조직별로 주요 농산품 생산 지도, 농산품 품질안전 수준 향상, 병충해 예방과 치료, 농업 재해방지과 재해감소, 농업과학 연구, 농업기술 보급, 농업 국외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45개 산하기관(중국농업과학원, 중국 수산과학연구원, 농업부정보센터 등)을 관리하고 있음

〈표 2-23〉 중국 농업농촌부 조직

조직명	
인사노동사	Department of Personnel and Labor
산업정책과 법규사	Department of Sectoral Policy and Law
농촌경제체제와 경영관리사	Department of Rural Economic System and Management
시장과 경제정보사	Department of Market and Economic Information
발전계획사(전국농업자원구획사무실)	Department of Development Planning (National Office of Agricultural Resources and Regional Planning)
재무사	Department of Finance
국제협력사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과학기술교육사 (외래물종관리사무실)	Depart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Education (Office of Exotic Species Control)

재배업관리사(식물보호사무실)	Department of Crop Production (Office of Plant Protection)
농업기계화관리사	Department of Farm Mechanization
목축업사(전국사료업무사무실)	Department of Animal Production (National Feed Office)
수의국(주요 동물 전염병 방어통제 사무실)	Veterinary Bureau (Office of Major Animal Disease Control)
농지개간국	Bureau of State Farms and Land Reclamation
농촌기업국(농산품가공국)	Bureau of Township Enterprises (Bureau of Produce Processing)
어업국(중화인민공화국 어정국)	Bureau of Fisheries (Bureau of Fisheries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농산품 품질안전 감독국	Bureau of Agri-food Quality and Safety
종자관리국	Seed Bureau
기관당위원회	CPC committee of MOA
퇴직간부국	Bureau of Retired cadres
농업부 주재 기율검사국	Head of the Discipline Inspection Group of the CPC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at MOA
농업부 기관 서비스 센터	General Service Center

자료: 중국 농업농촌부(www.moa.gov.cn)

□ 주요 기능인 농촌 지원,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등의 주요 업무별 운영구조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2-24> 중국 농업농촌부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구 분	담당기관	기관유형	운영조직	주요 업무	주요특징
농촌 지원	농업 농촌부 각 성	정부소속	각 성(32개), 현(1478개), 시(275개)의 농업국	농산물 수급의 안정적인 증가, 농산물 시장체계 개선, 농가소득의 보장 등	현과 시 (신청, 지급)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국가 식품 약품 감독 관리부	정부소속	-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생산에서 소비까지 위험관리 식품안전기준 설정	농산물품질안전 조사 일상적 모니터링
농산물 유통 관리	농업부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 공상국, 질량감독검사 검역총국, 지방정부 (현급이상)의 품질기술감독국	정부소속	UADA-AMS 29기관 (1만여명)	국가 원산지 라벨관리	농업법, 관세법, 통상무역법, 연방무역거래 위원회법

## (4) 프랑스

### 가. 주요 정책 동향

- 프랑스 농업은 EU의 확대,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기업적 논리의 수용,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프랑스 농정은 다른 영역의 공공정책과 함께 국가정책 목표에 보다 합리적으로 부합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분권화 및 분권화된 서비스의 개혁, 근접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나.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프랑스 식품농수산부)

#### 가) 조직 개요

- 식품농수산부는 프랑스 정부 내의 중앙행정 기관이며, 농업, 어업, 축산, 임업, 식품 등 관련된 환경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사업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나) 주요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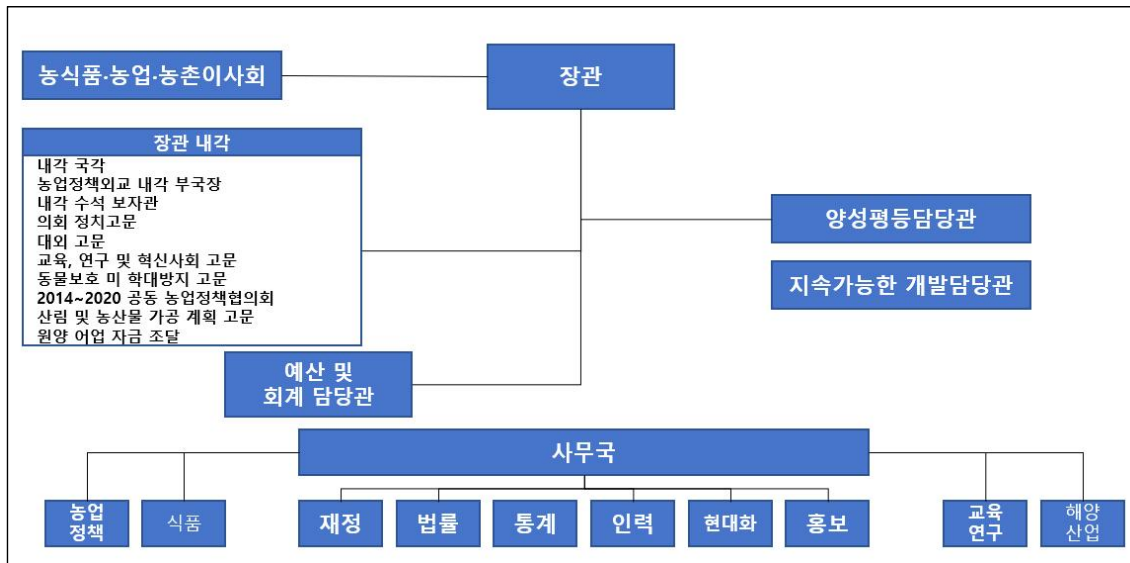
- 프랑스 중앙정부에서는 농촌 발전 정책 관련 6대 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정부의 기초단위인 '꼬뮌' 과 광역 지방정부인 '데파르트망' 이 주체가 되어 농촌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음
  - 꼬뮌이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데파르트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7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 모든 단체급식소에서 따라야 할 새로운 먹거리법 (la loi EGalim)에 의한 식재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고품질(품질마크나 지리적 표시, 전통식품 인증식재료)의 지속가능한 식재료 (공정무역 및 로컬푸드 식재료)를 50% 이상 사용, 유기농 식재료를 20% 이상 사용, 일200식 이상 단체급식소 대상 식물성을 포함하는 단백질원 다변화 다년 계획 수립 의무화,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제품 사용금지(생수병 포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다) 조직 기능

- 각 단위 조직별로 농업, 식품, 해양 산업 관련 정책, 지원업무와 재정, 법률, 통계, 인력, 현대화, 홍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2-28〉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조직도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04)

- 조직의 주요 기능인 농촌정책, 농촌 지원,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농산물 유통 관리 등의 주요 업무별 운영구조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2-25〉 프랑스 식품농수산부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구분	담당기관	기관유형	운영조직	주요 업무	주요특징
농촌 정책	국토의 평등을 위한 위원회 (CGET)	범부처 기구	-	총리주도 농촌정책 우선 과제 도출, 지역불균형 완화, 농촌 삶의 질 향상, 중앙·지자체간 협력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분권 이후 중앙과 지역간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동 위원회 산하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통해 &lt;농촌계약&gt; 시범사업 도입</li> </ul>

농촌 지원	농업 식품 산림부 지불청 (ASP)	정부소속	본부 (5~6백명), 지부 (26개, 1,450여명)	농지등록제 전담 책임운영기관, 농지등록, 농업경영체등록, 가축등록,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본직불제, 환경보호, 직불제, 농촌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영토관리국(신청), 지불청(지급)</li> </ul>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국립 식품 환경 노동 위생 안전청 (ANSES)	정부소속	본청 4부, 3개 행정지원 부서 및 수의학의약품국과 모니터링팀 (1,200여명)	식품,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간, 동물이 소비하는 식품 또는 사료의 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부, 재정경제산업부, 보건국 공동 관리</li> </ul>
농산물 유통 관리	농림 수산부 원산지 표시 품질 관리원	정부소속	DEFRA (1만여명), FSAL 8개 부서, 35개팀, 10국, 지방청 3 (2,300여명)	식품안전, 원산지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품질라벨: 원산지, 지리적표시보호 등</li> </ul>
식량	식품 농수산부	중앙행정 기관	-	식량안보, 식품안전·품질, 식문화, 공공급식, 환경·폐기, 지역 등을 포함한 공공식품정책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부 주도로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수립·추진</li> <li>• 국가식품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li> </ul>

## (5) 영국

### 가. 주요 정책 동향

- 영국은 농촌에 대한 지원이 환경보전, 농촌계획, 지방의 자율성 등의 문제를 농업적 관점이 아닌 영역적(Territorial)관점에서 제시되어 강화된 비농업적 경제활동 지원 및 농민들에게 대체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농업환경정책 (Agri-Environmental scheme) 등의 조치들이 '통합적 농촌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 방식으로 운영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농업과 비농업 및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개발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나. DEFRA(영국 환경식품농무부)

## 가) 조직 개요

- DEFRA의 창설은 환경규제를 농촌관점에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졌으며 환경 보호, 식품 생산, 농업, 어업 및 어촌 등에 대한 정책 및 관리·감독하는 영국 행정부의 부처로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식품 및 농업 산업을 지원하며 농촌 경제 발전 등의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사업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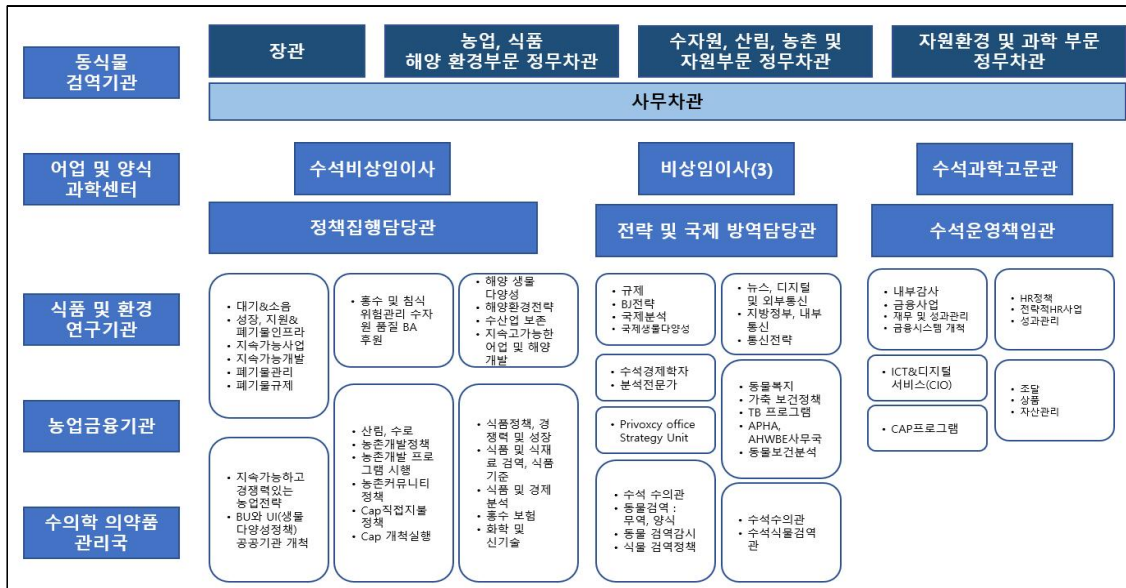
## 나) 주요 정책방향

- DEFRA는 식품 안전, 식생활 개선 등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식품종합전략인 Food 2030을 수립하였으며 7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식품종합전략인 Food 2030의 내용으로는 양질의 식품접근성 개선, 식품공급 개선, 식품관련 지식과 정보의 개선, 소비자 식교육, 식품문화유산의 보전·진흥, 지속가능한 식모델 창출, 식품정책의 긍정적 가치 전달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다) 조직 기능

- 각 단위 조직별로 동물 건강과 복지, 환경, 농업과 음식, 어업, 동물 건강과 복지, 농업 및 농촌,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관리, 통제, 승인 및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주요 분야별 기능으로는 농업과 음식 부문의 식품수입 관리, 레거시 체계, 기본 지불 체계 (BPS), 농촌개발 관리 책임 (CS) 및 영국 농촌 개발 프로그램 (RDPE)지원을 다루는 공통 농업 정책 (CAP)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 분야는 해양 환경, 라이선스, 규제, 해양 통제 및 집행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허가, 산업 및 폐기물, 수질 및 자원, 내륙 어업, 항법, 보전 및 생태, 질산염 취약 지역(NVZ), 토양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홍수분야의 현재 홍수 경고 및 강과 해수면 관리 등 농업과 비농업 및 환경을 아우르는 분야에 대해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2-29>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조직도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04)

□ 조직의 주요 기능인 농촌 지원,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농산물 유통관리의 주요 업무별 운영구조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표 2-26>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부처 주요 기능 및 특징

구 분	담당기관	기관유형	운영조직	주요 업무	주요특징
농촌 지원	환경 식품 농무부 농촌 지불청 (RPA)	정부소속	2,071여명 근무	농지등록제 전담, 책임운영기관, 농지등록, 농업경영체등록, 가축등록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본지불제, 환경보호직불제, 농촌개발사업	농촌지불청 (신청, 지급)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식품 기준청 (FSA)	정부소속	8개 부서, 35개 팀, 10국, 지방청 3 (2,300여명)	식품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 기준 설정, 지방정부 평가·감시, 식품관련 정보, 교육 자료 제공	독립적 운영
농산물 유통 관리	환경 식품 농무부, 식품 표준청	지방정부	소비자청: 식품표시기획과 (34명), 식품표시대책실 (14명), 농림수산업 소비자안전국	식품안전, 원산지표시	신선식품, 가공품, 음식점 자율표시



## (5) 주요 국가별 정책동향 종합

□ 주요 국가별 주요 정책동향 및 중점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식품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여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27〉 주요 국가별 정책 분석

구분	주요정책동향	조직개요	중점추진정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소득안정과 다원적 가치를 중시</li> <li>• 유통 관리뿐아니라 농촌 주민 복지,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의 식품 소비까지의 영역을 확장</li> <li>• 생산자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DA(미국 농무부)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과 국립산림지 감독, 농촌 지역의 발전 연구,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및 기술 연구의 중점적 역할을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개 전략 목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양질의 고객 서비스 제공</li> <li>②미국 농업 생산자의 역량 함양 위한 체계 구축</li> <li>③미국 농산물 및 수출 촉진 지원</li> <li>④농촌 번영과 경제 개발 촉진 지원</li> <li>⑤기술과 연구를 통한 사유지 관리체계 강화</li> <li>⑥국가 산림 시스템을 통한 생산적 토지 사용 촉진</li> <li>⑦자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은 식량 제공</li> </ol> </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에 대한 지원을 영역적 (Territorial) 관점에서 제시되어 통합적 농촌개발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방식으로 운영하며 환경변화에 대응</li> <li>• 농업과 비농업 및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 개발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FRA(영국 환경식품농무부)</li> <li>• 환경규제를 농촌관점에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서 창설</li> <li>•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식품 및 농업 산업을 지원하며 농촌 경제 발전 등의 관련 업무를 관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안전, 식생활 개선 등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식품종합전략인 Food 2030을 수립. 양질의 식품접근성 개선, 식품공급 개선, 식품관련 지식과 정보의 개선, 소비자 식교육, 식품문화 유산 보전·진흥, 지속 가능한 식모델창출, 식품정책의 긍정적 가치 전달 등 내용 추진</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을 신성장동력 중심축 중 하나로 설정</li> <li>• 생산 현장 강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구축, 수요 확대를 주요 정책의 목표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FF(일본 농림수산성)</li> <li>• 생활을 유지하는 음식과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계승하는 것에 사명을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추진전략을 ‘공격적 농림수산업’으로 설정</li> <li>•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 창조 플랜’을 수립하여 운영</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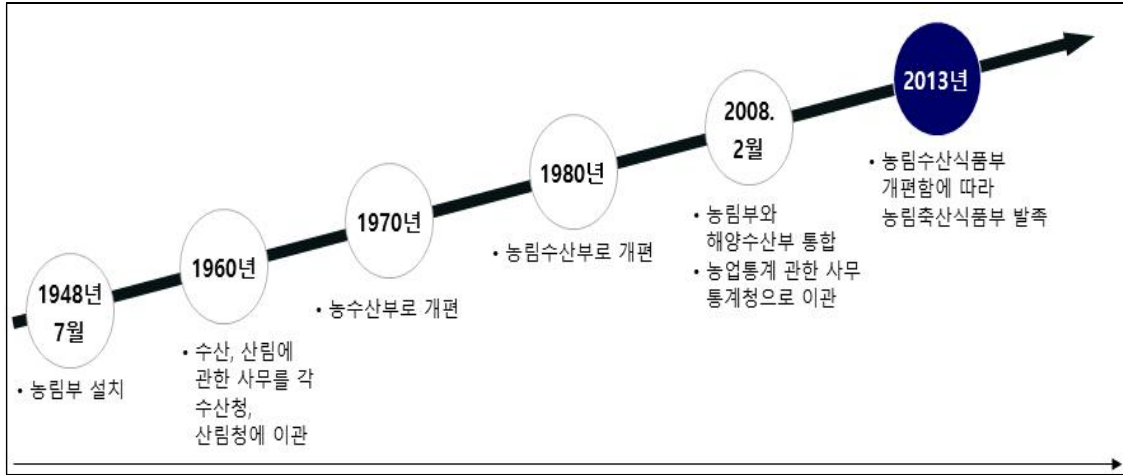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적 정책 추진</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화 동보(四化同步)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서 농업현대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 문건의 키워드로 설정</li> <li>4차 산업혁명의 농업분야 적용을 위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의 성장 전략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OA(중국 농업농촌부)</li> <li>농업관련 각종 산업과 농촌경제발전정책, 발전 전략, 중장기 발전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농업과 관련된 재정 및 세무, 가격, 금융보험, 수입, 수출 등 정책 제정 참여 및 농업행정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정의 4대(경쟁력, 소득, 복지, 수급·유통) 축과 관련된 과제 추진</li> <li>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내수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농민재산권제도 개혁 추진</li> </ul>



□ 연혁 및 소관 사무

- 농식품부는 2013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를 개편하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하여 발족되었으며, 또한, 농산·축산, 식량·농지, 식품산업 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임

<그림 2-30> 연혁



<표 2-29> 소관 사무

구분	내용
소관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li> <li>1.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li> <li>1.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li> <li>1.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li> <li>1.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li> <li>1. 축산진흥 및 가축의 사육관리와 질병에 관한 사항</li> <li>1. 축산물 및 육가공, 유가공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li> </ul>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2) 전략방향 분석

### (1) 비전 및 정책 방향

- 농식품부는 농정기본 방향에 따라 수립된 농식품분야 정책의 비전 및 중점추진 과제 실행을 위해 효율적·체계적 조직관리·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조직 기능 및 인력관리 방안이 필요함

〈표 2-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기본 방향 2019~2022년

비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		
중점추진과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직불제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li> <li>쌀 변동 직불제 개편</li> </ul>
		농가 경영 안전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재해 지원, 수입보장보험 확대</li> <li>농기계 공 동이용 확대 등 경영비 절감</li> </ul>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 산업 개편</li> <li>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수급안정 강화</li> </ul>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농식품 혁신 성장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육성</li> <li>R&amp;D, 빅데이터 등 혁신 인프라 정비</li> </ul>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창업농 등 미래 인력 육성</li> <li>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 등 육성</li> </ul>
		환경 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업 확산</li> <li>축사현대화 등 축산환경 개선</li> </ul>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안심 먹거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역단위푸드플랜수립</li> <li>중등수입의존도 높은 품목의 식량자급률제고</li> </ul>
		건강한 식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과일 간식 지원제도 도입 등</li> <li>공공급식의 품질 제고</li> </ul>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 위주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강화</li> <li>GAP·HACCP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li> </ul>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적 지역개발 등 농촌 뉴딜</li> <li>산림을 복지·휴양공간으로 활용</li> </ul>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li> <li>여성농업인의 위상 제고</li> </ul>
		지역 순환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경제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등</li> </ul>
추진체계	참여와 협력 농정	참여 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li> <li>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지원</li> </ul>
		협력 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농정·통상·국제농업·남북협력</li> <li>현장 농정</li> </ul>

비전	조직구조	인력 운영 및 육성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전 달성 및 전략 수행을 위해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조직 재설계 방향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적 중요 기능 수행을 위해 타당한 인력 수요 도출</li> </ul>
→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 수행을 위해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구조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인력배치 방안에 반영</li> </ul>

출처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18)

## (2) 2020년 업무계획 종합

- 2020년 업무 추진 방향은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공익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 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 추진방향과 정합된 기능 및 운영 인력의 고려가 필요함

〈표 2-31〉 2020년 업무추진방향 목표 및 기대효과 종합

구분	목표	기대효과
①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창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농업 구조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li> <li>☞ 농지·시설, 교육 등 2040 세대의 농업 창업 지원 강화</li> <li>☞ 스마트농업, 민간투자 등 기술 자본 투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li> <li>☞ 신남방, 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우리 농식품의 시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농업을 주도할 인적자원 확보 및 농업 혁신 촉진</li> </ul>
②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촌지역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지원 강화</li> <li>☞ 귀농 지원체계 정비로 체계적 사전 준비와 안정적 정착 지원</li> <li>☞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0 세대의 일자리 수요를 흡수하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li> </ul>
③ 공익직불제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소비자,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li> <li>☞ 환경·생태계 보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증진 활동 강화</li> <li>☞ 직불금 신청·관리 시스템 및 농지제도 정비 등 관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및 중소농업인 소득안정망 강화</li> </ul>
④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성 완화</li> <li>☞ 관측 강화 및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으로 사전적 수급조절 강화</li> <li>☞ 도매시장 이외의 대안 유통경로를 확산하여 합리적 가격형성 유도</li> <li>☞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소득과 소비자 물가 안정</li> </ul>
⑤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조기에 확산 차단</li> <li>☞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 차량 관리 강화</li> <li>☞ 방역에 적합하도록 농장 사육환경을 개선</li> <li>☞ 방역 책임성 제고를 통한 농장단위 방역강화</li> <li>☞ 역학조사 등 방역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 발생과 이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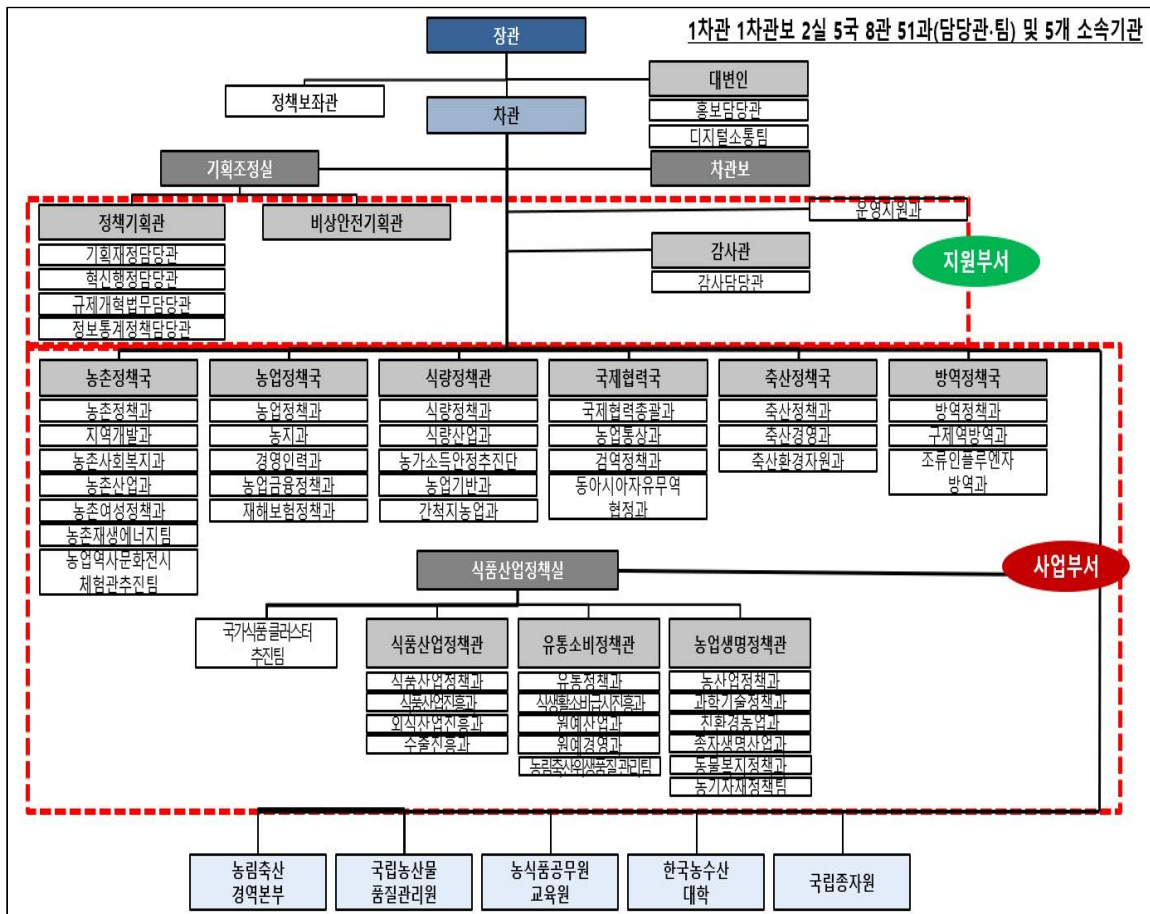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3) 조직 및 기능

#### (1) 조직체계

- 현재 부 전체 조직은 1차관 1차관보 2실 5국 8관 51과(담당관·팀) 및 5개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음
- 특히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9개 국 단위 상위 조직과 43개 과 단위 하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조직을 직무분석의 대상으로 함

〈그림 2-3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구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2) 업무현황

- 사업을 관장하는 9개 국 단위 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부서별 업무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음에 따라 단위 부서의 주요 업무를 기반으로 직무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표 2-32〉 농림축산식품부 단위조직별 주요 업무

단위 조직	업무구성
농촌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li> <li>▪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li> <li>▪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li> <li>▪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li> <li>▪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li> <li>▪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li> </ul>
농업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li> <li>▪ 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제도의 개발</li> <li>▪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방 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li> <li>▪ 남·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조정</li> <li>▪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li> </ul>
국제협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li> <li>▪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li> <li>▪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li> <li>▪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li> <li>▪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li> <li>▪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li> </ul>
축산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축산자금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지원</li> <li>▪ 한국마사회 업무 및 경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li> <li>▪ 초지조성·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의 생산·수급 조절</li> <li>▪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처리·이용에 관한 사항</li> <li>▪ 유기(有機)축산에 관한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방역정책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li> <li>▪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수립</li> <li>▪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관한 사항</li> <li>▪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li> <li>▪ 「수의사법」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li> <li>▪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식품산업정책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li> <li>▪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li> <li>▪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 식품 제조·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식품산업정책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li> <li>▪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li> <li>▪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 식품 제조·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농업인의 식품 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유통소비정책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li> <li>▪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조정</li> <li>▪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지원</li> <li>▪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li> <li>▪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li> <li>▪ 원예·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li> <li>▪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농업생명정책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li> <li>▪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li> <li>▪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li> <li>▪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li> <li>▪ 농업유전자원 보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li> <li>▪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li> <li>▪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우수농산물관리·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li> </ul>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직제규정

## 가) 단위 조직별 업무현황

### (가) 농촌정책국

- 농촌정책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복지증진, 미세먼지 대응,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양성평등, 재생에너지 보급 및 공동체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4개 과와 3개 팀 조직을 산하에 편제하고 있음

〈표 2-33〉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구분	담당·업무	광역단체
농촌정책과	농업농촌 중장기 계획 수립	16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업회의소 운영	
	산림청농어촌공사 지도감독	
	농민단체 지원·협력	
지역개발과	농촌형 교통모델 확산	16개 시도, 농정국, 농촌개발과, 농촌활력과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지역 유희시설 활용	
농촌사회복지과	농촌 정주권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6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농촌특화 복지 증진	
	사회적경제 총괄,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촌산업과	취약농가인력지원	13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농촌문화사업, 장학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관리	
농촌여성정책팀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14개 시·도, 농정과 등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공동아이돌봄센터(농어촌보육)	
농촌재생 에너지팀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구축	16개 시도, 농정국, 에너지개발과 등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 추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6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체험관 건립	
	농촌재능나눔	
	농촌공동체활성화	
	중요농업유산 운영	

- 농촌 부문의 정책수립과 실행의 연계를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 지역개발, 공동체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농촌관광정책 등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표 2-34〉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구분	위탁사무	법적 근거	수탁기관
농촌정책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관측지원, 시스템 운영, 인증제 관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농촌여성정책팀	결혼이민여성 교육 및 정착지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농협중앙회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어촌희망재단

### (나) 농업정책국

-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 FTA 피해보전지원, 농지보전, 농업인력육성, 농업재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4개 과 조직을 편제하고 있음

〈표 2-35〉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구분	담당·업무	광역단체
농업정책과	농업소득 등 정책수립	16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FTA 피해보전 등 지원	
농지과	농지제도	16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지보전·관리 지원	
	농지전용 허가	
	농지원부 관리 등	

경영인력과	농업인력육성	17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외국인 노동자 근로인력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7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등)
	농축산물 재해지원	
	농작업 피해 농업인 지원	
	농업작업 재해예방 지원	

□ 농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농업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피해보전지원, 농지보전, 농업인력육성, 농업재해 관련 업무 중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표 2-36〉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구분	위탁사무	법적 근거	수탁기관
농지과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보화	농지법 제49조, 제50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공사법 제10조, 제24조의5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	공사법 제24조의3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인력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11조 의2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 11조의2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촌고용인력지 원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8조	농협중앙회
	농업농촌교육훈 련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3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업농촌교육훈 련지원	축산법 제33조의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농협중앙회

농업금융 정책과	농식품모태펀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63조의2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정책자금검사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63조의2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재해보험 정책과	농업재해보험 사업 관리·운영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업인안전재해보 험 관리·운영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 (다) 식량정책관

□ 식량정책관은 식량정책, 쌀·밭직불제, 농업생산기반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4개 과와 1개 단 조직을 편제하고 있음

〈표 2-37〉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구분	담당·업무	광역단체
식량정책과	공공비축	16개 시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등
	정부양곡관리	
	TRQ쌀 관리	
	양곡특별회계	
식량산업과	생산조정	16개 시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등
	RPC, 들녘경영체	
	쌀 소비촉진·쌀 가공산업 육성	
	주요 곡물 생산	
	식물방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경영이양	16개 시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등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농업기반과	농업생산기반정비	16개 시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용수관리	
	용수개발	
	시설안전, 지진방제	

간척지농업과	배수개선	16개 시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등
	대단위·간척개발	
	대단위 재개발	
	새만금사업 시행 및 관리	
	새만금사업 총괄 및 기획	

□ 정부관리양곡 중 가공용쌀의 공급물량 배정업무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표 2-38〉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구분	위탁사무	법적 근거	수탁기관
식량정책과	공급물량 배정업무	「양곡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라) 축산정책국

□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 친환경축산, 가축분뇨, 사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3개 과를 산하에 편제하고 있음

〈표 2-39〉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구분	담당·업무	광역단체	관련법령
축산정책과	축산제도 무허가축사 관리 축산물유통 말산업육성	17개 시도, 농정국, 축산정책과 등	축산법 제8·12·13·14·20 ·22·25·28·34·4 1·42조, 말산업육성법 제4·14·15·19조
축산경영과	축종별 육성대책 축산물 수급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량 축산물이력제	17개 시도, 농정국, 축산정책과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3·24·28조
축산환경 자원과	친환경축산 가축분뇨 사료산업 조사료	17개 시도, 농정국, 축산정책과 등	사료관리법 제8·12·21·23·24 ·25조, 초지법 제5·5의2·12·23 ·23의2·24·27조

-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 등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표 2-40〉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구분	위탁사무	법적 근거	수탁기관
축산경영과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축산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대한오리협회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축산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식품산업정책관

-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발효식품 및 지역전략식품 육성,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4개 과 및 1개 팀 조직을 산하에 편제하고 있음

〈표 2-41〉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구분	담당·업무	광역단체	관련법령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 등	17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6조,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등
식품산업진흥과	전통발효식품산업 및 중소식품기업 육성 및 지원	17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등
외식산업진흥과	한식 및 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 등	17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외식산업진흥법 제6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등
수출진흥과	농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시행, 등	17개 시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 및 17조 등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팀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부산시(수산유통가공과) 충청북도(농업정책과) 전라북도(농촌활력과) 전라남도(농업정책과) 제주도(식품원예과)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등

- 식품 관련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 통계 조사, 외식산업 경영지원, 농식품 수출확대 등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하여 수행하고 있음

〈표 2-42〉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구 분	위탁사무	법적 근거	수탁기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식품산업진흥법 제 34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 (식품정보부) (식품기업컨설팅부)
	식품분야 R&D 사업 관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 6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사업실)
식품산업진흥과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75조 유통공사법 제 10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통식품진흥부)
	식품외식종합자금 (융자) 집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75조 유통공사법 제 10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 8조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성평가사업단)
외식산업진흥과	한식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17조, 17조의 2	한식진흥원 (경영기획팀)
	외식업 경영지원, 창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외식산업진흥법 제 18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
	외식산업 정보분석	외식산업진흥법 제 18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정보부)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집행	외식산업진흥법 제 18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수출진흥과	농식품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59조, 식품산업진흥법 제 10조, 식품산업진흥법 제 17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본부) (수출전략처) (수출사업처) (해외사업처)
	중동·동남아 등 이슬람 시장 진출 지원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59조, 식품산업진흥법 제 10조, 식품산업진흥법 제 17조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수출지원센터)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한식진흥원 (홍보사업팀)
국가클러스터 추진팀	식품산업 집적관련 정책개발·연구,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 등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 2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획홍보부)

### (바) 유통소비정책관

□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효율화, 수급·안정, 농·축산물 안전·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4개 과와 1개 팀 조직을 편제하고 있음

〈표 2-43〉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구분	담당·업무	광역단체
유통정책과	먹거리종합전략수립	16개 시도,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	
	산지시설지원	
식생활소비 급식진흥과	건강한 식생활 확산	16개 시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등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GAP 운영	
원예산업과	채소가격안정제 등 수급 및 가격안정	16개 시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등
원예경영과	과수 기획, 생산유통 지원	16개 시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등
	FTA 대응 사업	
	과수과채 수급관리	
	시설원예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화훼산업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축산물작업장 시설개선 지원	14개 시·도, 농정국, 동물방역과 등
	축산물작업장 지도·점검	
	축산물 위생 지도·점검·교육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 농축산물의 유통 관련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효율화, 수급·안정, 식생활교육, 품질·위생관리, 홍보 등 농산물 유통·소비 정책 업무 등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표 2-44〉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구 분	위탁사무	법적 근거	수탁기관
유통정책과	유통개선, 수급관리, 교육·훈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기금의 운용·관리), 75조(교육훈련 등), 유통공사법 제10조(사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생활소비 급식진흥과	농식품 소비정보교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제20조	농림수산물유통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소비 정보망 이용활성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2조	농림수산물유통교육문화정보원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 2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농림수산물유통교육문화정보원
	지리적표시 활성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농림수산물유통교육문화정보원
원예산업과	농업관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경영과	농가 계약재배 및 수매·출하 약정 업무 수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협경제지주 원예산업부
농축산물위생 품질관리팀	검사원 채용·배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 6항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 5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 농업생명정책관

□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소비 활성화, 친환경 농업직불금 제도 시행,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지자체 설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1개 과와 2개 팀 조직을 편제하고 있음

<표 2-45> 과별 담당업무 및 대응조직

구 분	담당·업무	광역단체	관련법령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5개 시·도 (부산, 울산 제외)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
	친환경농업 직불금	17개 시·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충남, 전남, 경북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 및 제10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친환경농어업법 제3조 및 제16조
	유기농산업복합 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충북, 전남	친환경농어업법 제3조 및 제16조
농기자재정책팀	농기계임대	17개 광역지자체 전체	농업기계화촉진법
	유기질비료 지원	17개 광역지자체 전체	비료관리법
	토양개량제 지원	17개 광역지자체 전체	농지법
동물복지정책팀	동물등록	16개 시도, 축산국, 동물보호과 등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안전관리		
	동물보호 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동물복지 축산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업무 시너지를 위하여 농식품부 R&D 사업, 동물복지 사업 등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표 2-46> 민간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구 분	위탁사무	법적 근거	수탁기관
과학기술정책과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료 징수·관리, 기술 개발·보급 현장수요조사, 신기술인증,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역량진단,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등		
농기자재정책팀	농기계 구입지원, 생산 및 사후관리 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7조	농협은행,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비료품질관리 교육·홍보, 정보관리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협경제지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정책팀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홍보	「동물보호법」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나) 단위 조직별 기능 및 인력운영 고려사항

- 사업부문을 관장하는 9개 국 단위 조직은 각 조직별 주어진 역할과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중요기능 강화, 기능 신설 필요성, 기능 축소, 전담인력 운영 등의 이슈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능 동태성 이슈를 고려한 적정 인력 산정이 필요함

〈표 2-47〉 대상 조직 기능 및 인력 운영 이슈

조직	주요 기능	조직 기능 및 인력 운영 고려사항
농촌정책국	농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효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운영 필요</li> <li>•농촌협약의 시범도입, 안정적 정착, 지역개발 외 농업·농촌분야로의 도입 확대를 위해 전담인력 운영 필요</li> <li>•농촌태양광 사업을 통한 수익이 지역주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수행할 인력 운영 필요</li> <li>•분산된 농업인 의료보건안전 업무 기능 강화 위한 일원화</li> </ul>
농업정책국	농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18.5)에 따른 농업인안전재해예방 업무 전담인력 운영 필요</li> <li>•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과 정원 확대 고려</li> </ul>

식량정책관	식량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국제교역 증가 등에 따른 병해충 발생 가능성 확대로 총괄조정, 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한 식물방역전담 기구 신설 필요</li> <li>•공익형 직불제추진에 따라 직불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심의, 기금의 운영, 강화된 준수 의무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추가 발굴, 농업인 교육 등 확대된 기능을 수행할 인력 운영 필요</li> </ul>
국제협력국	국제 농업 통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영향,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이끌기 위해 SPS 협상 기능 강화 필요</li> <li>•각국의 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출 관련 통보에 대한 대응 인력 운영 필요</li> </ul>
축산정책국	축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제정( '19.8.27) 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증장기 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양봉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li> <li>•분뇨 악취 민원 증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축산(분뇨) 지목 등 이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운영 필요</li> <li>•AI 미발생등에 따른 가금분야 기능 일부축소에 따라 가금기반과 가금유통계를 통합운영하고감축인력을 현안과제인 무허가 축사에 재배치 추진</li> </ul>
방역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SF 방역 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 및 인력 증원 필요</li> <li>•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 도입 및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에 따른 진료 표준화를 위한 전담인력 운영 필요</li> <li>•동물의료 분야 업무 독립 및 관련 업무 통합으로 동물의료 인력 및 산업 체계적 육성·관리 위한 동물의료정책팀 신설</li> </ul>
식품산업 정책관실	식품 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류산업활성화를 위한 발효식품 R&amp;D센터 건립 필요</li> </ul>
유통소비 정책관실	농산물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먹거리 관련 이슈의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운영 필요</li> </ul>
농업생명 정책관실	농업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묘산업육성 및 고품질 우량묘공급의 선진육묘 체계 구축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력 운영 필요</li> </ul>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조직진단, 소요정원 요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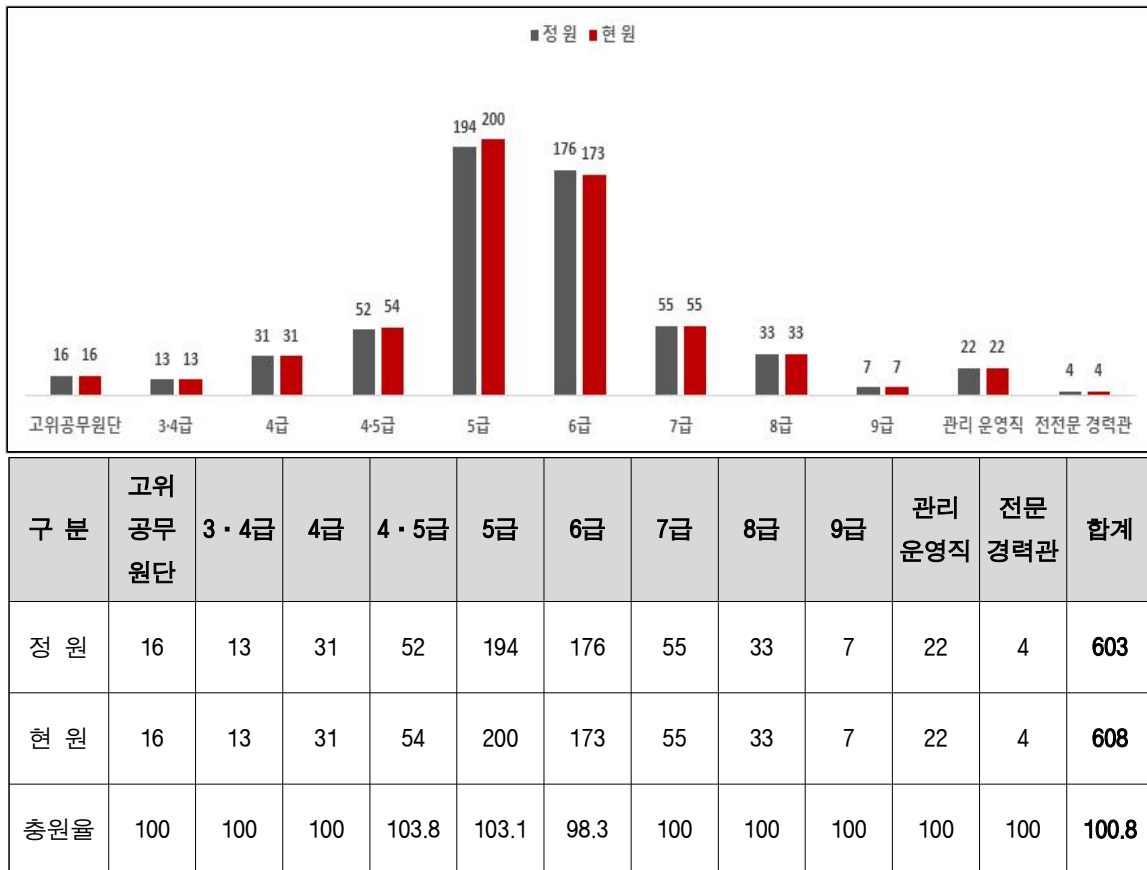
## 4) 인력현황

### (1) 정원 대비 현원 현황

- 농식품부 현원은 608명이며, 정원 603명 대비 인력충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것은 한시조직 편제로 인한 한시 정원 인력을 운영한 것에 기인함
- 4·5급 103.8%, 5급 103.1%로 정원 대비 현원이 많게 나타났으나, 6급이 정원에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반된 구조를 보임

〈그림 2-32〉 농림축산식품부 정원과 현원 비교

(단위 : 명)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2) 일반직 현원 현황

- 현재 농식품부 직급별 인원은 5급이 전체 일반직 인력 구성 중 3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항아리형 인력구조에 해당하며,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가능할 수 있는 인력관리 방안이 필요함

<그림 2-33> 일반직 대상 (현원)

(단위 : 명)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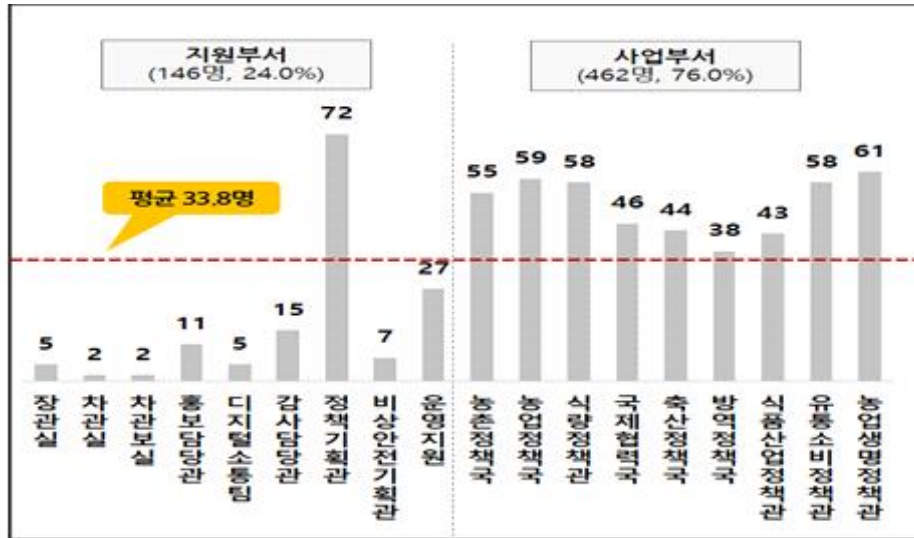
\* 정무직 제외, 별정직 제외(고위 공무원단 일반직 + 일반직 연구원 + 임기제)

## (3) 본부 부서별 현황

- 농식품부 인력구성은 정책기획관이 본부 전체인력 대비 11.8%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가장 많은 인력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생명정책관 10.0%, 농업정책국 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부서별 인력의 편차가 다소 나타나고 있어 각 부서별 기능 동태성을 고려한 인원 재배치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그림 2-34>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인력구성 (현원)

(단위 : 명)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표 2-48>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별 인력구성

구분	장관실	차관실	차관보실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운영지원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방역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인원(명)	5	2	2	11	5	15	72	7	27	55	59	58	46	44	38	43	58	61
비율(%)	0.8	0.3	0.3	1.8	0.8	2.5	11.8	1.2	4.4	9.0	9.7	9.5	7.6	7.2	6.3	7.1	9.5	10.0

#### (4) 조직진단 대상 부서 인력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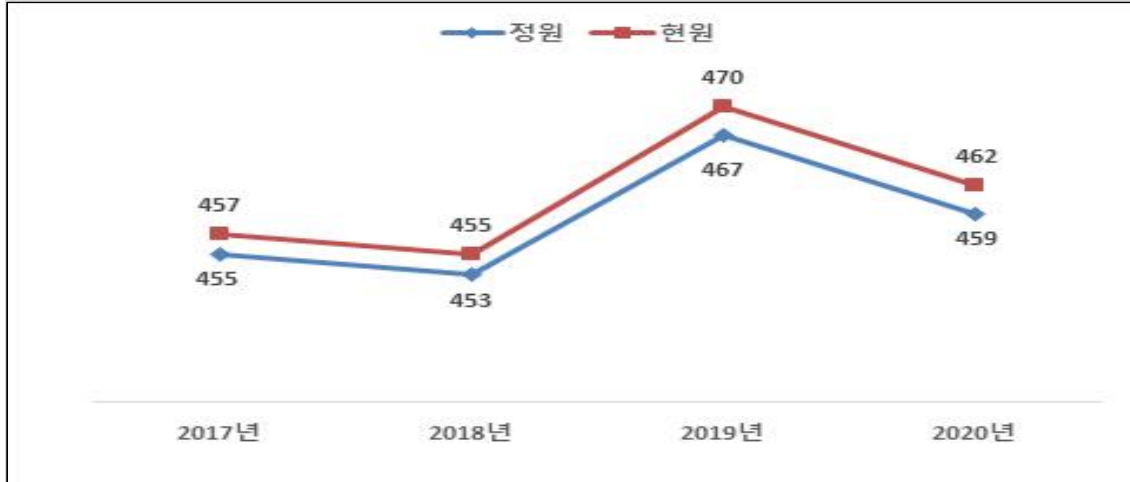
□ 조직진단 대상이 되는 9개 국 단위 부서별 인력 현원 추이는 2017년 총 457명에서 2020년 462명으로 5명 증가하였으며, 정원은 455명에서 459명으로 4명 증가하였음

- 유통소비정책관은 2017년 현원 47명에서 2020년 현원 58명으로 타 부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2-35> 조직진단 대상 부서별 4년간 인력운영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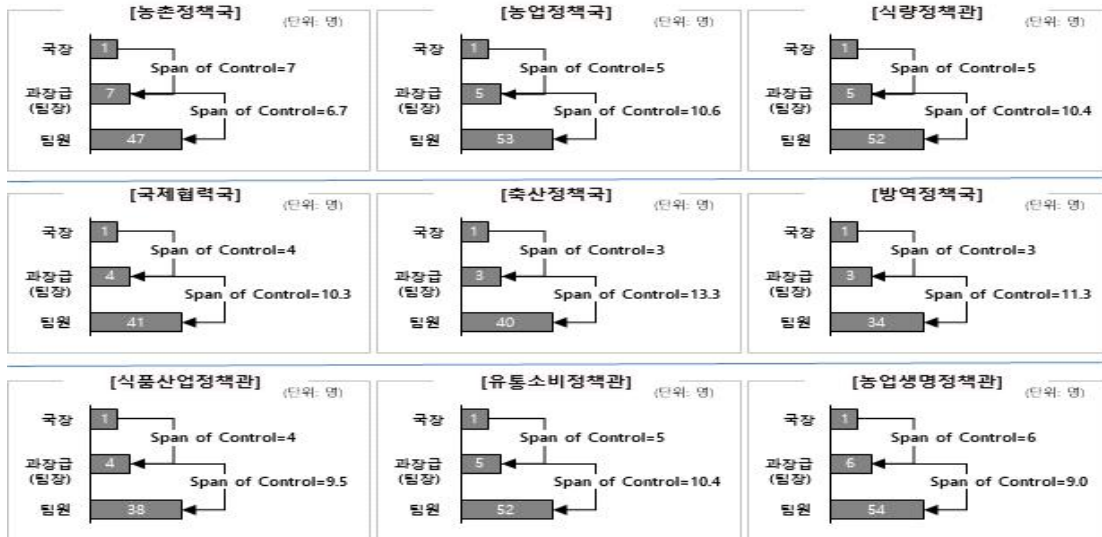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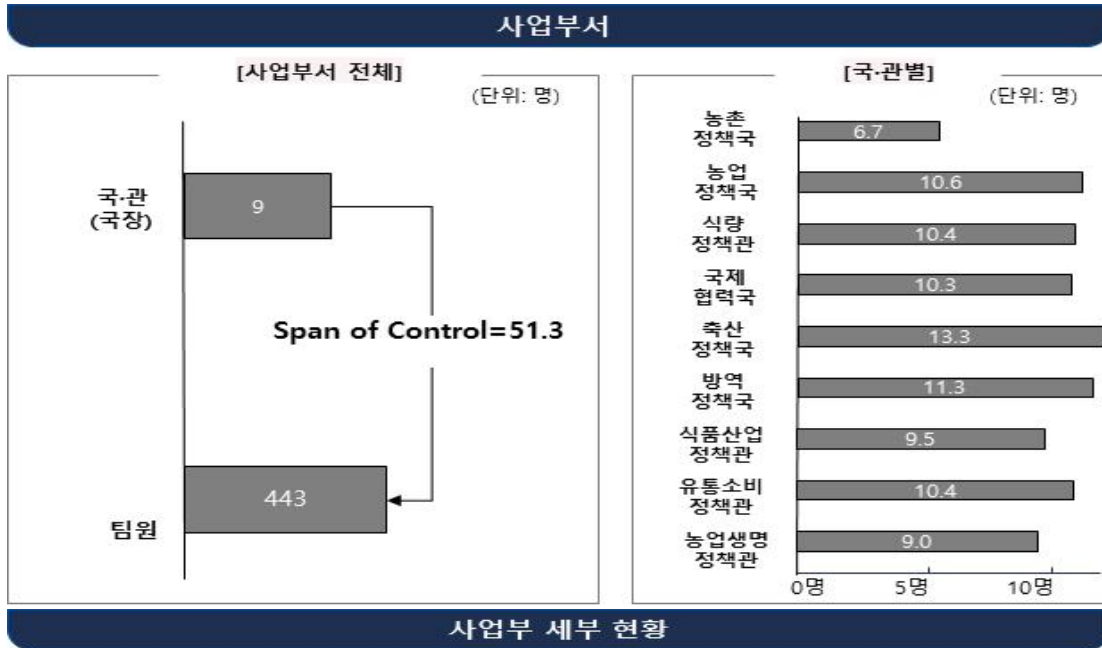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농촌정책국	51	52	50	51	57	59	53	55
농업정책국	60	60	61	61	60	60	59	59
식량정책관	57	58	57	58	57	58	57	58
국제협력국	47	47	48	48	48	48	46	46
축산정책국	51	51	51	51	45	45	44	44
방역정책국	40	40	40	40	38	38	38	38
식품산업정책관	43	43	43	43	45	45	43	43
유통소비정책관	47	47	46	46	59	59	58	58
농업생명정책관	59	59	57	57	58	58	61	61
<b>합계</b>	<b>455</b>	<b>457</b>	<b>453</b>	<b>455</b>	<b>467</b>	<b>470</b>	<b>459</b>	<b>462</b>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5) 조직별 통솔범위

- 9개 국 단위 조직의 통솔범위(SOC)는 51.3명으로 나타났으며, 43개 과 단위 조직의 SOC는 6.7명~ 13.3명의 편차로 나타남
- 현 국 단위 조직의 통솔범위가 일반직 조직 단위에 비해 넓어 과 단위 조직을 직무분석의 실질적 대상으로 간주하며, 각 부서별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해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림 2-36> 농림축산식품부 통설범위(Span of Control)분석 단위



<표 2-49> 인력구조 현황

국/관	과 / 팀	현원			
		국장	과장 (팀장)	팀원	합계
농촌정책국		1			1
	농촌정책과		1	13	14
	지역개발과		1	8	9
	농촌사회복지과		1	6	7
	농촌산업과		1	10	11
	농촌여성정책팀		1	5	6

	농촌재생에너지팀		1	4	5
	농업역사문화전사체험관추진팀		1	2	3
농업정책국		1			1
	농업정책과		1	15	16
	농지과		1	11	12
	경영인력과		1	10	11
	농업금융정책과		1	10	11
	재해보험정책과		1	8	9
식량정책관		1			1
	식량정책과		1	13	14
	식량산업과		1	11	12
	농가소득안정추진단		1	6	7
	농업기반과		1	12	13
	간척지농업과		1	10	12
국제협력국		1			1
	국제협력총괄과		1	16	17
	농업통상과		1	8	9
	검역정책과		1	10	11
	동아시아유무역협정과		1	8	9
축산정책국		1			1
	축산정책과		1	17	18
	축산경영과		1	14	15
	축산환경자원과		1	10	11
방역정책국		1			1
	방역정책과		1	14	15
	구제역방역과		1	11	12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1	10	11
식품산업정책관		1			1
	식품산업정책과		1	15	16
	식품산업진흥과		1	7	8
	외식산업진흥과		1	7	8
	수출진흥과		1	8	9
	국가클러스터추진팀		1	1	2
유통소비정책관		1			1
	유통정책과		1	15	16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1	11	12
	원예산업과		1	10	11
	원예경영과		1	11	12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1	6	7
농업생명정책관		1			1
	농산업정책과		1	14	15
	과학기술정책과		1	9	10
	친환경농업과		1	10	11
	종자생명산업과		1	8	9
	동물복지정책과		1	8	9
	농기자재정책팀		1	6	7
<b>합계</b>		<b>9</b>	<b>42</b>	<b>417</b>	<b>469</b>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자료(2020년 2월 기준)

## 5) 서면인터뷰 내용분석

### (1) 인터뷰 개요

- 농림부의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정합적인 인력 현황 및 수요를 이해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대내외 주요 환경변화와 기능 변화의 사항에 대한 이슈를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9개 실·국 조직 단위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음

〈표 2-50〉 인터뷰 질의사항

구분	인터뷰 질의사항
주요 환경변화 내용	- 해당 부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최근 정책환경 변화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기능 변화 내용	- 예측되는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취약한 기능은 무엇이며, 강화해야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활동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 (2) 인터뷰 결과분석

#### 가. 단위 조직별 인터뷰 내용

- 각 실국별로 응답한 주요 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기능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부문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표 2-51〉 농촌정책국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p><b>주요 환경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개발 및 공동화) 농촌 환경 보전 및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증가되고 있으나, 농촌자원을 훼손하는 난개발은 확산되고, 빈집 등 주거환경 악화 및 고령화 증가 추세</li> <li>- (지방분권)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강화 등 새로운 농촌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유희시설 관리·활용도 농촌개발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제기</li> <li>- (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법 시행('19.2.15) 및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운영에 따라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응기반 구축 필요</li> <li>- (농가소득) 도·농 소득격차 심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이 주요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소득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인 농외소득 창출의 중요성 증대하고 이에 따라,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제조·가공), 3차 산업(체험·관광·교육 등)을 연계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융합복합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중</li> <li>- (농촌관광) 국민소득 향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원격근무 활성화와 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가활동으로써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촌관광도 확대 추세</li> <li>- (양성평등) 농업농촌 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결혼이민여성·외국인여성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복지·의료·일자리 등 다방면의 정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또한,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 2018년 경찰청·대검찰청을 시작으로 2019년 교육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총 8개 정부부처에서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및 부처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농촌현장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대한 요구 증가</li> <li>- (기후변화) 新 기후체제( '15, 파리협정) 이후 지구환경 변화 가속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 추진</li> <li>- 환경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국·내외적 대응 전략 수립·이행 등 점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li> <li>- 농축산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계획 수립 및 전담인력 확충 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개발로 빈집 등 주거환경 악화 및 고령화 증가</li> <li>-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농촌개발정책 이슈 제기</li> <li>-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법 시행</li> <li>- 농외소득 창출 증대</li> <li>- 워라밸 문화로 인한 농촌관광 확대</li> <li>-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가</li> <li>-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녹색경제 추진</li> </ul>
<p><b>기능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질 향상 추진체계 강화)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범부처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강화</li> <li>- (농촌지역 난개발 대응)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국토관리 체계의 개선보완 및 토지이용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함에 따라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법제화 필요</li> <li>- (지방분권 대응) 농촌개발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충돌 방지, 농촌의 난개발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시군별 통합적 발전계획 수립 지원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li> <li>- (미세먼지 대응)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과 관련된 사업의 부재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강화</li> <li>- 농촌지역 난개발 대응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법제화 필요</li> <li>- 미세먼지 관련 사업 전담인력 필요</li> <li>- 재정 관련 지자체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이양) 지난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필요</li> <li>- (농촌융복합산업 관광) 정부 주도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민간 주체의 참여 확대, 육성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주체 전문성·역량 강화 기능이 중요</li> <li>- 농촌융복합산업에 재능있는 청년들의 참여 확보를 위해 농촌관광모델의 다변화, 노후화된 농공단지 리모델링 등 기존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확보 필요</li> <li>- 농촌관광 확대되고 있으나, 안전 문제에 대해 농촌관광 경영체, 지자체 담당자 등의 대응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기능 강화 필요</li> <li>- (양성평등 강화)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선 보육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나, 농촌은 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시설 운영 여건이 취약하고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정책 기반에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취약 분야의 기능강화 필요</li> <li>- 성평등 실현은 의식변화 및 성평등한 농업정책 수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농업인 대상 교육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강화 필요</li> <li>- (기후변화 대응) 각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정부 합동으로 수립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li> <li>- 지자체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련 담당인력 부재로 각 시·군·구별 실정에 맞는 대응계획 및 사업의 수립·추진이 어려움</li> <li>-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실적 및 통계 관리가 미비한 상황</li> <li>-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등 기관별로 R&amp;D가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발기술의 농가 보급 및 정책연계 결여</li> <li>- 농업분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계획적·체계적 대응계획·사업 수립·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전담조직·인력 구성 및 중앙부처의 정책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li> <li>-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li> <li>-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강화</li> <li>-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대응</li> </ul>
--	--	--

〈표 2-52〉 농업정책국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p style="text-align: center;"><b>주요 환경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농업은 도시대비 낮은 생활비, 새로운 일자리 기회 등으로 은퇴 후 신중년을 농촌에서 설계하는 등 농식품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새롭게 대두 될 것으로 보임</li> <li>- 농지원부 일제정비, 농지은행 활성화,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선으로 불법임대 관리 등 농지정책 기반 강화</li> <li>- 농지은행 매입방식 다양화 등으로 농지시장에서 농지은행 역할 강화, 수요자 중심 농지 지원 확대 추진</li> <li>-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국내 농업인력 수급 대응</li> <li>-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농·귀농인 등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li> <li>-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강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후 신중년에 따른 농업 일자리 창출</li> <li>- 농지정책 기반 강화</li> <li>- 농지 지원 확대 추진</li> <li>- 코로나 상황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li> <li>-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li> </ul>

<b>기능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업분야 일자리 창출 고용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농식품분야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일자리 업무의 인력 보강이 필요</li> <li>- 3년간 단계적으로 농지원부 일제 정비(총 197만 건 전체 정비), 농지이용실태조사 연계*, 농지임대차 신고제 도입 검토와 유희농지 복구-임대 사업 도입, 비축농지 장기(10년 이상) 임대 시 우선매입권 부여 등 청년농 수요 대응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 필요</li> <li>-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강화 필요</li> <li>-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가 재보험의 손익분석 및 보험사업자와의 약정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li> <li>- 최근 경제지주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적자 발생, 농협경제지주 자회사 확대(20개사) 등에 따른 신규 관리업무 증가(손익개선 요구, 공적마스크 공급 등)로 농협경제 업무 대응 강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업분야 일자리 기능 강화</li> <li>- 차세대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li> <li>- 농어업 재해 보험사업에 관한 기능 강화</li> <li>- 농협경제 업무 대응 강화 필요</li> </ul>
--------------	---	---

**<표 2-53> 식량정책관**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b>주요 환경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불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5.1일 시행됨</li> <li>-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직불제 시행</li> <li>- (국제곡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자급률이 낮은 쌀 이외 곡물에 대한 수급관리 강화 및 국제동향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li> <li>- 코로나로 인해 곡물 수급관리 강화 및 국제동향 모니터링</li> </ul>
<b>기능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불제) 기존 직불제가 통합·개편됨에 따라 직불제 관련 정책·사업·예산 총괄, 부정수급 방지 등 새로운 기능(업무)확대 수행에 따른 인력확보 및 대응 기능 강화 필요</li> <li>- (국제곡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식량 수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곡물 동향 분석 및 곡물수급 안정을 위한 조달체계 등 시스템 개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불제 통합·개편됨에 따른 새로운 기능(업무)확대</li> <li>- 국제곡물 조달체계 강화</li> </ul>

**<표 2-54> 국제협력국**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b>주요 환경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총괄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인도·베트남은 쌀 수출 잠시 중단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육류 공급 차질)</li> <li>- 농업 ODA가 외적 성장을 했으나, 국내 농업과 연계되어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꾸준히 제기</li> <li>- (농업통상과) WTO는 1995년에 설립되어(164개 회원국) 올해 25년째로, 관세 감축·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국제교역체제 수립의 중심축이며, 우리 농업분야에도 관세, 보조금 감축 등 실질적 정책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li> <li>-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속에서 WTO의 상소기구 재정비, 이행의무 강화 등 WTO 개혁 논의가 대두</li> <li>-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보건·의료물품 자급 생산체제 필요성 주장, 식량 수출 제한 등 다자교역체제를 약화시키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li> <li>- 국내 농업 내실 성장 필요</li> <li>- 최근 미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개혁</li> <li>-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등 검역 강화</li> <li>-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li> </ul>

	<p>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WTO의 향후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G20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농업 및 식량안보 관련)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참여가 더욱 중요</li> <li>- (검역정책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기후변화 및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로 인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유입 위험성 증대 및 각 국과 FTA, 메가 FTA 체결 확대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 강화 필요성이 대두</li> <li>-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세계 각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 긴장 고조</li> <li>- 美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 등 양자적 조치를 적극 활용해 무역수지 적자의 개선과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추구</li> <li>-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미중 무역협정 1단계 합의( '19.12.), 일본 농산물 시장접근을 위한 미일 무역협정 서명( '19.10.)</li> <li>- 일방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우리와의 무역 적자국과의 FTA 개정 협상(대부분 농업 이슈)에 대한 수요가 증가</li> <li>- 메가 FTA의 부상과 새로운 통상질서 모색</li> <li>- 미국의 탈퇴에도 일본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개방 수준(95%+)과 누적 원산지, 강화된 SPS 규정 등을 담은 CPTPP 발효</li> <li>- 아세안 중심으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에 합의( '19.11.)하고, '20년까지 최종타결 목표를 선언</li> <li>- EU-일본 EPA 발효( '19.2.),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타결( '19.6.),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USMCA 타결 합의( '19.12.)</li> <li>- WTO 등 다자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RCEP 등 메가 FTA를 통한 무역 자유화와 최신 통상규범 도입을 추진</li> <li>-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FTA 이행 이슈 증가</li> <li>- 칠레와의 FTA 이후 현재까지 16건(56개국)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TRQ, SPS, 원산지, 관세율 등 이행 관련 다양한 통상이슈 부상</li> <li>- FTA 상대국과의 비관세 장벽, 통관, 관세, TRQ 등 이행이슈 증가</li> </ul>	<p>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가 FTA 부상과 새로운 통상질서 모색</li> <li>- FTA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FTA 이슈 증가</li> </ul>
<p><b>기능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총괄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수입곡물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에 중점을 두어 해외농업개발사업 개선</li> <li>-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율이 낮은 밀, 콩, 옥수수를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기능 강화</li> <li>- 비상시 해외개발 곡물의 반입을 위한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li> <li>- 지속가능한 농업 ODA 추진으로 원조 효과성 제고</li> <li>- (원조 효과성) 수원국 농업,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성과중심 ODA 추진</li> <li>- (정책딥탐침) 신남방 정책, ICT 등 국내 농업과 연계한 ODA 추진으로 우리 농업의 혁신동력 지원(성공모델 발굴)</li> <li>- (기업진출 지원) ODA 사업의 밸류체인에 농기업·농기술 연계 추진</li> <li>- (협력강화) 유관기관(외교부, 농진청)과의 연계 강화</li> <li>- (인력양성) 국제기구 자원 및 국내 인프라 연계한 중장기 농업인력 양성</li> <li>- (농업통상과) 국제통상에서 우리 농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li> <li>- 이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국가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한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기능 필요</li> <li>- 농업 ODA 추진 효과성 제고 기능</li> <li>- 국제통상환경 대응 및 국제사회 공동 문제 참여 기능 필요</li> <li>- 메가FTA 확대 추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대응</li> <li>- SBS/TBT 서비스 및 지적권 등 규범 협상 기능 강화</li> <li>- FTA 이행 및</li> </ul>



<p>국제통상 관련 이슈의 신속한 파악 및 대응, WTO 협정문 및 통상관련 국내외 농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WTO 통상은 오랜 기간동안의 협상 내용과 방대한 범위의 협정문 규정, 상대국들의 산업현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통상전문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li> <li>- 농업통상과는 통상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등을 통해 협조를 받고 있으나, 향후 전문가 pool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협상 대응력 강화 필요</li> <li>- (검역정책과) RCEP(협정문 타결) 등 메가 FTA 확대 추세에 따라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기능 강화 필요</li> <li>- 지역화(구획화) 인정, 투명성 강화, 동등성 인정 등 국제 협정 준수 및 국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화·동등성 인정 평가, SPS조치 통보 등 SPS 협정 이행 관련 대응 담당조직 및 인력 확보 필요</li> <li>-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SPS/TBT, 서비스·지재권 등 규범 협상 기능 강화</li> <li>- 관세 장벽 완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NTB) 관련 SPS, TBT 관련 협정문 협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 보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가 SPS 관계부처(농식품부·식약처·해수부)를 대표해 협상을 총괄하나 현재 주무관(6급) 1명만이 실무를 담당</li> </ul> </li> <li>- 상품 관련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지재권 등 관련 협상 수요가 증가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협상은 수의서비스, 농산물 유통 관련, 지재권 협상은 신제품 보호, 농약자료 보호, 지리적 표시 관련해 다수의 쟁점 FTA 이행 및 시장조사 기능 강화</li> </ul> </li> <li>- FTA 네트워크의 확대에도 협상 관련 기능에 비해 농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상대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이행기능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이행 이슈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이행기능 강화 필요(16개 FTA 모두 이행위원회가 있으며 최근 3년간 20건 이상의 농업의제 논의)</li> </ul> </li> <li>- 협상 및 영향분석 외에도 사전에 협상 및 이행대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수시 시장조사와 자료 구축 기능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협상자료 및 통계를 수집해 제공하는 FTA 협상지원시스템 구축</li> </ul> </li> </ul>	<p>시장조사 기능 강화</p>
---	-------------------

〈표 2-55〉 축산정책국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p><b>주요 환경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국은 FTA 등 개방화의 파고 속에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li> <li>- 농가들이 규모화·전문화 되고 다른 농산물에 비해 높은 소득과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 전체적으로도 농림업 생산액(52.5조원, '18)의 38%를 차지(19.7조원)하고 있음</li> <li>- 축산업 허가기준 강화, 가축 사육거리 제한 확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축산환경의 날 시행, 가축분뇨의 자원화,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정책 등 추진</li> <li>- 수입 축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고, 이베리코 등 프리미엄·냉장육 제품 수입이 지속 확대되는 등 위기감 지속</li> <li>- 등급제 및 이력제 확대 등 소비자 신뢰 확보, 축산물유통 혁신 등 추진</li> <li>- 관세의 단계적 철폐 시기 임박('26~), 수입 축산물이 지속 유입되는 환경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li> <li>-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ICT 접목 축사시설 현대화 가속화 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 추구</li> <li>- 축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li> <li>- 등급제 및 이력제 확대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축산물 유통 추진</li> <li>- ICT 축사시설 추진</li> </ul>
<p><b>기능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정책국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는 ①국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역할, ②약취·가축분뇨 등 환경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역할임</li> <li>- 이에 축산물 유통과 축산환경 업무에 인력·조직보강 필요</li> <li>- 축산물 유통은 축종별 사육기간, 축산물(육류, 계란, 우유 등)별 저장성·유통방식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소비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나 일일 가격 자료 작성 등 현안 대응에도 벅찬 상황</li> <li>- 축산환경 부분은 최근 귀농귀촌 및 혁신도시 농촌지역 이주 등으로 약취 문제 심각</li> <li>- 12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인력으로는 민원 처리와 사업 집행에도 빠듯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li> <li>- 한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20.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 마련, 양봉농가 등록제 도입 등 후속조치를 위한 인력보강 필요</li> <li>- 개별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보급하는 것은 점차 축소 필요</li> <li>- 그동안 소득 창출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최근 농촌환경 부하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음</li> <li>- 축산 농가당 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고 개별 축사의 매출액도 커진 만큼 이제는 농가 소득보전 보다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li> <li>- 이에 예산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개별농가의 보조금은 융자금으로 전환하고, 분뇨처리시설이나 폐사체 처리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중임</li> <li>- 앞으로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장기간 축적된 축산 농가·도축·이력·유통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가공 하여 활용하는 체계를 신속하게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 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유통과 축산환경 업무 인력 및 기능 보강 필요</li> <li>- 양봉농가 등록제 도입 등 대응 기능 필요</li> <li>-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및 가공 기능 강화 필요</li> </ul>

〈표 2-56〉 방역정책국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p><b>주요 환경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으로 사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li> <li>- '19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저지하고 있지만, ASF 감염 멧돼지 출현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li> <li>- 특단의 방역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방역비용* 외에 지역 축제 취소 등 국민 경제에 부담 초래</li> <li>- 돼지농장에서는 10.9일 경기 연천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위기단계 '심각' )</li> <li>- 구제역, ASF, HPAI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예방적 연중 상시 방역관리 필요</li> <li>- 특히, ASF 예방 및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한 기능 강화로 ASF 방역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행할 인력(전담부서) 보강 필요</li> <li>-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운영 및 동물병원 진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물 진료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필요</li> <li>- 동물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 지원 확대와 계란 살충제 사태, 항생제 내성 등 동물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동물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동물약품 분야 정부지원 강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구제역 가축전염병 발생 확대</li> <li>- AI, 구제역 지속 관리 필요</li> <li>- ASF 등 상시 방역관리 체계 필요</li> <li>- 동물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li> </ul>
<p><b>기능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F 방역대응) '19.9월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방역관리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임</li> <li>- ASF에 대해 체계적인 연중 상시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기능 강화(전담 조직 신설) 필요</li> <li>- ASF는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 중이며, 북한, 중국 등 인접 발생국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중 농장 차단방역 관리 필요</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농식품부 장관) 운영에 따라 농장 사육돼지 뿐 아니라 야생멧돼지(환경부 담당) 방역까지 총괄 관리하여 업무를 추진 중인 상황</li> <li>- (동물진료 체계 개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운영 및 동물병원 진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물 진료 표준화 기능 강화 필요</li> <li>-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20년 시행예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li> <li>-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로드맵을 마련, 진료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진행, 우선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부터 자율적 추진하면서 제도화 지속 추진</li> <li>-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 수출혁신품목 육성 등 산업계 지원 확대 및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도입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 추진</li> <li>- 수출혁신품목 육성(시험인증, 해외수출등록 지원 등)하여 국내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li> <li>- 동물약품 사용실태조사 및 잔류성 시험·분석 등으로 축산농가의 안전사용기준 정비</li> <li>-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센터 구축사업(250억 2020~2022)으로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amp;D) 분야 강화</li> <li>- 매년 구제역, ASF, HP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방역정책국은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추진 중임</li> <li>- ASF 방역업무와 상시 개최되는 회의준비 및 주말까지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업무 피로도 누적</li> <li>- 현 상황에서 방역의 강도를 줄일 수 없으므로 방역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가 아니라, 조직(인력) 보강 등을 통해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기능 강화</li> <li>- 동물진료 체계 개선 및 기능 강화</li> <li>- 수출혁신품목 육성 기능 강화</li> <li>-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기능 강화</li> </ul>

〈표 2-57〉 식품산업정책국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p><b>주요 환경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li> <li>- (식품시장)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우리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 등으로 식품산업 성장 여건 성숙</li> <li>-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 기업이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고, R&amp;D 투자 저조로 기술 경쟁력 취약</li> <li>- (수출) *20년 세계경제 회복세 속에서 주력시장 경기 둔화, 무역 분쟁 등 리스크가 상존하나 신남방 시장 등은 성장이 기대</li> <li>- (외식) 외식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최근 공유주방 등 푸드테크 확산으로 새로운 시장의 성장 가능성 부각</li> <li>-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6.13조 달러(* 16)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li> <li>- 중국·아세안 등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 20년에는 7.1조 달러까지(연평균 1.9% 증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li> <li>-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큰 성장세 전망(연평균 5.9% ↑)</li> <li>- K-POP 등 한류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한식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국내 농식품 수출에 우호적 분위기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물류, 외식 등 파급효과인 산업</li> <li>- 새로운 소비 트렌드 및 우리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li> <li>- 신남방 시장 성장 기대</li> <li>- 공유주방 등 푸드테크 확산</li> <li>- 중국 아세안 등의 경제성장으로 동반 성장 기대</li> </ul>
<p><b>기능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분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분야 R&amp;D 지원 등을 통한 유망분야 집중 육성 필요</li> <li>- 확대되고 있는 기능성 식품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원료 발굴 등을 위한 식품영양학, 임상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능 강화 필요</li> <li>- 식품 경기 활성화 및 국내산 기능성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기대</li> <li>-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대면 판로개척 등 중소식품기업 경기 부양 정책 강화 필요</li> <li>- 한식진흥법에 따른 신규제도, 한식 진흥 사업 등을 통해 해외 한식당 이미지 개선 한식의 해외 소비 기반 확충 등 필요</li> <li>- 외식업체에 외식 경영, 푸드테크 활용, 해외진출 등 교육·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매출피해 지원방안 필요</li> <li>- 외식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확대, 외식 트렌드 변화 적시 제공, 외식상권 실시간 분석체계 구축 및 외식업자 경영교육 등 중소 식품기업들의 글로벌 온라인몰(아마존 등) 진출은 여전히 부족하며, 직구몰(Kmall24, 무역협회) 같은 자체 유통 플랫폼도 없는 상황으로 성장세인 온라인 유통망을 중점 지원할 필요</li> <li>- 식품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국책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담부서(과 조직) 신설 등을 통한 안정적 추진 체계마련 필요</li> <li>- (한시조직 운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등을 위해 신설된 식품클러스터추진팀(한시조직) 구성·운영 중( '12.2.28~현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분야 R&amp;D 지원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기능 필요</li> <li>-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원료 발굴 기능 필요</li> <li>- 온라인 유통망 지원 기능</li> <li>-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li> </ul>

〈표 2-58〉 유통소비정책국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주요 환경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안전 지향 소비패턴 확산, 윤리적 소비 관심 증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 증가</li> <li>- 기후변화·기술진보 등 생산여건이 변화하고 1인 가구 증가 및 외식경기 둔화 등 소비 변화로 수급 불안요인 증가</li> <li>- 온라인 유통 및 직거래, 대량수요처 등으로 직접 유통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도매시장의 경유비율이 높아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li> <li>-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산 기조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학생 등 대상 농식품 지원 요구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소비패턴 확산</li> <li>- 윤리적 소비 관심 증대</li> <li>-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 증가</li> <li>- 환경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및 외식 경기 둔화</li> <li>- 도매시장 유통구조개선 확대</li> <li>-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li> </ul>
기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지자체의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 수립·지원 및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등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위해 기능 강화 필요</li> <li>- 실측기반의 수급정보 고도화,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지원,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등 농산물 가격안정 체계 구축 필요</li> <li>- 신유통경로 확산 및 도매시장 중심 유통·가격결정 구조를 산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 강화</li> <li>- 농식품바우처, 학교과일간식 공급 등 농식품 취약계층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공급 확대 및 소비체계 확산</li> <li>- 기능 강화</li> <li>- 농산물 가격안정 체계 구축</li> <li>- 유통구조 개선 강화</li> <li>- 농산물 소비기반 지원 기능 강화</li> </ul>

〈표 2-59〉 농업생명정책국

부문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주요 환경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분야에 새로운 기술 도입이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li> <li>- 반려동물 인스타그램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동물복지 정책 수요 및 민원도 급증</li> <li>- 스마트팜은 이번 정부에서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핵심정책구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스마트농업 확산</li> <li>- 동물복지 정책 수요 민원 증가</li> </ul>
기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마련 스마트팜 확산발키 조성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실증지원 등을 도모하고 있음</li> <li>- 또한 전년도부터 ICT표준 마련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그린바이오 산업육성방안 수립 등 농식품부 기존업무가 아닌 새로운 분야의 정책 도입 추진중</li> <li>- 농업생명정책관실은 재배생산 등 축소·약화되고 있는 관행 정책이 아닌 스마트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amp;D, 곤충미생물 산업 육성 등 신산업을 개척발전시키는 부서임</li> <li>-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기획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은 별도 부서를 신설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임</li> <li>-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수립·기획을 위한 정책기획부서 신설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실증 지원 기능 강화</li> <li>- 타 분야 융합의 사업개발 가능 필요</li> <li>- 미래산업 육성 가능 필요</li> </ul>

## 나.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현업에서 체감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강화 이슈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기능 동태성 이슈를 고려한 적정 인력 산정이 필요함

〈표 2-60〉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부서	주요 환경변화	기능 변화
농촌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개발로 빈집 등 주거환경 악화 및 고령화 증가</li> <li>-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농촌개발정책 이슈 제기</li> <li>-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법시행</li> <li>- 농외소득창출 증대</li> <li>- 워라밸문화로 인한 농촌관광 확대</li> <li>-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가</li> <li>-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녹색경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강화</li> <li>- 농촌지역 난개발대응에 따른 농촌공간 계획 수립 및 법제화 필요</li> <li>- 미세먼지 관련 사업 전담인력 필요</li> <li>- 재정 관련 지자체 연계 강화</li> <li>-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방안 마련</li> <li>-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강화</li> <li>-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대응</li> </ul>
국제협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li> <li>- 국내 농업 내실 성장 필요</li> <li>- 최근 미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개혁</li> <l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검역 강화</li> <li>-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li> <li>- 메가 FTA 부상과 새로운 통상질서 모색</li> <li>- FTA 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FTA 이슈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한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기능 필요</li> <li>- 농업 ODA 추진 효과성 제고 기능</li> <li>- 국제통상환경 대응 및 국제사회 공동 문제 참여 기능 필요</li> <li>- 메가FTA 확대 추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대응</li> <li>- SBS/TBT 서비스 및 지재권 등 규범 협상 기능 강화</li> <li>- FTA 이행 및 시장조사 기능 강화</li> </ul>
식품산업 정책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물류, 외식 등 파급효과인 산업</li> <li>- 새로운 소비 트렌드 및 우리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li> <li>- 신남방시장 성장 기대</li> <li>- 공유주방 등 푸드테크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분야 R&amp;D 지원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기능 필요</li> <li>-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원료 발굴 기능 필요</li> <li>- 온라인 유통망 지원 기능</li> <li>-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아세안 등의 경제성장으로 동반 성장 기대</li> </ul>	
농업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후 신중년에따른 농업 일자리 창출</li> <li>- 농지정책 기반 강화</li> <li>- 농지 지원 확대 추진</li> <li>- 코로나 상황에 따른 농업인력 수급</li> <li>-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업분야일자리 기능 강화</li> <li>- 차세대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li> <li>-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기능 강화</li> <li>- 농협경제 업무 대응 강화 필요</li> </ul>
축산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 추구</li> <li>- 축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li> <li>- 등급제 및 이력제확대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축산물 유통 추진</li> <li>- ICT 축사시설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유통과 축산환경 업무 인력 및 기능 보강 필요</li> <li>- 양봉농가 등록제 도입 등 대응 기능 필요</li> <li>-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및 가공 기능 강화 필요</li> </ul>
유통소비 정책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소비패턴 확산</li> <li>- 윤리적 소비 관심 증대</li> <li>-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 증가</li> <li>- 환경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및 외식 경기 둔화</li> <li>- 도매시장 유통구조개선 확대</li> <li>-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공급 확대 및 소비체계 확산 기능 강화</li> <li>- 농산물 가격안정 체계 구축</li> <li>- 유통구조 개선 강화</li> <li>- 농산물 소비기반 지원 기능 강화</li> </ul>
식량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직불제시행</li> <li>- 코로나로 인해 곡물 수급관리 강화 및 국제동향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불제통합·개편됨에 따른 새로운 기능(업무)확대</li> <li>- 국제곡물 조달체계 강화</li> </ul>
방역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구제역 가축전염병 발생 확대</li> <li>- AI, 구제역 지속 관리 필요</li> <li>- ASF 등 상시 방역관리 체계 필요</li> <li>- 동물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기능 강화</li> <li>- 동물진료 체계 개선 및 기능 강화</li> <li>- 수출혁신품목 육성 기능 강화</li> <li>-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기능 강화</li> </ul>
농업생명 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스마트농업 확산</li> <li>- 동물복지 정책 수요 민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실증 지원 기능 강화</li> <li>- 타 분야 융합의 사업발굴 기능 필요</li> <li>- 미래산업 육성 기능 필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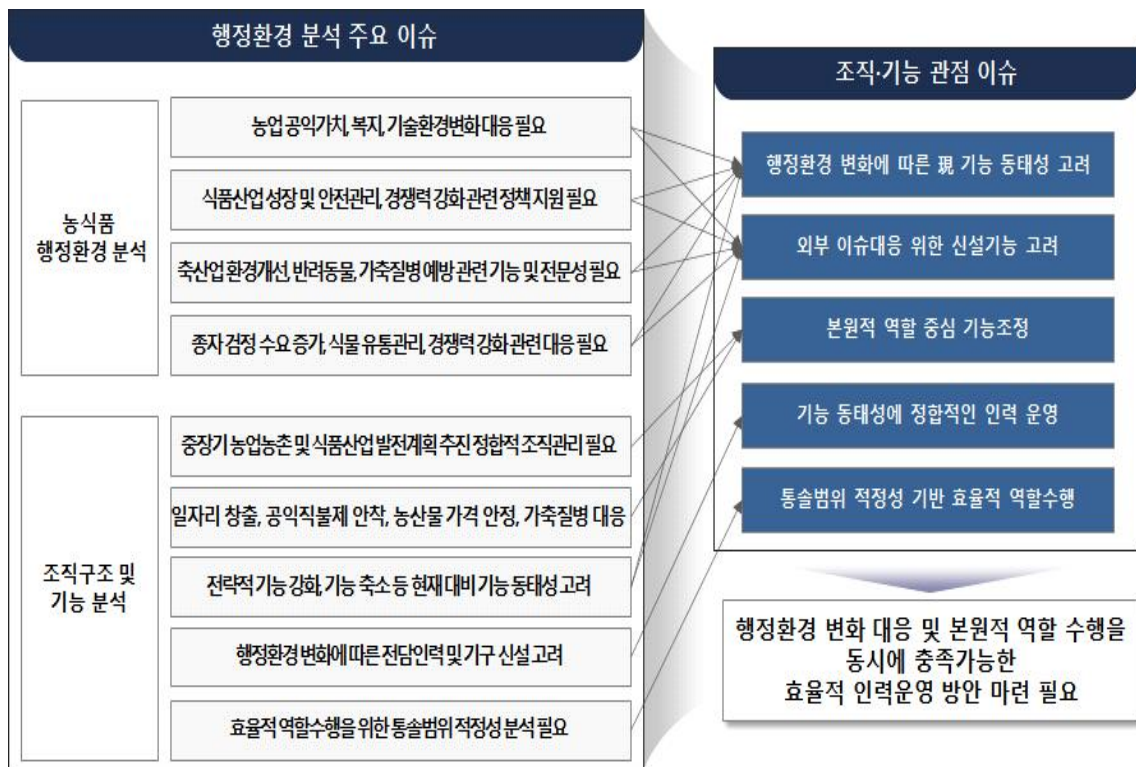
### 3. 종합 시사점

- 농식품부 행정환경 분석은 외부적인 관련 산업적 환경과 내부적인 조직구조 및 기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어지며, 식품산업의 경우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식품산업 신수요가 촉진됨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시장 개방 이슈를 고려한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약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능이 마련되어야 함
  - 축산업은 경우 축산 생산 기반 및 지속 성장을 위한 환경개선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내실 있는 성장 유도하고 가축 질병의 예방 중심 전략과 실행방안의 중점적 고려가 필요하며, 종자산업은 산업 성장세와 수요 증가에 따른 심사와 식물 검역 및 유통관리 강화가 필요하여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농식품부의 내부적인 조직구조 및 기능은 전략적 방향인 중장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추진과 정합된 조직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2020년 업무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공익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안정,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 등 업무 추진방향과 정합된 기능 및 인력 운영의 고려가 요구됨
  - 또한, 사업부문을 관장하는 9개 실·국 단위 조직은 각 조직별 주어진 역할과 관련된 정책환경 변화가 상이하어 이에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요기능 강화, 기능 신설 필요성, 기능 축소, 전담인력 운영 등의 이슈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능 동태성 이슈의 고려가 필요함
  - 더불어, 현재 국 단위 조직의 하위 과별 단위 조직의 SOC는 6.7명~ 13.3명의 편차로 나타남에 따라 각 부서별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한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기능 관점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 먼저, 조직진단 대상 조직의 본원적 역할 중심의 기능 조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 기능 동태성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외부 이슈 대응을 위한 신설기능의 고려가 요구됨



- 이와 같은 기능 동태성을 고려하여 조정된 기능에 정합된 인력운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또한, 단위조직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정부부처로서의 효율적 역할수행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종합하여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본부 및 단위조직 차원의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본원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림 2-37> 행정 환경 대응 위한 조직·기능주요 시사점



### Ⅲ. 조직 운영 분석

#### 1. 직무분석

##### 1) 직무분석 개요

###### (1) 직무조사 목적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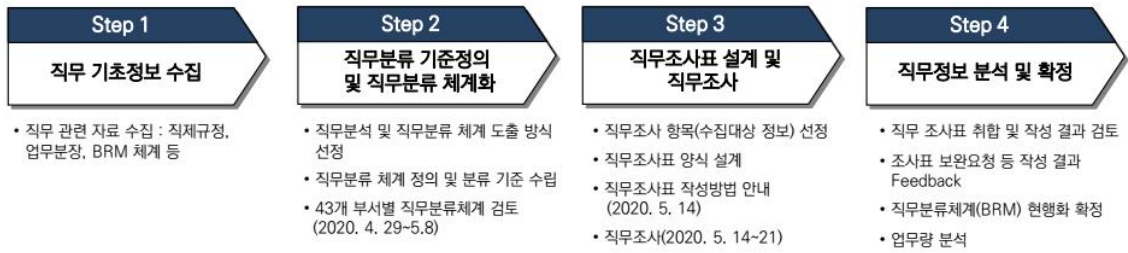
- 직무분석(Job Analysis)이란 조직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타당한 직무정보를 획득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조직 및 인력관리 전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됨
- 직무분석의 목적은 조직 진단 및 조직 재설계의 기반을 확립하고 직무분류, 직무관리의 기초자료로 수립을 통해 조직관리 및 인사제도 설계의 근간으로 활용됨
- 직무분석은 조직차원에서 조직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을 위한 세부 업무 프로세스 파악 및 문서화, 조직 내 수평적인 직무체계 구축,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사내 외 법규/규정의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조직의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한 토대 구축, 유사 직무그룹 및 경력개발경로 파악, 직무별 채용 및 내부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마련, 인력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 (2) 직무조사 절차

- 직무분석은 직무 기초정보 수집, 직무분류 기준정의 및 직무분류 체계화, 직무조사표 설계 및 직무조사, 직무정보 분석 및 확정 4단계로 이루어짐
- 직무 기초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직제규정, 업무분장, BRM 체계 등을 포함한 직무관련 자료를 수집함
- 직무분류 기준정의 및 직무분류 체계화 단계에서는 직무분석 및 직무분류 체계도출 방식을 선정하고 직무분류 체계 정의 및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현업 부서별 직무분류체계를 검토함

- 직무조사표 설계 및 직무조사 단계에서는 직무조사표 양식 설계 후 현업 부서 설명회를 통해 직무조사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직무조사를 실시함
- 직무정보 분석 및 확정 단계에서는 직무 조사표를 취합 및 작성 결과를 검토하고 조사표 보완요청 등 작성 결과를 피드백하여 직무분류체계를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량을 분석함

〈그림 3-1〉 직무분석 Process



### (3) 직무분석 방법론

- 직무분석은 다양한 방법론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분석 대상 조직이 많고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의 필요성이 높아 직무분석 추진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법을 활용하였음

〈그림 3-2〉 직무분석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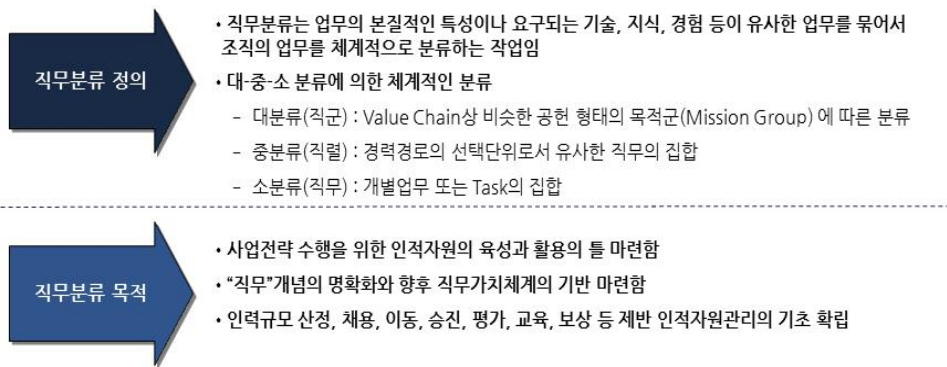
	정의	장점	단점	방법론(안)
<b>관찰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석자가 직무담당자의 직무활동에 대해 상세히 관찰 기록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이 쉬움</li> <li>• 육체노동과 같이 관찰이 가능한 직무에 적용이 쉬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 사고력이 많이 포함된 직무는 관찰이 어려움</li> <li>• 분석할 직무가 많거나 직무의 성격이 비반복적인 경우는 관찰에 많은 시간이 소요</li> <li>• 관찰자의 주관 개입 가능</li> </ul>	<input type="checkbox"/>
<b>면접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직무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과의 직접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얻기 때문에 자료의 실질성이 큼</li> <li>• 구조적인 직무는 지시적 면접을 통하여 시간 절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가 많은 경우에는 면접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li> <li>• 비구조적인 직무는 비지시적 면접을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li> </ul>	<input type="checkbox"/>
<b>설문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직무 담당자로 하여금 이에 응답하도록 하여 직무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지가 잘 설계되고 정확한 자료를 얻는 경우 매우 효과적</li> <li>• 단시일에 많은 정보를 수집</li> <li>• 직무가 많은 경우에 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담당자의 응답이 정확하지 않거나 직무분석자가 설문지 자료를 잘못 이해 또는 해석할 위험이 있음</li> </ul>	<input checked="" type="checkbox"/>

## 2) 직무분류체계 정립

### (1) 직무분류의 정의 및 목적

- 직무분류란 유사한 직무를 묶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하며, 조직관리 뿐 아니라 인적자원 육성·활용의 틀을 제공하고 향후 인사제도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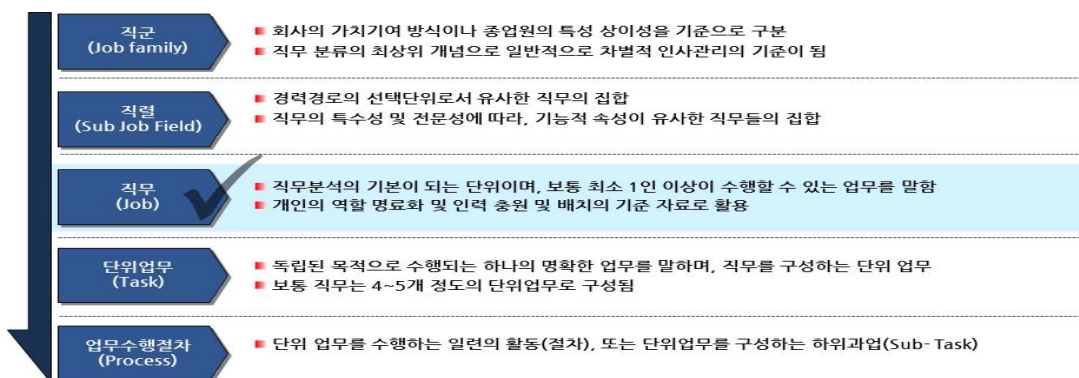
<그림 3-3> 직무분류의 정의 및 목적



### (2) 직무분류체계의 개념

- 직무분류체계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분류체계 내에서의 상·하위 구분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직무는 직무분석의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 개인의 역할 명료화 및 인력 충원 및 배치의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그림 3-4> 직무분류체계 개념



### (3) 직렬(Sub Job Field) 구분 원칙

- 농식품부의 실·국단위 조직은 정책수립, 예산편성, 정책 집행이 유사한 업무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직무분류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업무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실·국단위 조직 역할과 관련된 고유 영역의 고려가 필요함

〈표 3-1〉 업무구분 및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정책수립	기본 정책자료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본 정책안 작성
	이해관계자(국회, 청와대, 민간 등) 협상/조율/추가의견수렴
	법적 검토 및 타당성(영향력) 조사
	추진계획수립(로드맵, 실행계획, 협의체 안건 등)
	개선계획수립
정책 집행 및 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실행
	점검 및 모니터링
	산하기관 관리
	위원회/협의체 등 관리
	결과평가
내부 보고 및 회의	보고자료 초안 작성
	내부보고 및 보고자료 수정보완
	회의결과 기록 및 관리
	회의결과 후속조치
대외협력 (국회, BH, 국무총리실, 감사원등)	요청(보고)자료 작성(취합)/수정보완
	내부 보고 및 수정
	외부 업무보고/설명
	후속조치
예산관리	예산 편성 기본안 작성
	예산 심의 및 협의(1~5단계)
	예산 집행
	결산
법령 제개정	법령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심사(규제, 법제처 등)
	국회/차관회의 보고
	국회제출 및 대응

- 특히 농림부는 정부부처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 목적별로 분류한 BRM(Business Reference Model) 체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행화하여 직무분류체계를 완성하였음

#### (4) 직무 구분원칙

- 직무(Job)는 동일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유사 과업의 집합체로서 최근 유연한 조직관리, 경력개발, 보상 수준 비교 등의 필요성에 따라 역할과 책임(R&R), 필요역량/지식/기술이 함께 고려되는 개념임
- 직무범위 상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조직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
- 소규모 조직에서는 하나의 직무가 대규모 조직에서는 별도로 분류된 2~3개의 직무로 구성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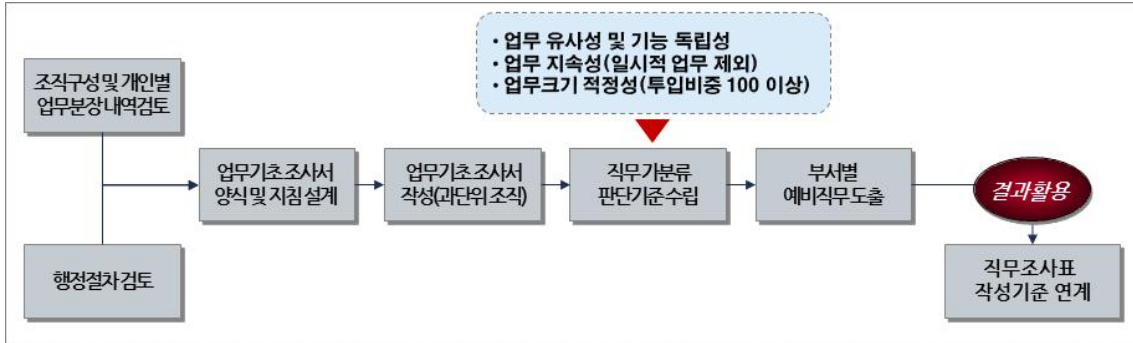
<그림 3-5> 직무분류체계 도출 방법



#### (5) 직무체계 가분류

- 직무 가분류는 효율적인 직무분석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 내 부서·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및 BRM을 기초로 사내 직무를 잠정 분류하는 과정이며, 직무 가분류 결과는 직무 조사표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함
- 현재 어떠한 업무들이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최종 직무분류 체계 설정 이전에 직무-업무-단위업무의 직무분류체계를 사전에 설정 하는 과정임
- 직무 가분류 결과는 과 단위 협업 사업부서 대상으로 하는 직무 조사표 작성 시 기준 직무로 활용됨

〈그림 3-6〉 직무 가분류 프로세스



## (6) 직무분류체계 확정

- 농식품부는 정부기능 분류체계인 BRM(Business Reference Model)를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직무분류체계의 전체적인 구조는 기존 BRM체계를 유지하되 세부 업무 단위인 소기능 및 단위업무의 경우 실·국단위 조직이 유사한 업무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본 연구의 직무분류 구조(안)을 활용하여 직무분류체계를 현행화하여 확정하였음

〈표 3-2〉 직무분류체계 예시(농업정책과)

과 / 팀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업무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남북농업협력 추진	북한농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획 총괄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남북농업협력 추진	통일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남북농업협력 추진	민간의대북농업지원사업및 농촌축산물 교역지원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남북농업협력 추진	머, 통준위, 통일부 등 대외 협력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남북농업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지원 운영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남북농업협력 추진	남북협력포럼 대외협력 및 자료 조사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직접지불제의 총괄 및 조정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 추진방안 수립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 포함)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농업정책연구 및 통계분석	중장기 농가소득 관련 정책 개발 및 농가소득 통계 분석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대응 및 대책수립	개도국 지위 관련 대응 및 대책 수립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농업분야 청년정책	청년정책 업무 수립 및 추진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농식품 정책 개발	농업 혁신 및 신규정책개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수립	농식품 정책 개발	EU 등 선진국 정책동향 시사점 발굴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농식품 정책연구 추진	정책연구개발사업 기획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농식품 정책연구 추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선정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농식품 정책연구 추진	정책연구개발사업 검사 .검수 및 예산 집행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농식품 정책연구 추진	정책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농식품 정책연구 추진	정책연구개발사업 (프리즘) 관리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정부기념일 행사 추진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추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정부기념일 행사 추진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기념식장 조성 및 운영)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정부기념일 행사 추진	행사결과 보고 및 정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정부기념일 행사 추진	농업인의 날 정부 포상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농업박람회 추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계획수립 및 TF 운영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농업박람회 추진	전시행사관 조성 및 대표 홈페이지 운영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운영	농업박람회 추진	농업박람회 평가결과 보고 및 정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관리	농정에 관한 보고서 작성	WTO 이행보고서 작성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 관리	농정에 관한 보고서 작성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수립및운영	농정회의 운영	시도 농정국장회의 추진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업정책수립및운영	농정회의 운영	농정 지역담당관 운영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식품 일자리	농식품 일자리 정책 수립	농식품 일자리 정책 기획 (일자리위원회 등 대응)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식품 일자리	농식품 일자리 정책 수립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업무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식품 일자리	농식품 일자리 정책 수립	산업별 고용동향 분석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식품 일자리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추진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식품 일자리	일자리 관련 시스템 운영	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등록관리 업무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농식품 일자리	일자리 관련 시스템 운영	국가 ·민간 자격증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에관한 법률 운용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영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운영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농어촌 상생기금 업무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FTA 대책 성과 및 투 · 용자 보고서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관리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FTA 분야 교육 · 홍보사업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운용	FTA 기금의 운용 · 관리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운용	FTA 기금 운용규정 제 · 개정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운용	FTA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농업정책과	국제농업통상협력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운용	FTA 기금 집행 및 결산

※전체 직무분류체계는 별도 파일 참고



### 3) 직무조사 결과분석

- 농림부의 인당 평균 연간 투입 업무량은 2,135시간이며, 국 단위 조직별 인당 평균 업무량은 2,076~2,239시간으로 나타남
- 국 단위 조직별 인당 평균 업무량의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며, 이는 조직별 업무 속성의 편차가 크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3-3〉 국 단위 조직별 연간 투입 업무량 현황

국 단위 조직	인원(명)*	업무시간**	
		전체	평균
농촌정책국	60	125,905	2,098
농업정책국	60	127,765	2,129
식량정책관	58	122,261	2,108
국제협력국	46	99,015	2,153
축산정책국	44	95,521	2,171
방역정책국	38	85,095	2,239
식품산업정책관	46	95,486	2,076
유통소비정책관	59	125,335	2,124
농업생명정책관	60	129,332	2,156
<b>합계</b>	<b>471</b>	<b>1,005,715</b>	<b>2,135</b>

\*2020년 5월 직무조사 시점 현원(현원 기준 적정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원의 업무량은 1년 단위 업무주기를 고려하여 2019년 업무량을 반영)

\*\*2019. 01~12 기간 투입 업무량(휴가 및 OT시간 반영)

□ 기능 동태적 측면에서는 본원적 업무 중 유지 업무가 6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능 동태성이 크지 않은 편임

□ 다만 강화 31.3%, 축소 0.2% 등으로 나타나는 기능 동태성에 대해서는 전략적  
강화 및 효율화 관점을 반영한 인력관리 방안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3-4〉 국 단위 조직별 기능 동태성 현황

국 단위 조직	본원적 업무시간	강화		유지		이관		축소		폐지	
		시간	비중	시간	비중	시간	비중	시간	비중	시간	비중
농촌정책국	92,716	36,138	39.0%	55,224	59.6%	0	0.0%	1,141	1.2%	212	0.2%
농업정책국	105,901	33,386	31.5%	71,731	67.7%	784	0.7%	0	0.0%	0	0.0%
식량정책관	92,568	33,207	35.9%	59,098	63.8%	0	0.0%	263	0.3%	0	0.0%
국제협력국	81,684	10,061	12.3%	71,623	87.7%	0	0.0%	0	0.0%	0	0.0%
축산정책국	81,231	14,669	18.1%	66,562	81.9%	0	0.0%	0	0.0%	0	0.0%
방역정책국	61,671	20,044	32.5%	41,628	67.5%	0	0.0%	0	0.0%	0	0.0%
식품산업정책관	72,432	21,601	29.8%	50,670	70.0%	0	0.0%	0	0.0%	161	0.2%
유통소비정책관	108,561	31,365	28.9%	75,933	69.9%	994	0.9%	268	0.2%	0	0.0%
농업생명정책관	114,213	53,607	46.9%	59,915	52.5%	690	0.6%	0	0.0%	0	0.0%
<b>합계</b>	<b>810,977</b>	<b>254,078</b>	<b>31.3%</b>	<b>552,384</b>	<b>68.1%</b>	<b>2,468</b>	<b>0.3%</b>	<b>1,672</b>	<b>0.2%</b>	<b>373</b>	<b>0.1%</b>

※ 공통업무 제외. 2020. 5. 14~21에 진행한 직무조사 결과에 중간보고 이후 기능동태성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포함 반영하였음

□ 비본원적 업무에 해당하는 공통업무 투입 비중은 전체 업무량의 19.4%이며, 국 단위 조직별 공통업무 비중은 11.7%~27.5%로 다소 편차가 존재함

○ 공통업무 중 서무와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원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통업무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표 3-5〉 국 단위 조직별 공통업무 현황 및 유형

국 단위 조직	인원	전체업무		공통업무		공통업무 (소분류)	업무시간	비중
		시간	평균	시간	비중			
농촌정책국	60	125,905	2,098	33,189	26.4%	기록관리	7,790	4.0%
농업정책국	60	127,765	2,129	21,864	17.1%	물품관리	3,700	1.9%
식량정책관	58	122,261	2,108	29,693	24.3%	민원관리	15,384	7.9%
국제협력국	46	99,015	2,153	17,331	17.5%	보안관리	8,763	4.5%
축산정책국	44	95,521	2,171	14,290	15.0%	서무	60,953	31.3%
방역정책국	38	85,095	2,239	23,424	27.5%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46,153	23.7%
식품산업정책관	46	95,486	2,076	23,054	24.1%	예산회계	23,758	12.2%
유통소비정책관	59	125,335	2,124	16,774	13.4%	지도감사	4,868	2.5%
농업생명정책관	60	129,332	2,156	15,119	11.7%	기타	23,369	12.0%
<b>합계</b>	<b>471</b>	<b>1,005,715</b>	<b>2,135</b>	<b>194,738</b>	<b>19.4%</b>	<b>합계</b>	<b>194,738</b>	<b>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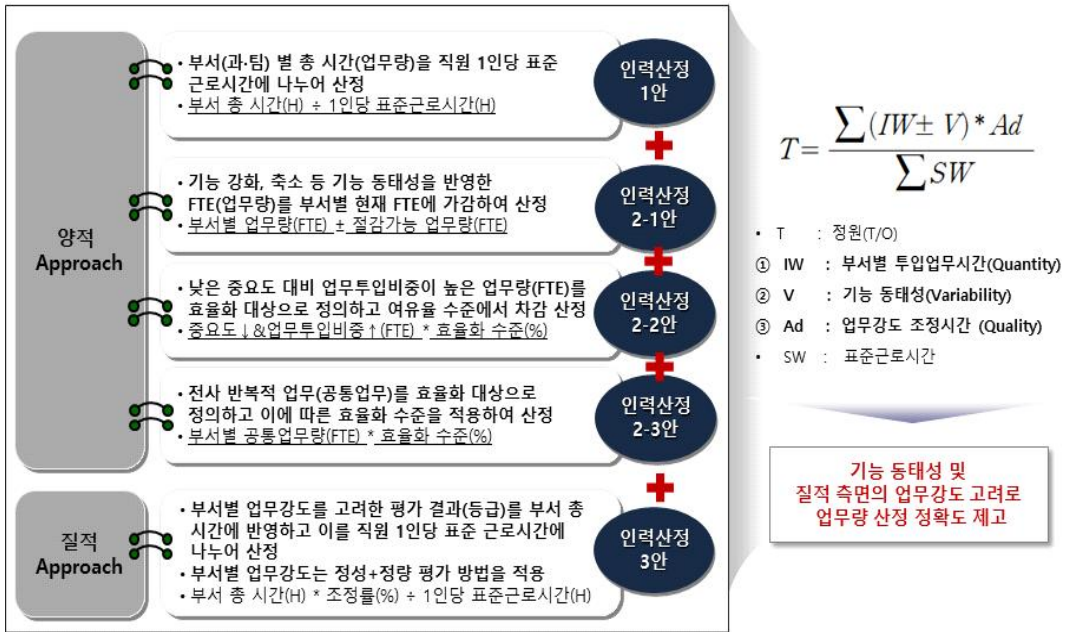
## 2. 업무량 분석 기반 적정인력 산정

### 1) 업무량 분석 개요

#### (1) 업무량 분석 방법론

- 양적 업무량 관점의 직무분석 결과에 기능 동태성 및 질적 업무량 관점의 업무 밀도 분석을 더하여 업무의 양적·질적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업무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정 인력을 산정함
- 양적관점의 업무량 분석은 2가지 안으로 산출되었으며, 양적 관점의 업무량 분석 1안은 부서(과)별 총 시간(업무량)을 1인당 표준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 또한, 양적 관점의 업무량 분석 2안은 기능 동태성, 공통 업무 효율성 등의 효율화 요소를 고려하여 3가지 방안으로 산정함
  - 2-1안의 경우 기능 강화, 축소 등의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업무량을 부서별 업무량에 가감하여 산정함
  - 2-2안은 중요도가 낮지만 업무투입비중이 높은 단위업무를 효율화 대상으로 정의하고 여유율 수준에서 차감하여 산정함
  - 2-3안은 전사 반복적 업무인 공통 업무를 효율화 대상으로 정의하고 선행 연구에서 절감 가능한 효율화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 또 다른 관점의 질적 분석은 업무강도에 대해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를 고려하여 부서 총 시간에 반영하고 이를 1인당 표준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이를 3안으로 적용함
  - 정량적 방법으로는 사업수행 건수, 홍보건수 등 수집된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국 단위 조직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업무밀도 차이에 따라 여유율 수준 차이를 적용하여 부서 총 시간에 반영함
  - 정성적 방법으로는 업무밀도 정성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조사표를 설계하여 실·국 단위 주무과장을 대상으로 평가 인터뷰 실시하여 조직별 상대적 밀도를 조사하였으며, 업무밀도 차이에 따라 여유율 수준 차이를 적용하여 부서 총 시간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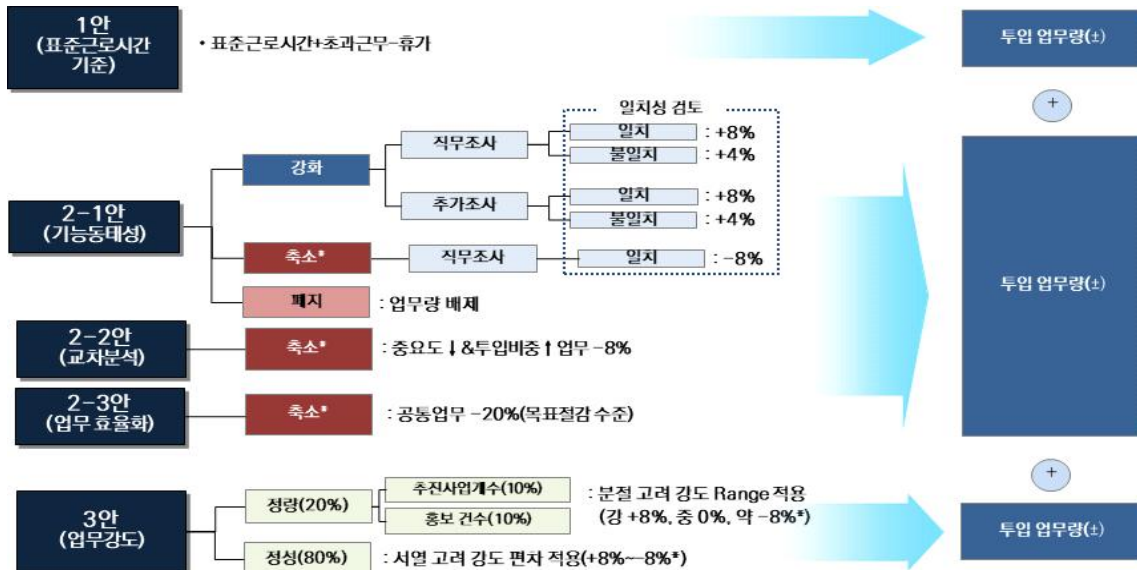
〈그림 3-7〉 업무량 분석 방법론



※ FTE(Full Time Equivalent) : 투입 업무량(인원)

□ 양적 관점과 질적 관점의 각 방안별 업무량 가감 요인은 다음과 같으며, 가감 요인을 감안한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을 산정함

〈그림 3-8〉 업무량 분석 가감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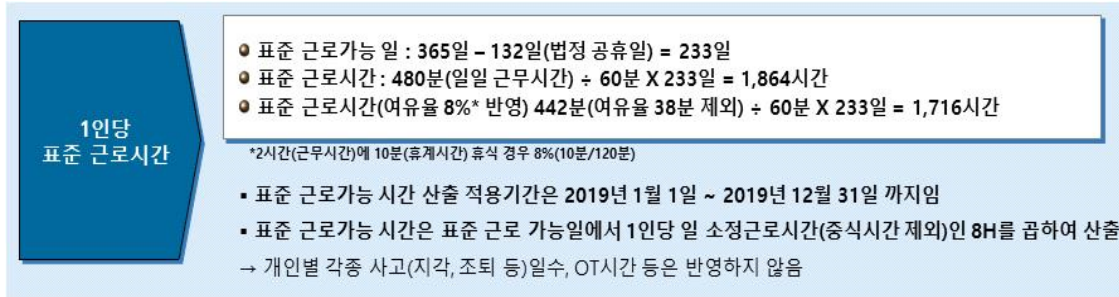
※ ±8%는 2시간 기준 10분의 여유율 수준임

\*표시는 효율화 대상이며, 기능의 폐지보다 여유율 축소 및 비분원적 업무에 대한 효율화 관점이 타당함

## (2) 표준근로시간 산출

- 표준근로시간 산출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 조직구성원들의 연간 표준 근로가능 일수는 233일이며, 인당 표준근로시간은 1,864시간으로 산출하였음

<그림 3-9> 표준 근로시간 산출



- 표준 근로가능 일수 산출 방법은 1년 365일에서 토·일요일, 명절, 국경일 및 어린이날 등과 같은 특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상 기본 15일 연차를 제외한 132일을 제외하여 산출함

<표 3-6> 근로 제외 일수

구분	토/일요일	신정	구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중복일수	계
일수	104	1	3	1	1	1	1	2	132일
구분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	-		
일수	1	3	1	1	1	15	-		

- 이에 따라, 농식품부 직원 1인당 표준 근로가능 일수는 2019년도 기준 총 233일에 해당함
- 표준근로시간은 1,864시간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입 업무량 대비 표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함

## 2) 업무량분석 결과

### (1) 1인 표준근로시간 기준

#### 가. 인력 재배치 방안\_과 단위 분석결과

#### 가) 농촌정책국

##### ① 농촌정책과

□ 농촌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9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7〉 농촌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림부문 중장기 정책개발 추진	2,776	1.33
농식품 중장기 대책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	1,549	0.75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등 법령 운영	1,170	0.55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연구	58	0.03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대책 추진	3,145	1.34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279	0.12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영	395	0.17
삶의질 향상 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395	0.17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519	0.22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519	0.22
삶의질 향상 위원회 운영	519	0.22
삶의질 향상 특별법 운용	519	0.22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880	0.42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880	0.42
농업회의소 관리 및 지원	1,381	0.64
농업회의소 관련 법령 제개정	908	0.42
농업회의소 설치, 관리 및 지원	473	0.22
농촌정책개발관리	1,388	0.63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운용	908	0.42
농촌개발 국제협력	403	0.17
농촌개발관련법령협의	38	0.02
농촌개발연구	38	0.02
농촌사회복지	1,427	0.64
농어촌 서비스기준 및 협의회 구성운영	519	0.22
농촌형 교통모델서비스 지원	908	0.42
농촌생활환경개선	473	0.22
깨끗한농촌만들기	473	0.22
농민단체 관련 기타	473	0.22

농민단체 관련 기타 업무사항	473	0.22
농민단체 관리 및 지원	3,648	1.69
농민단체 관련 정부포상	907	0.42
농민단체 관리	1,617	0.75
농민단체 지원	1,124	0.52
산하유관기관 지도감독	1,539	0.74
농어촌공사 지도감독	770	0.37
산림청 지도감독, 산불재난실무매뉴얼운영	770	0.37
처리과공통	10,693	5.13
<b>총 합계</b>	<b>27,826</b>	<b>13</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7,826(H) ÷ 1,864(H) = 14.93명(현원대비 1.93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3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 분류체계 기준으로 농림부문 중 장기 정책개발 추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부 단위업무별로는 농식품 중장기 대책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 산하유관기관 지도 감독, 농촌사회복지 등의 순으로 인력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7,826(H)으로 산정됨

## ②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4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8> 지역개발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촌정책개발관리	1,351	1
농촌지역개발계획	739	0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612	0
농촌활력증진계획	705	0
시군역량강화사업	359	0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	346	0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612	0
경관보전직불제시행	612	0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182	0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추진	182	0
농촌생활환경정비	3,680	2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 관련 제도 정비	557	0
농촌 경관개선 위한 업무 추진	172	0
농촌건축대전 및 농촌계획대전 추진	232	0



농촌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영	232	0
농촌빈집정비	721	0
농촌유휴시설 활용	509	0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개발·보급	192	0
농촌주택개량	483	0
전원마을 제도정비	19	0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19	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544	0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8,087	4
365생활권 구축	618	0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	681	0
농어촌개발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자격 관리	225	0
농촌 지역개발인력 역량강화	225	0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 및 관리	225	0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 운영 관리	484	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554	1
농촌지역개발 사업시행(농촌지역 서비스 전달모델 발굴 및 확산)	223	0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673	0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	225	0
농촌협약 제도 추진	967	0
생활SOC사업 추진	618	0
연계협력사업 추진	106	0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803	0
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23	0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운영	237	0
도농교류 활성화	1,092	1
농촌경관사진공모전 추진	430	0
한계농지 정비	59	0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603	0
포괄보조	524	0
포괄보조	524	0
처리과공통	5,014	2
<b>총 합계</b>	<b>21,247</b>	<b>10</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1,247(H) ÷ 1,864(H) = 11.40명(현원대비 1.40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0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 분류체계 기준으로 농촌정책개발관리, 농촌 활력증진계획, 경관 보전직불제 추진,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부 단위업무별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 제도 추진, 농촌지역개발계획 등의 순으로 인력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1,247(H)로 산정됨

### ③ 농촌사회복지과

□ 농촌사회복지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9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 농촌사회복지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촌복합공간조성	392	0
대학생 학자금 융자	392	0
농촌노인복지	1,212	1
복지정책 관련	1,212	1
농촌사회복지	3,363	2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1,192	1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1,288	1
농촌교육여건개선	884	0
사회적경제	1,675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558	0
사회적 협동조합	1,117	1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756	0
취약농가 인력지원	756	0
농촌공동체활성화	1,773	1
농촌교육문화복지	887	0
농촌축제지원	887	0
농촌생활환경개선	631	0
미세먼지 저감	631	0
도농교류 활성화	293	0
농촌문화체험기	293	0
처리과공통	4,802	2
<b>총 합계</b>	<b>14,897</b>	<b>7</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4,897(H) ÷ 1,864(H) = 7.99명(현원대비 0.99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7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 분류체계 기준으로 농촌복합공간 조성, 농촌노인복지, 사회적경제,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부 단위업무별로는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 보험료 지원, 복지정책 관련 등의 순으로 인력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4,897H)으로 산정됨

#### ④ 농촌산업과

- 농촌산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4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농촌산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2,994	1
농외소득법 관리	613	0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운영	434	0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1,025	1
농촌융복합산업법 관리	921	0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운영	508	0
위원회 운영	254	0
특구지정 및 특례법	254	0
농공단지조성	1,245	1
농공단지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973	0
농공단지조성 사업관리(수정)	273	0
농촌활력증진계획	799	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관리(수정)	273	0
농촌활력정착지원	526	0
지역특화사업	1,765	1
지역특화사업(지구, 네트워크) 제도개선	1,115	1
지역특화사업(지구, 네트워크)비 예산편성 및 집행	377	0
향토산업육성 사업관리(수정)	273	0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6,774	3
관광농원조성	736	0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494	0
농어촌민박	2,080	1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312	0
농촌관광 활성화	1,857	1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및 관리	629	0
외국인 농촌관광 운영 및 활성화	666	0
도농교류 활성화	2,186	1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및 관리	517	0
도농교류법 관리	536	0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1,134	1
처리과공통	6,959	3
<b>총 합계</b>	<b>23,230</b>	<b>11</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3,230(H) ÷ 1,864(H) = 12.46명(현원대비 1.46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 분류체계 기준으로 농촌체험관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어촌민박,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등의 순으로 인력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3,230(H)으로 산정됨

#### ④ 농촌여성정책팀

- 농촌여성정책팀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5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1〉 농촌여성정책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촌 성평등 정책	1,971	1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 성평등 교육 확대	295	0
농촌분야 성평등 인력육성	395	0
농촌분야 양성평등 교육확대	491	0
성별영향평가 계획수립 및 추진	395	0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	100	0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295	0
<b>농촌 여성 복지정책</b>	<b>4,649</b>	<b>2</b>
농업인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1,123	1
농촌 보육여건 개선	1,219	1
여성농업인 모성권 보호	225	0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조성	359	0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186	0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	1,219	1
일 생활 양립 지원	320	0
<b>농촌 여성 인력정책</b>	<b>1,564</b>	<b>1</b>
결혼이민여성 교육 및 역량강화	299	0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	395	0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580	0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	290	0
<b>농촌 여성정책</b>	<b>3,873</b>	<b>2</b>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운영	776	0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680	0
여성농업인 단체와 협력 및 지원	484	0
여성농업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482	0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94	0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	194	0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연구 및 평가	290	0
여성농업인 정책패널 운영	290	0
여성농업인육성 자문회의 운영	484	0
처리과공통	226	0
<b>총 합계</b>	<b>12,281</b>	<b>6</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2,281(H) ÷ 1,864(H) = 6.59명(현원대비 0.59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6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 분류체계 기준으로 농촌여성정책, 농촌 여성 복지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부 단위업무별로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 등의 순으로 인력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2,281(H)으로 산정됨

## ⑤ 농촌재생에너지팀

- 농촌재생에너지팀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2〉 농촌재생에너지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b>기후변화 적응</b>	3,322	2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05	1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및 실태조사	901	0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국제협력	422	0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	995	1
<b>농촌재생에너지 보급</b>	4,617	2
농업인(주민) 참여형 태양광 추진	843	0
농촌지역 바이오매스 개발 및 이용	414	0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1,154	1
수상태양광 관련 농어촌공사 지도감독 및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1,251	1
영농형 태양광 확산	956	0
<b>농촌재생에너지 제도</b>	3,000	1
국내외 태양광 사업 정보 수집 및 분석	516	0
농촌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813	0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통계	1,144	1
컨설팅 등 농업인 지원 체계 마련	527	0
<b>온실가스 감축</b>	3,552	2
농업농촌 자발적온실가스 감축사업	870	0
배출권거래제 및 외부사업	676	0
식품목재업종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772	0
온실가스 감축 및 통계에 관한사항	267	0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967	1
<b>처리과공통</b>	1,705	1
<b>총 합계</b>	<b>16,196</b>	<b>8</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16,196(H) ÷ 1,864(H) = 8.7명(현원대비 동일)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8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 분류체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부 단위업무별로는 수상태양광 관련 농어촌공사,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통계, 등의 순으로 인력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6,196(H)으로 산정됨

## 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49명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업유산보전.관리	1,848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관리	469	0
농촌다원적 자원활용 및 농업유산제도 운용	1,016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원	363	0
농촌생활환경개선	1,577	1
농촌공동체 활성화 총괄	464	0
농촌공동체활성화(농촌재능나눔)	557	0
농촌재능나눔/집고쳐주기사업	557	0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988	1
건축온실분야 자문위원회 운영	219	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원	1,648	1
농업체험관건립사업에 관한 업무	438	0
박물관 설립근거관련 법안 마련	464	0
체험관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219	0
처리과공통	3,815	2
<b>총 합계</b>	<b>10,228</b>	<b>5</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0,228(H) \div 1,864(H) = 5.49명$ (현원대비 0.49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5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업유산보전 관리, 농촌생활환경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원,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 및 농업유산제도 운용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0,228(H)으로 산정됨

## 나) 농업정책국

### ①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시 1.3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4〉 농업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추진	457	0.22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57	0.22
농식품 일자리 정책 수립	1,390	0.67
농식품 일자리 정책 기획(일자리위원회 등 대응)	476	0.23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업무	457	0.22
산업별 고용동향 분석	457	0.22
일자리 관련 시스템 운영	613	0.30
국가민간 자격증	402	0.20
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등록관리 업무	210	0.10
농정에 관한 보고서 작성	1,287	0.64
WTO이행보고서 작성	643	0.3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643	0.32
남북농업협력 추진	1,935	0.90
BH, 통준위, 통일부 등 대외 협력	302	0.1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지원 운영	174	0.08
남북협력관련 대외협력 및 자료 조사	301	0.14
민간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및 농림축산물 교역 지원	302	0.14
북한농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획 총괄	491	0.23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	364	0.17
농식품 정책 개발	846	0.42
EU 등 선진국 정책동향 시사점 발굴	423	0.21
농업 혁신 및 신규정책개발	423	0.21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441	0.22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441	0.22
농업분야 청년정책	662	0.33
청년정책 업무 수립 및 추진	662	0.33
농업정책연구 및 통계분석	1,398	0.65
중장기 농가소득 관련 정책 개발 및 농가소득 통계 분석	1,398	0.65
대응 및 대책수립	944	0.44
개도국 지위 관련 대응 및 대책 수립	944	0.44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1,616	0.75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1,616	0.75
직접지불제의 총괄 및 조정	361	0.18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 추진방안 수립(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 포함)	361	0.18
농정회의 운영	314	0.16
농정 지역담당관 운영	119	0.06
시도 농정국장회의 추진	195	0.10
농식품 정책연구 추진	2,416	1.22

정책연구개발사업 검사.검수 및 예산 집행	494	0.25
정책연구개발사업 기획	651	0.33
정책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339	0.17
정책연구개발사업(프리즘) 관리	299	0.15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선정)	632	0.32
<b>농업박람회 추진</b>	<b>1,170</b>	<b>0.63</b>
농업박람회 평가결과 보고 및 정산	186	0.1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계획수립 및 TF 운영	427	0.23
전시행사관 조성 및 대표 홈페이지 운영	557	0.30
<b>정부기념일 행사 추진</b>	<b>1,183</b>	<b>0.61</b>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기념식장 조성 및 운영)	406	0.21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추진계획 수립	148	0.08
농업인의 날 정부 포상	536	0.27
행사결과 보고 및 정산	93	0.05
<b>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운용</b>	<b>1,343</b>	<b>0.62</b>
FTA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301	0.14
FTA기금 운용규정 제·개정	305	0.14
FTA기금 집행 및 결산	283	0.13
FTA기금의 운용·관리	454	0.21
<b>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b>	<b>4,602</b>	<b>2.24</b>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345	0.16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관리	345	0.16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영	2,077	1.03
FTA대책 성과 및 투·용자 보고서	283	0.13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327	0.15
농어촌 상생기금 업무	560	0.28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운영	203	0.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에관한 법률 운용	462	0.23
처리과공통	5,640	2.80
<b>총 합계</b>	<b>28,616</b>	<b>14</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8,616(H) ÷ 1,864(H) = 15.35명(현원대비 1.35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4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남북농업협력추진, 농식품 일자리 정책 수립, 농정에 관한 보고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원,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 및 농업유산제도 운용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8,616(H)으로 산정됨



## ② 농지과

□ 농지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시 2.2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5> 농지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4,097	1.87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1,643	0.75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운영	1,643	0.75
농지보전부담금 채납 관리	812	0.37
농지은행 제도 운용	4,374	2.0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706	0.33
농지연금 제도 운영	843	0.44
농지은행 제도 운용	1,177	0.55
농지은행사업 홍보	471	0.22
농지은행제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1,177	0.55
농지정보화	1,246	0.65
농지종합정보화 추진	422	0.22
농촌지형정보체계구축	422	0.22
농촌행정시스템 운영	402	0.21
농지정책 수립, 집행	11,183	5.09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1,186	0.55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1,643	0.77
농지 관련 세제 검토	291	0.12
농지 관련 통계 관리	721	0.33
농지개발제도 운영	1,283	0.59
농지법령 운용	872	0.36
농지불법진용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721	0.33
농지소유 및 사후관리제도 운영	291	0.12
농지원부 제도 운영	843	0.44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이용증진사업	235	0.11
농지이용실태조사	291	0.12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운영	1,643	0.77
농지제도 개선 및 홍보	291	0.12
농지처분제도 운영	581	0.24
농지취득인정	291	0.12
처리과공통	5,139	2.30
<b>총 합계</b>	<b>26,471</b>	<b>12</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6,471(H) ÷ 1,864(H) = 14.20명(현원대비 2.20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2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지정책 수립, 시행, 농지은행 제도 운용, 농지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농지관리 기금운용 계획,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운영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6,471(H)으로 산정됨

### ③ 경영인력과

- 경영인력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9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6〉 경영인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b>농업경영지원</b>	<b>4,761</b>	<b>2.15</b>
농업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360	0.16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93	0.26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및 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사항	360	0.16
농업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783	0.36
농업법인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93	0.26
농업법인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76	0.31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909	0.42
농업회계장부에 관한 사항	243	0.11
신지식농업인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3	0.11
<b>농업인 교육훈련</b>	<b>3,201</b>	<b>1.54</b>
경영실습입대농장 사업 운영	436	0.21
농고·농대 등 예비농업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36	0.21
농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사항	104	0.05
농업교육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186	0.09
농업농촌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9	0.11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운영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519	0.25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운영 지원	396	0.19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229	0.11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계획 및 평가	229	0.11
현장실습교육장 및 첨단공동실습장 등 전문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436	0.21
<b>농업인력 육성 관리</b>	<b>12,112</b>	<b>5.44</b>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운영	302	0.15
귀농·귀촌 관련 정부 및 지자체 협의체 운영	121	0.06
귀농·귀촌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운영	402	0.19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07	0.15
귀농·귀촌 종합센터 총괄·조정 관련 사항	186	0.09
귀농·귀촌 창업 등에 관한 교육운영	121	0.06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1	0.06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224	0.11
귀농인의 집 조성	245	0.1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34	0.22
농업농촌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93	0.38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사항	463	0.21
농업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등 추천	242	0.11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63	0.21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84	0.31
농업분야 최저임금 대책 수립 및 홍보	242	0.11
농업인력육성 및 수급대책 수립 등	1,030	0.43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00	0.50
농촌인력중개사업에 관한 사항	990	0.4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45	0.12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245	0.12

비영리법인 허가 및 관리업무	121	0.06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67	0.1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25	0.42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2	0.05
한국-뉴질랜드 FTA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42	0.11
후계농 및 청년농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390	0.16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사항	267	0.1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636	0.26
처리과공통	4,030	1.87
<b>총 합계</b>	<b>24,104</b>	<b>11</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4,104(H) ÷ 1,864(H) = 12.93명(현원대비 1.93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인력 육성관리, 농업경영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농업인력유성 및 수급대책 수립 등, 농촌인력증개사업에 관한 사항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4,104(H)으로 산정됨

#### ④ 농업금융정책과

□ 농업금융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85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7> 농업금융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및 경영회생지원제도 운용	565	0.25
농어업인부채경감법 제·개정	203	0.09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운용	362	0.16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수정)	946	0.42
농식품모태펀드 운영	651	0.29
농식품투자조합법 제·개정 및 운용	295	0.13
농업관련 조세 등 부담경감제도	1,921	0.86
농업관련조세관리	1,429	0.64
농업용전기요금관리	492	0.22
농업금융 혁신	2,820	1.3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산출연	352	0.1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관련	526	0.25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제도 운용	460	0.22
농업금융제도 개선	584	0.26
농업정책자금 검사실적 관리	460	0.22
농협 금융지주 지도감독	353	0.16

정책자금대출업무관련 규정운용	84	0.04
농업정책자금 지원 및 제도개선	1,391	0.63
농업종합자금 지원제도 운용	416	0.19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제도 운용	416	0.19
농특회계사업 용자 운영 지원	79	0.04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481	0.22
농업협동조합 개혁 등 제도 개선	9,053	4.46
농협 구조개선법령 등 제,개정 및 운용	532	0.25
농협 신용사업	946	0.42
농협법 제·개정	1,413	0.70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3,858	1.95
농협중앙회 지도,감독	1,004	0.50
중앙회 규정 제·개정사항	446	0.22
협동조합 개혁	854	0.42
농업협동조합육성(설립, 합병 등)	5,415	2.55
농업협동조합 건전육성	475	0.22
농협 검사청구 업무	475	0.22
농협 일반업무	1,292	0.62
정부 포상 관련 업무	466	0.22
조합 지도·감독	1,063	0.50
조합공동사업법인 업무	217	0.11
협동조합 구조개선 추진	475	0.22
협동조합 설립인가	238	0.11
협동조합 정관례 제 개정 및 운용	238	0.11
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238	0.11
협동조합 합병 인가	238	0.11
농협 상호금융	1,123	0.50
농협 상호금융	1,123	0.50
처리과공통	4,455	2.04
<b>총 합계</b>	<b>27,689</b>	<b>13</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7,689(H) ÷ 1,864(H) = 14.85명(현원대비 1.85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3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금융 혁신, 농업관련 조세 등 부담경감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업관련조세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영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7,689(H)으로 산정됨

## ⑤ 재해보험정책과

□ 재해보험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2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재해보험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가축재해 보험 추진	2,182	1.10
가축재해보험 교육·홍보	139	0.07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	734	0.37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	139	0.07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238	0.12
가축재해보험 통계관리	139	0.07
가축재해보험 사업 운용	794	0.40
국가재보험 및 재해보험 관리	2,678	1.32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의 운용	1,232	0.60
손해평가사 자격 운용 및 제도 총괄	1,445	0.7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	2,987	1.39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운용	736	0.35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 추진	691	0.3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	1,560	0.72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영 및 지원	871	0.42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용	871	0.42
농작물재해 보험 추진	5,058	2.44
농작물재해보험 교육·홍보, 손해평가 관리, 통계관리	855	0.42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사업관리	1,506	0.72
농업재해 관련 법령운용 및 제도개선	1,031	0.50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1,665	0.80
재해대응 강화	4,380	2.03
농업재해대책 및 보험정책 기획	1,127	0.55
농업기상상황 입수 및 전파	813	0.37
농업재해 상황관리 및 복구지원	1,339	0.62
농업재해대책 관련 일반업무 추진	720	0.32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	380	0.17
처리과공통	2,730	1.30
<b>총 합계</b>	<b>20,885</b>	<b>10</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0,885(H) ÷ 1,864(H) = 11.20명(현원대비 1.20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0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작물재해 보험 추진, 재해대응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손해평가사 자격 운용 및 제도 총괄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0,885(H)으로 산정됨

## 다) 식량정책관

### ① 식량정책과

□ 식량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2.5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9〉 식량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양곡유통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531	0.23
정부관리양곡 구매추진	531	0.23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및 판매	2,961	1.32
정부관리양곡 매입·보관·매출	2,961	1.32
농가소득안정대책	1,574	0.75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1,574	0.75
가격안정대책	1,868	0.80
산지쌀값조사관리	1,593	0.68
양곡표시제 운영 및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275	0.12
국제업무	2,422	1.14
WTO/DDA, FTA, APTERR, IGC 등 쌀 관련 국제업무	236	0.11
국제곡물관측	256	0.12
수입쌀 관리방안	591	0.28
쌀 관세화 후속 대응	256	0.12
양곡(미곡)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	256	0.12
양곡류(쌀, 밀, 대두, 옥수수) 해외시장조사 분석	256	0.12
해외곡물 유통망 구축	571	0.27
양곡계획 수립	3,066	1.44
공공비축제도 시행	1,027	0.48
식량정책 및 양곡 수급계획	1,550	0.7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488	0.23
양곡관리예산업무	3,265	1.45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예산 집행 및 결산	1,642	0.7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예산편성	1,622	0.72
양곡수급	4,371	2.06
APTERR를 활용한 해외 원조	472	0.22
FAC/WFP를 통한 식량 원조	472	0.22
대북 식량지원	256	0.12
북한농산물(쌀 포함) 반입 및 귀속농산물 인수 등	256	0.12
소비자 시판용 양곡(수입밥쌀) 판매 관리	373	0.17
시장접근물량(종량) 양허관세 추천업무	373	0.17
시장접근물량수입추천사후관리	256	0.12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488	0.23
쌀시장 안정대책	1,009	0.48
전시 양곡수급 및 총무계획 수립	417	0.21
재고조사계획	746	0.32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및 안전 품질관리	746	0.32
처리과공통	9,956	4.49
<b>총 합계</b>	<b>30,759</b>	<b>14</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30,759(H) ÷ 1,864(H) = 16.50명(현원대비 2.50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4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곡수급, 양곡관리에산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정부관리양곡 매입·보관·매출,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30,759(H)으로 산정됨

② 식량산업과

□ 식량산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8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식량산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생산조정	10,037	4.39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28	0.53
공동농업경영체 관리에 관한 사항	131	0.06
교육·컨설팅업체 인증제에 관한 사항	131	0.06
논 타작물 단지화 구축 지원	963	0.43
농산시책 평가 및 식량분야 보상에 관한 사항	441	0.18
두류 생산·유통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41	0.49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1,107	0.48
벼 영농추진상황 관리	585	0.24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2	0.05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1,051	0.48
식량작물선도경영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8	0.09
쌀 생산조정제 추진	1,445	0.59
쌀 적정생산 수립	411	0.17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평가	583	0.26
콩, 옥수수 수매(약정)	600	0.28
쌀 전업농 육성	269	0.11
쌀 의무자조금 설치 지원	159	0.07
쌀 전업농 자조금 교육 지원	109	0.05
식물예찰방제	2,229	1.16
방제 대상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230	0.12
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0	0.12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442	0.23
식물방역법령 중 방제에 관한 사항	423	0.22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42	0.23
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정책에 관한 사항	461	0.24
밀산업 육성법 운용	450	0.22
밀산업 육성법 운용	450	0.22
쌀가공산업 육성	1,286	0.65
쌀 가공 관련 R&D에 관한 사항	435	0.2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	851	0.43
쌀소비활성화	2,554	1.29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 관한 사항	535	0.27

쌀 및 쌀 활용 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	752	0.38
쌀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	1,267	0.64
양곡수급	5,420	2.59
맥류 생산 및 유통 등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99	0.44
밭 식량작물 발전에 관한 사항	899	0.44
밭 식량작물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1,105	0.54
밭 식량작물 수매 및 민간 수매지원에 관한 사항	899	0.44
서류 생산 및 유통	1,617	0.73
잡곡수급	1,471	0.70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0	0.00
기타 밭 식량 작물(서류,맥류,두류 제외) 육성 관련 사항	435	0.22
양곡류(쌀 제외) 관세 운용	1,036	0.48
처리과공통	2,017	0.89
<b>총 합계</b>	<b>25,734</b>	<b>12</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5,734(H) ÷ 1,864(H) = 13.81명(현원대비 1.81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2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곡수급, 쌀소비활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서류 생산 및 유통, 쌀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5,734(H)으로 산정됨

### ③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9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1>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직불사업 운영 및 기금 운용	3,067	1.48
경영이양직불 사업추진	253	0.12
공익직불기금 등 직불제 관련 예산 심의, 운용, 결산	340	0.17
공익직불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355	0.17
공익직불제 관리기관 지도·감독	558	0.27
공익직불제 사업추진 총괄	412	0.20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추진	780	0.38
선택형 공익직불제(농활용직불제) 사업추진	369	0.17
직불제 장단기 정책개발 및 사업계획 추진	4,105	1.97
경영이양직불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253	0.12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525	0.25



공익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총괄	58	0.03
기본형 공익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261	0.13
논활용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256	0.12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법령 및 관련 고시 등 규정 개정 및 운용	1,507	0.72
직불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246	0.60
공익직불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357	0.17
공익직불제 관련 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협의	357	0.17
교육·홍보 추진	1,008	0.50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1,008	0.50
민원 상담	1,167	0.58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 등 상담 및 처리	1,167	0.58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1,130	0.55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제도 운영 및 개선	615	0.30
이행점검 전담관리기관 지정·운영	516	0.25
부정수급 방지	615	0.30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및 운영	615	0.30
(비어 있음)	355	0.17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355	0.17
처리과공통	4,802	2.28
<b>총 합계</b>	<b>16,606</b>	<b>8</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6,606(H) ÷ 1,864(H) = 8.91명(현원대비 0.91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8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불제 장단기 정책개발 및 사업계획 추진, 직불사업 운영 및 기금 운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 등 상담 및 처리,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6,606(H)으로 산정됨

#### ④ 농업기반과

□ 농업기반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1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2〉 농업기반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b>가뭄대책</b>	2,703	1.34
가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	322	0.16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524	0.26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 운영	302	0.15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	303	0.15
관계부처 합동 가뭄 종합대책 수립(매년)	323	0.16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303	0.15
지역별 강수량·저수율 모니터링	302	0.15
한발대비 용수개발	323	0.16
<b>농업생산기반 정비</b>	821	0.43
균특회계 농업생산기반 정비	210	0.11
밭 농업기반 정비	210	0.11
환지대행법인 및 환지사자격시험 제도 운영 및 관리	400	0.21
<b>농촌용수 확보</b>	2,568	1.29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 대책	441	0.22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813	0.41
다목적농촌용수개발	851	0.43
임진강수계 농촌용수	241	0.12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221	0.11
<b>농업생산기반 기획</b>	3,059	1.60
국가물관리 관련 관계기관 협력업무 추진	439	0.23
농어촌정비법 운용	543	0.28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등 관련 기술업무	285	0.1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괄업무	439	0.2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	421	0.22
농촌용수 국제협력 업무	209	0.11
저수지 주변지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추진	209	0.11
총사업비관리지침 운용	210	0.11
통합물관리 관련 농업용수 이용합리화계획 수립·조정	305	0.16
<b>기반시설 안전관리</b>	3,490	1.63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	1,357	0.63
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보완	239	0.11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260	0.1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진단	260	0.12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진대책	250	0.1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운용	152	0.07
방조제 관리법 운용	125	0.06
재해예방 계측 관리	213	0.10
저수지 붕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	152	0.07
저수지 준설	128	0.06
지진 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230	0.11
지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	125	0.06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4,936	2.44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이관	432	0.21
농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관리	432	0.21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대책	452	0.22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 관리	864	0.4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소송업무	226	0.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 작성 운영	226	0.11
농업용 지하수자원 관리	210	0.11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	485	0.24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운용	302	0.15
농업용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302	0.15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400	0.21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 입지제한	303	0.15
환경부·농식품부 합동 수질관리협의회 운영	302	0.15
처리과공통	8,765	4.27
<b>총 합계</b>	<b>26,342</b>	<b>13</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6,342(H) ÷ 1,864(H) = 14.13명(현원대비 1.13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3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6,342(H)으로 산정됨

⑤ 간척지농업과

□ 간척지농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2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3> 간척지농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업생산기반정비	478	0.23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249	0.12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양수	0	0.00
대단위사업 환지계획인가	0	0.00
용지매수보상 세목고시	229	0.11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4,565	2.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486	0.23
간척지 활용·운영 및 종장기 계획 수립	913	0.43
농학계 대학 등 시험·연구·교육·훈련사업 관리	148	0.0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양도양수 검토 등	272	0.13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임대, 매각 등)	1,515	0.71
대단위사업 관련 소송 수행	447	0.21

대단위사업 관련 환지인가	148	0.07
사업준공전 간척지 임시사용 등에 관한 사항	447	0.21
영산강 농업특화단지 관리	190	0.09
<b>대단위 농업개발</b>	<b>747</b>	<b>0.36</b>
대단위 농업개발 공정추진 및 정산	268	0.13
대단위농업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인가, 변경, 준공	478	0.23
<b>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b>	<b>9,192</b>	<b>4.34</b>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추진	464	0.23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관련 업무(양도양수, 접사용 등)	365	0.17
새만금 공유수면 환경 및 수질관리 등	467	0.21
새만금 관련 민원	149	0.07
새만금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282	0.13
새만금 내부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업추진)	1,479	0.73
새만금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	243	0.11
새만금 농업용수 확보대책	649	0.31
새만금 방조제 및 배수갑문 관리 운영	109	0.05
새만금 사업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등 추진	222	0.11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 및 대외협력 추진	464	0.23
새만금 준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690	0.31
새만금 준공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324	0.15
새만금개발공사 대외협력 및 현물출자 관련 사항 등	282	0.13
새만금사업 관련 대외협력 및 건의사항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036	0.47
새만금사업 관련 소송 업무 추진	192	0.09
새만금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협의	870	0.43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 수립	467	0.21
새만금위원회에 관한 사항	288	0.13
새만금특별법 운용	149	0.07
<b>서남해안간척사업</b>	<b>1,186</b>	<b>0.57</b>
간척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	478	0.23
간척사업 총사업비 조정	478	0.23
간척사업 추진	229	0.11
조성토지 관리 및 처분계획	0	0.00
토지이용계획수립	0	0.00
<b>치수능력확대사업</b>	<b>659</b>	<b>0.33</b>
삼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등 3지구 사업추진	659	0.33
<b>농업기반시설 재해안전관리</b>	<b>336</b>	<b>0.17</b>
수해피해 복구계획수립 및 복구추진	258	0.13
여름철 재해대책계획 수립 및 추진	19	0.01
우기대비 수리시설 안전점검계획수립 및 추진	19	0.01
우기대비 중점관리계획수립 및 추진	19	0.01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19	0.01
<b>영농기반시설 구축</b>	<b>1,317</b>	<b>0.66</b>
농지범용화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220	0.11
농지범용화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220	0.11
배수개선사업 계속 및 준공지구 시행계획변경 협의	220	0.11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220	0.11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신규착수지구 선정	220	0.11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를 위한 적정성검토	220	0.11
<b>처리과공통</b>	<b>4,342</b>	<b>2.19</b>
<b>총합계</b>	<b>22,820</b>	<b>11</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2,820(H) ÷ 1,864(H) = 12.24명(현원대 1.24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서남해안간척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임대, 매각 등), 삼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등 3지구 사업추진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2,820(H)으로 산정됨

라) 국제협력국

① 간척지농업과

□ 국제협력총괄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3.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4> 국제협력총괄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국제교류	4,187	1.84
국제교류협력일반	507	0.23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404	0.17
신남방 신북방 업무 총괄	915	0.42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525	0.23
외국 주최 행사 참가	367	0.16
외국과의 실무회의	397	0.17
외국과의 장관급 회의	500	0.22
외국투자유치	286	0.12
해외투자	286	0.12
국제농업관련단체 및 해외주재농무관 관리	466	0.20
국제농업관련 단체업무 지도	275	0.12
해외주재 농무관 업무지도	192	0.08
국제농업협력	4,723	2.00
국제농업협력 사업(국제기구 협력)	1,710	0.73
국제농업협력 사업(기획협력)	1,992	0.84
국제농업협력 사업(컨설팅)	523	0.22
해외인턴십사업	498	0.2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	3,120	1.40
FAO 등 국제농업기구 관련 행사개최 및 관련 국내단체 지원	340	0.15
FAO 등 국제농업기구의 농업관련자료 및 동향분석, 전파	458	0.21
FAO 총회, 이사회 및 소속위원회 관련업무	829	0.38
FAO와의 연락·협력 업무 총괄	748	0.34
IFAD, AARDO, WB 등 국제농업기구의 총회, 집행이사회 등 농업분야 관련업무	747	0.32
식량원조	929	0.44

WFP 등 식량원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76	0.13
국제기구 연계 식량원조 사업	503	0.24
식량원조위원회(FAC) 대응	150	0.07
아세안 회의 및 아시아지역 농업협력	1,887	0.81
ASEAN+3 농림장관회의	585	0.25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농업협력	536	0.23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사업 발굴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협조	256	0.11
한-아세안 농업협력	511	0.22
(비어 있음)	108	0.05
해외주재 농무관 업무지도	108	0.05
양자간 농업협력	2,733	1.20
협력 협정 체결	976	0.43
협력사업 이행 및 평가	500	0.22
협력위원회 운용	1,257	0.55
양자간 통상현안 대응	701	0.32
긴급 통상현안 조정	217	0.10
농업정보수집 및 활용	242	0.11
정례통상협의체 대응	101	0.05
주요 인사 면담	141	0.06
양자간 통상현안 대응	190	0.08
긴급 통상현안 조정	49	0.02
정례통상협의체 대응	141	0.06
양자간 통상현안 대응	1,038	0.45
긴급 통상현안 조정	234	0.10
농업정보수집 및 활용	234	0.10
정례통상협의체 대응	234	0.10
주요 인사 면담	335	0.15
해외농업투자 및 해외농업개발촉진	4,682	2.09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운영	1,907	0.85
해외농업개발사업 신고, 접수 승인	917	0.41
해외농업자원개발 심의회 운영	941	0.42
해외농업자원개발 협력법 운용	917	0.41
처리과공통	9,286	4.12
<b>총합계</b>	<b>34,050</b>	<b>15</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34,050(H) ÷ 1,864(H) = 18.27명(현원대비 3.27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5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농업관련단체 및 해외주재농무관 관리, 국제교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국제농업협력 사업(기획협력), 국제농업협력 사업(국제기구 협력)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34,050(H)으로 산정됨

## ② 농업통상과

□ 농업통상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5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5〉 농업통상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G20 등 다자국제기구 농업협력	995	0.50
G20 정상회의 및 농업장관회의 대응	995	0.50
G21 등 다자국제기구 농업협력	912	0.45
APEC 및 기타 국제기구 대응	912	0.45
경제협력개발기구관련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유도	2,221	1.15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논의 대응	1,650	0.85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정개혁방향과 국내정책과의 조화유도	384	0.20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농업정책 점검과 평가 대응	187	0.10
농산물 수입 및 관세관리	3,110	1.61
농산물관세제도 및 탄력관세 관리	772	0.40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영 관리	212	0.11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2,125	1.10
북한과의 농산물 교역	78	0.04
북한산 농산물 교역	78	0.04
세계무역기구 농업 관련 위원회 대응	784	0.39
WTO 무역개발위원회(CTD) 대응	80	0.04
WTO 분쟁해결기구(DSB) 대응	142	0.07
WTO 정부조달협정위원회 대응	138	0.07
WTO 지적재산권위원회(TRIPs) 대응	80	0.04
WTO 통일원산지 협상	345	0.17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 검토	681	0.35
WTO 무역정책 검토	578	0.30
WTO 신규가입국 협상	103	0.05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다자협상	1,390	0.69
WTO/DDA 기타분야 협상	142	0.07
WTO/DDA 농산물 협상	1,107	0.55
WTO/DDA 비농산물 협상	142	0.07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이행	1,627	0.84
WTO 기타분야 이행	138	0.07
WTO 농산물보조금분야 이행	385	0.20
WTO 농산물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323	0.17
WTO 서비스 협정 대응	201	0.10
WTO 정부조달 협정 대응	158	0.08
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이행	422	0.22
세계무역기구 쌀관세화 검증	1,263	0.63

쌀관세화 관련 후속조치 이행(신규)	1,263	0.63
세계무역기구 통보	1,390	0.72
WTO 국영무역 등 기타분야 통보	234	0.12
WTO 농산물 보조분야 통보	578	0.30
WTO 농산물시장접근분야 통보	578	0.30
세계무역기구협정이외 개도국간 일반특혜관세공여 및 다자협상	1,115	0.55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대응	345	0.17
아태무역협정(APTA) 대응	385	0.19
일반특혜관세 공여	385	0.19
처리과공통	2,172	1.08
<b>총합계</b>	<b>17,738</b>	<b>9</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17,738(H) ÷ 1,864(H) = 9.52명(현원대비 0.52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9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이행, 세계무역기구 통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논의 대응, 쌀관세화 관련 후속조치 이행(신규)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7,738(H)으로 산정됨

③ 검역정책과

- 검역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9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6> 검역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국제교류	256	0.12
해외 검역 및 위생동향 전파	256	0.12
기본계획 수립	131	0.06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 계획 수립	131	0.06
농산물안전성	113	0.05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책 추진	113	0.05
농업생명산업	1,285	0.58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44	0.11
농림축산업용 LMO의 환경방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조사	798	0.36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용	244	0.11
소속기관 지도관리	504	0.2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지도·관리	365	0.17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관리	139	0.07
농업생명산업	798	0.36



LMO 안전관리체계구축	798	0.36
국제교류	1,189	0.55
FTA/SPS 위원회	1,189	0.55
농산물안전성	475	0.22
세계동물기구(OIE) 관련 협력	475	0.22
농업생명산업	1,664	0.77
SPS 국제동향 조사 연구위원 관리	457	0.21
WTO/SPS, WTO/TBT 협정 관련 업무	951	0.44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관련 협력	256	0.12
검역통계관리	493	0.20
검역통계 및 해외정보 분석 업무	493	0.20
관련 법령 운용	301	0.13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출검역) 및 수출위생(검역)조건 등 제개정	301	0.13
농산물안전성	1,189	0.55
SOFA 동·식물검역 업무	256	0.1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련 총괄	933	0.43
수출입동물, 축산물검역	9,450	3.99
가축전염병예방법(수입검역) 운용	587	0.26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1,049	0.45
동축산물 수입검역 및 통상 업무	2,025	0.86
수입위생조건 등 고시 운영	827	0.36
해외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240	0.10
동·축산물 국경검역 관련 업무	1,588	0.66
동물 및 축산물 수출 검역 지원 *수정사유: 수출진흥은수출진흥과소관업무임	247	0.10
동물검역 관련 연구·개발 및 기타 업무	247	0.10
수출 검역·통상 관련 업무	776	0.32
수출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업무	1,588	0.6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관리	276	0.12
검역관리	1,467	0.73
수출입식물 국경검역	443	0.22
수출입식물 국제검역협력	1,023	0.51
관련 법령 운용	1,020	0.51
수출입식물 병해충위험분석	304	0.15
식물방역법령의 운용	716	0.36
관련 제도 수립	820	0.41
식물검역제도 수립	820	0.41
기본계획 수립	418	0.21
식물검역관련 중요정책 기본계획 수립	418	0.21
처리과공통	2,075	1.10
<b>총합계</b>	<b>24,127</b>	<b>11</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4,127(H) ÷ 1,864(H) = 12.94명(현원대비 1.94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생명산업, 수출입동물, 축산물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동축산물 수입검역 및 통상 업무, 동·축산물 국경검역 관련 업무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4,127(H)으로 산정됨

####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3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7〉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FTA 협상	16,521	7.81
FTA 관련 부서·부처간 협조	1,527	0.72
FTA 관련 정보 수집-관리연구업무(수정)	1,508	0.71
FTA 영향분석	1,754	0.81
FTA추진 관리·협상대응계획 및 결과 보고	1,480	0.70
SPS/TBT 협상	1,170	0.60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전략수립	1,466	0.70
상품협력 등 농업관련 협상진행(수정)	3,343	1.58
수출입 등 관련 통계 자료 관리	1,315	0.62
원산지 협상	615	0.33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협상	949	0.38
해외동향·시장조사	1,394	0.66
FTA협상지원시스템 관리	552	0.28
FTA협상지원시스템 구축·관리	552	0.28
교육 및 홍보	272	0.13
FTA관련 교육·홍보	272	0.13
기체결FTA 이행위원회 대응	2,119	1.05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전략 수립	566	0.28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부서간 협조	588	0.29
FTA 이행위원회 참석 대응	395	0.20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정보 수집 관리	570	0.28
처리과공통	3,637	1.73
<b>총합계</b>	<b>23,100</b>	<b>11</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3,100(H) ÷ 1,864(H) = 12.39명(현원대비 1.39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FTA 협상, 기체결FTA 이행위원회 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상품 협력 등 농업관련 협상진행, FTA 영향분석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3,100(H)으로 산정됨

## 마) 축산정책국

### ①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3.3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8〉 축산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도축·가공시설, 관리	341	0.15
도축가공시설 설치·운영지원	161	0.07
도축산업 육성지원 및 도축장 구조조정	180	0.08
<b>축산물유통</b>	<b>1,748</b>	<b>0.78</b>
소비자단체협력사업	242	0.11
축산물등급제도 운용	914	0.41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591	0.26
<b>경마 시행 관리</b>	<b>2,259</b>	<b>0.91</b>
경마 시행 및 건전화	795	0.32
한국마사회 지도·감독	795	0.32
한국마사회법 제개정 및 운용	669	0.27
<b>말산업 육성</b>	<b>2,328</b>	<b>0.93</b>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776	0.31
말산업 육성 지원	1,028	0.41
말산업육성법 제개정 및 운용	524	0.21
<b>장·단기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b>	<b>6,482</b>	<b>3.00</b>
중장기 축산발전대책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1,707	0.80
중장기 축산발전대책 집행 및 점검, 조정	318	0.14
축산물유통대책수립	1,678	0.77
축산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운영	715	0.33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총괄	165	0.08
축산자조금법 제도운용	951	0.43
축산정책 주요현안 기획 및 조정	948	0.45
<b>전통소싸움 경기 관리</b>	<b>668</b>	<b>0.27</b>
전통소싸움 경기 허가 및 개최계획 승인	397	0.16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운용	271	0.11
<b>축산관련 대외통상 업무</b>	<b>477</b>	<b>0.22</b>
축산분야 WTO,FTA 협상대비 국내대책 마련	477	0.22
<b>축산금융제도 운영</b>	<b>566</b>	<b>0.25</b>
장단기축산정책자금지원목표수립	292	0.13
축산정책자금지원	274	0.12
<b>축산발전기금 운영</b>	<b>4,455</b>	<b>1.90</b>
축산발전기금 자산운용 관리	274	0.12
축산발전기금 재산관리	986	0.42
축산발전기금대손보전관리	274	0.12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수립	1,461	0.62
축산발전기금지원관리	1,461	0.62
<b>축산법 운용</b>	<b>2,576</b>	<b>1.27</b>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관리	477	0.22

축산업 개정	2,099	1.05
축산부문농림사업종합계획수립지원	37	0.02
장단기축산사업목표수립	18	0.01
축산사업심사분석평가관리	18	0.01
축산업 허가/등록제 추진	7,859	3.50
농장전문관리업 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34	0.52
무허가 축사 관리	1,234	0.52
축산관계 법령 준수사항 통합 점검관리	2,431	1.02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추진	1,099	0.51
축산업 허가/등록제 정책방향 수립	1,040	0.52
축산업 허가/등록제 추진상황 지도점검	821	0.41
처리과공통	8,133	3.80
<b>총합계</b>	<b>37,928</b>	<b>17</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37,928(H) ÷ 1,864(H) = 20.35명(현원대비 3.35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7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제 추진 축산금융제도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축산관계 법령 준수사항 통합 점검관리,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수립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37,928(H)으로 산정됨

## ② 축산경영과

□ 축산경영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2.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9> 축산경영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축산 재해관리 업무	313	0.14
축산농가 재해관리에 대한 업무	313	0.14
축산관련 대외통상업무	2,506	1.18
닭·오리·계란 수출입에 관한 사항	538	0.25
돼지고기 수출입에 관한 사항	19	0.01
소 및 쇠고기 수출입에 관한 사항	313	0.14
양봉 관련 수출입 관리	292	0.14
유제품 수출입에 관한 사항	424	0.21
중축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183	0.09
축산물 FTA에 관한 업무 총괄	231	0.11
축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총괄	507	0.23
축산관련 법인 단체 지도 감독	1,538	0.72
가축개량 관련 법인 단체 지도 감독	121	0.06
이력제 관련 법인 단체 지도 감독	238	0.11
한우, 양돈, 가금, 낙농, 육우 및 양육 등 가축관련 법인 단체 지도 감독	1,179	0.55
축산물 브랜드 관리	326	0.15
축산물브랜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26	0.15

축산물 이력제도 관리	3,380	1.55
DNA 동일성 검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	676	0.31
가축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체계 관리	676	0.3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76	0.3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홍보·교육에 관한 업무	676	0.31
축산물 이력관리제 정보 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	676	0.31
축산물수급안정 및 관측업무	6,863	3.24
기타가축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34	0.16
축산물 가격조사에 관한 업무	1,608	0.76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1,995	0.93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업무	1,086	0.51
축산물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1,461	0.69
한우, 육우, 양돈, 가금류, 우유(원유), 유제품 수급관리 및 관측에 관한 업무	380	0.19
축산업 육성 사업 등 지원	6,554	3.16
ICT 융복합 축사 지원에 관한 업무	632	0.32
가축개량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551	0.27
가축경진대회, 축산박람회 등 축산분야 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447	0.22
계란GP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54	0.12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관한 업무	315	0.14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632	0.3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	632	0.32
축산계열화 육성 지원 및 평가에 대한 업무	235	0.11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업무	759	0.35
축산식품산업, 식육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86	0.04
축종별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1,566	0.73
학교, 군 등 단체 우유급식에 관한 업무	442	0.22
국가기술 자격제도 운용관리	224	0.11
축산분야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224	0.11
가축개량 종합계획의 수립	570	0.28
중축 개량 목표설정 및 발전계획 수립·추진 업무	285	0.14
중축업, 정액처리업, 부화업 제도 관리에 관한 업무	285	0.14
가축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2,471	1.17
가금 산업 육성·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619	0.29
낙농·유가공·육우·양육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461	0.23
양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481	0.23
양봉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329	0.16
한우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581	0.26
축산 소관 법령 운영	1,850	0.88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475	0.22
낙농진흥법 관리 운용	442	0.2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331	0.1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운용	600	0.28
처리과공통	5,174	2.42
<b>총합계</b>	<b>31,768</b>	<b>15</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31,768(H) ÷ 1,864(H) = 17.04명(현원대비 2.04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5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축산물수급안정 및 관측업무, 축산물 이력제도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축산물 가격조사에 관한 업무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31,768(H)으로 산정됨

### ③ 축산환경자원과

□ 축산환경자원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8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0〉 축산환경자원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4,077	1.8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등 자원화조직체 육성	492	0.22
가축분뇨 처리·이용 대책 수립	485	0.22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718	0.77
양분관리제 및 경축순환농업 종합대책 수립	691	0.31
퇴비 부숙도 등 퇴액비 품질관리	691	0.31
사료산업육성 및 사료수급관리 등	8,643	4.13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2,241	1.0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241	1.05
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1,078	0.52
사료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업무	920	0.46
사료공장 HACCP 운용	353	0.17
사료관리법령 운용 및 제도개선	1,230	0.60
사료원료 할당, 양허관세 운용	353	0.17
사료시험검사기관 운용	226	0.11
축산악취 저감 지도	4,923	2.28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36	0.02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1,807	0.84
축산분야 미세먼지 대응	492	0.22
축산환경 컨설팅,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702	0.31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	816	0.38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 관리	1,069	0.51
축산환경 정책 및 관리	3,012	1.37
축산환경 정책기획	1,077	0.50
가축분뇨 관련 법령의 운용	709	0.32
가축분뇨 통계관리	36	0.02
가축분뇨처리 표준설계 및 관련기술 평가	246	0.11
축산환경 관련 R&D 연구	242	0.11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및 관리	702	0.31
친환경 축산	4,408	2.04
「초지법」 운용 및 개정	1,305	0.60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621	0.29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979	0.45
친환경축산 교육·홍보사업	621	0.29
산지생태축산 교육·홍보사업	495	0.23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87	0.18
처리과공통	762	0.35
<b>총합계</b>	<b>25,825</b>	<b>12</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5,825(H) ÷ 1,864(H) = 13.85명(현원대비 1.85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2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료산업육성 및 사료수급관리, 축산 약취 저감 지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5.825(H)으로 산정됨

바) 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과

□ 방역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2.6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1> 방역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가축방역대책	16,655	7.45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업무	413	0.17
가축방역 사업평가 및 포상	919	0.42
가축방역사업 운용 지도 및 제도개선	728	0.32
가축방역사업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819	0.36
가축방역심의회 운용	371	0.1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감독	1,145	0.52
가축전염병관리대책 수립	479	0.23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운용	1,850	0.80
동물위생시험소법 관련 업무	364	0.16
방역 교육홍보 기획	1,355	0.62
방역분야 국정과제	592	0.27
방역분야 남북협력사업	483	0.22
방역분야 연구개발	1,133	0.52
방역분야 조직·인력 관리	367	0.17
방역분야 주요업무계획수립	607	0.28
방역분야의 제도개선·규제완화	487	0.21

방역상황관리(가축질병 상황실 운영, 범부처 영상회의 준비) 업무	394	0.16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운용	709	0.31
시도 가축방역사업 집행 및 결산	1,279	0.57
시도 가축방역사업 시행지침 관리·운용	605	0.27
중단기 방역발전기본계획 수립	644	0.30
타 법령에 의한 방역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383	0.17
가축방역협의회	258	0.12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272	0.11
수의사법 운영 및 수의사면허 관리	3,679	1.48
공중방역수의사법	394	0.16
동물보건사	788	0.32
수의사법	554	0.22
표준진료제	939	0.37
대한수의사회 지도감독	272	0.11
수의사법령 개정	732	0.30
가축방역	677	0.30
가축방역 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시행	386	0.18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개정	291	0.12
처리과공통	10,068	4.77
<b>총합계</b>	<b>31,078</b>	<b>14</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31,078(H) \div 1,864(H) = 16.67\text{명(현원대비 2.67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4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축방역대책, 수의사법 운영 및 수의사면허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시도 가축방역사업 집행 및 결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감독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31,078(H)으로 산정됨



## ② 구제역방역과

- 구제역방역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2.5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2〉 구제역방역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b>가축방역대책</b>	<b>8,333</b>	<b>3.58</b>
구제역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	1,879	0.80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 운용	291	0.12
국내 대가축(소, 말 등) 방역대책 수립·추진	826	0.43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사슴만성소모성질화 등 방역대책 추진	3,682	1.52
중가축(돼지, 사슴, 양 등) 방역대책	329	0.15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 추진	1,326	0.56
<b>구제역·AI 백신관리</b>	<b>3,450</b>	<b>1.52</b>
AI 백신 개발 및 국내 제조회사 관리 업무	135	0.06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해 백신제조시설 구축사업 지원	726	0.32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관리 업무	827	0.36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운용	227	0.10
구제역·AI 백신 대책 수립·운영	809	0.36
구제역·AI 백신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	726	0.32
<b>가축방역</b>	<b>8,260</b>	<b>3.80</b>
가축방역관 및 축산농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관리	407	0.18
대가축 농장 위생관리	211	0.11
돼지농장 울타리 등 방역시설 개보수	373	0.16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운영	92	0.04
방역시설 지원 사업 추진(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731	0.32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지원	389	0.17
살처분 매몰비 지원	731	0.32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 전반	731	0.32
살처분 보상금 예산 집행 및 운용	731	0.32
소독관리 전반	1,246	0.65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돼지열병 관련 고시 등 규정 운영	240	0.11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혈청예찰 및 환경부 협의	1,113	0.50
중가축 농장 위생관리	63	0.03
중앙점검반 운영	92	0.04
질병관리 등급제 운영	422	0.22
가축방역 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시행	687	0.31
<b>처리과공통</b>	<b>9,002</b>	<b>4.10</b>
<b>총합계</b>	<b>29,045</b>	<b>13</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9,045(H) ÷ 1,864(H) = 15.58명(현원대비 2.58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3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가축방역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사슴만성소모성질환 등 방역대책 추진, 구제역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9,045(H)으로 산정됨

②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2.4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7,478	3.06
시 긴급행동지침(SOP) 운용	1,464	0.60
시 방역대책 수립·추진	2,624	1.07
시 방역실시요령 등 규정 운용	1,213	0.50
시 비상훈련(CPX) 추진	764	0.31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609	0.25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 운영	804	0.33
동물약품관련 업무	4,722	2.12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규운영	883	0.40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	815	0.37
동물용의약품 항생제 내성관리	493	0.22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 지원	352	0.16
동물용의약품산업지원	1,069	0.47
가축 질병 치료 보험	352	0.16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개정	265	0.12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	493	0.22
방역시설관리(단위업무2개→4개)	4,135	1.90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수정)	1,200	0.55
가축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 사후관리(수정)	758	0.35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수정)	758	0.35
통제초소 관리 운영(수정)	1,421	0.65
소가축방역	5,211	2.30
축산차량 통제및 관리	1,944	0.85
KAHIS 등 가축방역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1,537	0.68
꿀벌 질병 방역	839	0.37
소가축 질병 방역	891	0.40
처리과공통	3,426	1.62
<b>총합계</b>	<b>24,972</b>	<b>11</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4,972(H) ÷ 1,864(H) = 13.40명(현원대비 2.40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소가축방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AI 방역대책 수립·추진, 축산차량 통제 및 관리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4,972(H)으로 산정됨

사) 식품산업정책관

① 식품산업정책과

□ 식품산업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9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4〉 식품산업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9,547	4.71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	534	0.27
식품외식 일자리 업무	292	0.15
푸드테크스타트업 등 신산업 발굴 및 육성	590	0.30
식품관련 제도 및 규제개혁	38	0.02
식품기술개발(R&D) 및 지원업무	2,471	1.20
식품산업 통계, 정보분석 및 제공	451	0.22
식품산업관련 국정과제-공약·정책평가	715	0.35
식품산업정책관실 연구용역	620	0.30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904	0.45
국내외 식품 시장동향 및 현황조사	547	0.27
산학연 연계 식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89	0.35
식품산업 교육, 훈련 지원 업무	236	0.12
식품산업진흥법령 운용	653	0.32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운영	563	0.27
식품외식전망대회 추진	245	0.12
식품의 규격 기준	1,422	0.68
CODEX 등 국제식품규격 대응	355	0.17
가공식품KS 표준	355	0.17
식품표준화 사업	355	0.17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 운영	355	0.17

판매촉진	5,420	2.41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2,389	1.05
식품의 FTA, WTO/DDA 협상 대응	1,185	0.52
대한민국식품대전 행사 추진	349	0.17
농식품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사업추진	255	0.12
식품,외식분야 물가 관리	1,242	0.55
처리과공통	13,257	6.20
<b>총합계</b>	<b>29,646</b>	<b>14</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9,646(H) ÷ 1,864(H) = 15.90명(현원대비 1.90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4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판매촉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식품기술개발(R&D) 및 지원업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9,646(H)으로 산정됨

## ② 식품산업진흥과

□ 식품산업진흥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5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5> 식품산업진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8,279	4.20
기능성식품산업육성	1,161	0.60
김치산업육성.지원	393	0.20
김치산업진흥법 운용	393	0.2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	590	0.30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	197	0.10
설탕할당관세 운영	236	0.12
식품기업 컨설팅 지원	400	0.20
식품명인 발굴 및 육성	295	0.15
식품산업진흥 관련 기획	581	0.30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750	0.38
식품외식종합자금 운용	440	0.22
주류관련 법제 정비 및 규제개선	733	0.35
중소식품기업 육성사업 관련 예·결산	420	0.21

통합성과관리 등 평가 관리	290	0.15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	1,067	0.55
식품 제조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197	0.10
우수문화상품 발굴육성	98	0.05
전통식품Codex 규격화추진(소기능 : 식품의 규격 기준으로 변경)	39	0.02
<b>전통식품산업의 육성</b>	<b>4,000</b>	<b>1.97</b>
술 품질인증 등 고급화 지원	191	0.09
전통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197	0.10
전통식품산업 육성 지원	389	0.20
전통주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124	0.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696	0.3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운용	621	0.30
전통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526	0.25
전통식품명인지정	197	0.10
전통식품품질인증	98	0.05
전통주산업 육성지원	923	0.45
정책실명제(전통발효식품육성)	39	0.02
<b>처리과공통</b>	<b>3,623</b>	<b>1.83</b>
<b>총합계</b>	<b>15,902</b>	<b>8</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5,902(H) ÷ 1,864(H) = 8.53명(현원대비 0.53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8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전통식품산업의 육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전통주산업 육성지원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5,902(H)으로 산정됨

### ③ 외식산업진흥과

□ 외식산업진흥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8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6〉 외식산업진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13,493	6.54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004	0.48
한식 정보분석 및 콘텐츠 확산	491	0.24
한식문화관 운영	391	0.19
한식정책 기본계획 수립	781	0.36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예산,결산	1,007	0.49
한식진흥법 및 하위법령, 고시 등 제·개정, 운용 등	1,116	0.51
한식진흥원 지도·감독	586	0.27
외식물가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	921	0.46
외식분야 식재료 산업 육성 및 유통개선	741	0.37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통계·정보화	580	0.29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1,164	0.58
외식산업진흥법령 운용	580	0.29
외식업체 육성 및 창업 지원	962	0.48
외식업체 해외진출 지원	741	0.37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보급	736	0.36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282	0.14
한식 및 외식관련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214	0.10
해외 확산 지원	1,197	0.56
소비촉진	1,547	0.77
푸드페스타&캠페인	920	0.46
한식 행사	627	0.31
처리과공통	1,499	0.69
<b>총합계</b>	<b>16,538</b>	<b>8</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6,538(H) ÷ 1,864(H) = 8.87명(현원대비 0.87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8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소비촉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한식진흥법 및 하위법령, 고시 등 제·개정, 운용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6,538(H)으로 산정됨

#### ④ 수출진흥과

□ 수출진흥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3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7〉 수출진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산물의 해외홍보·무역정보 등 해외시장의 개척	1,183	0.55
기타 신시장 진출업체 시장개척 지원	210	0.10
농식품 수출통계 및 동향 분석	219	0.10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파견 및 운영	210	0.10
해외 정보조사, 해외 비관세 장벽 조사 및 검토	219	0.10
농산물해외시장개척	105	0.05
농식품해외시장진출정보분석	219	0.10
농식품수출진흥업무 추진	15,105	7.04
K-FOOD FAIR 개최	450	0.20
국가별소비자체험행사추진	326	0.15
국내외 농식품홍보관운영	450	0.20
미디어마케팅	450	0.20
민간 기업(업체·바이어)대상 공모사업	647	0.30
민관협력 특화사업추진	647	0.30
온라인모바일마케팅	669	0.30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526	0.2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877	0.40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사업(용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432	0.20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육성사업	248	0.10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가공식품 안전관리 대응 지원	219	0.10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적용 대응	219	0.10
미래클K-Food 프로젝트	124	0.05
수출 관련 R&D 지원	216	0.10
수출 선도조직 및 협의회 육성	432	0.20
수출농식품 현지화·상품화·재외공관 연계사업	404	0.20
수출인프라강화사업	1,083	0.50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및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432	0.20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수출 효율화 방안 마련	867	0.40

주요 수출국별·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877	0.40
지자체 공동마케팅 추진	623	0.30
프론티어 업체 지원	210	0.10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404	0.20
해외박람회 및 바이어거래알선 사업	652	0.30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	210	0.10
해외안테나숍 운영 및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사업	652	0.30
해외인증수출보험통관 지원, 수출물류비 및 공동항공물류지원, 수출전문인력육성	202	0.10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활성화지원	435	0.20
농식품수출대책수립	438	0.20
수출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432	0.20
수출물류비지원	649	0.30
수출전문조직 육성	432	0.20
해외식품인증 지원	210	0.10
처리과공통	1,040	0.60
<b>총합계</b>	<b>17,332</b>	<b>8</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7,332(H) ÷ 1,864(H) = 9.30명(현원대비 1.30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8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식품수출진흥업무 추진, 농산물의 해외홍보·무역정보 등 해외시장의 개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수출인프라강화사업, 민간기업(업체·바이어)대상 공모사업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7,332(H)으로 산정됨



###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8〉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12,076	5.97
청년식품창업Lab 운영,관리	718	0.33
가정편의식(HMR) 기술지원센터 구축	908	0.4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세부사업계획 수립	1,017	0.52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 세부계획	699	0.32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543	0.26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관계기관 회의	762	0.40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497	0.2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1,080	0.55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회 운영·관리	529	0.28
국내외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390	0.18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697	0.34
기능성식품제형센터구축	1,000	0.50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기반구축	793	0.41
산업단지 입주환경 조성	241	0.12
산업단지 조성,관리	463	0.23
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계획수립	241	0.12
식품벤처센터 운영,관리	497	0.23
청년식품창업허브구축	1,000	0.50
지역농업활성화사업 추진	176	0.0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운영 및 관리	176	0.09
처리과공통	3,818	1.94
<b>총합계</b>	<b>16,068</b>	<b>8</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6,068(H) ÷ 1,864(H) = 8.62명(현원대비 0.16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8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지역농업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가정편의식(HMR) 기술지원센터 구축,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기반구축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6,068(H)으로 산정됨

## 아) 유통소비정책관

### ① 유통정책과

□ 유통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2.2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9〉 유통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b>농산물안전성</b>	2,286	1.15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법률 운용	794	0.40
원산지표시제도 정책 수립	794	0.40
농산물이력추적관리	699	0.35
<b>농산물품질 관리</b>	1,211	0.60
국가인증지원사업	404	0.20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404	0.20
지리적표시제도 운영	404	0.20
<b>농산물 물류제도 개선</b>	467	0.21
농산물물류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89	0.04
농산물물류혁신종합대책 수립	0	0.00
물류기기공동이용	378	0.17
물류표준화사업	0	0.00
<b>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사항</b>	2,203	1.06
농안기금 편성 및 운용, 결산, 평가, 재산관리	865	0.41
기금의 집행관리 및 결산	615	0.30
농안기금 운용계획 수립	723	0.35
<b>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지원</b>	425	0.20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213	0.10
사업시행 및 운영평가	213	0.10
<b>농산물수급관리</b>	39	0.02
정부비축사업 평가	39	0.02
<b>농산물유통기획</b>	10,388	4.86
농산물 공동선별 조직 지원	514	0.24
농산물 공정거래 관련	147	0.07
농산물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관리	128	0.06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128	0.06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400	0.18
발작물(채소·특작류) 경쟁력 제고 방안	222	0.10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수립	482	0.23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및 관리	638	0.30
산지유통조직 선정·지원 및 평가	522	0.25
산지유통종합자금 운용	425	0.20
원예농산물 산지조직화 정책	624	0.30
원예농산물 주산지 제도	286	0.13
원예산업 종합계획 선정 및 평가	425	0.20
채소류 최저가격 제도	374	0.1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운용	24	0.01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136	0.06
농산물 유통정책 기획 및 조정	1,158	0.55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대응	193	0.09

업무보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제 관리	844	0.40
유통공사 지도·감독	458	0.21
유통구조개선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 소비촉진	218	0.10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144	0.0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운용	1,097	0.50
시군유통회사	128	0.06
업무보고서 작성 및 추진실적 제출	675	0.32
농산물유통종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641	0.28
농식품유통교육 운영 등	397	0.18
유통교육기관 교육실시	122	0.05
유통교육기관 선정	122	0.05
농수산물수급관리	2,439	1.13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용	426	0.20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사후관리	89	0.04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539	0.25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사후관리	89	0.04
비축기지 운영 관리	220	0.10
비축사업 예산운용	432	0.20
비축기지 광역화 현대화사업	39	0.02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111	0.05
자조금지원	495	0.23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2,803	1.30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752	0.35
도매유통활성화사업	1,299	0.60
도매시장 평가	752	0.35
디지털유통 기반 마련	85	0.04
농산물등급 품위별 표준코드 및 RFID정립	43	0.02
수확후 관리기술 표준 매뉴얼 작성	43	0.02
농산물등급 품위별 표준코드 및 RFID정립	43	0.02
식품의 규격 기준	404	0.20
지리적표시 등록 관리	404	0.20
판매촉진	87	0.04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FTA 업무	87	0.04
처리과공통	8,625	3.91
<b>총합계</b>	<b>32,103</b>	<b>15</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32,103(H) ÷ 1,864(H) = 17.22명(현원대비 2.22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5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기획, 식품의 규격 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산물 유통정책 기획 및 조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운용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32,103(H)으로 산정됨

## ②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3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산물품질 관리	646	0.30
농산물품질관리법 운용	646	0.30
농산물유통관리	7,064	3.35
공공급식 관련 법률	329	0.15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선도 모델 발굴	955	0.45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621	0.30
공공급식 활성화 및 지원	1,358	0.65
급식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310	0.15
급식산업 육성 사업 발굴 운영	659	0.30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및 공급 확대	1,455	0.70
로컬푸드 급식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운영	741	0.35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및 관리	423	0.20
소비자유통활성화	215	0.10
농산물유통기획	2,199	1.1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474	0.25
국가·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교육·홍보	576	0.30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669	0.35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480	0.25
농산물직거래	3,183	1.50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운용	523	0.25
농산물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운영	2,009	0.95
직거래 매취자금	215	0.10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436	0.20
디지털유통 기반 마련	633	0.30
농산물 사이버거래 기반 구축	633	0.30
소비자유통	215	0.10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215	0.10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	4,581	2.15
농식품 소비정보조사	1,053	0.50
농식품바우처 운영관리	2,382	1.10
소비자정책 수립(수정)	1,146	0.55
식생활개선	3,673	1.90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575	0.30
식생활교육 및 홍보	1,447	0.75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육성	390	0.20
식생활교육지원법 운용	195	0.10
식생활지침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1,067	0.55
GAP인증	2,247	1.05
GAP 추진, 제도개선(수정)	2,247	1.05
<b>총합계</b>	<b>24,885</b>	<b>12</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4,885(H) ÷ 1,864(H) = 13.33명(현원대비 1.33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2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관리,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GAP 추진, 제도개선, 농식품바우처 운영관리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4,855(H)으로 산정됨

### ③ 원예산업과

□ 원예산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2.4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1〉 원예산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산물수급관리	442	0.20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 분석	442	0.20
인삼에 관한 사항	2,515	1.11
인삼류 수출입에 관리에 관한 사항	352	0.15
인삼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52	0.15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754	0.35
인삼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60	0.20
인삼산업법·제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60	0.20
인삼정책실명제	138	0.06
조미채소에 관한 사항	3,070	1.30
양념채소 일반	240	0.10
조미채소류의 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21	0.30
조미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1,628	0.70
조미채소류의 수매 및 비축사업 추진	481	0.20
특작(차, 버섯, 약용 등)에 관한 사항	1,151	0.55
기타 특용작물 산업 육성	212	0.10
기호작물 산업 육성	212	0.10
버섯류의 수급 및 경영에 관한 사항	304	0.15
섬유작물 산업 육성	42	0.02
약용작물의 수급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85	0.04
유지작물의 수급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85	0.04
특용작물의 수매 및 저장 등에 관한 사항	212	0.10
농산물수급관리	2,531	1.06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특별 대책반 운영	698	0.30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623	0.26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사업 운영	512	0.20
농산물수급안정 정책 수립	698	0.30
인삼에 관한 사항	1,142	0.49
인삼 소비촉진 교육·홍보	187	0.08
인삼 통계조사	309	0.13

인삼 특별긴급관세	187	0.08
인삼자조금 관리 및 운영	460	0.20
일반채소에 관한 사항	4,446	2.10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1,065	0.50
두채, 녹두채 등 새싹채소 산업육성	43	0.02
엽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1,464	0.70
엽근채류 구매비축	213	0.10
엽근채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	85	0.04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1,065	0.50
채소류 생산통계 조사 및 관리	85	0.04
출하조절시설 운영	426	0.20
조미채소에 관한 사항	1,922	0.8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240	0.10
조미채소 출하조절시설 지원	240	0.10
조미채소류 TRQ 운용	481	0.20
조미채소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 관리	240	0.10
조미채소류 자조금 관리·운영	481	0.20
조미채소류 주산지 육성	240	0.10
특작(차, 버섯, 약용 등)에 관한 사항	4,807	2.32
차 관련 지자체 지원 및 상호협력	423	0.20
차 산업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	610	0.30
차 산업발전 협의회 운영	212	0.10
차산업법 운영	212	0.10
특용작물 산업 종합계획 수립	398	0.20
특용작물(차, 버섯, 약용 등) 소비촉진 교육·홍보	624	0.30
특용작물(차, 버섯 등) 자조금단체 설립·운영	375	0.18
특작류 사업 추진	212	0.10
버섯배지류 할당관세 운영	141	0.07
특용작물 TRQ운영	212	0.10
특용작물(차, 버섯, 약용 등) 산업 통계조사	565	0.27
특용작물(차, 버섯, 약용 등)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산업 육성	826	0.40
처리과공통	2,767	1.27
<b>총합계</b>	<b>26,838</b>	<b>12</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6,838(H) ÷ 1,864(H) = 14.40명(현원대비 2.40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2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작(차, 버섯, 약용 등)에 관한 사항, 일반채소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특용작물(차, 버섯, 약용 등)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산업 육성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6,838(H)으로 산정됨

#### ④ 원예경영과

□ 원예경영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6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2〉 원예경영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대책의 수립	1,470	0.70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생산, 유통, 기타 지원)	628	0.30
과수 소득보전직접지불	0	0.00
과수폐업지원	632	0.30
과원규모화	209	0.10
과수산업 육성	2,306	1.10
FTA 대응 및 과수 홍보, 소비촉진	632	0.30
과수 기획	1,042	0.50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 추진	632	0.30
과수산업종합대책 수립·추진	198	0.10
과수경쟁력제고대책 수립·추진	198	0.10
과실 수급안정대책 수립·추진	7,961	3.80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221	0.10
과수 재해업무	992	0.50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운영	628	0.30
꽃가루생산단지조성	221	0.10
지역별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826	0.40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 운영	837	0.40
과수일반	422	0.20
과수통계	632	0.30
과실검역	0	0.00
과실계약출하지원	663	0.30
과실브랜드	422	0.20
과실수급	663	0.30
과실수출	992	0.50
과실자조금	442	0.20
시설원에 산업 수립 추진 운영	2,353	1.14
시설원에 수급안정사업	414	0.20
시설원에 재해업무	414	0.20
시설원에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운영	530	0.26
시설원에 자조금	414	0.20
시설채소 수출확대	249	0.12
유통협약·명령	332	0.16
시설원에 일반	497	0.24
시설원에 통계	249	0.12
시설원에단체관리	249	0.12

시설원예현대화	3,725	1.76
기타 시설원예 정책사업 추진	85	0.04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765	0.36
시설원예 FTA 국내보완대책	127	0.06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892	0.42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765	0.36
시설원예 현대화 및 경쟁력 제고 대책	1,091	0.52
화훼의 생산·유통지원	4,373	2.08
화훼 생산 및 유통 등 통계 생산·관리	212	0.10
화훼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운영	708	0.34
화훼 관련 국제행사 업무	85	0.04
화훼 관련 단체 관리	212	0.10
화훼 생산자조직의 육성 및 자조금 지원·관리	425	0.20
화훼공판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2	0.10
화훼농가 및 전문단지 육성에 관한 사항	453	0.22
화훼류 박람회에 관한 사항	127	0.06
화훼류 품종육성 및 보급과 관련한 사항	212	0.10
화훼류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425	0.20
화훼류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425	0.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708	0.34
화훼의 재해대책 추진	170	0.08
처리과공통	4,334	2.08
<b>총합계</b>	<b>27,218</b>	<b>13</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7,218(H) ÷ 1,864(H) = 14.60명(현원대비 1.60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3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대책의 수립, 과실 수급안정대책 수립·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과수 기획, 과수 재해업무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7,218(H)으로 산정됨



### ⑤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0.6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3〉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산물안전성	4,542	2.22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홍보 및 지도	529	0.26
농산물 안전관련 협의체 대응	400	0.19
농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	107	0.05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529	0.26
식품안전개선대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79	0.04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246	0.12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업무	510	0.25
식품위생법 및 국제기준(Codex) 제개정 대응	191	0.09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교육홍보	374	0.19
농산물안전성조사	547	0.27
농식품안전정보관리	264	0.13
농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	400	0.19
안전성 국제동향 파악	102	0.05
오염농경지 환경정밀조사	264	0.13
처리과공통	747	0.38
<b>총합계</b>	<b>14,321</b>	<b>7</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4,321(H) ÷ 1,864(H) = 7.68명(현원대비 0.68명 부족)

####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7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 농산물안전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도입 및 운영 관리, 생산단계 농장, 도축장, 집유장 HACCP 제도 운용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4,321(H)으로 산정됨

## 자) 농업생명정책관

### ① 농산업정책과

□ 농산업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8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4> 농산업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식품 ICT 융복합	3,237	1.52
농식품 ICT 기자재, 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	649	0.30
농식품 ICT 융복합 교육·홍보	1,295	0.60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578	0.27
농식품 ICT 융복합 현장지원 정책수립	715	0.35
농산업규제법령홍보	850	0.40
규제개혁 및 홍보 관련 업무	850	0.40
농산업정책 행정지원	2,540	1.21
농업생명정책관실 법령	948	0.45
기술개발사업 선정 및 진도관리	272	0.13
농업생명정책관실 정책연구용역	526	0.25
부처 및 부내, 소속기관 협력	793	0.38
농산업정책기획	4,171	1.89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 관리	761	0.35
농식품분야 혁신성장 추진관련	880	0.40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1,076	0.47
농업생명정책관실 및 스마트팜관련 국제협력	359	0.17
농업생명정책관실 주요업무 계획 수립	1,094	0.50
농식품 바이오산업	1,333	0.60
농식품 바이오산업 대응	1,333	0.60
농식품벤처육성	4,531	2.08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기술평가 지원	125	0.06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319	0.15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2,071	0.95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지원	131	0.06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운영	1,051	0.48
농식품 전문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175	0.0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추진	394	0.18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263	0.1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업무	1,167	0.5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련 업무	1,167	0.58
스마트팜 확산	7,539	3.65
스마트농업 대응 및 증장기 계획 수립	1,747	0.85
스마트팜 관련 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관리	1,262	0.60
스마트팜 기자재 수출 및 해외 진출	565	0.27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	695	0.33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446	0.22
스마트팜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 검토 및 협조	419	0.20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 및 운영	465	0.23
스마트팜 통계 및 실태조사	417	0.20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	1,059	0.52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465	0.23
처리과공통	2,217	1.07
<b>총합계</b>	<b>27,583</b>	<b>13</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27,583(H) ÷ 1,864(H) = 14.80명(현원대비 1.80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3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확산, 농식품벤처육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스마트농업 대응 및 증장기 계획 수립, 농식품 바이오산업 대응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7,583(H)으로 산정됨

② 과학기술정책과

□ 과학기술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4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5> 과학기술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관련 법령 운영	1,756	0.82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운용	409	0.1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	825	0.39
R&D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운영	522	0.24
<b>농림기술개발</b>	<b>11,161</b>	<b>5.26</b>
신기술인증 및 녹색인증 운용	244	0.11
R&D 제재조치(부실학회, 복제권 등)	329	0.15
국가 연구개발 운영 규정 개정	239	0.11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기획 및 대응	285	0.13
농식품부 R&D 사업운영계획 수립	461	0.21
농정현안 대응 R&D 증장기 추진 계획 마련 및 대응	536	0.25
도시농업 정책수립 및 시행	881	0.42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04	0.15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322	0.16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운영	1,506	0.76
민간·지역 R&D 활성화	196	0.09
산업기술보안	107	0.05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151	0.07
국가연구개발사업	483	0.22
국제협력	107	0.05
기술개발 완료과제활용	45	0.02
기술개발사업 선정 및 진도관리	348	0.16
기술제도(법,시행령,시행규칙)	262	0.12
기술제도(훈령,예규,지침)	395	0.18
농림 RD예산(결산,회계,예산)	769	0.35
농림 기술 중장기계획	851	0.40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운영	277	0.13
농림기술개발사업 개선	261	0.12
부처 및 부내, 소속기관 협력	421	0.19
신규사업 기획	331	0.15
연도별 농림과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536	0.25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 연구개발사업	514	0.26
농업기술개발관제 관리	4,842	2.23
농림축산식품 r&d정책 및 기획	756	0.35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536	0.25
농식품 R&D 16개 사업 관리	2,060	0.95
농식품 R&D 신규과제 기획	241	0.11
다부처 공동기획(사회문제 해결과제 등) 대응 및 사업운영	647	0.31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234	0.11
기술성과 관리	132	0.06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234	0.11
농업생명산업	1,011	0.51
국가지식재산	1,011	0.51
사업평가 관리	576	0.26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대응	576	0.26
소속기관 지도관리	544	0.25
농기평 지도감독	544	0.25
외부기관 대외협력	894	0.42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관련사항	460	0.21
도시농업 관련단체	208	0.10
도시농업협의회 운영	226	0.11
회의업무 관리	460	0.21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관련사항	460	0.21
처리과공통	2,023	1.04
<b>총 합계</b>	<b>23,266</b>	<b>11</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3,266(H) ÷ 1,864(H) = 12.48명(현원대비 1.48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생명산업, 외부기관 대외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운영, 도시농업 정책수립 및 시행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3,266(H)으로 산정됨

③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8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6> 친환경농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친환경농산물 유통	8,090	3.73
국정과제 및 성과 평가에 관련한 사항	653	0.32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등 국제 업무	722	0.35
유기농식품 온라인 거래 지원	536	0.25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536	0.25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조사	592	0.29
친환경농업 기초통계 관리	251	0.10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위생 및 품질관리	905	0.4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및 쇼핑몰 관리	590	0.2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및 관리	1,006	0.45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관리	315	0.15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152	0.08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및 관리	555	0.26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및 관리	978	0.45
친환경농업교육훈련지원	301	0.12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운용	3,289	1.38
친환경농어업법령 제·개정	1,618	0.66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 및 생산 유통 활성화	555	0.2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1,116	0.46
친환경농업육성사업	7,023	3.37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운영	536	0.25

유기·무농약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관리	596	0.25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사업	1,041	0.53
인증사업자 교육 운영	251	0.1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153	0.59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관리	269	0.14
친환경인증기관 관리	502	0.20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	1,155	0.59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	536	0.25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228	0.12
자조금관리	757	0.35
친환경농업정책계획	2,021	0.98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 및 단체	825	0.40
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	1,033	0.50
친환경농업육성계획추진실적	164	0.08
친환경자재 및 직불제	2,056	0.88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	580	0.24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및 집행관리	672	0.30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 관리	604	0.26
친환경농자재지원	201	0.08
처리과공통	1,394	0.66
<b>총 합계</b>	<b>23,872</b>	<b>11</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23,872(H) ÷ 1,864(H) = 12.81명(현원대비 1.81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정책계획, 친환경자재 및 직불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및 관리, 친환경농어업법령 제·개정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23,872(H)으로 산정됨

#### ④ 종자생명산업과

□ 종자생명산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5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7〉 종자생명산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사업관리	1,034	0.47
곤충산업 육성·지원	374	0.17
곤충·양잠 관련 민간협회 지도·감독	374	0.17
양잠산업 육성·지원	286	0.13
정책총괄	1,801	0.81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402	0.18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335	0.15
곤충산업육성	556	0.25
양잠산업 육성	508	0.23
제도 및 현황	1,043	0.47
곤충산업 실태조사(연간)	199	0.09
기능성 양잠 관련 통계	155	0.0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운영	335	0.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운영	354	0.16
계획 수립	1,294	0.58
농업 분야 생명공학 육성 계획 수립	390	0.17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 관리 계획 수립	176	0.08
농업 분야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 수립	176	0.08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552	0.25
국제 협력	1,162	0.52
FAO 식량농업유전자원 위원회 대응	355	0.16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농업 분야 대응	355	0.16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대응	451	0.20
산업 지원	670	0.30
농업생명산업 관련 사업 추진	670	0.30
정보화	200	0.09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운영	200	0.09
제도 관리	1,070	0.48
농업생명자원 관계 기관 관리	315	0.14
농업생명자원법 및 하위 법령 운용 및 제개정	511	0.23
유전자원법에 따른 농업 분야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지원	244	0.11
인력양성	228	0.11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228	0.11
종자관련 위원회 운영	725	0.33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	725	0.33
종자산업 육성	3,267	1.57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추진	1,393	0.67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운영	937	0.45

종자 수출진흥 및 수입	252	0.12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685	0.33
종자산업 제도·정책 총괄	2,957	1.34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운용	1,410	0.64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774	0.35
UPOV 등 국제협력 사항	266	0.12
종자생산 및 보급	508	0.23
책임운영기관·단체 등 관리	891	0.41
국립종자원 지도·감독	508	0.23
종자·육묘 단체 관리 및 지원	383	0.18
홍보	937	0.45
국제종자박람회개최 등 종자산업 홍보	937	0.45
처리과공통	2,327	1.07
<b>총 합계</b>	<b>19,604</b>	<b>9</b>

<b>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b>
• 19,604(H) ÷ 1,864(H) = 10.52명(현원대비 1.52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9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 및 현황, 정책총괄, 계획 수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추진, 농업생명산업 관련 사업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운영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9,604(H)으로 산정됨

⑤ 동물복지정책과

□ 동물복지정책과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7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8> 동물복지정책과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관련 법령 운용	2,790	1.25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운용	1,972	0.90
반려동물 사료 법령 운용	818	0.35
동물보호대책	9,292	4.27
동물등록제 활성화	585	0.26
동물보호 단체 및 협회 등의 지도·감독	513	0.22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지원	393	0.19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1,612	0.71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69	0.21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975	0.44
반려동물 안전관리	1,047	0.46
사설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	582	0.29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488	0.24
윤리적 동물실험	471	0.2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710	0.34
동물복지 정책	1,448	0.67
반려동물 관련산업	3,756	1.64
반려동물 관련 산업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605	0.26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등 관리	763	0.32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 및 정기점검	406	0.17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 예·결산 및 집행	561	0.27
반려동물 관련 자격 지도·감독	414	0.17
반려동물 산업 관리	1,006	0.45
처리과공통	4,134	1.84
<b>총 합계</b>	<b>19,972</b>	<b>9</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9,972(H) ÷ 1,864(H) = 10.71명(현원대비 1.71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9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대책, 반려동물 관련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안전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 활성화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9,972(H)으로 산정됨

⑥ 농기자재정책팀

□ 농기자재정책팀의 미시인력 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기준 시 1.0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9> 농기자재정책팀 소기능 및 단위업무별 시간(H) 및 FTE(명)

소기능 및 단위업무	시간(H)	FTE(명)
농기계 관리	4,678	2.11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403	0.18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312	0.14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528	0.24
농업기계 검정제도	287	0.13

농업기계 세제지원	403	0.18
농업기계 안전제도	199	0.09
농업기계박람회 지원	312	0.14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14	0.19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용 및 제도개선	464	0.21
농업용 면세유 지원	513	0.23
농기계 관련 법령운용 및 제도개선	422	0.19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세제지원	422	0.19
<b>농약수급 및 안전사용</b>	<b>2,657</b>	<b>1.29</b>
농약 가격표시제	453	0.22
농약관련 예산 운용	909	0.44
농약관리법령 운용	844	0.41
농약안전사용교육 추진	453	0.22
<b>비료자재 관리</b>	<b>4,672</b>	<b>2.17</b>
비료 관련 해외협력	172	0.08
비료 오염원 관리	254	0.12
비료관련 협회, 단체	259	0.12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	361	0.17
비료의 품질관리	387	0.18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477	0.22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353	0.16
토양 양분관리	259	0.12
흙의 날 행사 개최	427	0.20
비료관리법 운용 및 개정	402	0.19
비료정책 및 제도개선	324	0.15
유기질비료보조	517	0.24
토양개량제 지원	480	0.22
<b>처리과공통</b>	<b>3,029</b>	<b>1.43</b>
<b>총 합계</b>	<b>15,035</b>	<b>7</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5,035(H) ÷ 1,864(H) = 8.07명(현원대비 1.07명 부족)

○ 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현황

- 현원 7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료자재 관리, 농기계 관리, 농약수급 및 안전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위업무별로는 농약관련 예산 운용, 농약관리법령 운용,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등 운영이 확인되며, 연간 부서 총 추정 근무시간은 15,035(H)으로 산정됨

## 나. 인력 재배치 방안\_국 단위 분석결과

### 가) 농촌정책국

□ 농촌정책국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60.9~98.2%, 공통업무에 1.8~39.1%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농촌정책국의 투입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7.55명 부족함

〈표 3-50〉 농촌정책국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농촌 정책과 (13명)	농림부문 중장기 정책개발 추진	10.5%	2,776	1.33	60.9%	480.5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대책 추진	9.8%	3,145	1.34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3.3%	880	0.42		
	농업회의소 관리 및 지원	5.0%	1,381	0.64		
	농촌정책개발관리	5.0%	1,388	0.63		
	농촌사회복지	5.0%	1,427	0.64		
	농촌생활환경개선	1.7%	473	0.22		
	농민단체 관련 기타	1.7%	473	473		
	농민단체 관리 및 지원	13.2%	3,648	1.69		
	산하유관기관 지도감독	5.7%	1,539	0.74		
	처리과 공통	39.1%	10,693	5.13	39.1%	5.13
	<b>합계</b>	<b>100%</b>	<b>27,826</b>	<b>13.00</b>		
	<b>표준근로시간</b>				<b>14.93</b>	
지역 개발과 (10명)	농촌정책개발관리	6.5%	1,351	1	76.2%	7.61
	농촌활력증진계획	3.1%	705	0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3.0%	612	0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0.9%	182	0		
	농촌생활환경정비	17.7%	3,680	2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37.3%	8,087	4		
	도농교류 활성화	5.3%	1,092	1		
	포괄보조	2.4%	524	0		
	처리과 공통	23.8%	5,014	2	23.8%	2.39
	<b>합계</b>	<b>100%</b>	<b>21,247</b>	<b>10.00</b>		
	<b>표준근로시간</b>				<b>11.40</b>	
농촌사회 복지과 (7명)	농촌복합공간조성	2.9%	392	0	68.8%	4.80
	농촌노인복지	7.8%	1,212	1		
	농촌사회복지	22.9%	3,363	2		
	사회적경제	10.6%	1,675	1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5.0%	756	0	31.2%	2.20		
	농촌공동체 활성화	13.1%	1,773	1				
	농촌생활환경개선	4.3%	631	0				
	도농 교류 활성화	2.2%	293	0				
	처리과 공통	31.2%	4,802	2				
	<b>합계</b>	<b>100%</b>	<b>14,897</b>	<b>7.00</b>				
	<b>표준근로시간</b>			<b>7.99</b>				
농촌산업과 (11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13.5%	2,994	1	69.6%	7.65		
	지역 특화발전특구위원회 운영	2.3%	508	0				
	농공단지조성	5.2%	1,245	1				
	농촌활력증진계획	3.4%	799	0				
	지역특화사업	7.5%	1,765	1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8.5%	6,774	3				
	도농교류 활성화	9.2%	2,186	1				
	처리과 공통	30.4%	6,959	3				
	<b>합계</b>	<b>100%</b>	<b>23,230</b>	<b>11.00</b>				
<b>표준근로시간</b>			<b>12.50</b>					
농촌여성 정책팀 (6명)	농촌 성 평등 정책	16.6%	1,971	1	98.2%	5.90		
	농촌 여성 복지정책	34.8%	4,649	2				
	농촌 여성 인력정책	13.3%	1,564	1				
	농촌 여성정책	33.5%	3,873	2				
	처리과 공통	1.8%	225	0	1.8%	0.10		
	<b>합계</b>	<b>100%</b>	<b>12,281</b>	<b>6.00</b>				
<b>표준근로시간</b>			<b>6.59</b>					
농촌재생 에너지팀 (8명)	기후변화 적응	20.4%	3,322	2	89.5%	7.16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27.9%	4,617	2				
	농촌재생에너지 제도	18.3%	3,000	1				
	온실가스 감축	22.9%	3,552	2				
	처리과 공통	10.5%	1,705	1	10.5%	0.84		
	<b>합계</b>	<b>100%</b>	<b>16,196</b>	<b>8.00</b>				
<b>표준근로시간</b>			<b>8.69</b>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추진팀 (5명)	농업유산보전.관리	17.7%	1,848	1	64.6%	3.22		
	농촌생활환경개선	17.2%	1,577	1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9.7%	2,988	1				
	처리과 공통	35.4%	3,815	2	35.4%	1.78		
	<b>합계</b>	<b>100%</b>	<b>10,228</b>	<b>5.00</b>				
<b>표준근로시간</b>			<b>5.49</b>					
<b>총 합계</b>			<b>125,905</b>	<b>60.00</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25,905 (H) ÷ 1,864(H) = 67.55명(현원대비 7.55명 부족)

## 나) 농업정책국

□ 농업정책국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80.1~87.1%, 공통업무에 12.9~19.9%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농업정책국의 투입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8.54명 부족함

〈표 3-51〉 농업정책국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농업정책과 (14명)	농식품 일자리 박람회 추진	1.6%	457	0.22	80.1%	11.20
	농식품 일자리 정책 수립	4.8%	1,390	0.67		
	일자리 관련 시스템 운영	2.1%	613	0.30		
	농정에 관한 보고서 작성	4.6%	1,287	0.64		
	남북농업협력 추진	6.4%	1,935	0.90		
	농식품 정책 개발	3.0%	846	0.42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1.6%	441	0.22		
	농업분야 청년정책	2.4%	662	0.33		
	농업정책연구 및 통계분석	4.7%	1,398	0.65		
	대응 및 대책수립	3.2%	944	0.44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5.5%	1,616	0.75		
	직접지불제의 총괄 및 조정	1.3%	361	0.18		
	농정회의 운영	1.1%	314	0.16		
	농식품 정책연구 추진	8.6%	2,416	1.22		
	농업박람회 추진	4.5%	1,170	0.63		
	정부기념일 행사 추진	4.3%	1,183	0.6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운용	4.4%	1,343	0.62		
	자유무역협정제도 운영	16.0%	4,602	2.24		
	처리과 공통	19.9%	5,640	2.80		
	<b>합계</b>		<b>100%</b>	<b>28,616</b>	<b>14.00</b>	
<b>표준근로시간</b>				<b>15.35</b>		
농지과 (12명)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15.7%	4,097	1.87	80.8%	9.70
	농지은행 제도 운용	17.4%	4,374	2.09		
	농지정보화	5.4%	1,246	0.65		
	농지정책 수립, 집행	42.3%	11,183	5.09		
	처리과 공통	19.2%	5,139	2.30	19.2%	2.30
	<b>합계</b>		<b>100%</b>	<b>26,471</b>	<b>12.00</b>	
<b>표준근로시간</b>				<b>14.20</b>		
경영인력과	농업경영지원	20.0%	4,761	2.15	83.1%	9.13

(11명)	농업인 교육훈련	13.8%	3,201	1.54		
	농업인력 육성 관리	49.3%	12,112	5.44		
	처리과 공통	16.9%	4,030	1.87	16.9%	1.87
	<b>합계</b>	<b>100%</b>	<b>24,104</b>	<b>11.00</b>		
<b>표준근로시간</b>				<b>12.93</b>		
농업금융 정책과 (13명)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및 경영회생지원제도 운용	1.9%	565	0.25	84.4%	10.96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수정)	3.2%	946	0.42		
	농업관련 조세 등 부담경감제도	6.6%	1,921	0.86		
	농업금융 혁신	10.1%	2,820	1.31		
	농업정책자금 지원 및 제도개선	4.9%	1,391	0.63		
	농업협동조합 개혁 등 제도 개선	34.4%	9,053	4.46		
	농업협동조합육성(설립, 합병 등)	19.5%	5,415	2.55		
	농협 상호금융	3.8%	1,123	0.50		
	처리과 공통	15.6%	4,455	2.04	15.6%	2.04
	<b>합계</b>	<b>100%</b>	<b>27,689</b>	<b>13.00</b>		
<b>표준근로시간</b>				<b>14.85</b>		
재해보험 정책과 (10명)	가축재해 보험 추진	11.5%	2,182	1.10	87.1%	8.70
	국가재보험 및 재해보험 관리	13.5%	2,678	1.3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	13.7%	2,987	1.39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영 및 지원	4.2%	871	0.42		
	농작물재해 보험 추진	24.3%	5,058	2.44		
	재해대응 강화	19.9%	4,380	2.03		
	처리과 공통	12.9%	2,730	1.30	12.9%	1.30
	<b>합계</b>	<b>100%</b>	<b>20,885</b>	<b>10.00</b>		
<b>표준근로시간</b>				<b>11.20</b>		
<b>총 합계</b>			<b>127,765</b>	<b>60.00</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27,765(H) ÷ 1,864(H) = 68.54명(현원대비 8.54명 부족)

## 다) 식량정책관

□ 식량정책관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67.3~92.6%, 공통업무에 7.4~32.7%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식량정책관의 투입 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7.59명 부족함

〈표 3-52〉 식량정책관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식량정책과 (14명)	양곡유통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531	0.23	67.9%	9.51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및 판매	9.5%	2,961	1.32		
	농가소득안정대책	5.3%	1,574	0.75		
	가격안정대책	5.7%	1,868	0.80		
	국제업무	8.1%	2,422	1.14		
	양곡계획 수립	10.4%	3,066	1.44		
	양곡관리에산업무	10.3%	3,265	1.45		
	양곡수급	14.7%	4,371	2.06		
	재고조사계획	2.3%	746	0.32		
	처리과 공통	32.1%	9,956	4.49		
	<b>합계</b>	<b>100%</b>	<b>30,759</b>	<b>14.00</b>		
	<b>표준근로시간</b>				<b>16.50</b>	
식량산업과 (12명)	생산조정	36.5%	10,037	4.39	92.6%	11.11
	쌀 전업농 육성	0.9%	269	0.11		
	식물예찰방제	9.6%	2,229	1.16		
	밀산업 육성법 운용	1.9%	450	0.22		
	쌀가공산업 육성	5.6%	1,286	0.65		
	쌀소비활성화	11.0%	2,554	1.29		
	양곡수급	21.3%	5,420	2.59		
	잡곡수급	5.8%	1,471	0.70		
	처리과 공통	7.4%	2,017	0.89	7.4%	0.89
	<b>합계</b>	<b>100%</b>	<b>25,734</b>	<b>12.00</b>		
<b>표준근로시간</b>				<b>13.81</b>		
농가소득 안정추진단 (8명)	직불사업 운영 및 기금 운용	18.3%	3,067	1.48	71.2%	5.72
	직불제 장단기 정책개발 및 사업계획 추진	24.4%	4,105	1.97		
	공익직불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2.1%	357	0.17		
	교육·홍보 추진	6.4%	1,008	0.50		
	민원 상담	7.4%	1,167	0.58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6.8%	1,130	0.55		
	부정수급 방지	3.7%	615	0.30		

	신고 포상금 운영	2.1%	355	0.17		
	처리과 공통	28.8%	4,802	2.28	28.8%	2.28
	<b>합계</b>	<b>100%</b>	<b>16,606</b>	<b>8.00</b>		
	<b>표준근로시간</b>			<b>8.91</b>		
농업기반과 (13명)	가뭄대책	10.6%	2,703	1.34	67.3%	8.73
	농업생산기반 정비	3.3%	821	0.43		
	농촌용수 확보	9.7%	2,568	1.29		
	농업생산기반 기획	12.3%	3,059	1.60		
	기반시설 안전관리	12.5%	3,490	1.63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8.9%	4,936	2.44		
	처리과 공통	32.7%	8,765	4.27	32.7%	4.27
	<b>합계</b>	<b>100%</b>	<b>26,342</b>	<b>13.00</b>		
	<b>표준근로시간</b>			<b>14.13</b>		
간척지 농업과 (11명)	농업생산기반정비	2.1%	478	0.23	80.2%	8.81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19.9%	4,565	2.15		
	대단위 농업개발	3.3%	747	0.36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9.3%	9,192	4.34		
	서남해안간척사업	5.2%	1,186	0.57		
	치수능력확대사업	3.0%	659	0.33		
	농업기반시설 재해안전관리	1.6%	336	0.17		
	영농기반시설 구축	5.8%	1,317	0.66		
	처리과 공통	19.8%	4,342	2.19	19.8%	2.19
	<b>합계</b>	<b>100%</b>	<b>22,820</b>	<b>11.00</b>		
	<b>표준근로시간</b>			<b>12.24</b>		
<b>총 합계</b>			<b>122,261</b>	<b>58.00</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22,261(H) ÷ 1,864(H) = 65.59명(현원대비 7.59명 부족)



## 라) 국제협력국

□ 국제협력국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72.8~90.6%, 공통업무에 9.4~27.2%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국제협력국의 투입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7.12명 부족함

〈표 3-53〉 국제협력국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국제협력 총괄과 (15명)	국제교류	12.4%	4,187	1.84	72.8%	11.03
	국제농업관련단체 및 해외주재 농무관 관리	1.3%	466	0.20		
	국제농업협력	13.4%	4,723	2.00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	9.4%	3,120	1.40		
	식량원조	2.9%	929	0.44		
	아세안 회의 및 아시아지역 농업협력	5.4%	1,887	0.81		
	농무관	0.3%	108	0.05		
	양자간 농업협력	8.1%	2,733	1.20		
	양자간 통상현안 대응	5.7%	1,928	1.00		
	해외농업투자 및 외농업개발촉진	13.9%	4,682	2.09		
	처리과 공통	27.2%	9,286	4.12	27.2%	4.12
	<b>합계</b>		<b>100%</b>	<b>34,050</b>	<b>15.00</b>	
<b>표준근로시간</b>				<b>18.27</b>		
농업통상과 (9명)	G20 등 다자국제기구 농업협력	5.5%	995	0.50	88.0%	7.92
	G21 등 다자국제기구 농업협력	5.0%	912	0.45		
	경제 협력 개발기구 관련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유도	12.7%	2,221	1.15		
	농산물 수입 및 관세관리	17.7%	3,110	1.61		
	북한과의 농산물 교역	0.4%	78	0.04		
	세계무역기구 농업 관련 위원회 대응	4.4%	784	0.39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 검토	4.0%	681	0.35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다자협상	7.6%	1,390	0.69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이행	9.4%	1,627	0.84		
	세계무역기구 쌀관세화 검증	7.0%	1,263	0.63		
	세계무역기구 통보	8.2%	1,390	0.72		
	세계무역기구협정외 개도국간 일반 특혜관세공여 및 다자협상	6.1%	1,115	0.55		

	처리과 공통	12.0%	2,172	1.08	12.0%	1.08		
	<b>합계</b>	<b>100%</b>	<b>17,738</b>	<b>9.00</b>				
	<b>표준근로시간</b>				<b>9.52</b>			
검역정책과 (11명)	국제교류	1.1%	256	0.12	88.6%	9.68		
	기본계획 수립	0.6%	131	0.06				
	농산물안전성	0.5%	113	0.05				
	농업생명산업	5.6%	1,285	0.58				
	소속기관 지도관리	2.1%	504	0.24				
	농업생명산업	3.4%	798	0.36				
	국제교류	5.2%	1,189	0.55				
	농산물안전성	2.1%	475	0.22				
	농업생명산업	7.2%	1,664	0.77				
	검역통계관리	1.8%	493	0.20				
	관련 법령 운용	1.2%	301	0.13				
	농산물안전성	5.2%	1,189	0.55				
	수출입동물, 축산물검역	36.1%	9,450	3.99				
	검역관리	6.5%	1,467	0.73				
	관련 법령 운용	4.5%	1,020	0.51				
	관련 제도 수립	3.6%	820	0.41				
	기본계획 수립	1.9%	418	0.21				
	회의업무 관리	9.4%	2,075	1.10				
	처리과 공통	9.4%	2,268	1.03			9.4%	1.03
		<b>합계</b>	<b>100%</b>	<b>24,127</b>			<b>11.00</b>	
	<b>표준근로시간</b>				<b>12.94</b>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과 (11명)	FTA 협상	71.0%	16,521	7.81	84.1%	9.27		
	FTA협상지원시스템 관리	2.6%	552	0.28				
	교육 및 홍보	1.1%	272	0.13				
	기체결FTA 이행위원회 대응	9.4%	2,119	1.05				
	처리과 공통	15.9%	3,637	1.73	15.9%	1.73		
		<b>합계</b>	<b>100%</b>	<b>23,100</b>	<b>11.00</b>			
	<b>표준근로시간</b>				<b>12.39</b>			
<b>총 합계</b>			<b>99,015</b>	<b>46.00</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99,015(H) ÷ 1,864(H) = 53.12명(현원대비 7.12명 부족)

## 마) 축산정책국

□ 축산정책국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77.7~97.1%, 공통업무에 2.9~22.3%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축산정책국의 투입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7.25명 부족함

〈표 3-54〉 축산정책국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축산정책과 (17명)	도축·가공시설, 관리	0.8%	341	0.15	77.7%	13.20
	축산물유통	4.7%	1,748	0.78		
	경마 시행 관리	5.4%	2,259	0.91		
	말 산업 육성	5.5%	2,328	0.93		
	장·단기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17.8%	6,482	3.00		
	전통 소싸움 경기 관리	1.6%	668	0.27		
	축산관련 대외통상 업무	1.3%	477	0.22		
	축산금융제도 운영	1.4%	566	0.25		
	축산발전기금 운영	11.0%	4,455	1.90		
	축산법 운용	7.4%	2,576	1.27		
	축산부문 농림사업종합계획수립지원	0.1%	37	0.02		
	축산업 허가/등록제 추진	20.7%	7,859	3.50		
	처리과 공통	22.3%	8,133	3.80	22.3%	3.80
	<b>합계</b>		<b>100%</b>	<b>37,928</b>	<b>17.00</b>	
<b>표준근로시간</b>				<b>20.35</b>		
축산환경 자원과 (12명)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15.2%	4,077	1.83	97.1%	11.65
	사료산업육성 및 사료수급관리 등	34.3%	8,643	4.13		
	축산악취 저감 지도	19.5%	4,923	2.28		
	축산환경 정책 및 관리	11.3%	3,012	1.37		
	친환경 축산	16.8%	4,408	2.04		
	처리과 공통	2.9%	762	0.35	2.9%	0.35
	<b>합계</b>		<b>100%</b>	<b>25,825</b>	<b>12.00</b>	
<b>표준근로시간</b>				<b>13.85</b>		
축산경영과 (15명)	축산 재해관리 업무	0.9%	313	0.14	84.0%	12.58
	축산관련 대외통상업무	7.9%	2,506	1.18		
	축산관련 법인 단체 지도 감독	4.8%	1,538	0.72		
	축산물 브랜드 관리	1.0%	326	0.15		
	축산물 이력제도 관리	10.2%	3,380	1.55		
	축산물수급안정 및 관측업무	21.7%	6,863	3.24		
	축산업 육성 사업 등 지원	21.3%	6,554	3.16		
	국가기술 자격제도 운용관리	0.7%	224	0.11		
	가축개량 종합계획의 수립	1.8%	570	0.28		
	가축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	7.8%	2,471	1.17		
	축산 소관 법령 운영	5.9%	1,850	0.88		
	처리과 공통	16.0%	5,174	2.42	16.0%	2.42
<b>합계</b>		<b>100%</b>	<b>31,768</b>	<b>15.00</b>		
<b>표준근로시간</b>				<b>17.04</b>		
<b>총 합계</b>			<b>95,521</b>	<b>44.00</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95,521(H) ÷ 1,864(H) = 51.25명(현원대비 7.25명 부족)

## 바) 방역정책국

□ 방역정책국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65.8~85.4%, 공통업무에 14.6~34.2%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방역정책국의 투입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7.65명 부족함

〈표 3-55〉 방역정책국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방역 정책과 (14명)	가축방역대책	53.2%	16,655	7.45	65.8%	9.23
	수의시범 운영 및 수의사면허 관리	10.4%	3,679	1.48		
	가축방역	2.2%	677	0.30		
	처리과 공통	34.2%	10,068	4.77	34.2%	4.77
	<b>합계</b>	<b>100%</b>	<b>31,078</b>	<b>14.00</b>		
	<b>표준근로시간</b>				<b>16.67</b>	
구제역 방역과 (13명)	가축방역대책	28.10%	8,333	3.58	68.5%	8.90
	구제역·AI 백신관리	10.50%	3,450	1.52		
	가축방역	29.90%	8,260	3.80		
	처리과 공통	31.50%	9,002	4.10	31.5%	4.10
	<b>합계</b>	<b>100%</b>	<b>29,045</b>	<b>13.00</b>		
	<b>표준근로시간</b>				<b>15.58</b>	
조류인플 엔자방역과 (11명)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28.50%	7,478	3.06	85.4%	9.38
	동물약품관련 업무	19.60%	4,722	2.12		
	방역시설관리	16.10%	4,135	1.90		
	소가축방역	21.20%	5,211	2.30		
	처리과 공통	14.60%	3,426	1.62	14.6%	1.62
	<b>합계</b>	<b>100%</b>	<b>24,972</b>	<b>11.00</b>		
<b>표준근로시간</b>				<b>13.40</b>		
<b>총 합계</b>			<b>85,095</b>	<b>38.00</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85,095(H) ÷ 1,864(H) = 45.65명(현원대비 7.65명 부족)

## 사) 식품산업정책관

□ 식품산업정책관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56.1~94.0%, 공통업무에 6.0~43.9%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식품산업정책관의 투입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5.23명 부족함

〈표 3-56〉 식품산업정책관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식품산업 정책과 (14명)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34.3%	9,547	4.71	56.1%	7.80
	식품의 규격 기준	4.8%	1,422	0.68		
	판매촉진	17.0%	5,420	2.41	43.9%	6.20
	처리과 공통	43.9%	13,257	6.20		
	<b>합계</b>	<b>100%</b>	<b>29,646</b>	<b>14.00</b>		
<b>표준근로시간</b>				<b>15.90</b>		
식품산업 진흥과 (8명)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52.7%	8,279	4.20	76.7%	6.17
	전통식품산업의 육성	24.0%	4,000	1.97		
	처리과 공통	23.3%	3,623	1.83	23.3%	1.83
	<b>합계</b>	<b>100%</b>	<b>15,902</b>	<b>8.00</b>		
<b>표준근로시간</b>				<b>8.53</b>		
외식산업 진흥과 (8명)	농산식품산업의 육성	81.8%	13,493	6.54	91.4%	7.31
	소비촉진	9.6%	1,547	0.77		
	처리과 공통	8.6%	1,499	0.69	8.6%	0.69
	<b>합계</b>	<b>100%</b>	<b>16,538</b>	<b>8.00</b>		
<b>표준근로시간</b>				<b>8.87</b>		
수출진흥과 (8명)	농산물의 해외홍보·무역정보 등 해외시장의 개척	6.8%	1,183	0.55	94.0%	8.00
	농식품수출진흥업무 추진	87.2%	15,105	7.45		
	처리과 공통	6.0%	1,040	0.48	6.0%	0.48
	<b>합계</b>	<b>100%</b>	<b>17,332</b>	<b>8.00</b>		
<b>표준근로시간</b>				<b>9.30</b>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팀 (8명)	농산식품산업	74.7%	12,076	5.97	75.9%	6.06
	지역농업구조정책수립총괄	1.2%	176	0.09		
	처리과 공통	24.1%	3,818	1.94	24.1%	1.94
	<b>합계</b>	<b>100%</b>	<b>16,068</b>	<b>8.00</b>		
<b>표준근로시간</b>				<b>8.62</b>		
<b>총 합계</b>			<b>95,486</b>	<b>46.00</b>		

###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95,486(H) ÷ 1,864(H) = 51.23명(현원대비 5.23명 부족)

### 아) 유통소비정책관

□ 유통소비정책관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73.9~98.3%, 공통업무에 1.7~26.1%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유통소비정책관의 투입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8.24명 부족함

〈표 3-57〉 유통소비정책관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유통정책과 (15명)	농산물안전성	7.7%	2,286	1.15	73.9%	11.09	
	농산물품질 관리	4.0%	1,211	0.60			
	농산물 물류제도 개선	1.4%	467	0.21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7.0%	2,203	1.06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지원	1.3%	425	0.20			
	농산물수급관리	0.1%	39	0.02			
	농산물유통기획	32.5%	10,388	4.86			
	농산물유통종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1.9%	641	0.28			
	농수산물수급관리	7.5%	2,439	1.13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8.6%	2,803	1.30			
	디지털유통 기반 마련	0.3%	85	0.04			
	식품의 규격 기준	1.3%	404	0.20			
	판매촉진	0.3%	87	0.04			
	처리과 공통	26.1%	8,625	3.91			26.1%
	<b>합계</b>		<b>100%</b>	<b>32,103</b>	<b>15.00</b>		
	<b>표준근로시간</b>				<b>17.22</b>		
식생활소비급 식진흥과 (12명)	농산물품질 관리	2.5%	646	0.30	98.3%	11.80	
	농산물유통관리	28.1%	7,064	3.35			
	농산물유통기획	9.6%	2,199	1.15			
	농산물직거래	12.5%	3,183	1.50			
	디지털유통 기반 마련	2.5%	633	0.30			
	소비자유통	0.7%	215	0.10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	17.9%	4,581	2.15			
	식생활개선	15.7%	3,673	1.90			
	GAP인증	8.8%	2,247	1.05			
	처리과 공통	1.7%	423	0.20	1.7%	0.20	
	<b>합계</b>		<b>100%</b>	<b>24,855</b>	<b>12.00</b>		
<b>표준근로시간</b>				<b>13.33</b>			

원예산업과 (12명)	농산물수급관리	1.7%	442	0.20	82.7%	9.93
	인삼에 관한 사항	9.2%	2,515	1.11		
	조미채소에 관한 사항	10.7%	3,070	1.30		
	특작(차, 버섯, 약용 등)에 관한 사항	4.7%	1,151	0.55		
	농산물수급관리	8.9%	2,531	1.06		
	인삼에 관한 사항	4.1%	1,142	0.49		
	일반채소에 관한 사항	17.2%	4,446	2.10		
	조미채소에 관한 사항	6.6%	1,922	0.80		
	특작(차, 버섯, 약용 등)에 관한 사항	19.6%	4,807	2.32		
	농업관측사업 추진	10.6%	2,767	1.27		
	처리과 공통	10.6%	2,845	1.27	10.6%	1.27
	<b>합계</b>		<b>100%</b>	<b>26,838</b>	<b>12.00</b>	
<b>표준근로시간</b>				<b>14.40</b>		
원예경영과 (13명)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대책의 수립	5.4%	1,470	0.70	84.0%	10.92
	과수산업 육성	8.4%	2,306	1.10		
	과수산업종합대책 수립·추진	0.8%	198	0.10		
	과실 수급안정대책 수립·추진	29.4%	7,961	3.80		
	시설원에 산업 수립 추진 운영	8.8%	2,353	1.14		
	시설원에 일반	1.9%	497	0.24		
	시설원에현대화	13.3%	3,725	1.76		
	화훼의 생산·유통지원	16.0%	4,373	2.08		
	처리과 공통	16.0%	4,334	2.08	16.0%	2.08
	<b>합계</b>		<b>100%</b>	<b>27,218</b>	<b>13.00</b>	
<b>표준근로시간</b>				<b>14.60</b>		
농축산물 위생품질 관리팀 (7명)	농산물안전성	31.8%	4,554	2.23	94.6%	6.62
	장·단기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4.2%	601	0.29		
	축산물위생	58.6%	8,392	4.10		
	처리과 공통	5.4%	747	0.38	5.4%	0.38
	<b>합계</b>		<b>100%</b>	<b>14,321</b>	<b>7.00</b>	
<b>표준근로시간</b>				<b>7.68</b>		
<b>총 합계</b>			<b>125,335</b>	<b>59.00</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25,335(H) ÷ 1,864(H) = 67.24명(현원대비 8.24명 부족)

## 자) 농업생명정책관

□ 농업생명정책관은 과 단위 조직별 본 업무에 79.6~94.0%, 공통업무에 6.0~20.4%의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음. 표준근로시간 기준 농업생명정책관의 투입업무량 고려 시 현원 대비 9.38명 부족함

〈표 3-58〉 농업생명정책관 업무량 기반 FTE(명)

구분	소기능	비중	시간(H)	FTE(명)	비중	FTE(명)
과학기술 정책과 (11명)	관련 법령 운영	5.4%	1,756	0.82	84.0%	9.96
	농림기술개발	8.4%	11,161	5.26		
	농업기술개발관제 관리	0.8%	4,842	2.23		
	농업생명산업	29.4%	1,011	0.51		
	사업평가 관리	8.8%	576	0.26		
	소속기관 지도관리	1.9%	544	0.25		
	외부기관 대외협력	13.3%	894	0.42		
	회의업무 관리	16.0%	460	0.21		
	처리과 공통	16.0%	2,023	1.04	16.0%	1.04
	<b>합계</b>	<b>100%</b>	<b>23,266</b>	<b>11.00</b>		
<b>표준근로시간</b>				<b>12.48</b>		
농기자재 정책팀 (7명)	농기계 관리	29.4%	4,678	2.11	79.6%	5.57
	농약수급 및 안전사용	18.4%	2,657	1.29		
	비료자재 관리	31.8%	4,672	2.17		
	처리과 공통	20.4%	3,029	1.43	20.4%	1.43
	<b>합계</b>	<b>100%</b>	<b>15,035</b>	<b>7.00</b>		
<b>표준근로시간</b>				<b>8.07</b>		
농산업정책과 (13명)	농식품ICT 융복합	11.6%	3,237	1.52	91.8%	11.93
	농산업규제법령홍보	3.1%	850	0.40		
	농산업정책 행정지원	9.3%	2,540	1.21		
	농산업정책기획	14.5%	4,171	1.89		
	농식품 바이오산업	4.6%	1,333	0.60		
	농식품벤처육성	15.9%	4,531	2.0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업무	4.4%	1,167	0.58		
	스마트팜 확산	28.4%	7,539	3.65		
	처리과 공통	8.2%	2,217	1.07	8.2%	1.07
<b>합계</b>	<b>100%</b>	<b>27,583</b>	<b>13.00</b>			
<b>표준근로시간</b>				<b>14.80</b>		
종자생명	사업관리	5.2%	1,034	0.47	88.1%	7.93



산업과 (9명)	정책총괄	9.0%	1,801	0.81		
	제도 및 현황	5.2%	1,043	0.47		
	계획 수립	6.5%	1,294	0.58		
	국제 협력	5.8%	1,162	0.52		
	산업 지원	3.4%	670	0.30		
	정보화	1.0%	200	0.09		
	제도 관리	5.4%	1,070	0.48		
	인력양성	1.4%	228	0.11		
	종사관련 위원회 운영	3.7%	725	0.33		
	종사산업 육성	17.2%	3,267	1.57		
	종사산업 제도·정책 총괄	14.9%	2,957	1.34		
	책임운영기관·단체 등 관리	4.5%	891	0.41		
	홍보	4.9%	937	0.45		
	처리과 공통	11.9%	2,327	1.07	11.9%	1.07
<b>합계</b>		<b>100%</b>	<b>19,604</b>	<b>9.00</b>		
<b>표준근로시간</b>				<b>10.52</b>		
동물복지 정책과 (9명)	관련 법령 운용	14.1%	2,790	1.25	80.9%	7.16
	동물보호대책	48.3%	9,292	4.27		
	반려동물 관련산업	18.5%	3,756	1.64		
	처리과 공통	19.1%	4,134	1.84	19.1%	1.84
	<b>합계</b>		<b>100%</b>	<b>19,972</b>	<b>9.00</b>	
<b>표준근로시간</b>				<b>10.71</b>		
친환경농업과 (11명)	친환경농산물 유통	33.8%	8,090	3.73	94.0%	10.34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운용	12.7%	3,289	1.38		
	친환경농업육성사업	30.5%	7,023	3.37		
	친환경농업정책계획	8.9%	2,021	0.98		
	친환경자재 및 직불제	8.1%	2,056	0.88		
	처리과 공통	6.0%	1,394	0.66	6.0%	0.66
	<b>합계</b>		<b>100%</b>	<b>23,872</b>	<b>11.00</b>	
<b>표준근로시간</b>				<b>12.81</b>		
<b>총 합계</b>			<b>129,332</b>	<b>60.00</b>		

**산정결과(표준근로시간)**

• 129,332(H) ÷ 1,864(H) = 69.38명(현원대비 9.38명 부족)

## 다. 종합 분석 결과

### 가) 국 단위 분석

□ 농촌정책국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7.5명(현원 대비 7.5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59〉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10,228	5	5.5	0.5
농촌사회복지과	14,897	7	8.0	1.0
농촌산업과	23,230	11	12.5	1.5
농촌여성정책팀	12,281	6	6.6	0.6
농촌재생에너지팀	16,196	8	8.7	0.7
농촌정책과	27,826	13	14.9	1.9
지역개발과	21,247	10	11.4	1.4
<b>합계</b>	<b>125,905</b>	<b>60</b>	<b>67.5</b>	<b>7.5</b>

□ 농업정책국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8.5명(현원 대비 8.5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60〉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경영인력과	24,104	11	12.9	1.9
농업금융정책과	27,689	13	14.9	1.9
농업정책과	28,616	14	15.2	1.4
농지과	26,471	12	14.2	2.2
재해보험정책과	20,885	10	11.2	1.2
<b>합계</b>	<b>127,765</b>	<b>60</b>	<b>68.5</b>	<b>8.5</b>

□ 식량정책관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5.6명(현원 대비 7.6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61〉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간척지농업과	22,820	11	12.2	1.2
농가소득안정추진단	16,606	8	8.9	0.9
농업기반과	26,342	13	14.1	1.1
식량산업과	25,734	12	13.8	1.8
식량정책과	30,759	14	16.5	2.5
<b>합계</b>	<b>122,261</b>	<b>58</b>	<b>65.6</b>	<b>7.6</b>

□ 국제협력국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3.1명(현원 대비 7.1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62〉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검역정책과	24,127	11	12.9	1.9
국제협력총괄과	34,050	15	18.3	3.3
농업통상과	17,738	9	9.5	0.5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23,100	11	12.4	1.4
<b>합계</b>	<b>99,015</b>	<b>46</b>	<b>53.1</b>	<b>7.1</b>

□ 축산정책국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1.2명(현원 대비 7.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63〉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축산경영과	31,768	15	17.0	2.0
축산정책과	37,928	17	20.3	3.3
축산환경자원과	25,825	12	13.9	1.9
<b>합계</b>	<b>95,521</b>	<b>44</b>	<b>51.2</b>	<b>7.2</b>

□ 방역정책국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5.7명(현원 대비 7.7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64〉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구제역방역과	29,045	13	15.6	2.6
방역정책과	31,078	14	16.7	2.7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4,972	11	13.4	2.4
<b>합계</b>	<b>85,095</b>	<b>38</b>	<b>45.7</b>	<b>7.7</b>

□ 식품산업정책관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1.2명(현원 대비 5.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65〉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수출진흥과	17,332	8	9.3	1.3
식품산업진흥과	15,902	8	8.5	0.5
식품산업정책과	29,646	14	15.9	1.9
외식산업진흥과	16,538	8	8.9	0.9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16,068	8	8.6	0.6
<b>합계</b>	<b>95,486</b>	<b>46</b>	<b>51.2</b>	<b>5.2</b>

- 유통소비정책관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7.2명(현원 대비 8.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66〉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14,321	7	7.7	0.7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4,855	12	13.3	1.3
원예경영과	27,218	13	14.6	1.6
원예산업과	26,838	12	14.4	2.4
유통정책과	32,103	15	17.2	2.2
<b>합계</b>	<b>125,335</b>	<b>59</b>	<b>67.2</b>	<b>8.2</b>

- 농업생명정책관의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9.4명(현원 대비 9.4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67〉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과학기술정책과	23,266	11	12.5	1.5
농기자재정책팀	15,035	7	8.1	1.1
농산업정책과	27,583	13	14.8	1.8
동물복지정책과	19,972	9	10.7	1.7
종자생명산업과	19,604	9	10.5	1.5
친환경농업과	23,872	11	12.8	1.8
<b>합계</b>	<b>129,332</b>	<b>60</b>	<b>69.4</b>	<b>9.4</b>

## 나) 종합 분석 결과

- 투입된 업무량 대비 표준근로시간에 기준한 인력산정 결과, 539.5명(현원 대비 68.5명 부족)으로 나타남
  - 표준근로시간 대비 투입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현원 유지 시 표준근로시간 기준 68.5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함
  - 국 단위 9개 부서별 필요 인력은 최소 5.2명 ~ 최대 9.4명의 편차가 존재함

〈표 3-68〉 투입 업무량 기준 적정인력 산정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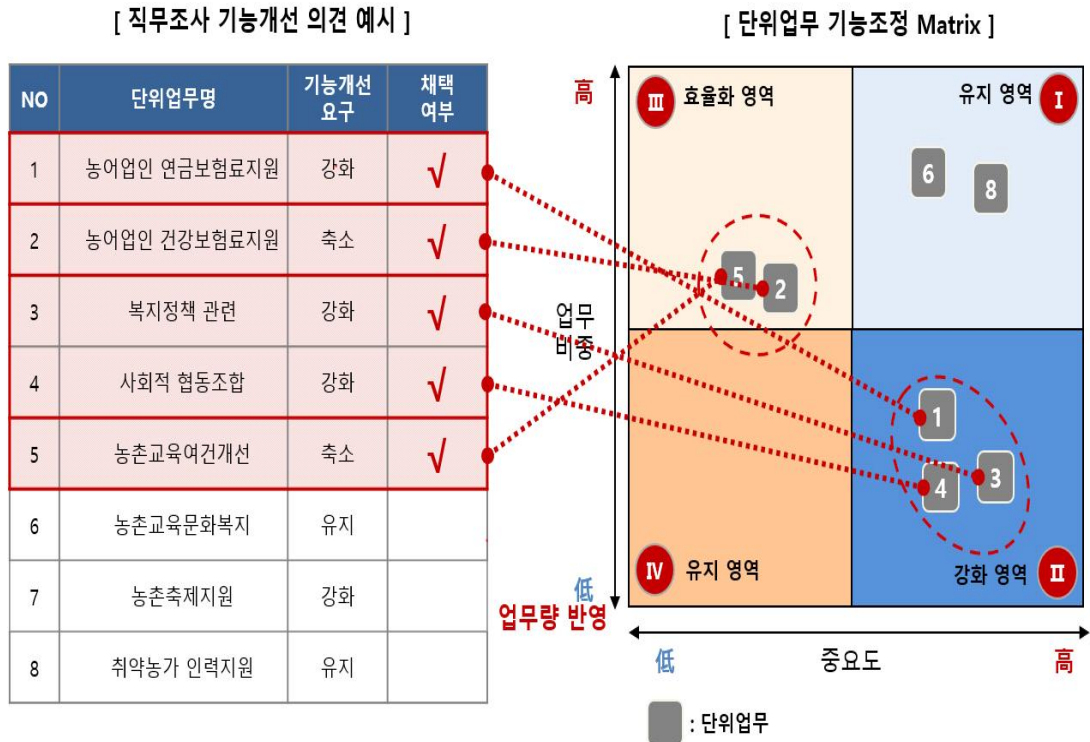
부서	추정근로시간(H)	현원(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인원(명)
농촌정책국	125,905	60	67.5	7.5
농업정책국	127,765	60	68.5	8.5
식량정책관	122,261	58	65.6	7.6
국제협력국	99,015	46	53.1	7.1
축산정책국	95,521	44	51.2	7.2
방역정책국	85,095	38	45.7	7.7
식품산업정책관	95,486	46	51.2	5.2
유통소비정책관	125,335	59	67.2	8.2
농업생명정책관	129,332	60	69.4	9.4
<b>총 합계</b>	<b>1,005,715</b>	<b>471</b>	<b>539.5</b>	<b>68.5</b>

-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 2) 표준근로시간 : 1,864(H)

## (2) 2-1안 기능동태성 반영 적정인력 산정\_기능조정

- 직무조사에서 응답한 기능개선 의견과 단위업무 기능조정 Matrix 영역을 검토하여 일치하는 경우 기능 조정의 요구를 채택하여 기능 조정 및 업무량에 반영함

<그림 3-10>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 \* 기능개선 의견 중 유지는 현재 업무 변동성이 낮고 업무 적절성(현업 의견) 전제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업무량을 반영하여 일치성 검토에서 제외함
- \* 강화 기재된 업무에 대한 일치성 검토 결과 일치되는 업무는 여유율 최대 8%를 가산하며, 불일치 경우 4%를 가산

## 가.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결과

### 가) 농촌정책국

□ 농촌정책국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32.6%,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31.6%,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15.5%로 나타남

〈표 3-69〉 농촌정책국 기능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I (유지)	농촌정책과	11.8%	173.9%	32.6%
	지역개발과	7.5%		
	농촌사회복지과	24.1%		
	농촌산업과	16.6%		
	농촌여성정책팀	39.1%		
	농촌재생에너지팀	4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31.6%		
II (강화)	농촌정책과	44.4%	168.8%	31.6%
	지역개발과	49.3%		
	농촌사회복지과	-		
	농촌산업과	31.0%		
	농촌여성정책팀	31.7%		
	농촌재생에너지팀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12.4%		
III (효율화*)	농촌정책과	-	82.6%	15.5%
	지역개발과	-		
	농촌사회복지과	31.7%		
	농촌산업과	-		
	농촌여성정책팀	5.0%		
	농촌재생에너지팀	28.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17.3%		
IV (유지)	농촌정책과	10.6%	108.6%	20.3%
	지역개발과	19.4%		
	농촌사회복지과	13.0%		
	농촌산업과	22.0%		
	농촌여성정책팀	22.4%		
	농촌재생에너지팀	17.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3.5%		

\* 효율화 영역의 업무 중 필수적 기능은 중요도가 낮아도 유지로 간주 필요하여 중요도 下 & 업무 비중 5% 이하 업무는 현업 직접 응답값과 비교하여 유지 영역으로 분석(이하 관련 표 동일)



## 나) 농업정책국

□ 농업정책국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19.3%,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38.9%,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7.7%로 나타남

〈표 3-70〉 농업정책국 기능 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I (유지)	농업정책과	-	80.2%	19.3%
	농지과	25.4%		
	경영인력과	-		
	농업금융정책과	20.5%		
	재해보험정책과	34.3%		
II (강화)	농업정책과	24.5%	161.8%	38.9%
	농지과	27.9%		
	경영인력과	59.8%		
	농업금융정책과	45.4%		
	재해보험정책과	4.2%		
III (효율화)	농업정책과	14.1%	31.9%	7.7%
	농지과	-		
	경영인력과	-		
	농업금융정책과	-		
	재해보험정책과	17.8%		
IV (유지)	농업정책과	42.0%	142.1%	34.2%
	농지과	27.5%		
	경영인력과	23.3%		
	농업금융정책과	18.5%		
	재해보험정책과	30.8%		

## 다) 식량정책관

□ 식량정책관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24.3%,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53.6%,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0%로 나타남

〈표 3-71〉 식량정책관 기능 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I (유지)	식량정책과	30.4%	90.0%	24.3%
	식량산업과	11.6%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0.1%		
	농업기반과	4.8%		
	간척지농업과	13.1%		
II (강화)	식량정책과	25.2%	198.3%	53.6%
	식량산업과	62.5%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2.4%		
	농업기반과	20.8%		
	간척지농업과	57.4%		

Ⅲ (효율화)	식량정책과	-	0.0%	0.0%
	식량산업과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농업기반과	-		
	간척지농업과	-		
Ⅳ (유지)	식량정책과	12.3%	81.7%	22.1%
	식량산업과	18.5%		
	농가소득안정추진단	6.6%		
	농업기반과	41.6%		
	간척지농업과	2.7%		

## 라) 국제협력국

□ 국제협력국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36.8%,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32.5%,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7.3%로 나타남

〈표 3-72〉 국제협력국 기능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Ⅰ (유지)	국제협력총괄과	5.7%	123.9%	36.8%
	농업통상과	40.3%		
	검역정책과	25.0%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52.9%		
Ⅱ (강화)	국제협력총괄과	41.7%	109.5%	32.5%
	농업통상과	14.7%		
	검역정책과	35.2%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17.9%		
Ⅲ (효율화)	국제협력총괄과	5.6%	24.5%	7.3%
	농업통상과	5.0%		
	검역정책과	1.8%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12.1%		
Ⅳ (유지)	국제협력총괄과	19.5%	79.1%	23.5%
	농업통상과	28.0%		
	검역정책과	30.4%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1.2%		

### 마) 축산정책국

□ 축산정책국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21.1%,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52.7%,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0%로 나타남

〈표 3-73〉 축산정책국 기능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I (유지)	축산정책과	12.2%	55.0%	21.1%
	축산경영과	11.3%		
	축산환경자원과	31.5%		
II (강화)	축산정책과	63.0%	137.3%	52.7%
	축산경영과	32.6%		
	축산환경자원과	41.7%		
III (효율화)	축산정책과	-	0.0%	0.0%
	축산경영과	-		
	축산환경자원과	-		
IV (유지)	축산정책과	2.7%	68.2%	26.2%
	축산경영과	39.8%		
	축산환경자원과	25.7%		

### 바) 방역정책국

□ 방역정책국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24.9%,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24.3%,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2.7%로 나타남

〈표 3-74〉 방역정책국 기능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I (유지)	방역정책과	-	53.4%	24.9%
	구제역방역과	18.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35.2%		
II (강화)	방역정책과	-	52.0%	24.3%
	구제역방역과	16.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35.6%		
III (효율화)	방역정책과	5.7%	5.7%	2.7%
	구제역방역과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		
IV (유지)	방역정책과	60.0%	103.1%	48.1%
	구제역방역과	28.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14.7%		

### 사) 식품산업정책관

□ 식품산업정책관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26.2%,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33.4%,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4.6%로 나타남

〈표 3-75〉 식품산업정책관 기능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I (유지)	식품산업정책과	16.1%	104.4%	26.2%
	식품산업진흥과	20.0%		
	외식산업진흥과	31.7%		
	수출진흥과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36.6%		
II (강화)	식품산업정책과	16.5%	132.7%	33.4%
	식품산업진흥과	34.3%		
	외식산업진흥과	9.0%		
	수출진흥과	49.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23.6%		
III (효율화)	식품산업정책과	-	18.5%	4.6%
	식품산업진흥과	-		
	외식산업진흥과	18.5%		
	수출진흥과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IV (유지)	식품산업정책과	27.0%	142.3%	35.8%
	식품산업진흥과	22.2%		
	외식산업진흥과	32.1%		
	수출진흥과	45.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15.6%		

### 아) 유통소비정책관

□ 유통소비정책관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16.8%,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54.9%,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0%로 나타남

〈표 3-76〉 유통소비정책관 기능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I (유지)	유통정책과	-	73.9%	16.8%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43.4%		
	원예산업과	11.5%		
	원예경영과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19.0%		
II (강화)	유통정책과	52.6%	241.3%	54.9%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7.0%		
	원예산업과	48.9%		
	원예경영과	50.4%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62.4%		

Ⅲ (효율화)	유통정책과	-	0.0%	0.0%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원예산업과	-		
	원예경영과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Ⅳ (유지)	유통정책과	21.3%	124.5%	28.3%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7.9%		
	원예산업과	29.0%		
	원예경영과	33.2%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13.1%		

### 자) 농업생명정책관

□ 농업생명정책관은 유지(중요도가 높고 비중도 높음) 19.4%, 강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45.9%, 효율화(중요도가 높고 비중은 낮음) 1.2%로 나타남

<표 3-77> 농업생명정책관 기능조정 영역 분포

영역	부서명	업무 비중	비중 합	백분위 환산
Ⅰ (유지)	농산업정책과	13.9%	102.4%	19.4%
	과학기술정책과	15.5%		
	친환경농업과	16.7%		
	종자생명산업과	14.5%		
	동물복지정책과	36.0%		
	농기자재정책팀	5.8%		
Ⅱ (강화)	농산업정책과	33.8%	242.0%	45.9%
	과학기술정책과	73.3%		
	친환경농업과	38.3%		
	종자생명산업과	52.5%		
	동물복지정책과	6.8%		
	농기자재정책팀	37.3%		
Ⅲ (효율화)	농산업정책과	-	6.3%	1.2%
	과학기술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종자생명산업과	-		
	동물복지정책과	-		
	농기자재정책팀	6.3%		
Ⅳ (유지)	농산업정책과	43.7%	176.3%	33.5%
	과학기술정책과	4.7%		
	친환경농업과	39.2%		
	종자생명산업과	20.3%		
	동물복지정책과	38.1%		
	농기자재정책팀	30.3%		

## 나. 일치성 분석 결과

### 가) 과 단위 일치성 분석 결과

#### (가) 농촌정책국

〈표 3-78〉 농촌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삶의질 향상 특별법 운용	유지	강화	1.7%	-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유지	강화	1.7%	-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유지	강화	1.7%	-
산림청 지도감독, 산불재난실무매뉴얼운영	유지	강화	2.8%	-
농촌개발연구	유지	효율화	0.2%	-
농촌개발관련법령협의	유지	효율화	0.4%	-
농촌개발 국제협력	유지	효율화	1.3%	-
농업회의소 관련 법령 제개정	유지	강화	3.3%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연구	유지	효율화	0.4%	-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등 법령 운영	유지	강화	4.3%	-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운용	유지	강화	3.3%	-
농어촌공사 지도감독	유지	강화	2.8%	-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유지	효율화	3.3%	-
농민단체 지원	유지	강화	4.1%	-
농민단체 관리	유지	유지	5.9%	-
농민단체 관련 정부포상	유지	효율화	3.3%	-
농민단체 관련 기타 업무사항	유지	효율화	1.7%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유지	강화	0.9%	-
깨끗한농촌만들기	유지	강화	1.7%	-
농식품 중장기 대책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	유지	유지	5.9%	-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강화	강화	0.9%	10.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강화	강화	1.7%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영	강화	강화	0.9%	
농업회의소 설치, 관리 및 지원	강화	강화	1.7%	
농어촌 서비스기준 및 협의회 구성운영	강화	강화	1.7%	
농촌형 교통모델서비스 지원	강화	강화	3.3%	

〈표 3-79〉 지역개발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한계농지 정비	유지	효율화	0.3%	-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	유지	효율화	1.6%	-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	유지	강화	1.1%	-
농촌지역개발계획	유지	강화	3.5%	-
농촌주택개량	유지	강화	2.3%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개발·보급	유지	효율화	0.9%	-
농촌유희시설 활용	유지	효율화	2.5%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유지	유지	7.5%	-
농촌마을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영	유지	효율화	1.1%	-
농촌경관사진공모전 추진	유지	효율화	2.1%	-
농촌건축대전 및 농촌계획대전 추진	유지	효율화	1.1%	-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 및 관리	유지	효율화	1.1%	-
농촌 지역개발인력 역량강화	유지	강화	1.1%	-
농촌 경관개선 위한 업무 추진	유지	효율화	0.8%	-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추진	유지	효율화	0.9%	-
농어촌개발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자격 관리	유지	효율화	1.1%	-
연계협력사업 추진	축소	일치	0.6%	0.8%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폐지	일치	0.1%	
전원마을 제도정비	폐지	일치	0.1%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강화	강화	2.9%	46.4%
포괄보조	강화	강화	2.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강화	강화	2.6%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강화	강화	3.0%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강화	강화	1.0%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운영	강화	강화	1.1%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강화	강화	3.5%	
시군역량강화사업	강화	강화	1.6%	
생활SOC사업 추진	강화	강화	2.7%	
농촌협약 제도 추진	강화	강화	4.5%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강화	강화	3.1%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모델 발굴 및 확산	강화	강화	1.0%	
농촌빈집정비	강화	강화	3.5%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 운영 관리	강화	강화	2.2%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 관련 제도 정비	강화	강화	2.6%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	강화	강화	3.0%	
경관보전직불제시행	강화	강화	3.0%	
365생활권 구축	강화	강화	2.7%	

〈표 3-80〉 농촌사회복지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	유지	유지	8.5%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	유지	유지	7.8%
복지정책 관련	유지	강화	7.8%
사회적 협동조합	유지	강화	7.1%
농촌교육여건개선	유지	강화	6.6%
농촌교육문화복지	유지	강화	6.5%
농촌축제지원	유지	강화	6.5%
취약농가 인력지원	유지	강화	5.0%
미세먼지 저감	유지	강화	4.3%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유지	유지	3.5%
대학생 학자금 융자	유지	유지	3.0%
농촌문화체험기	유지	효율화	2.2%

〈표 3-81〉 농촌산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특구지정 및 특례법	유지	강화	1.1%	-
지역특화사업(지구, 네트워크)비 예산편성 및 집행	유지	효율화	1.6%	-
위원회 운영	유지	효율화	1.1%	-
외국인 농촌관광 운영 및 활성화	유지	강화	2.8%	-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유지	효율화	4.7%	-
도농교류법 관리	유지	효율화	2.3%	-
농촌활력정착지원	유지	효율화	2.3%	-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및 관리	유지	강화	2.6%	-
농촌융복합산업법 관리	유지	강화	4.1%	-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및 관리	유지	강화	2.2%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유지	강화	2.1%	-
농공단지조성 사업관리	유지	효율화	1.2%	-
관광농원조성	유지	효율화	3.0%	-
농외소득법 관리	유지	강화	2.8%	-
지역특화사업(지구, 네트워크) 제도개선	강화	강화	4.7%	11.3%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강화	강화	4.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운영	강화	강화	2.0%	
농촌관광 활성화	강화	유지	7.8%	-
농어촌민박	강화	유지	8.8%	-
농공단지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강화	강화	4.1%	4.1%
향토산업육성 사업관리	축소	일치	1.2%	3.7%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관리	축소	일치	1.2%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축소	일치	1.3%	



〈표 3-82〉 농촌여성정책팀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 성평등 교육 확대	강화	강화	2.5%	2.5%
농업인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강화	유지	8.3%	-
농촌 보육여건 개선	강화	유지	9.1%	-
농촌분야 성평등 인력육성	강화	강화	3.3%	7.5%
농촌분야 양성평등 교육확대	강화	강화	4.2%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강화	유지	5.0%	-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	유지	5.9%	-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	강화	강화	2.5%	22.7%
여성농업인 단체와 협력 및 지원	강화	강화	4.2%	
여성농업인 모성권 보호	강화	강화	1.7%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조성	강화	강화	2.6%	
여성농업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	강화	4.2%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연구 및 평가	강화	강화	2.5%	
여성농업인 정책패널 운영	강화	강화	2.5%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강화	강화	2.5%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	강화	유지	9.1%	-
일 생활 양립지원	강화	강화	2.5%	2.5%
결혼이민여성 교육 및 역량강화	유지	강화	2.5%	-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	유지	강화	3.3%	-
성별영향평가 계획수립 및 추진	유지	강화	3.3%	-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	강화	효율화	0.7%	-
여성농업인육성법 운영	유지	유지	6.7%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유지	효율화	1.5%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강화	효율화	1.7%	-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	유지	효율화	1.7%	-
여성농업인육성 자문회의 운영	유지	강화	4.2%	-

〈표 3-83〉 농촌재생에너지팀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국내외 태양광 사업 정보 수집 및 분석	유지	효율화	3.2%	-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국제협력	유지	효율화	2.7%	-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	유지	효율화	6.0%	-
농업농촌 자발적온실가스 감축사업	유지	효율화	5.6%	-
농업인(주민) 참여형 태양광 추진	유지	효율화	5.0%	-
농촌지역 바이오매스 개발 및 이용	유지	효율화	2.6%	-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통계	유지	효율화	7.0%	-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유지	유지	7.1%	-
배출권거래제 및 외부사업	유지	효율화	4.4%	-
수상태양광 관련 농어촌공사 지도감독 및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유지	유지	7.7%	-
식품목재업종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유지	효율화	5.0%	-
영농형 태양광 확산	유지	유지	5.6%	-
온실가스 감축 및 통계에 관한사항	유지	효율화	1.7%	-
컨설팅 등 농업인 지원 체계마련	유지	효율화	3.1%	-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강화	유지	6.1%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및 실태조사	강화	유지	5.5%	-
농촌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강화	강화	5.0%	5.0%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강화	유지	6.2%	-

〈표 3-8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건축온실분야 자문위원회 운영	유지	강화	2.0%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원	유지	유지	16.6%	-
농업체험관건립사업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4.0%	-
농촌공동체 활성화 총괄	유지	효율화	5.1%	-
농촌공동체활성화(농촌재능나눔)	유지	효율화	6.1%	-
농촌재능나눔/집고쳐주기사업	유지	효율화	6.1%	-
박물관 설립근거관련 법안 마련	유지	유지	5.1%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원	유지	효율화	3.5%	-
체험관 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2.0%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관리	강화	강화	4.4%	4.4%
농촌다원적 자원활용 및 농업유산제도 운용	강화	강화	9.9%	-

## (나) 농업정책국

〈표 3-85〉 농업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BH, 통준위, 통일부 등 대화 협력	강화	강화	0.9%	0.9%
EU 등 선진국 정책동향 시사점 발굴	유지	효율화	1.5%	-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관리	유지	효율화	1.1%	-
FTA직접피해보전제도 운영	유지	효율화	7.1%	-
FTA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유지	강화	1.0%	-
FTA대채 성과 및 투·용자 보고서	강화	강화	1.0%	3%
FTA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강화	강화	1.0%	-
FTA이행지원센터 운영관리	강화	강화	1.0%	-
FTA기금 운용규정 제·개정	유지	효율화	1.0%	-
FTA기금 집행 및 결산	유지	효율화	0.9%	-
FTA기금의 운용·관리	유지	강화	1.5%	1.10%
FTA 대책 성과 및 투·용자 보고서	유지	강화	1.1%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강화	강화	1.1%	-
WTO이행보고서 작성	유지	효율화	2.4%	-
개도국 지위 관련 대응 및 대책 수립	유지	효율화	1.5%	-
국가민간 자격증	유지	효율화	1.4%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지원 운영	강화	효율화	0.6%	-
남측협력관련 대외협력 및 자료조사	강화	효율화	0.9%	-
농·단위소득정책제도 추진방안수립(중장기적불개평안 포함)	유지	효율화	1.3%	-
농식품 일자리 정책 기획(일자리위원회 등 대응)	강화	효율화	1.0%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업무	유지	효율화	1.6%	-
농어촌 상생이금 업무	유지	효율화	2.0%	-
농업 혁신 및 신규정책개발	유지	효율화	1.6%	-
농업박람회 평가결과보고 및 정산	유지	효율화	0.7%	-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수립	유지	효율화	1.6%	-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기념식장 조성 및 운영)	유지	효율화	1.5%	1.0%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추진계획 수립	유지	강화	0.6%	-
농업인의 날 정부 포상	강화	강화	1.0%	-
농정 지역담당관 운영	강화	효율화	0.4%	-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유지	효율화	2.4%	-
민간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및 농림축산물 교역 지원	강화	강화	1.0%	1.0%
북한농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획 총괄	강화	효율화	1.6%	-
산업별 고용동향 분석	유지	효율화	1.6%	-
시도 농정국장회의 추진	유지	효율화	0.7%	-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6%	-
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등록관리 업무	유지	효율화	0.7%	-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 위원회운영	유지	효율화	0.9%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업인등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유지	효율화	1.6%	-
정책연구개발사업 감사·검수 및 예산 집행	유지	효율화	1.6%	-

정책연구개발사업 기획	강화	강화	1.9%	1.9%
정책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유지	효율화	1.9%	-
정책연구개발사업(프리즘) 관리	유지	효율화	1.1%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선정)	유지	강화	2.3%	-
중장기농가소득관련정책개발및농가 소득 통계 분석	강화	효율화	4.6%	-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유지	효율화	7.0%	-
청년정책 업무 수립 및 추진	강화	효율화	1.4%	-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	강화	강화	1.2%	1.2
행사결과 보고 및 정산	유지	효율화	0.4%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계획수립 및 TF 운영	강화	강화	1.6%	3.7%
전시행사관 조성 및 대표 홈페이지 운영	강화	강화	2.1%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이관	일치	1.1%	1.1%

<표 3-86> 농지와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유지	강화	2.7%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유지	효율화	4.6%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유지	유지	6.4%
농지 관련 세제 검토	유지	효율화	1.0%
농지 관련 통계 관리	유지	효율화	2.7%
농지개량제도 운영	유지	효율화	4.9%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유지	유지	6.3%
농지법령 운용	유지	강화	3.0%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운영	유지	유지	6.3%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관리	유지	효율화	3.1%
농지불법전용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지	효율화	2.7%
농지소유 및 사후관리제도 운영	강화	효율화	1.0%
농지연금 제도 운영	유지	강화	3.6%
농지원부 제도 운영	강화	강화	3.6%
농지은행 제도 운용	강화	강화	4.6%
농지은행사업 홍보	강화	강화	1.8%
농지은행제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유지	강화	4.6%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이용증진사업	유지	효율화	0.9%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강화	1.0%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운영	유지	유지	6.4%
농지제도 개선 및 홍보	유지	효율화	1.0%
농지종합정보화 추진	유지	효율화	1.8%
농지처분제도 운영	유지	강화	2.0%
농지취득인정	유지	효율화	1.0%
농촌지형정보체계구축	유지	효율화	1.8%
농촌행정시스템 운영	유지	효율화	2.0%

〈표 3-87〉 경영인력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 운영	유지	효율화	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운영	유지	효율화	1.4%	
귀농·귀촌 관련 정부 및 지자체 협의체 운영	유지	효율화	0.4%	
귀농·귀촌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운영	유지	효율화	1.7%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4%	
귀농·귀촌 종합센터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8%	
귀농·귀촌 창업 등에 관한 교육운영	강화	효율화	0.5%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5%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유지	효율화	1.0%	
귀농인의 집 조성	유지	효율화	1.1%	
농고·농대 등 예비농업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9%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2.0%	
농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4%	
농업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5%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2.4%	
농업교육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8%	
농업농촌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0%	
농업농촌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강화	효율화	3.4%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운영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2.2%	
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 및 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5%	
농업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3.4%	
농업법인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2.4%	
농업법인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2.9%	
농업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등 추천	유지	강화	1.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9%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2.8%	
농업분야 최저임금 대책 수립 및 홍보	유지	강화	1.0%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운영 지원	유지	강화	1.7%	
농업인력육성 및 수급대책 수립 등	유지	강화	3.9%	
농업회계장부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1%	1.1%
귀농인의 집, 마을단위 융화교육	강화	효율화	1.1%	-
비영리법인 허가 및 관리업무	유지	효율화	0.5%	-
신지식농업인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0%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0%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8%	3.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사항	유지	효율화	0.5%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및 훈령 등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0%	-
한국 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계획 및 평가	유지	강화	1.0%	-
한국-뉴질랜드 FTA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0%	-
현장실습교육장 및 첨단공동실습장 등 전문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9%	-
후계농 및 청년농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5%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0%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2.4%	-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강화	강화	4.0%	15.4%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8%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4.5%	
농촌인력중개사업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4.1%	

〈표 3-88〉 농업금융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유지	유지	15.1%	-
농협법 제·개정	유지	유지	5.4%	-
농업관련조세관리	유지	강화	4.8%	-
조합 지도·감독	유지	강화	3.9%	-
농협중앙회 지도,감독	유지	강화	3.8%	-
농협 상호금융	유지	강화	3.8%	-
협동조합 개혁	유지	강화	3.2%	-
농협 신용사업	유지	강화	3.2%	-
농식품모태펀드 운영	유지	강화	2.2%	-
농업금융제도 개선	유지	강화	2.0%	-
농협 구조개선법령 등 제,개정 및 운용	유지	강화	1.9%	-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유지	강화	1.7%	-
농업협동조합 건전육성	유지	강화	1.7%	-
중앙회 규정 제·개정사항	유지	강화	1.7%	-
협동조합 구조개선 추진	유지	강화	1.7%	-
농업정책자금 검사실적 관리	유지	강화	1.7%	-
농업종합자금 지원제도 운용	유지	강화	1.4%	-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제도 운용	유지	강화	1.4%	-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 예산출연	유지	강화	1.3%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운용	유지	강화	1.2%	-
농식품투자조합법 제·개정 및 운용	유지	강화	1.0%	-
협동조합 정관례 제 개정 및 운용	유지	강화	0.8%	-
농어업인 부채경감법 제·개정	유지	강화	0.7%	-
농협 일반업무	유지	효율화	4.7%	-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제도관련	유지	효율화	2.0%	-
농협 검사청구 업무	유지	효율화	1.7%	-
농림수산 정책자금대손보전제도 운용	유지	효율화	1.7%	-
정부 포상 관련 업무	유지	효율화	1.6%	-
농협 금융지주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1.2%	-
조합공동사업법인 업무	유지	효율화	0.9%	-
협동조합 설립인가	유지	효율화	0.8%	-
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유지	효율화	0.8%	-
협동조합 합병 인가	유지	효율화	0.8%	-
정책자금대출업무관련 규정운용	유지	효율화	0.3%	-
농업용전기요금관리	이관	일치	1.7%	2.0%
농특회계사업 용자 운영 지원	이관	일치	0.3%	

〈표 3-89〉 재해보험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강화	유지	7.9%	-
손해평가사 자격 운용 및 제도 총괄	강화	유지	7.2%	-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사업관리	강화	유지	7.0%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	강화	유지	6.1%	-
농업재해 상황관리 및 복구지원	강화	강화	4.2%	4.2%
농업재해대책 및 보험정책 기획	강화	효율화	7.4%	-
농작물재해보험 교육·홍보, 손해평가 관리, 통계관리	강화	효율화	5.0%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용	강화	효율화	4.3%	-
가축재해보험 사업 운용	강화	효율화	4.2%	-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	강화	효율화	3.9%	-
농업기상상황 입수 및 전파	강화	효율화	3.6%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운용	강화	효율화	3.5%	-
농업재해대책 관련 일반업무 추진	강화	효율화	3.1%	-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 추진	강화	효율화	3.1%	-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	강화	효율화	1.3%	-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강화	효율화	0.7%	-
가축재해보험 교육·홍보	유지	효율화	0.7%	-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	유지	효율화	0.7%	-
가축재해보험 통계관리	유지	효율화	1.7%	-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의 운용	강화	유지	6.1%	-
농업재해 관련 법령운용 및 제도개선	강화	유지	5.4%	-

(다) 식량정책관

<표 3-90> 식량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WTO/DDA, FTA, APTERR, IGC 등 쌀 관련 국제업무	유지	효율화	0.4%	-
공공비축제도 시행	유지	강화	3.5%	-
국제곡물관측	유지	효율화	0.9%	-
대북 식량지원	유지	효율화	0.9%	-
북한농산물(쌀 포함) 반입 및 귀속농산물 인수 등	유지	효율화	0.9%	-
산지쌀값조사관리	유지	강화	4.8%	-
소비자 시판용 양곡(수입밥쌀) 판매 관리	유지	효율화	1.2%	-
시장접근물량(증량) 양허관세 추천업무	유지	효율화	1.2%	-
시장접근물량수입추천사후관리	유지	효율화	0.9%	-
쌀 관세화 후속 대응	유지	효율화	0.9%	-
양곡(미곡)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	유지	효율화	0.9%	-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예산 집행 및 결산	유지	유지	5.2%	-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예산편성	유지	유지	5.1%	-
양곡류(쌀, 밀, 대두, 옥수수) 해외시장조사 분석	유지	효율화	0.9%	-
양곡표시제 운영 및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유지	효율화	0.9%	-
전시 양곡수급 및 총무계획 수립	유지	강화	1.6%	-
정부관리양곡 구매추진	유지	강화	1.6%	-
정부관리양곡 매입·보관·매출	유지	유지	9.5%	-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및 안전 품질관리	유지	효율화	2.3%	-
APTERR를 활용한 해외 원조	강화	유지	1.6%	-
FAC/WFP를 통한 식량 원조	강화	유지	1.6%	-
수입 쌀 관리방안	강화	강화	2.0%	1.8%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강화	강화	1.6%	
식량정책 및 양곡 수급계획	강화	유지	5.3%	-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강화	유지	5.3%	-
쌀시장 안정대책	강화	강화	3.4%	3.4%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유지	1.6%	-
해외곡물 유통망 구축	강화	강화	1.9%	1.9%



〈표 3-91〉 식량산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콩, 옥수수 수매(약정)	유지	강화	2.2%	-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평가	유지	강화	1.9%	-
양곡류(쌀 제외) 관세 운용	유지	효율화	3.7%	-
쌀 전업농 자조금 교육 지원	유지	효율화	0.4%	-
쌀 의무자조금 설치 지원	유지	효율화	0.5%	-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8%	4.6%
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정책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8%	
식물병해충예방및방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0%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4%	-
쌀 식량작물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4.4%	4.4%
방제 대상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강화	효율화	1.0%	-
밀 산업 육성법 운용	강화	효율화	1.9%	-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유지	강화	4.0%	-
두류생산·유통등산업육성에관한사항	유지	강화	4.1%	-
농산시책 평가 및 식량분야 보상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9%	-
논 타작물 단지화 구축 지원	유지	강화	3.3%	-
쌀가공산업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 운용	강화	강화	3.6%	3.6%
쌀 적정생산 수립	강화	효율화	1.5%	-
쌀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5.5%	-
쌀 생산조정제 추진	강화	강화	4.9%	7.2%
쌀 및 쌀 활용 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3%	
쌀 가공 관련 R&D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2.3%	-
식물방역법령 중 방제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2.0%	-
식량작물선도경영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강화	효율화	0.6%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강화	강화	4.0%	4.0%
서류 생산 및 유통	강화	유지	6.1%	-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4%	-
벼 영농추진상황 관리	강화	강화	1.9%	1.9%
쌀 식량작물 수매 및 민간 수매지원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3.6%	-
쌀 식량작물 발전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6%	11.2%
맥류생산및유통등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6%	
기타쌀식량작물(서류,맥류,두류 제외) 육성 관련 사항	강화	강화	4.0%	
교육·컨설팅업체인증제에관한사항	강화	효율화	0.5%	-
공동농업경영체관리에관한사항	강화	효율화	0.5%	-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강화	효율화	4.4%	-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0%	2.0%

〈표 3-92〉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지	효율화	2.1%	-
선택형 공익직불제(논활용직불제) 사업추진	유지	효율화	2.1%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법령 및 관련 고시 등 규정 개정 및 운용	유지	효율화	8.9%	-
논활용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1.5%	-
기본형 공익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유지	강화	1.6%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추진	유지	강화	4.7%	-
공익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총괄	유지	강화	0.4%	-
공익직불제 관리기관 지도·감독	유지	강화	3.3%	-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 등 상담 및 처리	유지	강화	7.4%	-
공익직불제 관련 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협의	유지	강화	2.1%	-
공익직불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유지	강화	2.1%	-
공익직불기금 등 직불제 관련 예산 심의, 운용, 결산	유지	강화	2.1%	-
경영이양직불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1.5%	-
경영이양직불 사업추진	유지	강화	1.5%	-
직불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강화	유지	7.4%	-
지자체및유관기관담당자교육	강화	유지	6.4%	-
이행점검 전담관리기관 지정·운영	강화	강화	3.1%	16.1%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및 운영	강화	강화	3.7%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제도 운영 및 개선	강화	강화	3.7%	
공익직불제 사업추진 총괄	강화	강화	2.5%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강화	강화	3.1%	

〈표 3-93〉 농업기반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4대강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 대책	유지	효율화	1.7%	-
가뭄위기대응실무매뉴얼운영	유지	효율화	1.3%	-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강화	강화	2.1%	2.1%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 운영	유지	효율화	1.2%	-
국가물관리 관련 관계기관 협력업무 추진	유지	효율화	1.8%	-
균특회계 농업생산기반 정비	축소	일치	0.8%	0.8%
농어촌정비법 운용	유지	효율화	2.2%	-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유지	효율화	1.2%	-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등 관련 기술업무	유지	효율화	1.2%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이관	유지	강화	1.6%	-
농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관리	유지	효율화	1.6%	-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	강화	강화	5.8%	5.8%

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보완	유지	효율화	0.8%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대책	강화	강화	1.7%	4.3%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진단	강화	강화	0.9%	
농업생산기반시설운영관리	강화	강화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진대책	유지	효율화	0.9%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운용	유지	효율화	0.5%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소송업무	강화	강화	0.8%	0.8%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괄업무	유지	강화	1.8%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 작성 운영	유지	효율화	0.8%	-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운용	유지	강화	1.2%	-
농업용호소수질측정망운영	유지	효율화	1.2%	-
재해예방 계측 관리	유지	효율화	0.6%	-
저수지 붕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	유지	효율화	0.5%	-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 입지제한	유지	효율화	1.2%	-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유지	효율화	0.8%	-
지역별강수량·저수율모니터링	유지	효율화	1.2%	-
지진발생상황모니터링및대응	유지	효율화	0.8%	-
지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용	유지	효율화	0.5%	-
총사업비관리지침 운용	유지	효율화	0.8%	-
통합물관리 관련 농업용수 이용합리화계획 수립·조정	유지	강화	1.2%	-
한발대비 용수개발	유지	효율화	1.3%	-
환경부·농식품부합동수질관리협의회 운영	유지	효율화	1.2%	-
환지대행법안및환지사자격시험제도 운영 및 관리	유지	효율화	1.6%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소	일치	0.9%	-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	강화	효율화	1.2%	-
관계부처 합동 가뭄 종합대책 수립(매년)	강화	효율화	1.3%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총사업비심의위원회운영	강화	효율화	1.7%	-
농업용 지하수자원 관리	강화	효율화	0.8%	-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	강화	강화	1.9%	1.9%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강화	효율화	1.6%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유지	강화	3.3%	-
저수지 주변지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추진	강화	효율화	0.9%	-
저수지 준설	강화	효율화	0.5%	-

〈표 3-94〉 간척지농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일치성	비중	일치성 비율
	의견	분석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유지	유지	1.0%	-
용지매수보상 세목고시	유지	유지	0.9%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유지	강화	1.9%	-
간척지 활용·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유지	강화	3.5%	-
농학계 대학 등 시험·연구·교육·훈련사업 관리	유지	강화	0.6%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및실시계획협의,양도양수	유지	강화	1.1%	-
농지조성사업으로조성된재산의관리·처분	유지	강화	5.8%	-
대단위사업 관련 소송 수행	유지	강화	1.7%	-
대단위사업 관련 환지인가	유지	강화	0.6%	-
사업준공전 간척지 임시사용 등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7%	-
영산강 농업특화단지 관리	유지	강화	0.7%	-
대단위 농업개발 공정추진 및 정산	유지	강화	1.0%	-
대단위농업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인가, 변경, 준공	유지	강화	1.8%	-
간척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	유지	강화	1.8%	-
간척사업 총사업비 조정	유지	강화	1.8%	-
간척사업 추진	유지	강화	0.9%	-
수해피해 복구계획수립 및 복구추진	유지	강화	1.0%	-
여름철 재해대책계획 수립 및 추진	유지	강화	0.1%	-
우기대비 수리시설 안전점검계획수립 및 추진	유지	강화	0.1%	-
우기대비 중점관리계획수립 및 추진	유지	강화	0.1%	-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유지	강화	0.1%	-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추진	유지	강화	2.1%	-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관련 업무(양도양수)	유지	강화	1.5%	-
새만금 공유수면 환경 및 수질관리 등	유지	강화	1.9%	-
새만금 관련 민원	유지	강화	0.6%	-
새만금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유지	강화	1.2%	-
농지범용화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강화	강화	1.0%	1.0%
새만금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	유지	강화	1.0%	-
새만금 농업용수 확보대책	유지	강화	2.8%	-
새만금 방조제 및 배수갑문 관리 운영	유지	강화	0.5%	-
새만금 사업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등 추진	유지	강화	1.0%	-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 및 대외협력 추진	유지	강화	2.1%	-
새만금 준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유지	강화	2.8%	-
새만금 준공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유지	강화	1.4%	-
새만금개발공사 대외협력 및 현물출자 관련 사항 등	유지	강화	1.2%	-
새만금사업 관련 대외협력 및 건의사항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4.3%	-
새만금사업 관련 소송 업무 추진	유지	강화	0.8%	-
새만금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협의	유지	강화	3.8%	-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 수립	유지	강화	1.9%	-
새만금위원회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2%	-
새만금특별법 운용	유지	강화	0.6%	-
농지범용화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유지	강화	1.0%	-
배수개선사업 계속 및 준공지구 시행계획변경 협의	유지	강화	1.0%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유지	강화	1.0%	-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신규착수지구 선정	유지	강화	1.0%	-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를 위한 적정성검토	유지	강화	1.0%	-
삼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등 3지구 사업추진	강화	강화	2.6%	2.6%

(라) 국제협력국

<표 3-95> 국제협력총괄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운영	강화	유지	5.7%
협력위원회 운용	유지	강화	3.7%
협력 협정 체결	유지	강화	2.9%
신남방신북방업무총괄	유지	강화	2.8%
해외농업자원개발 협력법 운용	유지	강화	2.7%
FAO 총회, 이사회 및 소속위원회 관련업무	유지	강화	2.5%
FAO와의연락·협력업무총괄	유지	강화	2.3%
IFAD, AARDO, WB 등 국제농업기구의 총회, 집행이사회 등 농업분야 관련업무	유지	강화	2.1%
ASEAN+3 농림장관회의	유지	강화	1.7%
국제기구 연계 식량원조 사업	유지	강화	1.6%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유지	강화	1.5%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농업협력	유지	강화	1.5%
한-아세안 농업협력	유지	강화	1.5%
외국과의 장관급 회의	유지	강화	1.5%
긴급 통상현안 조정	유지	강화	1.5%
해외인턴십사업	유지	강화	1.4%
주요 인사 면담	유지	강화	1.4%
정례통상협의체 대응	유지	강화	1.4%
농업정보수집 및 활용	유지	강화	1.4%
외국과의 실무회의	유지	강화	1.1%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유지	강화	1.1%
외국 주최 행사 참가	유지	강화	1.1%
WFP 등 식량원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유지	강화	0.9%
해외투자	유지	강화	0.8%
외국투자유치	유지	강화	0.8%
식량원조위원회(FAC) 대응	유지	강화	0.5%
국제농업협력 사업(기획협력)	유지	효율화	5.6%
국제농업협력 사업(국제기구 협력)	유지	효율화	4.9%
해외농업자원개발 심의회 운영	유지	효율화	2.8%
해외농업개발사업 신고, 접수 승인	유지	효율화	2.7%
국제교류협력일반	유지	효율화	1.5%
협력사업 이행 및 평가	유지	효율화	1.5%
국제농업협력 사업(컨설팅)	유지	효율화	1.5%
FAO 등 국제농업기구의 농업관련자료 및 동향분석, 전파	유지	효율화	1.2%
FAO 등 국제농업기구 관련 행사개최 및 관련 국제단체 지원	유지	효율화	1.0%
해외주재 농무관 업무지도	유지	효율화	0.9%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사업 발굴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협조	유지	효율화	0.7%
국제농업관련 단체업무 지도	유지	효율화	0.8%

〈표 3-96〉 농업통상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5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유지	유지	12.2%	-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업위원회 및 산하직업반 논의 대응	유지	유지	9.4%	-
쌀관세화 관련 후속조치 이행(신규)	유지	유지	7.0%	-
WTO/DDA농산물협3	유지	유지	6.1%	-
G20정3회의및농업장관회의대응	유지	유지	5.6%	-
WTO 무역정책 검토	유지	강화	3.3%	-
WTO 농산물 보조분야 통보	강화	강화	3.3%	3.3%
WTO 농산물시장접근분야 통보	유지	강화	3.3%	-
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이행	유지	강화	2.6%	-
WTO 농산물보조금분야 이행	강화	강화	2.2%	2.2%
APEC및기타국제기구대응	유지	효율화	5.0%	-
농산물관세제도 및 탄력관세 관리	유지	효율화	4.5%	-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정개혁방향과 국내정책과의 조화유도	유지	효율화	2.2%	-
아태무역협정(APTA) 대응	유지	효율화	2.1%	-
일반특혜관세 공여	유지	효율화	2.1%	-
WTO 농산물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유지	효율화	1.9%	-
WTO 통일원산지 협3	유지	효율화	1.9%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대응	유지	효율화	1.9%	-
WTO 국영무역 등 기타분야 통보	유지	효율화	1.3%	-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농업정책 점검과 평가 대응	유지	효율화	1.1%	-
WTO서비스협정대응	유지	효율화	1.1%	-
WTO정부조달협정대응	유지	효율화	0.9%	-
WTO/DDA비농산물협3	유지	효율화	0.8%	-
WTO/DDA기타분야협3	유지	효율화	0.8%	-
WTO 기타분야 이행	유지	효율화	0.8%	-
WTO 분쟁해결기구(DSB) 대응	유지	효율화	0.8%	-
WTO 정부조달협정위원회 대응	유지	효율화	0.8%	-
WTO 신규가입국 협3	유지	효율화	0.6%	-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영 관리	유지	효율화	1.2%	-
북한산 농산물 교역	유지	효율화	0.4%	-
WTO 무역개발위원회(CTD) 대응	유지	효율화	0.4%	-
WTO 지적재산권위원회(TRIPs) 대응	유지	효율화	0.4%	-

〈표 3-97〉 검역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SOFA동·식물검역 업무	유지	효율화	1.1%	-
SPS 국제동향 조사 연구위원 관리	유지	효율화	2.0%	-
WTO/SPS,WTO/TBT협정관련업무	강화	강화	4.1%	4.1%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출검역) 및 수출위생(검역)조건 등 제개정	유지	효율화	1.2%	-
가축전염병예방법(수입검역) 운용	유지	강화	2.4%	-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 작성	유지	효율화	2.0%	-
검역통계 및 해외정보 분석 업무	유지	효율화	1.8%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지도·관리	유지	효율화	1.6%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관련협력	유지	효율화	1.1%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련 총괄	강화	강화	4.0%	4.0%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 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0.6%	-
농림축산업용LMO의환경방출모니터링및환경영향조사	유지	효율화	3.4%	-
동·축산물 국경검역 관련 업무	유지	유지	6.0%	-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강화	강화	4.1%	4.1%
동물 및 축산물 수출 검역 지원	유지	효율화	0.9%	-
동물검역 관련 연구·개발 및 기타 업무	유지	효율화	0.9%	-
동축산물 수입검역 및 통상 업무	유지	유지	7.8%	-
세계동물기구(OIE) 관련 협력	유지	효율화	2.1%	-
수입위생조건 등 고시 운영	유지	효율화	3.3%	-
수출동물및축산물검역업무	유지	유지	6.0%	-
수출입식물 국경검역	유지	효율화	2.0%	-
수출입식물 국제검역협력	강화	강화	4.5%	4.5%
수출입식물 병해충위험분석	유지	효율화	1.3%	-
식물검역관련 중요정책 기본계획 수립	유지	강화	1.9%	-
식물방역법령의 운용	유지	강화	3.2%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용	유지	효율화	1.1%	-
해외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유지	효율화	0.9%	-
해외 검역 및 위생동향 전파	유지	효율화	1.1%	-
LMO 안전관리체계구축	강화	효율화	3.2%	-
LMO의국·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	강화	효율화	1.1%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관리(추가)	강화	효율화	1.1%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관리	강화	효율화	0.6%	-
수출 검역·통상 관련 업무	유지	강화	2.9%	-
식물검역제도 수립	유지	강화	3.6%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책 추진	강화	효율화	0.5%	-

〈표 3-98〉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상품협력등농업관련협상진행	유지	유지	14.4%	-
FTA 영향분석	유지	유지	7.4%	-
FTA 관련 부서·부처간 협조	유지	유지	6.6%	-
FTA추진 관리·협상대응계획 및 결과 보고	유지	유지	6.4%	-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전략수립	유지	유지	6.4%	-
해외동향·시장조사	유지	유지	6.0%	-
SPS/TBT 협상	유지	유지	5.7%	-
원산지 협상	유지	강화	2.9%	-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협상	강화	강화	3.3%	15.1%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부서간 협조	강화	강화	2.6%	
FTA협상지원시스템 구축·관리	강화	강화	2.3%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정보 수집 관리	강화	강화	2.6%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전략 수립	강화	강화	2.5%	
FTA 이행위원회 참석 대응	강화	강화	1.8%	
FTA관련정보수집-관리연구업무	유지	효율화	6.5%	-
수출입 등 관련 통계 자료 관리	유지	효율화	5.6%	-
FTA관련 교육·홍보	유지	효율화	1.2%	-



(마) 축산정책국

<표 3-99> 축산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경마 시행 및 건전화	유지	강화	1.9%	-
농장전문관리업 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1%	3.1%
도축가공시설 설치 · 운영지원	유지	강화	0.4%	-
도축산업 육성지원 및 도축장 구조조정	유지	효율화	0.5%	-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유지	강화	1.8%	-
말산업 육성 지원	유지	강화	2.4%	-
말산업육성법 제개정 및 운용	유지	강화	1.2%	-
무허가 축사 관리	유지	강화	3.1%	-
장단기축산사업목표수립	유지	강화	0.1%	-
장단기축산정책자금지원목표수립	유지	강화	0.8%	-
전통소싸움 경기 허가 및 개최계획 승인	유지	효율화	0.9%	-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운용	유지	효율화	0.6%	-
중장기 축산발전대책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유지	강화	4.7%	-
중장기 축산발전대책 집행 및 점검, 조정	유지	강화	0.8%	-
축산물등급제도 운용	강화	강화	2.5%	2.5%
축산발전기금대손보전관리	유지	강화	0.7%	-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수립	유지	강화	3.6%	-
축산발전기금지원관리	유지	강화	3.6%	-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관리	유지	강화	1.3%	-
축산법 개정	유지	유지	6.1%	-
축산분야 WTO,FTA 협상대비 국내대책 마련	유지	강화	1.3%	-
축산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운영	강화	강화	1.9%	1.9%
축산사업심사분석평가관리	유지	강화	0.1%	-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추진	유지	강화	3.0%	-
축산업 허가/등록제 정책방향 수립	유지	강화	3.0%	-
축산업 허가/등록제 추진상황 지도점검	유지	강화	2.4%	-
축산자조금법 제도운용	유지	강화	2.6%	-
축산정책 주요현안 기획 및 조정	유지	강화	2.6%	-
축산정책자금지원	유지	강화	0.7%	-
한국마사회 지도 · 감독	유지	강화	1.9%	-
한국마사회법 제개정 및 운용	유지	강화	1.6%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강화	효율화	0.7%	-
축산관계 법령 준수사항 통합 점검관리	강화	유지	6.1%	-
축산물유통대책수립	강화	강화	4.7%	6.0%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 및 지도 · 감독	강화	강화	1.3%	
축산발전기금지산운용관리	강화	효율화	0.7%	-
축산발전기금 재산관리	강화	효율화	2.4%	-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총괄	강화	효율화	0.5%	-

〈표 3-100〉 축산경영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DNA동일성검사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2.0%
ICT 융복합 축사 지원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2.3%
가금 산업 육성·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1.9%
가축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체계 관리	유지	강화	2.0%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유지	효율화	1.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2.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홍보·교육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2.0%
가축개량 관련 법인 단체 지도 감독	유지	효율화	0.4%
가축개량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1.7%
가축경산대회, 축산브랜딩등축산분야행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1.4%
계란GP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0.8%
기타가축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1.1%
낙농진흥법 관리 운용	유지	효율화	1.5%
낙농·유가공·육우·양육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1.6%
닭·오리·계란수출입에관한사항	유지	효율화	1.7%
돼지고기 수출입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0.1%
소 및 쇠고기 수출입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0.9%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관한 업무	유지		0.9%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2.3%
양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1.5%
양봉 관련 수출입 관리	유지	효율화	0.9%
양봉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1.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유지	효율화	1.1%
유제품 수출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4%
이력제 관련 법인 단체 지도 감독	유지	효율화	0.7%
종축개량목표설정및발전계획수립·추진 업무	유지	강화	0.9%
종축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6%
종축업, 정액처리업, 부화업제도관리에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0.9%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2.3%
축산계열화 육성 지원 및 평가에 대한 업무	유지	효율화	0.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운용	유지	효율화	1.9%
축산농가 재해관리에 대한 업무	유지	효율화	0.9%
축산물 FTA에 관한 업무 총괄	유지	효율화	0.7%
축산물 가격조사에 관한 업무	유지	유지	5.1%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2.3%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업무	유지	유지	6.2%
축산물 수급조정협의회 운영 업무	유지	효율화	3.4%
축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총괄	유지	효율화	1.4%
축산물이력관리제정보관리및전산시스템 운영	유지	강화	2.0%
축산물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4.0%
축산물브랜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1.0%
축산분야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0.7%
축산식품산업, 식육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0.3%
축종별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4.9%
학교, 군 등 단체 우유급식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1.5%
한우, 양돈, 가금, 낙농육우 및 양육 등 가축 관련 법인 단체 지도 감독	유지	효율화	3.7%
한우, 육우, 양돈, 가금류, 우유(원유), 유제품 수급관리 및 관측 에 관한 업무	유지	효율화	1.3%
한우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유지	강화	1.7%

〈표 3-101〉 축산환경자원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친환경축산 교육·홍보사업	유지	효율화	2.4%	-
가축분뇨 관련 법령의 운용	유지	강화	2.6%	-
가축분뇨 처리·이용 대책 수립	유지	강화	1.8%	-
가축분뇨 통계관리	유지	효율화	0.2%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유지	유지	6.5%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유지	유지	7.2%	-
사료공장 HACCP 운용	유지	효율화	1.4%	-
사료원료 할당, 양허관세 운용	유지	효율화	1.4%	-
양분관리제 및 경축순환농업 종합대책 수립	유지	효율화	2.5%	-
축산분야 미세먼지 대응	유지	효율화	1.9%	-
축산환경 관련 R&D 연구	유지	효율화	0.9%	-
축산환경 컨설팅,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유지	강화	2.6%	-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	유지	효율화	3.1%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및 관리	유지	효율화	2.6%	-
「초지법」 운용 및 개정	유지	강화	4.9%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등 자원화조직체 육성	유지	효율화	1.9%	-
가축분뇨처리 표준설계 및 관련기술 평가	유지	효율화	0.9%	-
사료시험검사기관 운용	유지	효율화	0.9%	-
산지생태축산 교육·홍보사업	유지	효율화	1.9%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유지	효율화	2.4%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유지	효율화	3.7%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유지	유지	8.9%	-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 관리	유지	효율화	4.5%	-
축산환경 정책기획	유지	효율화	4.1%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유지	효율화	1.5%	-
퇴비 부숙도 등 퇴액비 품질관리	유지	강화	2.5%	-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유지	효율화	0.2%	-
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	강화	4.2%	12.8%
사료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업무	강화	강화	3.7%	
사료관리법령 운용 및 제도개선	강화	강화	4.9%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강화	유지	8.9%	-

(바) 방역정책과

<표 3-102> 방역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 개정·운동	유지	효율화	5.7%	-
방역 교육홍보 기획	유지	효율화	4.4%	-
시도 가축방역사업 집행 및 결산	유지	효율화	4.1%	-
방역분야연구개발	유지	효율화	3.7%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3.7%	-
가축방역 사업평가 및 포상	유지	효율화	3.0%	-
표준진료제	강화	효율화	2.6%	-
가축방역사업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유지	효율화	2.6%	-
가축방역사업 운용 지도 및 제도개선	유지	효율화	2.3%	-
동물보건사	유지	효율화	2.3%	-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운용	유지	효율화	2.2%	-
중단기 방역발전기본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2.1%	-
수의사법령 개정	유지	효율화	2.1%	-
방역분야 주요업무계획수립	유지	효율화	2.0%	-
방역분야국정과제	유지	효율화	1.9%	-
시도가축방역사업시행지침관리·운동	유지	효율화	1.9%	-
가축전염병관리대책수립	유지	효율화	1.6%	-
방역분야남북협력사업	유지	효율화	1.6%	-
수의사법	유지	효율화	1.6%	-
방역분야의 제도개선·규제완화	유지	효율화	1.5%	-
가축방역 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시행	유지	효율화	1.3%	-
방역분야조직·인력관리	유지	효율화	1.2%	-
가축방역심의회운동	유지	효율화	1.2%	-
타 법령에 의한 방역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유지	효율화	1.2%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업무	유지	효율화	1.2%	-
동물위생시험소법 관련 업무	유지	효율화	1.1%	-
공중방역수의사법	유지	효율화	1.1%	-
방역상황관리(가축질병상황실운영,범부처영상회의준비)업무	유지	효율화	1.1%	-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개정	유지	효율화	0.9%	-
가축방역협의회	유지	효율화	0.9%	-
대한수의사회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0.8%	-
위기관리 매뉴얼 운동	유지	효율화	0.8%	-

〈표 3-103〉 구제역방역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중앙점검반운영	유지	효율화	0.3%	-
중가축(돼지,사슴,양등)방역대책	유지	효율화	1.2%	-
중가축 농장 위생관리	유지	효율화	0.2%	-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돼지열병 관련 고시 등 규정 운영	유지	효율화	0.9%	-
살처분 보상금 예산 집행 및 운용	유지	강화	2.5%	-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 전반	유지	효율화	2.5%	-
살처분 매몰비 지원	유지	효율화	2.5%	-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지원	유지	효율화	1.3%	-
방역시설 지원 사업 추진(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유지	효율화	2.5%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운영	유지	효율화	0.3%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운영	유지	효율화	0.3%	-
대가축 농장 위생관리	유지	효율화	0.9%	-
국내 대가축(소, 말 등) 방역대책 수립·추진	유지	효율화	3.4%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운용	유지	효율화	0.7%	-
구제역백신국산화를위해백신제조시설 구축사업 지원	유지	효율화	2.2%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 운용	유지	효율화	0.9%	-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 추진	유지	강화	4.3%	-
가축방역 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시행	유지	효율화	2.4%	-
AI 백신 개발 및 국내 제조회사 관리 업무	유지	효율화	0.4%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운용	유지	효율화	0.7%	-
질병관리 등급제 운영	유지	강화	1.8%	-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사슴·성소·양·말 등 방역대책 추진	강화	유지	12.3%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혈청예찰 및 환경부 협의	강화	강화	4.0%	4.0%
소독관리 전반	강화	유지	5.2%	-
돼지농장 울타리 등 방역시설 개보수	유지	유지	1.3%	-
구제역·AI 백신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	강화	강화	2.2%	4.7%
구제역·AI백신대책수립·운영	강화	강화	2.5%	

〈표 3-104〉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AI 방역대책 수립·추진	유지	유지	10.0%	-
축산차량 통제 및 관리	강화	유지	7.8%	-
KAHIS 등 가축방역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강화	유지	6.3%	-
AI 긴급행동지침(SOP) 운용	유지	유지	5.6%	-
통제초소관리운영	유지	유지	5.5%	-
AI 방역실시요령 등 규정 운용	유지	강화	4.7%	-
축사체처리지원사업	강화	강화	4.7%	12.7%
동물용의약품산업지원	강화	강화	4.3%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규운영	강화	강화	3.7%	
소가축 질병 방역	유지	강화	3.7%	-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	강화	강화	3.4%	14.5%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 운영	강화	강화	3.1%	
가축살처분인력및매몰지사후관리	강화	강화	3.0%	
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	강화	강화	3.0%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	강화	강화	2.0%	
꿀벌질병방역	유지	효율화	3.4%	-
AI 비상훈련(CPX) 추진	유지	효율화	2.9%	-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유지	효율화	2.3%	-
동물용의약품 항생제 내성관리	유지	효율화	2.0%	-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 지원	유지	효율화	1.5%	-
축 질병 치료 보험	유지	효율화	1.5%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 기준령 개정	유지	효율화	1.1%	-

(사) 식품산업정책과

<표 3-105> 식품산업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CODEX 등 국제식품규격 대응	유지	효율화	1.2%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 운영	유지	효율화	1.2%	-
가공식품KS 표준	유지	효율화	1.2%	-
국내외 식품 시장동향 및 현황조사	유지	강화	1.9%	-
농식품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사업추진	유지	효율화	0.8%	-
대한민국식품대전 행사 추진	유지	효율화	1.2%	-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	유지	효율화	2.0%	-
식품,외식분야 물가 관리	유지	효율화	3.9%	-
식품관련 제도 및 규제개혁	유지	강화	0.1%	-
식품기술개발(R&D)및지원업무	유지	유지	8.7%	-
식품산업 교육, 훈련 지원 업무	유지	효율화	0.9%	-
식품산업 통계, 정보분석 및 제공	유지	효율화	1.6%	-
식품산업관련 국정과제·공약·정책평가	유지	강화	2.5%	-
식품산업정책관실연구용역	유지	효율화	2.2%	-
식품산업진흥법령 운용	유지	강화	2.3%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운영	유지	효율화	1.9%	-
식품외식일자리업무	유지	효율화	1.1%	-
식품외식전망대회 추진	유지	효율화	0.9%	-
식품의 FTA, WTO/DDA 협상 대응	유지	효율화	3.7%	-
식품표준화 사업	유지	효율화	1.2%	-
푸드 테크스타트업 등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유지	효율화	2.2%	-
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유지	강화	3.2%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유지	7.4%	-
산학연연계식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6%	2.6%

〈표 3-106〉 식품산업진흥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통합성과관리 등 평가 관리	유지	효율화	1.9%	-
중소식품기업육성사업관련예·결산	유지	효율화	2.7%	-
주류관련 법제 정비 및 규제개선	유지	강화	4.3%	-
정책실명제(전통발효식품육성)	유지	효율화	0.2%	-
전통주산업 육성지원	유지	유지	5.6%	-
전통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유지	강화	2.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운용	유지	강화	3.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유지	강화	4.3%	-
전통주 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유지	효율화	0.7%	-
전통식품품질인증	유지	효율화	0.6%	-
전통식품산업 육성 지원	유지	강화	2.5%	-
전통식품명인지정	유지	강화	1.2%	-
전통식품Codex규격화추진(소기능:식품의	유지	효율화	0.2%	-
우수문화상품 발굴육성	유지	효율화	0.6%	-
식품산업진흥 관련 기획	유지	강화	3.7%	-
식품기업 컨설팅 지원	유지	효율화	2.6%	-
식품 제도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유지	효율화	1.2%	-
술 품질인증 등 고급화 지원	유지	강화	1.1%	-
설탕할당관세 운영	유지	효율화	1.5%	-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	유지	효율화	1.2%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	유지	효율화	3.8%	-
김치산업진흥법 운용	유지	효율화	2.5%	-
김치산업육성지원	유지	효율화	2.5%	-
전통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강화	강화	1.2%	10.8%
식품외식종합자금 운용	강화	강화	2.8%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강화	강화	4.9%	
식품명인 발굴 및 육성	강화	강화	1.9%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유지	6.9%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강화	유지	7.5%	-



〈표 3-107〉 외식산업진흥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7.2%	-
한식진흥법 및 하위법령, 고시 등 제·개정, 운용 등	유지	효율화	6.4%	-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예산,결산	유지	효율화	6.1%	-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유지	6.0%	-
외식업체 육성 및 창업 지원	강화	효율화	6.0%	-
한식정책 기본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4.5%	-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보급	강화	강화	4.5%	4.5%
해외 확산 지원	강화	유지	7.0%	-
외식물가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	유지	효율화	5.8%	-
푸드페스타&캠페인	강화	유지	5.7%	-
외식분야 식재료 산업 육성 및 유통개선	유지	효율화	4.6%	-
외식업체 해외진출 지원	강화	유지	4.6%	-
한식 행사	강화	유지	3.8%	-
외식산업관련 조사·연구·통계·정보화	강화	유지	3.7%	-
외식산업진흥법령 운용	유지	효율화	3.7%	-
한식진흥원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3.4%	-
한식 정보분석 및 콘텐츠 확산	유지	효율화	3.0%	-
한식문화관 운영	유지	효율화	2.4%	-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유지	효율화	1.7%	-
한식 및 외식관련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1.2%	-

〈표 3-108〉 수출진흥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K-FOOD FAIR 개최	강화	효율화	2.5%	-
국가별소비자체험행사추진	유지	효율화	1.5%	-
기타 신시장 진출업체 시장개척 지원	유지	효율화	0.6%	-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유지	효율화	0.6%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강화	강화	3.1%	4.1%
농식품 수출통계 및 동향 분석	강화	강화	1.0%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파견 및 운영	유지	효율화	1.3%	-
농식품해외시장진출정보분석	유지	효율화	1.0%	-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육성사업	유지	효율화	1.3%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가공식품 안전관리 대응 지원	유지	효율화	0.8%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적용 대응	유지	효율화	1.0%	-
미디어마케팅	유지	효율화	2.1%	-
미래클K-Food프로젝트	강화	강화	0.6%	0.6%
민간 기업(업체·바이어)대상 공모사업	유지	효율화	3.8%	-
수출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유지	효율화	2.5%	-
수출농식품 현지화·상품화·재외공관 연계사업	유지	효율화	2.5%	-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유지	효율화	6.0%	-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및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강화	2.3%	12.9%
수출전문조직 육성	강화	강화	2.5%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강화	강화	3.5%	
주요 수출국별·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강화	강화	4.6%	
프론티어 업체 지원	유지	효율화	1.3%	-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유지	효율화	2.5%	-
해외정보조사, 해외비관세장벽조사 및 검토	유지	효율화	1.1%	-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운영	유지	효율화	1.3%	-
해외안테나숍 운영 및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사업	유지	효율화	3.8%	-
해외인증·수출보험·통관지원, 수출물류비 및 공동항공물류지원, 수출전문인력 육성	유지	효율화	1.3%	-
국내외농식품홍보관 운영	유지	강화	2.1%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활성화 지원	유지	강화	2.0%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강화	강화	4.6%	4.6%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사업(용자),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강화	효율화	2.3%	-
농식품수출대책수립	강화	강화	2.3%	2.3%
민관협력 특화사업추진	강화	효율화	3.8%	-
수출 관련 R&D 지원	강화	강화	1.3%	1.3%
수출 선도조직 및 협의회 육성	강화	효율화	2.3%	-
수출물류비지원	강화	강화	3.8%	8.3%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수출 효율화 방안 마련	강화	강화	4.5%	
지자체 공동마케팅 추진	유지	강화	3.5%	-
해외박람회 및 바이어거래알선 사업	유지	강화	3.8%	-
해외식품인증 지원	유지	강화	1.3%	-

〈표 3-109〉 국가클러스터추진팀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가정편의식(HMR) 기술지원센터 구축	유지	유지	5.7%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세부사업계획수립	유지	유지	6.4%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 세부계획	유지	강화	4.1%	-
국가식품클러스터종합계획수립	유지	강화	3.2%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관계기관 회의	유지	강화	4.9%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유지	강화	2.9%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유지	유지	6.8%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회 운영·관리	유지	효율화	3.4%	-
국내외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유지	효율화	2.3%	-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유지	강화	4.3%	-
기능성식품제형센터구축	유지	유지	6.3%	-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기반구축	유지	유지	5.1%	-
산업단지 입주환경 조성	유지	효율화	1.5%	-
산업단지 조성,관리	유지	효율화	2.9%	-
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계획수립	유지	효율화	1.5%	-
식품벤처센터 운영,관리	유지	효율화	2.9%	-
청년식품창업Lab 운영,관리	유지	강화	4.2%	-
청년식품창업허브구축	유지	유지	6.3%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운영 및 관리	폐지	일치	1.1%	1.1%

(아) 유통정책과

<표 3-110> 유통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농수산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용	유지	강화	1.3%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운용	유지	효율화	0.1%	-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유지	효율화	0.7%	-
국가인증지원사업	유지	효율화	1.3%	-
기금의 집행관리 및 결산	유지	강화	2.0%	-
농산물 공동선별 조직 지원	유지	강화	1.6%	-
농산물 공정거래 관련	유지	효율화	0.5%	-
농산물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관리	유지	강화	0.4%	-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유지	효율화	0.4%	-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유지	효율화	0.4%	-
농산물 유통정책 기획 및 조정	유지	강화	3.7%	-
농산물등급품위별표준코드및RFID정립	유지	효율화	0.1%	-
농산물물류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유지	효율화	0.3%	-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유지	효율화	0.5%	-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사후관리	유지	효율화	0.3%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운용	유지	강화	3.3%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법률 운용	유지	효율화	2.7%	-
농식품국가인증제도홍보	유지	효율화	1.3%	-
농식품유통교육 운영 등	유지	강화	1.2%	-
농안기금운용계획수립	유지	강화	2.3%	-
농안기금편성및운용,결산,평가,재산관리	강화	강화	2.7%	2.7%
도매시장 평가	유지	효율화	2.3%	-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유지	효율화	2.3%	-
도매유통활성화사업	유지	강화	3.9%	-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대응	유지	효율화	0.6%	-
물류기기공동이용	유지	효율화	1.1%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	유지	강화	1.2%	-
발작물(채소·특작류) 경쟁력 제고 방안	유지	효율화	0.7%	-
비축기지 광역화 현대화사업	유지	강화	0.1%	-
비축기지 운영 관리	유지	효율화	0.7%	-
비축사업 예산운용	유지	효율화	1.3%	-
사업시행 및 운영평가	유지	강화	0.7%	-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수립	유지	강화	1.5%	-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및 관리	유지	강화	2.0%	-
산지유통조직 선정·지원 및 평가	유지	효율화	1.7%	-
산지유통종합자금 운용	유지	효율화	1.3%	-
수확후관리기술표준매뉴얼작성	유지	효율화	0.1%	-
시군유통회사	유지	효율화	0.4%	-
업무보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제 관리	유지	강화	2.7%	-
업무보고서 작성 및 추진실적 제출	유지	강화	2.1%	-
원산지표시제도 정책 수립	유지	효율화	2.7%	-
원예농산물 산지조직화 정책	유지	효율화	2.0%	-
원예농산물자조금정책	유지	효율화	1.7%	-
원예농산물 주산지 제도	유지	효율화	0.9%	-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사후관리	유지	효율화	0.3%	-
원예산업 종합계획 선정 및 평가	유지	강화	1.6%	-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유지	효율화	0.3%	-
유통공사 지도·감독	유지	강화	1.4%	-
유통교육기관 교육실시	유지	효율화	0.3%	-
유통교육기관 선정	유지	효율화	0.3%	-
유통구조개선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 소비촉진	유지	효율화	0.7%	-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FTA 업무	유지	효율화	0.3%	-
자조금지원	강화	강화	1.5%	1.5%
정부비축사업 평가	유지	효율화	0.1%	-
지리적표시 등록 관리	유지	효율화	1.3%	-
지리적표시제도 운영	유지	강화	1.3%	-
채소류 최저가격 제도	유지	효율화	1.1%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강화	강화	2.3%	2.3%

〈표 3-111〉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GAP 추진, 제도개선	유지	유지	8.8%	
소비자정책수립	유지	강화	4.6%	
식생활지침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유지	강화	4.5%	
지역먹거리종합전략(지역푸드플랜)구축 지원	유지	효율화	2.9%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유지	효율화	2.5%	
농산물품질관리법 운용	유지	효율화	2.5%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유지	강화	2.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유지	효율화	2.1%	
소비자 유통시설 지원	유지	강화	0.8%	
농식품 소비정보조사	유지	효율화	4.1%	
공공급식로컬푸드공급선도 모델 발굴	유지	효율화	3.8%	
로컬푸드 급식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운영	유지	효율화	2.9%	
급식산업 육성 사업 발굴 운영	유지	효율화	2.5%	
국가·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교육·홍보	유지	효율화	2.5%	
지역먹거리종합전략(지역푸드플랜)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유지	효율화	2.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및 관리	유지	효율화	1.7%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육성	유지	강화	1.6%	
소비자유통활성화	유지	효율화	0.8%	
직거래 매취자금	유지	효율화	0.8%	
식생활교육지원법 운용	유지	효율화	0.8%	
급식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유지	효율화	1.3%	
공공급식관련법률	유지	효율화	1.3%	
농식품바우처 운영관리	강화	유지	9.2%	-
농산물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운영	강화	유지	7.9%	-
식생활교육 및 홍보	강화	유지	6.2%	-
로컬푸드공급체계구축 및 공급 확대	강화	강화	5.9%	15.9%
공공급식 활성화 및 지원	강화	강화	5.4%	
농산물 사이버거래 기반 구축	강화	강화	2.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운용	강화	강화	2.1%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유지	1.7%	-

〈표 3-112〉 원예산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조미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강화	유지	5.8%	-
엽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강화	유지	5.7%	-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강화	강화	4.1%	8.2%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강화	강화	4.1%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유지	강화	2.9%	-
특용작물(차, 버섯, 약용 등) 소비촉진 교육·홍보	유지	강화	2.5%	-
차 산업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	유지	강화	2.5%	-
농업관측 고도화 추진	유지	강화	2.5%	-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특별 대책반 운영	유지	강화	2.5%	-
농산물수급안정 정책 수립	유지	강화	2.5%	-
조미채소류의 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5%	2.5%
농업관측사업 운영 및 전담기관 관리	유지	강화	1.7%	-
품목별 관측월보 및 분기보 제공	유지	강화	1.7%	-
인삼자조금 관리 및 운영	강화	강화	0.3%	0.3%
인삼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7%	-
인삼산업법·제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7%	-
주요농축산물수급·가격동향분석	유지	강화	1.7%	-
조미채소류 TRQ 운용	유지	강화	1.7%	-
조미채소류 자조금 관리·운영	강화	강화	1.7%	5.0%
조미채소류의 수매 및 비축사업 추진	강화	강화	1.7%	
출하조절시설 운영	강화	강화	1.6%	
인삼류 수출입에 관리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2%	-
인삼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2%	-
인삼 통계조사	유지	강화	1.1%	-
차산업법 운영	유지	강화	0.9%	-
농업관측 사업계획 승인	유지	강화	0.8%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유지	강화	0.8%	-
조미채소류 주산지 육성	유지	효율화	0.8%	-
엽근채류 수매비축	유지	효율화	0.5%	-
특용작물(차, 버섯, 약용 등)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산업 육성	유지	효율화	3.4%	-
특용작물(차, 버섯, 약용 등) 산업 통계조사	유지	효율화	2.3%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유지	효율화	2.2%	-
차 관련 지자체 지원 및 상호협력	유지	효율화	1.7%	-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사업 운영	유지	효율화	1.7%	-
특용작물 산업 종합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1.7%	-
버섯류의 수급 및 경영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2%	-
차 산업발전 협의회 운영	유지	효율화	0.9%	-
특작류 사업 추진	유지	효율화	0.9%	-
특용작물 산업 육성	유지	효율화	0.9%	-
기호작물 산업 육성	유지	효율화	0.9%	-
특용작물 TRQ운영	유지	효율화	0.9%	-
특용작물의 수매 및 저장 등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9%	-
조미채소 출하조절시설 지원	축소	일치	0.8%	0.8%
조미채소류 생산, 가공 및 수출입 관리	유지	효율화	0.8%	-
양념채소 일반	유지	효율화	0.8%	-
인삼 소비촉진 교육·홍보	강화	강화	0.7%	0.7%
인삼 특별긴급관세	유지	효율화	0.7%	-
버섯배지류 할당관세 운영	유지	효율화	0.6%	-
엽근채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	강화	강화	1.7%	1.7%
채소류 생산통계 조사 및 관리	유지	효율화	0.3%	-
두채, 녹두채 등 새싹채소 산업육성	유지	효율화	0.2%	-
특용작물(차, 버섯 등) 자조금단체 설립·운영	유지	효율화	1.5%	-
인삼정책실명제	유지	효율화	0.5%	-
약용작물의 수급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3%	-
유지작물의 수급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3%	-
섬유작물 산업 육성	유지	효율화	0.2%	-



〈표 3-113〉 원예경영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과수 재해업무	유지	강화	4.0%	
시설원에 현대화 및 경쟁력 제고 대책	유지	강화	4.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유지	강화	2.7%	
시설원에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유지	강화	2.7%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운영	유지	강화	2.3%	
과수통계	유지	강화	2.3%	
시설원에 수급안정사업	유지	강화	1.5%	
시설원에 재해업무	유지	강화	1.5%	
시설원예자조금	유지	강화	1.5%	
화훼 생산자조직의 육성 및 자조금 지원·관리	유지	강화	1.5%	
화훼류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5%	
화훼류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유지	강화	1.5%	
과실수출	유지	효율화	4.0%	
과수기획	유지	효율화	3.9%	
FTA 대응 및 과수 홍보, 소비촉진	유지	효율화	2.3%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 추진	유지	효율화	2.3%	
과수폐업지원	유지	효율화	2.3%	
시설원에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운영	유지	효율화	2.0%	
화훼농가 및 전문단지 육성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1.7%	
과수일반	유지	효율화	1.5%	
과실브랜드	유지	효율화	1.5%	
시설원에 통계	유지	효율화	0.9%	
시설원예단체관리	유지	효율화	0.9%	
과수경쟁력제고대책 수립·추진	유지	효율화	0.8%	
과원규모화	유지	효율화	0.8%	
화훼류 품종육성 및 보급과 관련한 사항	유지	효율화	0.8%	
화훼의 재해대책 추진	유지	효율화	0.6%	
시설원에 FTA 국내보완대책	유지	효율화	0.5%	
기타 시설원에 정책사업 추진	유지	효율화	0.3%	
화훼 생산 및 유통 등 통계 생산·관리	유지	효율화	0.8%	
화훼 관련 단체 관리	유지	효율화	0.8%	
화훼공판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8%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유지	효율화	0.70%	-
꽃가루생산단지조성	유지	효율화	0.70%	-
화훼류 박람회에 관한 사항	유지	효율화	0.50%	-
화훼 관련 국제행사 업무	유지	효율화	0.30%	-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강화	강화	3.20%	23.40%
지역별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강화	강화	3.10%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 운영	강화	강화	3.10%	
화훼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강화	2.6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60%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생산, 유통, 기타 지원)	강화	강화	2.30%	
과실계약출하지원	강화	강화	2.20%	
과실수급	강화	강화	2.20%	
유통협약·명령	강화	강화	1.20%	
시설채소 수출확대	강화	강화	0.90%	
과실자조금	강화	유지	1.50%	-

〈표 3-114〉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도입 및 운영 관리	유지	유지	7.6%	-
계란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유지	강화	4.3%	-
축산물위생관리 대책수립 및 추진	유지	강화	4.1%	-
농산물안전성조사	유지	강화	3.9%	-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홍보 및 지도	유지	강화	3.7%	-
생산단계농산물안전관리계획수립	유지	강화	3.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업무	유지	강화	3.6%	-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교육홍보	유지	강화	2.7%	-
농산물안전관련협의체대응	유지	강화	2.7%	-
축산물위생제도 운용	유지	강화	1.7%	-
도축검사운영및축산물HACCP지원사업	유지	강화	3.2%	-
도축검사운영사업 및 축산물HACCP지원사업 관련 예산 수립, 집행 관리	유지	강화	3.1%	-
농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	유지	강화	2.7%	-
축산물위생관련소비자협력사업	유지	강화	2.4%	-
농식품안전정보관리	유지	강화	1.9%	-
오염농경지 환경정밀조사	유지	효율화	1.9%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1.7%	-
검사관,검사원,책임수의사에대한지도·감독,교육,인력 양성및운영	유지	효율화	1.7%	-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감시	유지	효율화	1.4%	-
식품위생법 및 국제기준(Codex) 제·개정 대응	유지	효율화	1.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 생산단계 HACCP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1.3%	-
축산물 검사 관련 식품안전일일상황보고	유지	효율화	0.9%	-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 통계 관리	유지	효율화	0.9%	-
안전성 국제동향 파악	유지	효율화	0.7%	-
농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	유지	효율화	0.7%	-
식품안전개선대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유지	효율화	0.6%	-
축산물안전성검사계획수립 및 운용	강화	유지	5.5%	-
HACCP 제도 확대 및 운용	강화	강화	3.2%	18.7%
생산단계 농장, 도축장, 집유장 HACCP 제도 운용	강화	강화	4.4%	
축산물안전관리교육·홍보	강화	강화	4.0%	
도축장, 집유장 HACCP 조사·평가	강화	강화	4.0%	
HACCP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강화	강화	3.1%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도입 관련 업무	강화	유지	5.9%	-

(자) 농업생명정책관

<표 3-115> 농산업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농업생명정책관실주요업무계획수립	유지	강화	3.8%	
농업생명정책관실 법령	유지	강화	3.4%	
규제개혁 및 홍보 관련 업무	유지	강화	3.1%	
농식품분야 혁신성장 추진관련	유지	강화	3.1%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추진	유지	강화	1.4%	
스마트팜관련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관리	유지	효율화	4.7%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운영	유지	효율화	3.7%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유지	효율화	3.6%	
부처 및 부내, 소속기관 협력	유지	효율화	2.9%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 관리	유지	효율화	2.7%	
농식품ICT기자재,통신표준화와관련된 사항	유지	효율화	2.3%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유지	강화	3.1%	
농업생명정책관실 정책연구용역	유지	효율화	1.9%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 및 운영	유지	효율화	1.8%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유지	효율화	1.8%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	효율화	1.7%	
스마트팜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 검토 및 협조	유지	효율화	1.6%	
스마트팜통계및실태조사	유지	효율화	1.6%	
농업생명정책관실 및 스마트팜관련 국제협력	유지	효율화	1.3%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유지	효율화	1.1%	
기술개발사업 선정 및 진도관리	유지	효율화	1.0%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유지	효율화	0.9%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기술평가 지원	유지	효율화	0.5%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강화	유지	7.3%	-
스마트농업대응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강화	유지	6.6%	-
농식품바이오산업대응	강화	강화	4.6%	19.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련 업무	강화	강화	4.4%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	강화	강화	4.1%	
농식품ICT융복합현장지원 정책수립	강화	강화	2.7%	
스마트팜 기자재 수출 및 해외 진출	강화	강화	2.1%	
농식품 전문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강화	강화	0.6%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지원	강화	강화	0.5%	
농식품 ICT 융복합 교육·홍보	강화	유지	3.0%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유지	2.5%	-

〈표 3-116〉 과학기술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일치성	비중	일치성 비율	
	의견	분석			
농식품 R&D 16개 사업 관리	강화	유지	8.4%	-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운영	강화	유지	7.1%	-	
국가연구개발사업	강화	유지	5.3%	-	
국가지식재산	유지	강화	4.9%	-	
도시농업 정책수립 및 시행	강화	강화	3.8%	37.2%	
농림 기술 중장기계획	강화	강화	3.2%		
농림 RD예산(결산,회계,예산)	강화	강화	3.2%		
농림축산식품 r&d정책 및 기획	강화	강화	3.2%		
부처 및 부내, 소속기관 협력	강화	강화	2.9%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대응	강화	강화	2.4%		
연도별 농림과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강화	강화	2.3%		
신기술인증 및 녹색인증 운용	강화	강화	2.3%		
R&D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운영	강화	강화	2.2%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 연구개발사업	강화	강화	2.0%		
농식품부 R&D 사업운영계획 수립	강화	강화	1.9%		
기술제도(훈령,예규,지침)	강화	강화	1.6%		
기술개발사업 선정 및 진도관리	강화	강화	1.4%		
신규사업 기획	강화	강화	1.4%		
R&D 제재조치(부실학회, 복제건 등)	강화	강화	1.3%		
농림기술개발사업 개선	강화	강화	1.1%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기획 및 대응	강화	강화	1.0%		
농식품R&D신규과제기획	강화	강화	1.0%		12.9%
국가 연구개발 운영 규정 개정	강화	강화	1.0%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강화	강화	1.0%		
기술성과 관리	강화	강화	1.0%		
민간·지역 R&D 활성화	강화	강화	0.8%		
산업기술보안	강화	강화	0.4%		
다부처공동기획(사회문제해결과제등) 대응및사업운영	강화	강화	2.7%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행계획수립	강화	강화	2.3%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강화	1.3%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강화	강화	1.4%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관련사항	유지	강화	1.9%	-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관련사항	유지	강화	1.9%	-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운영	유지	효율화	1.0%	-	
도시농업협의회 운영	유지	효율화	1.0%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유지	효율화	1.0%	-	
도시농업 관련단체	유지	효율화	0.9%	-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유지	효율화	0.6%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운용	유지	효율화	1.0%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유지	효율화	1.9%	-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효율화	1.5%	-	
기술제도(법,시행령,시행규칙)	유지	효율화	1.5%	-	

〈표 3-117〉 친환경농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친환경농어업법령 제·개정	유지	유지	6.1%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사업	유지	강화	4.8%	-
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	강화	강화	4.5%	8.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및 관리	강화	강화	4.1%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 및 단체	유지	강화	3.6%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등 국제 업무	유지	강화	3.2%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및 관리	강화	강화	2.4%	2.4%
임산부친환경꾸러미위생및품질관리	유지	효율화	3.7%	-
국정과제 및 성과 평가에 관련한 사항	유지	효율화	2.9%	-
친환경농업직불제이행 관리	유지	강화	2.4%	-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	유지	효율화	2.2%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관리	유지	효율화	1.3%	-
친환경인증기관 관리	유지	효율화	1.8%	-
친환경농업교육훈련지원	유지	효율화	1.1%	-
인증사업자교육운영	유지	효율화	0.9%	-
친환경농업 기초통계 관리	유지	효율화	0.9%	-
친환경농업육성계획추진실적	유지	효율화	0.7%	-
친환경농자재지원	이관	효율화	0.7%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	폐지	일치	0.0%	0.0%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	강화	유지	5.3%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강화	유지	5.3%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유지	강화	4.2%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및 집행관리	강화	효율화	2.7%	-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 및 생산 유통 활성화	유지	강화	2.4%	-
유기·무농약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관리	유지	강화	2.3%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유지	강화	2.3%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유지	강화	1.1%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유지	강화	0.7%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및 관리	강화	효율화	4.1%	-
자조금관리	강화	효율화	3.2%	-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조사	강화	효율화	2.6%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및 쇼핑물 관리	강화	강화	2.4%	2.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운영	강화	효율화	2.3%	-
유기농식품 온라인 거래 지원	강화	효율화	2.3%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	강화	효율화	2.3%	-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관리	강화	효율화	1.4%	-

〈표 3-118〉 종자생명산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 추진	유지	유지	7.4%	-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운용	유지	유지	7.1%	-
민간육종연구단지및종자산업진흥센터지정·운영	유지	강화	4.9%	-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유지	강화	3.9%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유지	강화	3.6%	-
농업생명산업 관련 사업 추진	강화	강화	3.4%	3.4%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유지	강화	2.8%	-
농업생명자원법및하위법령운용및제개정	강화	강화	2.6%	2.6%
양잠산업 육성	유지	강화	2.6%	-
곤충산업육성·지원	강화	강화	2.0%	2.0%
FAO 식량농업유전자원 위원회 대응	유지	효율화	1.8%	-
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농업분야 대응	유지	효율화	1.8%	-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제도운영	유지	효율화	1.8%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운영	유지	효율화	1.7%	-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유지	효율화	1.7%	-
양잠산업육성·지원	유지	효율화	1.5%	-
종자 수출진흥 및 수입	유지	효율화	1.3%	-
국제종자박람회개최 등 종자산업 홍보	유지	효율화	4.9%	-
국립종자원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2.6%	-
종자·육묘 단체 관리 및 지원	유지	효율화	2.0%	-
곤충·양잠관련민간협회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1.9%	-
농업생명자원 관계 기관 관리	유지	효율화	1.6%	-
UPOV 등 국제협력 사항	유지	효율화	1.3%	-
유전자원법에 따른 농업 분야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지원	유지	효율화	1.2%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유지	효율화	1.2%	-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운영	유지	효율화	1.0%	-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 관리 계획 수립	유지	효율화	0.9%	-
농업 분야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 수립	이관	일치	0.9%	0.9%
기능성 양잠 관련 통계	유지	효율화	0.8%	-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	강화	강화	3.7%	11.0%
곤충산업육성	강화	강화	2.5%	
종자생산 및 보급	강화	강화	2.6%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대응	강화	강화	2.2%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유지	강화	2.0%	-
농업 분야 생명공학 육성 계획 수립	유지	강화	1.9%	-
곤충산업 실태조사(연간)	유지	강화	1.0%	-

〈표 3-119〉 동물복지정책과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운용	유지	유지	10.1%	-
동물복지종합계획수립·시행	유지	유지	8.0%	-
동물복지 정책	유지	유지	7.6%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유지	강화	3.9%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등 관리	유지	효율화	3.6%	-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 예·결산 및 집행	유지	효율화	3.1%	-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유지	효율화	2.8%	-
반려동물 관련 자격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1.9%	-
동물보호 단체 및 협회 등의 지도·감독	유지	효율화	2.5%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 및 정기점검	유지	효율화	1.7%	-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유지	5.2%	-
반려동물 산업 관리	강화	유지	5.1%	-
동물등록제 활성화	강화	강화	2.9%	2.9%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강화	효율화	4.9%	-
반려동물 사료 법령 운용	강화	효율화	3.9%	-
사설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	강화	효율화	3.4%	-
반려동물 관련 산업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강화	효율화	2.9%	-
윤리적 동물실험5	강화	효율화	2.8%	-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효율화	2.4%	-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지원	강화	효율화	2.2%	-

〈표 3-120〉 농기자재정책팀 일치성 분석

단위업무	기능 개선 의견	일치성 분석	비중	일치성 비율
농약관리법령 운용	유지	유지	5.8%	-
유기질비료보조	유지	강화	3.5%	-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유지	강화	3.4%	-
토양개량제 지원	유지	강화	3.2%	-
농업용 면세유 지원	유지	강화	3.2%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유지	강화	3.2%	-
흙의 날 행사 개최	유지	강화	2.9%	-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용 및 제도개선	유지	강화	2.9%	-
비료관리법 운용 및 개정	유지	강화	2.8%	-
농기계 관련 법령운용 및 제도개선	유지	강화	2.7%	-
비료의 품질관리	강화	강화	2.6%	2.6%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시행계획 수립	유지	강화	2.6%	-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	유지	강화	2.5%	-
비료 오염원 관리	유지	강화	1.8%	-
농약관련 예산 운용	유지	효율화	6.3%	-
농약안전사용교육 추진	강화	효율화	3.1%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세제지원	강화	효율화	2.7%	-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강화	효율화	2.5%	-
농업기계 세제지원	강화	효율화	2.5%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강화	효율화	2.3%	-
비료정책 및 제도개선	강화	효율화	2.2%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강화	효율화	2.0%	-
농업기계 검정제도	강화	효율화	1.8%	-
토양 양분관리	강화	효율화	1.8%	-
농업기계 안전제도	강화	효율화	1.3%	-
농약 가격표시제	강화	효율화	3.1%	-
농업기계박람회 지원	강화	효율화	2.0%	-
비료관련 협회, 단체	강화	효율화	1.8%	-
비료 관련 해외협력	강화	효율화	1.2%	-



## 나) 국 단위 일치성 분석 결과

□ 농촌정책국의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1〉 농촌정책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개선 요구	연구팀 의견	비중	기능조정 비중	
농촌 정책과	농식품 증장기 대책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	강화	유지	5.9%	10.2%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강화	강화	0.9%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강화	강화	1.7%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영	강화	강화	0.9%		
	농업회의소 설치, 관리 및 지원	강화	강화	1.7%		
	농어촌 서비스기준 및 협의회 구성운영	강화	강화	1.7%		
	농촌형 교통모델서비스 지원	강화	강화	3.3%		
지역 개발과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강화	강화	2.9%	46.4%	
	포괄보조	강화	강화	2.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강화	강화	2.6%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강화	강화	3.0%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강화	강화	1.0%		
	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운영	강화	강화	1.1%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강화	강화	3.5%		
	시군역량강화사업	강화	강화	1.6%		
	생활SOC사업 추진	강화	강화	2.7%		
	농촌협약 제도 추진	강화	강화	4.5%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강화	강화	3.1%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모델 발굴 및 확산	강화	강화	1.0%		
	농촌빈집정비	강화	강화	3.5%		
	농촌공간정보시스템(RAISE) 운영 관리	강화	강화	2.2%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 관련 제도 정비	강화	강화	2.6%		
	기초생활거점사업추진	강화	강화	3.0%		
	경관보전지불제시행	강화	강화	3.0%		
	365생활권 구축	강화	강화	2.7%		
	연계협력사업 추진	축소	축소	0.6%		0.8%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	폐지	폐지	0.1%		
전원마을 제도정비	폐지	폐지	0.1%			
농촌 산업과	지역특화사업(지구, 네트워크) 제도개선	강화	강화	4.7%	15.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강화	강화	4.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운영	강화	강화	2.0%		
	농공단지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강화	강화	4.1%		
	농어촌 민박	강화	유지	8.8%	3.7%	
	농촌관광 활성화	강화	유지	7.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관리	축소	축소	1.2%		
	향토산업육성 사업관리	축소	축소	1.2%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축소	축소	1.3%		
농촌 여성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	강화	효율화	0.7%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강화	효율화	1.7%		
	농업인 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강화	유지	8.3%		

정책팀	농촌 보육여건 개선	강화	유지	9.1%	35.2%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강화	유지	5.0%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	유지	5.9%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	강화	유지	9.1%	
	여성농업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	강화	4.2%	
	여성농업인 정책패널 운영	강화	강화	2.5%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연구 및 평가	강화	강화	2.5%	
	여성농업인 단체와 협력 및 지원	강화	강화	4.2%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조성	강화	강화	2.6%	
	일 생활 양립 지원	강화	강화	2.5%	
	여성농업인 모성권 보호	강화	강화	1.7%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강화	강화	2.5%	
	농촌분야 양성평등 교육확대	강화	강화	4.2%	
	농촌분야 성평등 인력육성	강화	강화	3.3%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 성 평등 교육 확대	강화	강화	2.5%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	강화	강화	2.5%		
농촌 재생 에너지팀	농촌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강화	강화	5.0%	5.0%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성	강화	유지	6.1%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및 실태조사	강화	유지	5.5%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강화	유지	6.2%	
농업역사 문화전시 체험관추 진팀	농촌다원적 자원활용 및 농업유산제도 운용	강화	유지	9.9%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관리	강화	강화	4.4%	4.4%

: 기능조정 일치 단위업무(이하 장표 동일)

\* 현업부서 응답 결과 부 전체 업무 중 유지 업무(72.5%)는 검토 대상에서 배제, 이관 0.3%, 축소 0.2%로 주 대상은 강화 업무(27%)에 해당됨 (이하 관련 장표 동일)

□ 농업정책국의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2> 농업정책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 개선 요구	연구팀 의견	비중	기능조정 비중
농업 정책과	BH, 통준위, 통일부 등 대외 협력	강화	강화	0.9%	13.8%
	FTA대책 성과 및 투융자 보고서	강화	강화	1.0%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강화	강화	1.0%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관리	강화	강화	1.0%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강화	강화	1.1%	
	농업인의 날 정부 포상	강화	강화	1.0%	
	민간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및 농림축산물 교역 지원	강화	강화	1.0%	
	정책연구개발사업 기획	강화	강화	1.9%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	강화	강화	1.2%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계획수립 및 TF운영	강화	강화	1.6%	
	전시행사관 조성 및 대표 홈페이지 운영	강화	강화	2.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지원 운영	강화	효율화	0.6%	
	남북협력관련 대외협력 및 자료 조사	강화	효율화	0.9%	
	농식품 일자리 정책 기획(일자리위원회 등 대응)	강화	효율화	1.0%	
	농정 지역담당관 운영	강화	효율화	0.4%	
	북한농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획 총괄	강화	효율화	1.6%	
	중장기농소득관련 정책개발및 농가소득 통계분석	강화	효율화	4.6%	
	청년정책 업무 수립 및 추진	강화	효율화	1.4%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이관	일치	1.1%	1.1%
경영 인력과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10%	20.3%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80%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강화	강화	4.00%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80%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사항	강화	강화	4.50%	
	농촌인력중개사업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4.10%	
	귀농·귀촌 창업 등에 관한 교육 운영	강화	효율화	0.5%	
	농업농촌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강화	효율화	3.4%	
농업 금융 정책과	농업용전기요금관리	이관	일치	1.70%	2.0%
	농특회계사업 용자 운영지원	이관	일치	0.30%	
재해 보험 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강화	유지	7.9%	
	손해평가사 자격 운용 및 제도 총괄	강화	유지	7.2%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사업관리	강화	유지	7.0%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	강화	유지	6.1%	
	농업재해 상황관리 및 복구지원	강화	강화	4.2%	4.2%
	농업재해대책 및 보험정책 기획	강화	효율화	7.4%	
	농작물재해보험 교육홍보 손해평가 관리 통계관리	강화	효율화	5.0%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용	강화	효율화	4.3%	
	가축재해보험 사업 운용	강화	효율화	4.2%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	강화	효율화	3.9%	
	농업기상상황 입수 및 전파	강화	효율화	3.6%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운용	강화	효율화	3.5%	
	농업재해대책 관련 일반업무 추진	강화	효율화	3.1%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 추진	강화	효율화	3.1%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	강화	효율화	1.3%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강화	효율화	0.7%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의 운용	강화	유지	6.1%	
	농업재해 관련 법령운용 및 제도개선	강화	유지	5.4%	

□ 식량정책관의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3> 식량정책관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 개선 요구	연구팀 의견	비중	기능조정 비중
식량 정책과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강화	유지	5.3%	3.9%
	해외곡물 유통망 구축	강화	강화	1.9%	
	수입 쌀 관리방안	강화	강화	2.0%	
	식량정책 및 양곡 수급계획	강화	유지	5.3%	5.0%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유지	5.3%	
	APTERR를 활용한 해외 원조	강화	유지	1.6%	
	FAC/WFP를 통한 식량 원조	강화	유지	1.6%	
	쌀시장 안정대책	강화	강화	3.4%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강화	강화	1.6%	
식량 산업과	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정책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8%	6.4%
	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8%	
	방제 대상 병해충 여찰방제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0%	
	식물 병해충 여찰방제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1.8%	
	식물방역법령 중 방제에 관한 사항	강화	유지	2.0%	16.5%
	병해충 여찰방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강화	유지	1.4%	
	쌀 적정생산 수립	강화	유지	1.5%	
	쌀 생산조정제 추진	강화	강화	4.9%	
	발 식량작물 발전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6%	
	발 식량작물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4.4%	
	발 식량작물 구매 및 민간 구매지원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6%	
	맥류 생산 및 유통 등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6%	
	서류 생산 및 유통	강화	유지	6.0%	
기타 발식량작물(서류, 맥류, 두류 제외) 육성 관련 사항	강화	강화	4.0%	4.0%	
쌀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	강화	유지	5.5%		

	쌀 및 쌀 활용 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3%	7.9%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	강화	강화	3.6%	
	쌀 가공 관련R&D에 관한 사항	강화	유지	2.3%	
	밀 산업 육성법 운용	강화	유지	1.9%	
농가 소득 안정 추진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강화	강화	3.1%	3.1%
	직불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강화	유지	7.5%	
	공익직불제 사업추진 총괄	강화	강화	2.5%	13.0%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제도 운영 및 개선	강화	강화	3.7%	
	이행점검 전담관리기관 지정·운영	강화	강화	3.1%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및 운영	강화	강화	3.7%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강화	유지	6.4%	
간척지 농업과	삽교방조제배수갑문확장공사 등 3지구사업추진	강화	강화	2.6%	3.6%
	농지 범용화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강화	강화	1.0%	
농업 기반과	가뭄피해우려지역 실태조사	강화	강화	2.1%	2.1%
	균특회계 농업생산기반 정비	축소	일치	0.9%	0.9%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	강화	강화	5.8%	10.9%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대책	강화	강화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진단	강화	강화	0.9%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 관리	강화	강화	1.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소송업무	강화	강화	0.8%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	강화	효율화	1.2%	
	관계부처 합동 가뭄 종합대책 수립(매년)	강화	효율화	1.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효율화	1.7%	
	농업용 지하수자원 관리	강화	효율화	0.8%	
	농업용 호소 수질개선	강화	강화	1.9%	1.9%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강화	효율화	1.6%	
	저수지 주변지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추진	강화	효율화	0.9%	
	저수지 준설	강화	효율화	0.5%	

□ 국제협력국의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4〉 국제협력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 개선 요구	연구팀 의견	비중	기능조정 비중
농업 통상과	WTO 농산물 보조분야 통보	강화	강화	3.3%	5.5%
	WTO 농산물 보조금분야 이행	강화	강화	2.2%	
검역 정책과	WTO/SPS, WTO/TBT 협정 관련 업무	강화	강화	4.1%	16.7%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련 총괄	강화	강화	4.0%	
	수출입식물 국제검역협력	강화	강화	4.5%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강화	강화	4.1%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책 추진	강화	효율화	0.5%	
	LMO안전관리체계 구축	강화	효율화	3.2%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강화	효율화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관리	강화	효율화	1.1%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관리	강화	효율화	0.6%	
	동 아시아 자유 무역 협정과	지적재산권, 서비스·투자 협상	강화	강화	3.3%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전략 수립		강화	강화	2.5%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정보 수집 관리		강화	강화	2.6%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부서간 협조		강화	강화	2.6%	
FTA 이행위원회 참석 대응		강화	강화	1.8%	
FTA협상지원시스템 구축·관리		강화	강화	2.3%	

□ 축산정책국의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5〉 축산정책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 개선 요구	연구팀 의견	비중	기능조정 비중
축산 정책과	축산물유통대책수립	강화	강화	4.7%	6.6%
	축산분야 연구개발 증장기 계획수립 및 운영	강화	강화	1.9%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강화	효율화	0.7%	
	축산관계 법령 준수사항 통합 점검관리	강화	유지	6.1%	
	축산발전기금 자산운용 관리	강화	효율화	0.7%	
	축산발전기금 재산관리	강화	효율화	2.4%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총괄	강화	효율화	0.5%	
	농장전문관리업 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3.1%	6.9%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강화	1.3%	
	축산물등급제도 운용	강화	강화	2.5%	
축산 환경 자원과	사료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업무	강화	강화	3.7%	7.9%
	사료 안정성 및 품질관리	강화	강화	4.2%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강화	유지	8.9%	
	사료관리법령 운용 및 제도개선	강화	강화	4.9%	4.9%

□ 방역정책국의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6〉 방역정책국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 개선 요구	연구팀 의견	비중	기능조정 비중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과	KAHIS 등 가축방역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강화	유지	6.3%	
	축산차량 통제 및 관리	강화	유지	7.8%	
	축사체처리지원 사업	강화	강화	4.7%	27.2%
	동물용의약품산업지원	강화	강화	4.3%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규운영	강화	강화	3.7%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	강화	강화	3.4%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 운영	강화	강화	3.1%	
	가축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 사후관리	강화	강화	3.0%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	강화	강화	3.0%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강화	강화	2.0%	
	통제초소 관리 운영	강화	유지	5.5%	
구제역 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사슴만성소모성질환 등 방역대책 추진	강화	유지	12.3%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혈청예찰 및 환경부 협의	강화	강화	4.0%	4.0%
	소독관리 전반	강화	유지	5.2%	
	구제역·AI 백신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	강화	강화	2.2%	4.7%
	구제역·AI 백신 대책 수립·운영	강화	강화	2.5%	
	구제역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	강화	유지	5.9%	
가축방역관 및 축산농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강화	1.4%	1.4%	



□ 식품산업정책관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7> 식품산업정책관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 개선 요구	연구팀 의견	비중	기능조정 비중
식품 산업 정책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유지	7.4%	
	산학연 연계 식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6%	2.6%
수출 진흥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강화	강화	3.1%	34.1%
	농식품 수출통계 및 동향 분석	강화	강화	1.0%	
	미래클 K-Food 프로젝트	강화	강화	0.6%	
	수출전문단지 지정, 운영 및 수출농산물 안전 관리	강화	강화	2.3%	
	수출전문 조직 육성	강화	강화	2.5%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강화	강화	3.5%	
	주요 수출국별,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강화	강화	4.6%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강화	강화	4.6%	
	농식품수출대책수립	강화	강화	2.3%	
	수출 관련 R&D 지원	강화	강화	1.3%	
	수출물류비지원	강화	강화	3.8%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수출 효율과 방안 마련	강화	강화	4.5%	
	K-Food FAIR 개최	강화	효율화	2.5%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사업(용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강화	효율화	2.3%	
	민관협력 특화사업추진	강화	효율화	3.8%	
	수출 선도조직 및 협의외 육성	강화	효율화	2.3%	
국가 식품 클러 스터 추진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운영 및 관리	폐지	폐지	1.1%	1.1
외식 산업 진흥과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유지	6.0%	
	외식업체 육성 및 창업 지원	강화	효율화	6.0%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보급	강화	강화	4.5%	4.5%
	해외 확산 지원	강화	유지	7.0%	
	푸드페스타& 캠페인	강화	유지	5.7%	
	외식업체 해외진출 지원	강화	유지	4.6%	
	한식 행사	강화	유지	3.8%	
식품 산업 진흥과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통계·정보화	강화	유지	3.7%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유지	6.9%	
	기능성식품산업육성	강화	유지	7.0%	
	전통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강화	강화	1.2%	10.8%
	식품외식종합자금 운용	강화	강화	2.8%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강화	강화	4.9%		
식품명인 발굴 및 육성	강화	강화	1.9%		

- 유통소비정책관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8〉 유통소비정책관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 개선	연구팀	비중	기능조정 비중	
		요구	의견			
원예 산업과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강화	강화	4.1%	18.4%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강화	강화	4.1%		
	조미채소류의 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5%		
	인삼자조금 관리 및 운영	강화	강화	0.3%		
	조미채소류 자조금 관리·운영	강화	강화	1.7%		
	조미채소류의 수매 및 비축사업 추진	강화	강화	1.7%		
	출하조절시설 운영	강화	강화	1.6%		
	인삼 소비촉진 교육·홍보	강화	강화	0.7%		
	엽근채류 자조금 관리 및 운영	강화	강화	1.7%		
	조미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강화	유지	5.8%		
	엽근채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강화	유지	5.7%		
조미채소 출하조절시설지원	축소	일치	0.8%	0.8%		
농 축산물 위생 품질 관리팀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관련 업무	강화	유지	5.9%	18.7%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 및 운용	강화	유지	5.5%		
	HACCP 제도 확대 및 운용	강화	강화	3.2%		
	생산단계 농장, 도축장, 집유장 HACCP 제도 운용	강화	강화	4.4%		
	축산물 안전관리 교육·홍보	강화	강화	4.0%		
	도축장, 집유장 HACCP 조사·평가	강화	강화	4.0%		
	HACCP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강화	강화	3.1%		
식생활 소비급 진흥과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및 공급 확대	강화	유지	5.9%	11.3%	
	공공급식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유지	5.4%		
	농산물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운영	강화	유지	7.9%	2.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운용	강화	강화	2.1%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유지	1.7%		
	농산물 사이버거래 기반 구축	강화	강화	2.5%		2.5%
	식생활교육 및 홍보	강화	유지	6.2%		
	농식품바우처 운영관리	강화	유지	9.2%		
유통 정책과	자조금지원	강화	강화	1.5%	6.5%	
	농인기금 편성 및 운용, 결산, 평가, 재산관리	강화	강화	2.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강화	강화	2.3%		
원예 경영과	FTA/FTA+수출촉진사업에관한사항생산유통기타지원	강화	강화	2.3%	6.7%	
	과실계약출하지원	강화	강화	2.2%		
	과실수급	강화	강화	2.2%		
	과실자조금	강화	유지	1.5%	16.7%	
	지역별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강화	강화	3.1%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 운영	강화	강화	3.1%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강화	강화	2.6%		
	화훼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강화	2.6%		
	유통협약명령	강화	강화	1.2%		
	시설채소 수출확대	강화	강화	0.9%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강화	강화	3.2%		

□ 농업생명정책관 기능동태성 관련 현업 의견과 중요도·비중 분석 간 일치성을 검토하여 상호 일치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량 가감의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29> 농업생명정책관 단위업무 기능조정 일치성 검토

부서명	단위업무	기능 개선 요구	연구팀 의견	비중	기능조정 비중
과학 기술 정책과	도시농업 정책수립 및 시행	강화	강화	3.8%	50.1%
	농림 기술 중장기계획	강화	강화	3.2%	
	농림 RD예산(결산, 회계, 예산)	강화	강화	3.2%	
	농림축산식품 r&d정책 및 기획	강화	강화	3.2%	
	부처 및 부내, 소속기관 협력	강화	강화	2.9%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대응	강화	강화	2.4%	
	연도별 농림과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강화	강화	2.3%	
	신기술인증 및 녹색인증 운용	강화	강화	2.3%	
	R&D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운영	강화	강화	2.2%	
	포스트게놈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유 전체 연구개발사업	강화	강화	2.0%	
	농식품부 R&D 사업운영계획 수립	강화	강화	1.9%	
	기술제도(훈령, 예규, 지침)	강화	강화	1.6%	
	기술개발사업 선정 및 진도관리	강화	강화	1.4%	
	신규사업 기획	강화	강화	1.4%	
	R&D제재조치(부실학회, 복제건 등)	강화	강화	1.3%	
	농림기술개발사업 개선	강화	강화	1.1%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 사 사업 기획 및 대응	강화	강화	1.0%	
	농식품 R&D 신규과제 기획	강화	강화	1.0%	
	국가 연구개발 운영 규정 개정	강화	강화	1.0%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강화	강화	1.0%	
	기술성과 관리	강화	강화	1.0%	
	민간지역 R&D 신규과제 기획	강화	강화	0.8%	
	산업기술보안	강화	강화	0.4%	
	다부처 공동기획(사회문제 해결과제 등) 대응 및 사업운영	강화	강화	2.7%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행계획수립	강화	강화	2.3%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강화	1.3%	
	도시농업관리자 자격제도 운영	강화	강화	1.4%	
농식품 R&D 16개 사업관리	강화	유지	8.4%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운영	강화	유지	7.1%		
국가연구개발사업	강화	유지	5.3%		
농 기자재 정책팀	비료의 품질관리	강화	강화	2.6%	2.6%
	농약안전사용교육 추진	강화	효율화	3.1%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세제지원	강화	효율화	2.7%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강화	효율화	2.5%	
	농업기계 세제지원	강화	효율화	2.5%	
	친환경최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강화	효율화	2.3%	
	비료정책 및 제도개선	강화	효율화	2.2%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강화	효율화	2.0%	

	농업기계 검정제도	강화	효율화	1.8%	
	토양 양분관리	강화	효율화	1.8%	
	농업기계 안전제도	강화	효율화	1.3%	
	농약 가격표시제	강화	효율화	3.1%	
	농업기계박람회 지원	강화	효율화	2.0%	
	비료관련 협회, 단체	강화	효율화	1.8%	
	비료 관련 해외협력	강화	효율화	1.2%	
동물 복지 정책과	동물등록제 활성화	강화	강화	2.9%	2.9%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유지	5.2%	
	반려동물 산업관리	강화	유지	5.1%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강화	효율화	4.9%	
	반려동물 사료 법령 운용	강화	효율화	3.9%	
	사설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	강화	효율화	3.4%	
	반려동물 관련 산업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강화	효율화	2.9%	
	윤리적 동물실험	강화	효율화	2.8%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효율화	2.4%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지원	강화	효율화	2.2%		
종자 생명 산업과	농업생명산업 관련 사업 추진	강화	강화	3.4%	8.0%
	농업생명자원법 및 하위 법령 운용 및 제개정	강화	강화	2.6%	
	근충산업 육성 지원	강화	강화	2.0%	
	농업 분야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 수립	이관	일치	0.9%	0.9%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	강화	강화	3.7%	11.0%
	근충산업육성	강화	강화	2.5%	
	종자생산 및 보급	강화	강화	2.6%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대응	강화	강화	2.2%		
농산업 정책과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강화	유지	7.3%	19.0%
	스마트농업 대응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강화	유지	6.6%	
	농식품 바이오산업 대응	강화	강화	4.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련 업무	강화	강화	4.4%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	강화	강화	4.1%	
	농식품 ICT 융복합 현장지원 정책수립	강화	강화	2.7%	
	스마트팜 기자재 수출 및 해외 진출	강화	강화	2.1%	
	농식품 전문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강화	강화	0.6%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지원	강화	강화	0.5%	
	농식품 ICT융복합 교육·홍보	강화	유지	3.0%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유지	2.5%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	강화	강화	4.5%	11.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및 관리	강화	강화	4.1%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및 관리	강화	강화	2.4%	
	친환경농자재지원	이관	효율화	0.7%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	강화	유지	5.3%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강화	유지	5.3%	
	친환경농업직물제 신청 및 집행관리	강화	효율화	2.7%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및 관리	강화	효율화	4.1%	
	자조금관리	강화	효율화	3.2%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조사	강화	효율화	2.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및 쇼핑물 관리	강화	강화	2.4%	2.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운영	강화	효율화	2.3%	
	유기농식품 온라인 거래 지원	강화	효율화	2.3%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	강화	효율화	2.3%	
친환경농산물공공급식 지원 관리	강화	효율화	1.4%		

## 다. 기능조정 반영 적정인력 산정 결과

### 가) 국 단위 분석 결과

#### (가) 농촌정책국

□ 농촌정책국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8.6명(현원 대비 8.6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0〉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강화		축소	폐지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일치	불일치								
농업역사 문화전시 체험관 추진팀	450	1,013			10,228	10,305	77	5	5.5	0.5
농촌사회 복지과					14,897	14,897		7	8.0	1.0
농촌산업과	3,577	3,856	929		23,230	23,596	336	11	12.7	1.7
농촌여성 정책팀	4,323	4,888			12,281	12,822	541	6	6.9	0.9
농촌재생 에너지팀	810	2,883			16,196	16,376	180	8	8.8	0.8
농촌정책과	2,838	1,641			27,826	28,119	293	13	15.1	2.1
지역개발과	9,859		212	212	21,247	22,807	560	10	11.7	1.7
<b>합계</b>	<b>21,857</b>	<b>14,281</b>	<b>1,141</b>	<b>212</b>	<b>125,905</b>	<b>127,922</b>	<b>2,107</b>	<b>60</b>	<b>68.6</b>	<b>8.6</b>

(나) 농업정책국

□ 농업정책국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9.5명(현원 대비 9.5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1>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강화		축 소	폐 지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일치	불일치								
경영 인력과	4,893	265			24,104	24,506	402	11	13.1	2.1
농업금융 정책과	554				27,689	27,733	44	13	14.9	1.9
농업 정책과	3,949	3,005			28,616	29,052	436	14	15.6	1.6
농지과	1,482	1,694			26,471	26,657	186	12	14.3	2.3
재해보험 정책과	877	16,666			20,885	21,622	737	10	11.6	1.6
<b>합계</b>	<b>11,755</b>	<b>21,630</b>			<b>127,765</b>	<b>129,571</b>	<b>1,806</b>	<b>60</b>	<b>69.5</b>	<b>9.5</b>

(다) 식량정책관

□ 식량정책관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6.7명(현원 대비 8.7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2>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강화		축소	폐지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일치	불일치								
간척지 농업과	822				22,820	22,886	66	11	12.3	1.3
농가소득 안정 추진단	2,674	2,292			16,606	16,912	306	8	9.1	1.1
농업 기반과	4,136	2,107	263		26,342	26,736	394	13	14.3	1.3
식량 산업과	10,011	4,246			25,734	26,705	971	12	14.3	2.3
식량 정책과	2,184	4,737			30,759	31,123	364	14	16.7	2.7
<b>합계</b>	<b>19,825</b>	<b>13,382</b>	<b>263</b>		<b>122,261</b>	<b>124,361</b>	<b>2,100</b>	<b>58</b>	<b>66.7</b>	<b>8.7</b>

(라) 국제협력국

□ 국제협력국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3.5명(현원 대비 7.5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3>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강화		축 소	폐 지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일치	불일치								
검역 정책과	4,029	1,568			24,127	24,512	385	11	13.2	2.2
국제협력 총괄과					34,050	34,050		15	18.3	3.3
농업 통상과	976				17,738	17,816	78	9	9.6	0.6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과	3,488				23,100	23,379	279	11	12.5	1.5
<b>합계</b>	<b>8,493</b>	<b>1,568</b>			<b>99,015</b>	<b>99,757</b>	<b>742</b>	<b>46</b>	<b>53.5</b>	<b>7.5</b>



(마) 축산정책국

□ 축산정책국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1.7명(현원 대비 7.7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4>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강화		축 소	폐 지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일치	불일치								
축산 경영과					31,768	31,768		15	17.0	2.0
축산 정책과	5,120	3,945			37,928	38,495	567	17	20.7	3.7
축산환경 자원과	3,306	2,298			25,825	26,181	356	12	14.0	2.0
합계	8,426	6,243			95,521	96,445	924	44	51.7	7.7

(바) 방역정책국

□ 방역정책국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6.3명(현원 대비 8.3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5>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강화		축 소	폐 지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일치	불일치								
구제역 방역과	2,934	6,797			29,045	29,552	507	13	15.9	2.9
방역 정책과					31,078	31,078		14	16.7	2.7
조류 인플루엔 자방역과	6,792	3,521			24,972	25,656	684	11	13.8	2.8
<b>합계</b>	<b>9,726</b>	<b>10,318</b>			<b>85,095</b>	<b>86,286</b>	<b>1,191</b>	<b>38</b>	<b>46.3</b>	<b>8.3</b>

(사) 식품산업정책관

□ 식품산업정책관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1.8명(현원 대비 5.8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6>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강화		축 소	폐 지						
	일치	불일치								
수출 진흥과	5,910	1,889			17,332	17,880	548	8	9.6	1.6
식품산업 진흥과	1,717	2,290			15,902	16,131	229	8	8.7	0.7
식품산업 정책과	771	2,194			29,646	29,795	149	14	16.0	2.0
외식산업 진흥과	744	6,086			16,538	16,841	303	8	9.0	1.0
국가식품 클러스터 추진팀				161	16,068	15,891	-161	8	8.5	0.5
<b>합계</b>	<b>9,143</b>	<b>12,459</b>		<b>161</b>	<b>95,486</b>	<b>96,555</b>	<b>1,069</b>	<b>46</b>	<b>51.8</b>	<b>5.8</b>

(아) 유통소비정책관

□ 유통소비정책관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8.3명(현원 대비 9.3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7>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강화		축소	폐지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일치	불일치								
농축산물 위생품질 관리팀	2,678	1,633			14,321	14,601	280	7	7.8	0.8
식생활소 비급식진 흥과	3,952	6,214			24,855	25,420	565	12	13.6	1.6
원예 경영과	6,369	408			27,218	27,744	526	13	14.9	1.9
원예 산업과	4,938	3,086	268		26,838	27,335	497	12	14.7	2.7
유통 정책과	2,087				32,103	32,270	167	15	17.3	2.3
<b>합계</b>	<b>20,024</b>	<b>11,341</b>	<b>215</b>		<b>125,335</b>	<b>127,369</b>	<b>2,034</b>	<b>59</b>	<b>68.3</b>	<b>9.3</b>

(자) 농업생명정책관

□ 농업생명정책관의 기능조정 응답값에 일치성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기능 동태성을 반영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71.1명(현원 대비 11.1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8>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강화		축소	폐지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일치	불일치								
과학기술 정책과	11,656	4,839			23,266	24,392	1,126	11	13.1	2.1
농기자재 정책팀	391	4,556			15,035	15,248	213	7	8.2	1.2
농산업 정책과	5,241	5,351			27,583	28,216	633	13	15.1	2.1
동물복지 정책과	579	6,551			19,972	20,280	308	9	10.9	1.9
종자생명 산업과	3,725				19,604	19,902	298	9	10.7	1.7
친환경 농업과	3,199	7,520			23,872	24,429	557	11	13.1	2.1
<b>합계</b>	<b>24,791</b>	<b>28,817</b>			<b>129,332</b>	<b>132,468</b>	<b>3,136</b>	<b>60</b>	<b>71.1</b>	<b>11.1</b>

## 나) 분석 종합 결과

□ 직무조사의 기능조정 응답 대비 중요도-업무비중 일치성 분석 결과, 강화 요인이 축소 및 폐지의 효율화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547.6명(현원 대비 76.6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39〉 기능조정 일치성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 종합

부서	업무량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기능조정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강화		축소	폐지						
	일치	불일치								
농촌 정책국	21,857	14,281	1,141	212	125,905	127,922	2,017	60	68.7	8.7
농업 정책국	11,755	21,630	0	0	127,765	129,571	1,806	60	69.5	9.5
식량 정책관	19,825	13,382	263	0	122,261	124,382	2,121	58	66.7	8.7
국제 협력국	8,493	1,568	0	0	99,015	99,757	742	46	53.5	7.5
축산 정책국	8,426	6,243	0	0	95,521	96,445	924	44	51.7	7.7
방역 정책국	9,726	10,318	0	0	85,095	86,286	1,191	38	46.3	8.3
식품산업 정책관	9,143	12,459	0	161	95,486	96,539	1,053	46	51.8	5.8
유통소비 정책관	20,024	11,341	268	0	125,335	127,373	2,038	59	68.3	9.3
농업생명 정책관	24,791	28,817	0	0	129,332	132,468	3,136	60	71.1	11.1
<b>총 합계</b>	<b>134,040</b>	<b>120,039</b>	<b>1,672</b>	<b>373</b>	<b>1,005,715</b>	<b>1,020,733</b>	<b>15,018</b>	<b>471</b>	<b>547.6</b>	<b>76.6</b>

1) 추정근로시간:19년1월~12월실제근무시간(OT포함,휴가제외)

2) 표준근로시간:1,864(H)

3) 강화업무 대상업무 중기능 조정일치 비율은 53%, 불일치 비율은 4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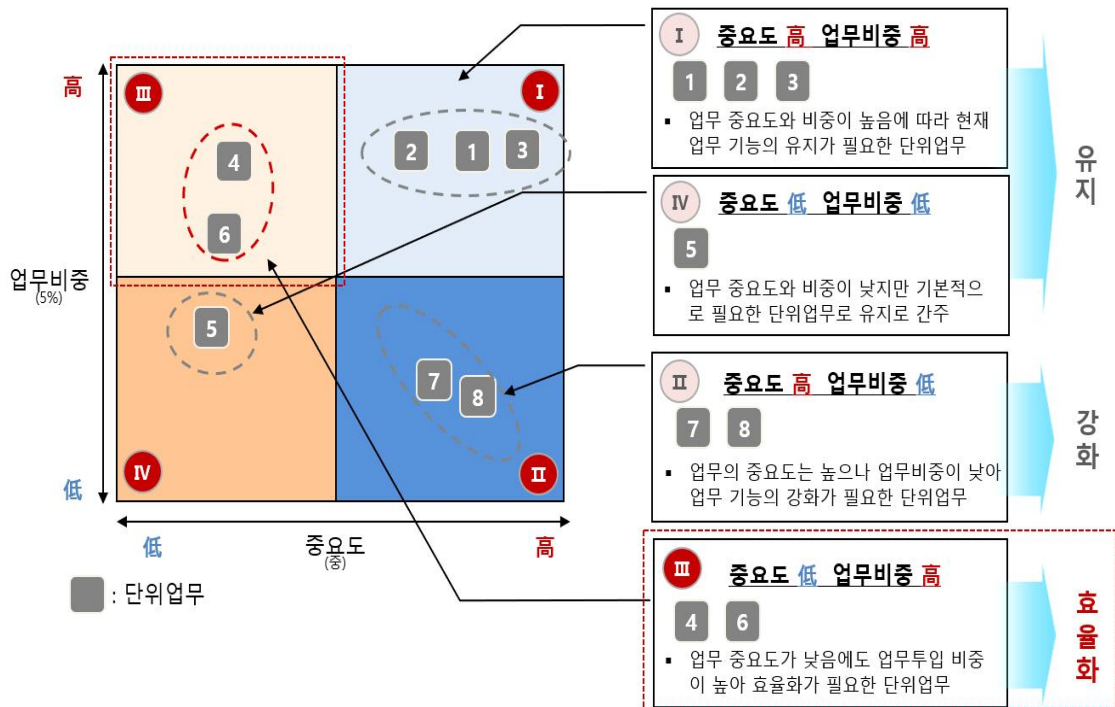
4) 축소 및 폐지 대상업무는 기능조정 일치비율 100%임

5) 조정근로시간(인력산정기준시간)=추정근로시간+신설+(강화일치\*8%)+(강화불일치\*4%)+(축소\*-4%)-폐지

### (3) 2-2안 기능동태성 반영 적정인력 산정\_교차분석 결과 효율화

- 직무조사 결과 업무 중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투입 비중이 높은 III영역의 업무는 반대의 경우인 II번 영역의 업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효율화 대상으로 간주함

〈그림 3-11〉 단위업무 기능조정 Matrix



- ※ 업무비중 : 세부업무 기준 1~10% 업무비중 range를 고려 중위값을 '5%' 로 산정
- ※ 5% 이상 업무비중 高, 5% 미만 업무비중 低 중요도 : 상~하 중 중위값을 '중' 으로 산정, 중요도 중/하를 중요도 低로 간주

#### 가. 업무 중요도-업무 비중 분석

#### 가) 농촌정책국

# ① 농촌정책과

<표 3-140> 농촌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정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8.5%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li> </ul> <p>(업무비중)</p> <p>하                      중                      상                      (중요도)</p>	I	1	농식품 증장기 대책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	상	5.9%	1,641	
	2	농민단체 관리	상	5.9%	1,641		
	3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등 법령 운영	상	4.3%	1,196		
	4	농민단체 지원	상	4.1%	1,141		
	5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운영	상	3.3%	918		
	6	농업회의소 관련 법령 제개정	상	3.3%	918		
	7	농촌형 교통모델서비스 지원	상	3.3%	918		
	8	농어촌공사 지도감독	상	2.8%	779		
	9	산림청 지도감독, 불재난실무매뉴얼운영	상	2.8%	779		
	10	깨끗한농촌만들기	상	1.7%	473		
	11	농업회의소 설치, 관리 및 지원	상	1.7%	473		
	12	농어촌 서비스기준 및 협의회 구성운영	상	1.7%	473		
	13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상	1.7%	473		
	14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상	1.7%	473		
	15	삶의질 향상 위원회 운영	상	1.7%	473		
	16	삶의질 향상 특별법 운영	상	1.7%	473		
	17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상	0.9%	250		
	18	농어촌영향평가제도 운영	상	0.9%	250		
	19	삶의질 향상 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상	0.9%	250		
	20	농민단체 관련 정부포상	중	3.3%	918		
	21	농민단체 관련 기타 업무사항	중	1.7%	473		
	22	농촌개발 국제협력	중	1.3%	362		
	2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연구	중	0.4%	111		
	24	농촌개발관련법령협의	중	0.4%	111		
	25	농촌개발연구	중	0.2%	56		
	26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하	3.3%	925		
	-	27	처리과 공통	-	39.1%	10,878	

※ 같은 비율일 경우 하나의 점으로 표시. 공통업무는 분포도에서 제외(이하 장표 동일)



## ② 지역개발과

〈표 3-141〉 지역개발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지역개발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49.3%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상	7.5%	1,593	
	2	농촌협약 제도 추진	상	4.5%	956		
	3	농촌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상	3.5%	744		
	4	농촌빈집정비	상	3.5%	744		
	5	농촌지역개발계획	상	3.5%	744		
	6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상	3.1%	659		
	7	기초생활기초사업 추진	상	3.0%	637		
	8	경관도전지불제시행	상	3.0%	637		
	9	영농노동준보급지리조성	상	3.0%	637		
	10	365생활권 구축	상	2.7%	574		
	II	11	생활SOC사업 추진	상	2.7%	574	
	1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상	2.6%	552		
	13	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 관련 제도 정비	상	2.6%	552		
	14	묘관보조	상	2.4%	510		
	15	농촌주택개량	상	2.3%	489		
	16	농촌공기정보시스템(RAISE) 운영 관리	상	2.2%	467		
	17	시군역량강화사업	상	1.6%	340		
	18	지역개발증가지원조직 운영	상	1.1%	234		
	19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모델 발굴 및 확산	상	1.0%	212		
	20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상	1.0%	212		
	21	행복농촌마늘기 콘테스트 추진	중	2.9%	616		
	22	농촌유치시설 활용	중	2.5%	531		
	23	농촌경관사치공모전 추진	중	2.1%	446		
	24	수미수도마을만들기사업	중	1.6%	340		
	25	농어촌개발 퍼실리테이터, 컨설턴트 자격 관리	중	1.1%	234		
	26	농촌 지역개발인력 역량강화	중	1.1%	234		
	27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 및 관리	중	1.1%	234		
	28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	중	1.1%	234		
	29	농어촌지역구수협의회 추진	중	0.9%	191		
	30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개발·보급	중	0.9%	191		
	31	농촌건축대전 및 농촌계획대전 추진	중	1.1%	234		
	32	농촌마을 리모델링 축치를 위한 특별법 운영	중	1.1%	234		
	33	농촌경관개선 위한 업무 추진	중	0.8%	170		
	34	연계협력사업 추진	중	0.6%	127		
	35	하계농지 정비	중	0.3%	64		
	36	전원마을 제도정비	중	0.1%	22		
	37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	0.1%	2		
	-	38	처리과 공통	-	23.8%	5,056	

### ③ 농촌사회복지과

〈표 3-142〉 농촌사회복지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사회복지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1.7%가 Ⅲ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화 대상의 업무영역에 해당됨</li> </ul>	<p>(업무비중)</p>	I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	상	8.5%	1,266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	상	7.8%	1,162
			3	복지정책 관련	상	7.8%	1,162
		Ⅲ	4	사회적 협동조합	중	7.1%	1,058
			5	농촌교육여건개선	중	6.6%	983
			6	농촌교육문화복지	중	6.5%	968
			7	농촌축제지원	중	6.5%	968
			8	취약농가 인력지원	중	5.0%	745
		Ⅳ	9	미세먼지 저감	중	4.3%	641
			10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3.5%	521
			11	대학생 학자금 융자	중	3.0%	447
			12	농촌문화체험기	하	2.2%	328
		-	13	처리과 공통	-	-	31.2%

#### ④ 농촌산업과

<표 3-143> 농촌산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촌산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1.0%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농어촌민박	상	8.8%	2,051	
		2	농촌관광 활성화	상	7.8%	1,818	
	II	3	지역특화사업(지구, 네트워크) 제도개선	상	4.7%	1,065	
		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상	4.6%	1,030	
		5	농촌융복합산업법 관리	상	4.1%	955	
		6	농공단지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상	4.1%	955	
		7	외국인 농촌관광 운영 및 활성화	상	2.8%	652	
		8	농외소득법 관리	상	2.8%	652	
		9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및 관리	상	2.6%	606	
		10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및 관리	상	2.2%	513	
		1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운영	상	2.0%	466	
		12	특구지정 및 특례법	상	1.1%	256	
		IV	13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중	4.7%	1,095
	14		관광농원조성	중	3.0%	699	
	15		도농교류법 관리	중	2.3%	536	
	16		농촌활력정착지원	중	2.3%	536	
	17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중	2.1%	489	
	18		지역특화사업(지구, 네트워크)비 예산편성 및 집행	중	1.6%	373	
	19		위원회 운영	중	1.1%	256	
	20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하	1.3%	303	
	21		농공단지조성 사업관리	하	1.2%	280	
	22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관리	하	1.2%	280	
	23		향토산업육성 사업관리	하	1.2%	280	
	-	24	처리과 공통	-	30.4%	7,084	

⑤ 농촌여성정책팀

<표 3-144> 농촌여성정책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촌여성정책팀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21.7%가 IV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5.0%가 존재함</p> <p>(업무비중)</p> <p>(중요도)</p>	I	1	농촌 보육여건 개선	상	9.1%	1,118	
		2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	상	9.1%	1,118	
		3	농업인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상	8.3%	1,019	
		4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운영	상	6.7%	823	
		5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상	5.9%	725	
	II	6	여성농업인 단체와 협력 및 지원	상	4.2%	516	
		7	여성농업인육성 자문회의 운영	상	4.2%	516	
		8	농촌분야 양성평등 교육확대	상	4.2%	516	
		9	여성농업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상	4.2%	516	
		10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	상	3.3%	405	
		11	농촌분야 성평등 인력육성	상	3.3%	405	
		12	성별영향평가 계획수립 및 추진	상	3.3%	405	
		13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상	2.5%	307	
		14	결혼이민여성 교육 및 역량강화	상	2.5%	307	
	III	15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중	5.0%	614	
	IV	16	여성농업인 문화여건 조성	중	2.6%	319	
		17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	중	2.5%	307	
		18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연구 및 평가	중	2.5%	307	
		19	여성농업인 정책패널 운영	중	2.5%	307	
		20	일 생활 양립 지원	중	2.5%	307	
		21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 성평등 교육 확대	중	2.5%	307	
		22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중	1.7%	209	
		23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	중	1.7%	209	
		24	여성농업인 모성권 보호	중	1.7%	209	
		25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중	1.5%	184	
		26	성인지 통계의 구축 및 교육	중	0.7%	86	
		-	27	처리과 공통	-	1.8%	221

## ⑥ 농촌재생에너지팀

〈표 3-145〉 농촌재생에너지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촌재생에너지팀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43.2%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 영역의 단위업무는 28.6%로 존재함</p> <p>(업무비중)</p> <p>하 중 상 (중요도)</p>	I	1	수상태양광 관련 농촌공사자교도 및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상	7.7%	1,247
		2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상	7.1%	1,150
		3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상	6.2%	1,004
		4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상	6.1%	988
		5	영농형 태양광 확산	상	5.6%	907
		6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및 실태조사	상	5.5%	891
		7	농업인(주민) 참여형 태양광 추진	상	5.0%	810
	III	8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통계	중	7.0%	1,134
		9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	중	6.0%	972
		10	농업농촌 자발적온실가스 감축사업	중	5.6%	907
		11	농촌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	중	5.0%	810
		12	식품목재업종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중	5.0%	810
	IV	13	배출권거래제 및 외부사업	중	4.4%	713
		14	컨설팅 등 농업인 지원 체계 마련	중	3.1%	502
		15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국제협력	중	2.7%	437
		16	국내외 태양광 사업 정보 수집 및 분석	하	3.2%	518
		17	농촌지역 바이오매스 개발 및 이용	하	2.6%	421
		18	온실가스 감축 및 통계에 관한사항	하	1.7%	275
	-	19	처리과 공통	-	10.5%	1,701

⑦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표 3-14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1.6%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17.3%로 존재함</li> </ul> <p>(업무비중)</p>	I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원	상	16.6%	1,698	
		2	농촌다원적 자원활용 및 농업유산제도 운용	상	9.9%	1,013	
		3	박물관 설립근거관련 법안 마련	상	5.1%	522	
	II	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관리	상	4.4%	450	
		5	농업체험관건립사업에 관한 업무	상	4.0%	409	
		6	건축온실분야 자문위원회 운영	상	2.0%	205	
		7	체험관 부지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상	2.0%	205	
	III	8	농촌공동체활성화(농촌재능나눔)	중	6.1%	624	
		9	농촌재능나눔/집고쳐주기사업	중	6.1%	624	
		10	농촌공동체 활성화 총괄	중	5.1%	522	
	IV	1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원	중	3.3%	338	
	-	12	처리과 공통	-	35.4%	3,621	

## 나) 농업정책국

### ① 농업정책과

<표 3-147> 농업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업정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24.5%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14.1%로 존재함</p>	II	1	정책연구개발사업 기획	상	2.4%	687	
	2	정책연구개발사업 의위원회 운영(서정)	상	2.3%	658		
	3	전시행사관 조성 및 대표 홈페이지 운영	상	2.1%	601		
	4	농업인인력향상 업무	상	1.9%	544		
	5	농업인인력향상 지원에 관한 기획 총괄	상	1.6%	458		
	6	정책연구개발사업 결사검수 및 예산 집행	상	1.6%	458		
	7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획수립 및 TF 운영	상	1.6%	458		
	8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기념식장 조성 및 운영)	상	1.5%	429		
	9	FTA기금의 운용·관리	상	1.5%	429		
	10	통일대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	상	1.2%	343		
	11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관리	상	1.1%	315		
	12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상	1.1%	315		
	13	FTA대책 성과 및 투·융자 보고서	상	1.1%	315		
	14	미가의 대별 농업지원사업 및 동림축산물 교역 지원	상	1.0%	286		
	15	FTA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상	1.0%	286		
	16	BI, 통수위, 통일부 등 대외 협력	상	0.9%	258		
	17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추진계획 수립	상	0.6%	172		
	18	FTA 침적 피해보전제도 운영	III	7.1%	2,032		
	19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III	7.0%	2,003		
	20	중장기 동기소득 관련 정책 개발 및 동기소득 통계 분석	III	4.6%	1,316		
	21	중기 정책 업무 수립 및 추진	III	2.4%	687		
	22	WTO이행보고서 작성	III	2.4%	687		
	23	농정에 관한 영자보고서 작성	III	2.4%	687		
	24	농어촌 상생기금 업무	III	2.0%	572		
	25	농식품 일자리 정책 기획(일자리위원회 등 대응)	III	1.6%	458		
	26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업무	III	1.6%	458		
	27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인들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III	1.6%	458		
	28	농업분야 서비스 산업 발전전략 수립	III	1.6%	458		
	29	농업 혁신 및 신규정책개발	III	1.6%	458		
	30	산업별 고용통화 분석	III	1.6%	458		
	31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III	1.6%	458		
	32	개도국 지원 관련 대응 및 대책 수립	III	1.5%	429		
	33	EU 등 선진국 정책동향 시사점 발굴	III	1.5%	429		
	34	국가비건 자각증	III	1.4%	401		
	35	동기소득추진정책은 추진방안 수립(중장기 직물제 개편방안 포함)	III	1.3%	372		
	36	정책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III	1.9%	544		
	37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관리	III	1.1%	315		
	38	정책연구개발사업(프리즘) 관리	III	1.1%	315		
	39	FTA기금 운용규정 제·개정	III	1.0%	286		
	40	남북협력관련 대외협력 및 자료 조사	III	0.9%	258		
	41	FTA기금 집행 및 결산	III	0.9%	258		
	42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들 지원위원회 운영	III	0.9%	258		
	43	농업박람회 평가결과 보고 및 정산	III	0.7%	200		
	44	시도 농정국장회의 추진	III	0.7%	200		
	45	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 등록관리 업무	III	0.7%	200		
	4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지원 운영	III	0.6%	172		
	47	행사결과 보고 및 정산	III	0.4%	114		
	48	농정 지원담당관 운영	III	0.4%	114		
	49	처리과 공중	-	19.4%	5,552		

## ② 농지과

<표 3-148> 농지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지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27.5%가 IV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I	1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상	6.4%	1,694	
		2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운영	상	6.4%	1,694	
		3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상	6.3%	1,668	
		4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운영	상	6.3%	1,668	
	II	5	농지은행 제도 운용	상	4.6%	1,218	
		6	농지은행제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상	4.6%	1,218	
		7	농지연금 제도 운영	상	3.6%	953	
		8	농지원부 제도 운영	상	3.6%	953	
		9	농지법령 운용	상	3.0%	794	
		10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상	2.7%	715	
		11	농지처분제도 운영	상	2.0%	529	
		12	농지은행사업 홍보	상	1.8%	476	
		13	농지소유 및 사후관리제도 운영	상	1.0%	265	
		14	농지이용실태조사	상	1.0%	265	
		IV	15	농지개량제도 운영	중	4.9%	1,297
			16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중	4.6%	1,218
			17	농지보전부담금 채납 관리	중	3.1%	821
			18	농지 관련 통계 관리	중	2.7%	715
	19		농지불법전용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중	2.7%	715	
	20		농지종합정보화 추진	중	1.8%	476	
	21		농촌지형정보체계구축	중	1.8%	476	
	22		농촌행정시스템 운영	중	2.0%	529	
	23		농지 관련 세제 검토	중	1.0%	265	
	24		농지제도 개선 및 홍보	중	1.0%	265	
	25		농지취득인정	중	1.0%	265	
	26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이용증진 사업	중	0.9%	238	
	-	27	처리과 공통	-	19.2%	5,082	



### ③ 경영인력과

<표 3-149> 경영인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경영인력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59.8%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I	1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상	4.5%	1,085	
		2	농촌인력증개사업에 관한 사항	상	4.1%	988	
		3	농업법인제도 운영 및 개선	상	4.0%	964	
		4	농업인력육성 및 수급대책 수립 등	상	3.9%	940	
		5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상	3.8%	916	
		6	농업농촌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상	3.4%	820	
		7	농업법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상	3.4%	820	
		8	농업법인의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상	2.9%	699	
		9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쿼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상	2.8%	675	
		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상	2.4%	578	
		11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운영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상	2.2%	530	
		12	농업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상	2.0%	482	
		13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사항	상	1.9%	458	
		14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상	1.9%	458	
		15	농고·농대 등 예비농업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상	1.9%	458	
		16	현장실습교육장 및 첨단공동실습장 등 전문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상	1.9%	458	
		17	귀농·귀촌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운영	상	1.7%	410	
		18	농업인단체,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운영 지원	상	1.7%	410	
		19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운영	상	1.4%	337	
		20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상	1.4%	337	
		2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상	1.1%	265	
		22	농업분야 최저임금 대책 수립 및 홍보	상	1.0%	241	
		23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상	1.0%	241	
		24	농업농촌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상	1.0%	241	
		25	한국농수사대학 설치법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상	1.0%	241	
		26	한국농수사대학 책임운영기관 계획 및 평가	상	1.0%	241	
		27	귀농·귀촌 창업 등에 관한 교육운영	상	0.5%	121	
		2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중	2.4%	578	
		29	농업법인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중	2.4%	578	
		30	경영실습인대농장 사업 운영	중	1.9%	458	
		31	농업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중	1.5%	362	
		32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및 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사항	중	1.5%	362	
		33	후계농 및 청년농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중	1.5%	362	
		34	귀농인의 집 조성	중	1.1%	265	
		35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중	1.1%	265	
		36	농업회계장부에 관한 사항	중	1.0%	241	
		37	신지식농업인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1.0%	241	
		38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중	1.0%	241	
		39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사항	중	1.0%	241	
		40	농업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등 추천	중	1.0%	241	
		41	한국-뉴질랜드 FTA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중	1.0%	241	
		42	귀농·귀촌 종합센터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하	0.8%	193	
		43	농업교육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하	0.8%	193	
		44	귀농·귀촌 관리 정부 및 지자체 협의체 운영	하	0.4%	96	
		45	농산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사항	하	0.4%	96	
		46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하	0.5%	121	
		47	비영리법인 허가 및 관리업무	하	0.5%	121	
		48	제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0.5%	121	
		-	지리과 공통	-	-	16.9%	4,074

#### ④ 농업금융정책과

〈표 3-150〉 농업금융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업금융정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45.4%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III</p> <p>I</p> <p>IV</p> <p>II</p>	I	1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상	15.1%	4,181
		I	2	농협법 제·개정	상	5.4%	1,495
		II	3	농업관련조세관리	상	4.8%	1,329
			4	조합 지도·감독	상	3.9%	1,080
			5	농협중앙회 지도·감독	상	3.8%	1,052
			6	농협중앙회 지도·감독	상	3.8%	1,052
			7	농협 상호금융	상	3.8%	1,052
			8	협동조합 개혁	상	3.2%	886
			9	농협 신용사업	상	3.2%	886
			10	농산물모태펀드 운영	상	2.2%	609
			11	농협금융제도 개선	상	2.0%	554
			12	농협 구조개선법령 등 제·개정 및 운용	상	1.9%	526
			13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상	1.7%	471
			14	농협협동조합 건적육성	상	1.7%	471
			15	농협중앙회 규정 제·개정사항	상	1.7%	471
			16	협동조합 구조개선 추진	상	1.7%	471
			17	농협정책자금 검사실적 관리	상	1.7%	471
			18	농협협동조합자금 지원제도 운용	상	1.4%	388
			19	농협축산경영자금 지원제도 운용	상	1.4%	388
			20	농협림수산업 자신통보증기금 예산출연	상	1.3%	360
			21	농협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 운용	상	1.2%	332
			22	농협식품투자조합법 제·개정 및 운용	상	1.0%	277
			23	농어업인 부채경감법 제·개정	상	1.0%	277
			IV	24	농협 일반업무	중	4.7%
		25		농협림수산업 자신통보증제도관련	중	2.0%	554
		26		농협 검사청구 업무	중	1.7%	471
		27		농협림수산 정책자금대손보전제도 운용	중	1.7%	471
		28		농협농전기요금관리	중	1.7%	471
		29		정부 포상 관련 업무	중	1.6%	443
		30		농협 금융지주 지도감독	중	1.2%	332
		31		조합공동사업법인 업무	중	0.9%	249
		32		협동조합 설립인가	중	0.8%	222
		33		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중	0.8%	222
		34		협동조합 합병 인가	중	0.8%	222
		35		정책자금대출업무관련 규정운용	중	0.3%	83
		36		농특회계사업 융자 운영 지원	하	0.3%	83
		-		37	양통업무	-	-

### ⑤ 재해보험정책과

〈표 3-151〉 재해보험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보험정책과의 단위업무(공동업무 제외) 중 38.5%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17.8%로 존재함</li> </ul> <p>(업무비중)</p>	I	1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상	7.9%	1,650	
		2	손해평가사 자격 운용 및 제도 총괄	상	7.2%	1,504	
		3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보장보험 사업관리	상	7.0%	1,462	
		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	상	6.1%	1,274	
		5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의 운용	상	6.1%	1,274	
	II	6	농업재해 상황관리 및 복구지원	상	4.2%	877	
		III	7	농업재해대책 및 보험정책 기획	중	7.4%	1,545
	8		농업재해 관련 법령운용 및 제도개선	중	5.4%	1,128	
	9		농작물재해보험 교육·홍보, 손해평가 관리, 통계관리	중	5.0%	1,044	
	IV	10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운용	중	4.3%	898	
		11	가축재해보험 사업 운용	중	4.2%	877	
		12	가축재해보험 사업 관리	중	3.9%	815	
		13	농업기상상황 입수 및 전파	중	3.6%	752	
		14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운용	중	3.5%	731	
		15	농업재해대책 관련 일반업무 추진	중	3.1%	647	
		16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 추진	중	3.1%	647	
		17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	중	1.3%	272	
		18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중	0.7%	146	
		19	가축재해보험 교육·홍보	중	0.7%	146	
		20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관리	중	0.7%	146	
		21	가축재해보험 통계관리	하	1.7%	355	
	-	22	처리과 공통	-	12.9%	2,694	

다) 식량정책관

① 식량정책과

<표 3-152> 식량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식량정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0.4%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정부관리양곡 매입·보관·매출	상	9.5%	2,922	
		2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상	5.3%	1,630	
		3	식량정책 및 양곡 수급계획	상	5.3%	1,630	
		4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기금 예산집행 및 결산	상	5.2%	1,599	
		5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기금 예산편성	상	5.1%	1,569	
	II	6	산지쌀값조사관리	상	4.8%	1,476	
		7	공공비축제도 시행	상	3.5%	1,077	
		8	쌀시장 안정대책	상	3.4%	1,046	
		9	수입쌀 관리방안	상	2.0%	615	
		10	해외곡물 유통망 구축	상	1.9%	584	
		11	정부관리양곡 구매추진	상	1.6%	492	
		12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	상	1.6%	492	
		1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상	1.6%	492	
		14	전시 양곡수급 및 총무계획 수립	상	1.6%	492	
		15	APTERR를 활용한 해외 원조	상	1.6%	492	
		16	FAC/WFP를 통한 식량 원조	상	1.6%	492	
	IV	17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및 안전 품질관리	중	2.3%	707	
		18	소비자 시판용 양곡(수입쌀) 판매 관리	중	1.2%	369	
		19	시장접근물량(증량) 양허관세 추천업무	중	1.2%	369	
		20	양곡표시제 운영 및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중	0.9%	277	
		21	국제곡물관측	중	0.9%	277	
		22	대북 식량지원	중	0.9%	277	
		23	북한농산물(쌀 포함) 반입 및 귀속농산물 인수 등	중	0.9%	277	
		24	시장접근물량수입추천사후관리	중	0.9%	277	
		25	쌀 관세화 후속 대응	중	0.9%	277	
		26	양곡(미국)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	중	0.9%	277	
		27	양곡(미국)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	중	0.9%	277	
		28	양곡(미국)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	중	0.9%	277	
	28	WTO/DDA, FTA, APTERR, IGC 등 쌀 관련 국제업무	중	0.4%	123		
-	29	처리과 공통	-	-	32.1%	9,874	

## ② 식량산업과

〈표 3-153〉 식량산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식량산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62.5%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 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서류 생산 및 유통	상	6.1%	1,570	
	2	쌀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	상	5.5%	1,415		
	3	쌀 생산조정제 추진	상	4.9%	1,261		
	II	4	발 식량작물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상	4.4%	1,132	
	5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상	4.4%	1,132		
	6	두류 생산·유통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상	4.1%	1,055		
	7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	상	4.0%	1,029		
	8	미국중합처리장 운영	상	4.0%	1,029		
	9	양곡류(쌀 제외) 관세 운용	상	3.7%	952		
	1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	상	3.6%	926		
	11	맥류 생산 및 유통 등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상	3.6%	926		
	12	발 식량작물 발전에 관한 사항	상	3.6%	926		
	13	발 식량작물 수매 및 민간 수매지원에 관한 사항	상	3.6%	926		
	14	논 타작물 단지화 구축 지원	상	3.3%	849		
	15	쌀 및 쌀 활용 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사항	상	2.3%	592		
	16	콩, 옥수수 수매(약정)	상	2.2%	566		
	17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 관한 사항	상	2.0%	515		
	18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평가	상	1.9%	489		
	19	벼 영농추진상황 관리	상	1.9%	489		
	20	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정책에 관한 사항	상	1.8%	463		
	21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상	1.8%	463		
	22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상	1.4%	360		
	23	기타 발 식량 작물(서류,맥류,두류 제외) 육성 관련 사항	중	4.0%	1,029		
	24	쌀 가공 관련 R&D에 관한 사항	중	2.3%	592		
	25	식물방역법령 중 방제에 관한 사항	중	2.0%	515		
	26	밀산업 육성법 운용	중	1.9%	489		
	27	농산시책 평가 및 식량분야 보상에 관한 사항	중	1.9%	489		
	28	쌀 적정생산 수립	중	1.5%	386		
	29	방제 대상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중	1.0%	257		
	30	식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	1.0%	257		
	31	식량작물선도경영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중	0.6%	154		
	32	쌀 의무자조금 설치 지원	중	0.5%	129		
	33	공동농업경영체 관리에 관한 사항	중	0.5%	129		
	34	교육·컨설팅업체 인증제에 관한 사항	중	0.5%	129		
	35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하	0.4%	103		
	36	쌀 전업농 자조금 교육 지원	하	0.4%	103		
	-	37	처리과 공통	-	7.4%	1,904	

### ③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표 3-154〉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4.5%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 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 (업무비중)</p>	I	1	농업노동공익직불법 등 법령 및 관련 고시 등 규정 개정 및 운용	상	8.9%	1,478	
		2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 등 상담 및 처리	상	7.4%	1,229	
		3	직불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상	7.4%	1,229	
		4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상	6.4%	1,063	
	II	5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추진	상	4.7%	780	
		6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제도 운영 및 개선	상	3.7%	614	
		7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및 운영	상	3.7%	614	
		8	공익직불제 관리기관 지도·감독	상	3.3%	548	
		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상	3.1%	515	
		10	이행점검 전담관리기관 지정·운영	상	3.1%	515	
		11	공익직불제 사업추진 총괄	상	2.5%	415	
		12	공익직불제 관련 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협의	상	2.1%	349	
		13	공익직불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상	2.1%	349	
		14	공익직불기금 등 직불제 관련 예산 심의, 운용, 결산	상	2.1%	349	
		15	기본형 공익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상	1.6%	266	
		16	공익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총괄	상	0.4%	66	
		17	선택형 공익직불제(논활용직불제) 사업추진	중	2.1%	349	
	IV	18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중	2.1%	349	
		19	경영이양직불 사업추진	중	1.5%	249	
		20	경영이양직불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중	1.5%	249	
		21	논활용직불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중	1.5%	249	
	-	22	처리과 공통	-	-	28.8%	4,783

#### ④ 농업기반과

<표 3-155> 농업기반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업기반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26.6%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I	1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	4.8%	1,264	
		2	다목적농촌용수개발	3.3%	869	
		3	농업생산기반시설 운영 관리	3.2%	843	
		4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4.1%	1,080	
		5	기후변화해무려지역 실태조사	2.1%	553	
		6	농업용수 수질개선	1.9%	500	
		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괄업무	1.8%	474	
		8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대책	1.7%	448	
		9	농업생산기반시설 국유재산 관리	1.6%	421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농업용수 이용관리계획 수립·조정	1.2%	316	
		11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지단	0.9%	237	
	IV	12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운영	2.2%	580	
		13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관계기관 협력업무 추진	1.8%	474	
		1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	1.7%	448	
		15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대책	1.7%	448	
		16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1.6%	421	
		17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이관	1.6%	421	
		18	기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영	1.3%	342	
		19	해빙대비 용수개발	1.3%	342	
		20	반계부처 합동 가뭄 종합대책 수립(매년)	1.3%	342	
		21	환경부·농식품부 합동 수질관리협의회 운영	1.2%	316	
		22	지역별 강수량·저수율 모니터링	1.2%	316	
		23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1.2%	316	
		24	농업용수 수질관리지침 운영	1.2%	316	
		25	반계부처 합동 가뭄 TF 운영	1.2%	316	
		26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 인자제한	1.2%	316	
		27	농업용수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1.2%	316	
		28	반계부처 합동 가뭄 예·경보	1.2%	316	
		29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등 관련 기술업무	1.2%	316	
		30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0.9%	237	
		31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진대책	0.9%	237	
		32	민간강수계 농촌용수	0.9%	237	
		33	저수지 주변지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추진	0.9%	237	
		34	농촌용수 국제협력 업무	0.9%	237	
		35	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보완	0.8%	211	
		36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지침 운영	0.8%	211	
		37	농업기반 정비	0.8%	211	
		38	지진 발생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0.8%	211	
		3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 작성 운영	0.8%	211	
		4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소송업무	0.8%	211	
		41	제주농업용수 통합관려화	0.8%	211	
		42	지해예방 계획 관리	0.5%	132	
		43	저수지 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영	0.5%	132	
		44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운영	0.5%	132	
		45	저수지 조성	0.5%	132	
		46	지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운영	0.5%	132	
		47	방조제 관리법 운영	0.5%	132	
		48	환경지대행방인 및 환경시가지경시합 제도 운영 및 관리	1.3%	342	
		49	농업용 지하수자원 관리	0.5%	132	
		50	다목적용수 농업생산기반 정비	0.5%	132	
		-	-	51	지리과 공통	32.7%

⑤ 간척지농업과

<표 3-156> 간척지농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간척지농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58.9%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 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새만금 내부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업추진)	상	11.0%	2,510	
	2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사의 관리·처분	상	5.2%	1,187		
	3	새만금사업 관련 대외협력 및 기타사항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상	4.3%	981		
	4	새만금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협의	상	3.8%	867		
	5	간척지 활용·운영 및 증장기 계획 수립	상	3.7%	844		
	6	새만금 농업용수 확보대책	상	2.8%	639		
	7	새만금 준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상	2.8%	639		
	8	삼교양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 등 3지구 사업추진	상	2.6%	593		
	9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추진	상	2.1%	479		
	10	새만금 잣바리부지 매립 및 대외협력 추진	상	2.1%	479		
	11	간척지의 농어업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상	1.9%	434		
	12	새만금 공유수면 환경 및 수질관리 등	상	1.9%	434		
	13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 수립	상	1.9%	434		
	14	대단위농업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인가, 변경, 준공	상	1.8%	411		
	15	간척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	상	1.8%	411		
	16	간척사업 총사업비 추정	상	1.8%	411		
	17	대단위사업 관련 소송 수행	상	1.7%	388		
	18	사업추진에 관한 간척지 임시시용 등에 관한 사항	상	1.7%	388		
	19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관련 업무(양도양수, 준공도차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상	1.5%	342		
	20	새만금 준공도차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상	1.4%	319		
	21	새만금 기본계획 및 증장기계획 수립	상	1.7%	274		
	22	새만금개발공사 대외협력 및 현물출자 관련 사항 등	상	1.4%	319		
	23	새만금 위험회피에 관한 사항	상	1.2%	274		
	2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양도양수	상	1.1%	251		
	25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상	1.0%	228		
	26	대단위 농업개발 공적추진 및 청사	상	1.0%	228		
	27	수해피해 복구계획수립 및 복구추진	상	1.0%	228		
	28	농지범용화사업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상	1.0%	228		
	29	새만금 농업생시기바시성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	상	1.0%	228		
	30	새만금 사업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등 추진	상	1.0%	228		
	31	농지범용화사업사업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상	1.0%	228		
	32	배수개천사업 계속 및 준공지구 시행계획변경 협의	상	1.0%	228		
	33	배수개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상	1.0%	228		
	34	배수개천사업 기본조사 및 신규착수지구 선정	상	1.0%	228		
	35	배수개천사업 기본조사를 위한 적정성검토	상	1.0%	228		
	36	용지매수보상 세목고시	상	0.9%	205		
	37	간척사업 추진	상	0.9%	205		
	38	영사간 농업특화단지 관리	상	0.7%	160		
	39	대단위사업 관련 협의인가	상	0.6%	137		
	40	새만금 관련 민원	상	0.6%	137		
	41	새만금 특별법 운용	상	0.6%	137		
	42	새만금 방조제 및 배수갑문 관리 운영	상	0.5%	114		
	43	여름철 재해대책계획 수립 및 추진	상	0.3%	68		
	44	우기대비 수리시설 안전점검계획수립 및 추진	상	0.3%	68		
	45	우기대비 축적관리계획수립 및 추진	상	0.3%	68		
	46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상	0.3%	68		
	47	처리과 공통	상	19.8%	4,518		
IV							



라) 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총괄과

<표 3-157> 국제협력총괄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국제협력총괄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41.7%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5.6%로 존재함</p> <p>(업무비중)</p>	I	1	농산물수출사업 해외지출사업 운영	상	5.7%	1,941	
	2	협력위원회 운영	상	3.7%	1,260		
	3	협력협정 체결	상	2.9%	987		
	4	시급방식특별업무 총괄	상	2.8%	953		
	5	해외농업지원개발 협력업무 운영	상	2.7%	919		
	6	FAO 총회, 이사회 및 소속위원회 관련업무	상	2.5%	851		
	7	FAO와의 여려·협력 업무 총괄	상	2.3%	783		
	8	FAO, AFD, WB 등 국제기구와의 중·상위 사회개발 분야 관련업무	상	2.1%	715		
	9	ASEAN+3 농림장관회의	상	1.7%	579		
	10	국제기구 연계 식량원조 사업	상	1.6%	545		
	11	양자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상	1.5%	511		
	12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농업협력	상	1.5%	511		
	13	하·아세안 농업협력	상	1.5%	511		
	14	외국과의 장관급 회의	상	1.5%	511		
	15	기급 통상협안 조정	상	1.5%	511		
	16	해외이력신사업	상	1.4%	477		
	17	중·외 이사 면담	상	1.4%	477		
	18	정책통상협의체 대응	상	1.4%	477		
	19	외국농업전문수진 및 활용	상	1.4%	477		
	20	국과의 실무회의	상	1.1%	375		
	21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상	1.1%	375		
	22	외국 주최 행사 참가	상	1.1%	375		
	23	WFP 등 식량원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상	0.9%	306		
	24	해외투자	상	0.8%	272		
	25	외국 투자유치	상	0.8%	272		
	26	식량원조위원회(FAC) 대응	상	0.5%	170		
	27	국제농업협력 사업(기획협력)	상	5.6%	1,907		
	28	국제농업협력 사업(국제기구 협력)	상	4.9%	1,668		
	29	해외농업지원개발 심의회 운영	상	2.8%	953		
	30	해외농업개발사업 신고, 접수 승인	상	2.7%	919		
	31	국제교류협력일람	상	1.5%	511		
	32	협력사업 이행 및 평가	상	1.5%	511		
	33	국제농업협력 사업(건설팀)	상	1.5%	511		
	34	FAO 등 국제농기구의 농업관리자료 및 동향분석 자료	상	1.2%	409		
	35	FAO 등 국제농기구 관련 행사개최 및 관련 국제체 지원	상	1.0%	341		
	36	해외주재 농무관 업무지도	중	0.9%	306		
	37	한국개발은행(KDB) 지원사업별별대응협력팀(KOICA) 관련협조	중	0.7%	238		
	38	국제농업관련 단체업무 지도	하	0.8%	272		
	39	처리과 공통	-	27.5%	9,364		

## ② 농업통상과

〈표 3-158〉 농업통상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업통상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40.3%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5.0%로 존재함</p> <p>(업무비중)</p>	I	1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상	12.2%	2,164	
		2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논의 대응	상	9.4%	1,667	
		3	쌀관세화 관련 후속조치 이행(신규)	상	7.0%	1,242	
		4	WTO/DDA 농산물	상	6.1%	1,082	
		5	G20 정3회의 및 농업장관회의 대응	상	5.6%	993	
		6	WTO 무역정책 검토	상	3.3%	585	
	II	7	WTO 농산물 보조분야 통보	상	3.3%	585	
		8	WTO 농산물시장접근분야 통보	상	3.3%	585	
		9	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이행	상	2.6%	461	
		10	WTO 농산물보조금분야 이행	상	2.2%	390	
	III	11	APEC 및 기타 국제기구 대응	중	5.0%	887	
		12	농산물관세제도 및 탄력관세 관리	중	4.5%	798	
	IV	13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장개량행위과 국내정책과의 조화유도	중	2.2%	390	
		14	아태무역협정(APTA) 대응	중	2.1%	372	
		15	일반특혜관세 공여	중	2.1%	372	
		16	WTO 농산물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중	1.9%	337	
		17	WTO 통일원산지 협3	중	1.9%	337	
		18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대응	중	1.9%	337	
		19	WTO 국영무역 등 기타분야 통보	중	1.3%	231	
		20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농업정책 점검과 평가 대응	중	1.1%	195	
		21	WTO 서비스 협정 대응	중	1.1%	195	
		22	WTO 정부조달 협정 대응	중	0.9%	160	
		23	WTO/DDA 비농산물	중	0.8%	142	
		24	WTO/DDA 기타분야	중	0.8%	142	
		25	WTO 기타분야 이행	중	0.8%	142	
		26	WTO 분쟁해결기구(DSB) 대응	중	0.8%	142	
		27	WTO 정부조달협정위원회 대응	중	0.8%	142	
		28	WTO 신규가입국 협3	중	0.6%	106	
		29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영 관리	하	1.2%	213	
		30	북한산 농산물 교역	하	0.4%	71	
		31	WTO 무역개발위원회(CTD) 대응	하	0.4%	71	
		32	WTO 지적재산권위원회(TRIPs) 대응	하	0.4%	71	
		-	33	처리과공통	-	12.0%	2,129

### ③ 검역정책과

〈표 3-159〉 검역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검역정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5.2%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III</p> <p>I</p> <p>IV</p> <p>II</p>	<p>I</p> <p>II</p> <p>IV</p>	1	동축산물 수입검역 및 통상 업무	상	7.8%	1,882
			2	동축산물 국경검역 관련 업무	상	6.0%	1,448
			3	수출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업무	상	6.0%	1,448
			4	FTA/SPS 위원회	상	5.2%	1,255
			5	수출입식물 국제검역협력	상	4.5%	1,086
			6	WTO/SPS, WTO/TBT 협정 관련 업무	상	4.1%	989
			7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상	4.1%	989
			8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련 총괄	상	4.0%	965
			9	식물검역제도 수립	상	3.6%	869
			10	수입위생조건 등 고시 운영	상	3.3%	796
			11	식물방역법령의 운용	상	3.2%	772
			12	수출 검역·통상 관련 업무	상	2.9%	700
			13	가축전염병예방법(수입검역) 운용	상	2.4%	579
			14	식물검역관련 중요정책 기본계획 수립	상	1.9%	458
			15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출검역) 및 수출위생검역조건 등 제개정	상	1.2%	290
			16	농림축산업용LMO의 환경방출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조사	중	3.4%	820
			17	LMO 안전관리체계구축	중	3.2%	772
			18	세계동물기구(OIE) 관련 협력	중	2.1%	507
			19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 작성	중	2.0%	483
			20	SPS 국제동향 조사 연구위원 관리	중	2.0%	483
			21	수출입식물 국경검역	중	2.0%	483
			22	검역통계 및 해외정보 분석 업무	중	1.8%	434
			23	국제식물검역인증원지도·관리	중	1.6%	386
			24	SOFA 동·식물검역 업무	중	1.1%	265
			25	해외 검역 및 위생동향 전파	중	1.1%	265
			26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관련 협력	중	1.1%	265
			2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도·관리(추가)	중	1.1%	265
			28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중	1.1%	265
			29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용	중	1.1%	265
			30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관리	중	0.6%	145
			31	농림축산업용LMO 안전관리 계획 수립	중	0.6%	145
			32	수출입식물 병해충위험분석	하	1.3%	314
			33	해외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하	0.9%	217
			34	동물 및 축산물 수출 검역 지원	하	0.9%	217
			35	동물검역 관련 연구개발 및 기타 업무	하	0.9%	217
			36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책 추진	하	0.5%	121
			-	37	처리과공통	-	9.4%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표 3-160>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52.9%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12.1% 존재함 (업무비중)</p>	I	1	상품협력등 농업관련 협상진행	상	14.4%	3,326	
		2	FTA 영향분석	상	7.4%	1,709	
		3	FTA 관련 부서·부처간 협조	상	6.6%	1,525	
		4	FTA추진 관리·협상대응계획 및 결과 보고	상	6.4%	1,478	
		5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전략수립	상	6.4%	1,478	
		6	해외동향·시장조사	상	6.0%	1,386	
		7	SPS/TBT 협상	상	5.7%	1,317	
	II	8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 협상	상	3.3%	762	
		9	원산지 협상	상	2.9%	670	
		10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부서간 협조	상	2.6%	601	
		11	FTA협상지원시스템 구축·관리	상	2.3%	531	
		12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정보 수집 관리	상	2.5%	578	
		13	FTA 이행위원회 의제 관련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전략 수립	상	2.5%	578	
		14	FTA 이행위원회 참석 대응	상	1.8%	416	
	III	15	FTA 관련 정보 수집·관리연구업무	중	6.5%	1,502	
		16	수출입 등 관련 통계 자료 관리	중	5.6%	1,294	
	IV	17	FTA관련 교육·홍보	중	1.2%	277	
	-	18	처리과공통	-	15.9%	3,673	

마) 축산정책국

① 축산정책과

<표 3-161> 축산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축산정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63.0%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하                      중                      상                      (중요도)</p>	I	1	축산관계 법령 준수사항 통합 점검관리	6.1%	2,314	
			2	축산업 개성	6.1%	2,314	
			3	축산물유통대책수립	4.7%	1,783	
			4	중장기 축산발전대책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4.7%	1,783	
			5	축산물전기금운용계획수립	3.6%	1,365	
			6	축산물전기금지원관리	3.6%	1,365	
			7	축산안전관리업 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1%	1,176	
			8	축산업 허가 관리	3.1%	1,176	
			9	축산업 허가/등록제 정책방향 수립	3.0%	1,138	
			10	축산업 축사자 의무교육 추진	3.0%	1,138	
			11	축산정책 주요현안 기획 및 조정	2.6%	986	
			12	축산자조금법제도운용	2.6%	986	
			13	축산농업법제도 운용	2.5%	948	
			14	축산물전기금 재산관리	2.4%	910	
			15	축산업육성 지원	2.4%	910	
			16	축산업 허가/등록제 추진상황 지도점검	2.4%	910	
			17	축산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운영	1.9%	721	
			18	경마 시행 및 견전화	1.9%	721	
			19	한국마사회 지도·감독	1.9%	721	
			20	축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8%	683	
			21	한국마사회법제개정및 운용	1.6%	607	
			22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6%	607	
			23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관리	1.3%	493	
			24	축산분야 WTO, FTA 협상대비 국내대책 마련	1.3%	493	
			25	축산업육성법 제개정및 운용	1.2%	455	
			26	중장기 축산발전대책 시행 및 점검, 조정	0.8%	303	
			27	중단기 축산정책자금지원목표수립	0.8%	303	
			28	축산물전기금 차상운용 관리	0.7%	265	
			29	축산물전기금 대손보전관리	0.7%	265	
			30	축산정책자금지원	0.7%	265	
			31	축산분야 일자리 창출 총괄	0.5%	190	
			32	도축기공시설 설치·운영지원	0.4%	152	
			33	중단기 축산사업목표수립	0.1%	38	
			34	축산사업시행사업평가관리	0.1%	38	
			35	전통소싸움경기 허가 및 개최계획 승인	0.9%	341	
			36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0.7%	265	
			3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개정및 운용	0.6%	228	
			38	도축사업 육성지원 및 도축장 구조조정	0.3%	114	
-	39	처리과공통	-	22.3%	8,458		

## ② 축산경영과

〈표 3-162〉 축산경영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축산경영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2.6%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중요도)</p>	I	1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인정에 관한 업무	상	6.2%	1,970	
	2	축산물 가격조사에 관한 업무	상	5.1%	1,620		
	3	축산물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상	4.6%	1,461		
	4	ICT 융복합 축사 지원에 관한 업무	상	2.3%	731		
	5	스마트축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상	2.3%	731		
	6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	상	2.3%	731		
	7	기축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체계 관리	상	2.0%	635		
	8	축산물 이력관리제 정보 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	상	2.0%	635		
	9	가금 사업 육성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상	1.9%	604		
	10	축산계열회사사업에 관한 법률 운용	상	1.9%	604		
	11	가축개량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상	1.7%	540		
	12	양돈사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상	1.7%	540		
	13	양돈·유가공·육우·양돈사업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상	1.6%	508		
	14	양돈사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상	1.5%	477		
	15	학교·군 등 단체 우유급식에 관한 업무	상	1.5%	477		
	16	기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상	1.4%	445		
	17	한우·육우·양돈·유가공·육우·양돈사업발전계획 수립·추진 업무	상	1.3%	413		
	18	소 및 쇠고기 수출인에 관한 사항	상	0.9%	286		
	19	중축 개량 목표설정 및 발전계획 수립·추진 업무	상	0.9%	286		
	20	축산물 FTA에 관한 업무 총괄	상	0.7%	222		
	21	돼지고기 수출인에 관한 사항	상	0.1%	32		
	22	중축 별자조급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상	4.9%	1,557		
	23	한우·양돈·가금·양돈·유가공·육우·양돈사업발전계획 수립·추진 업무	상	3.7%	1,175		
	24	축산물 수급 조절협의회 운영 업무	상	3.4%	1,080		
	25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상	2.3%	731		
	26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상	2.0%	635		
	27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홍보·교육에 관한 업무	상	2.0%	635		
	28	축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총괄	상	1.4%	445		
	29	다동지흥법 관리 운용	상	1.5%	477		
	30	양돈·유가공·육우·양돈사업발전계획 수립·추진 업무	상	1.4%	445		
	31	가축현대화 축사발전 등 축사분야 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상	1.4%	445		
	32	가금·기축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상	1.1%	349		
	33	양돈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용	상	1.1%	349		
	34	양돈사업 육성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상	1.1%	349		
	35	축산물 브랜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상	1.0%	318		
	36	축산농가 재해관리에 대한 업무	상	0.9%	286		
	37	승하차 생산안전 사업에 관한 업무	상	0.9%	286		
	38	계란GP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상	0.8%	254		
	39	축산계열화 육성 지원 및 평가에 대한 업무	상	0.8%	254		
	40	축산분야 국가기술키워드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상	0.8%	254		
	41	DNA 동일성 검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	하	2.1%	667		
	42	닭·오리·계란 수출인에 관한 사항	하	1.7%	540		
	43	양돈 관련 수출인 관리	하	0.9%	286		
	44	중축업, 정액처리업, 부화업 제도 관리에 관한 업무	하	0.9%	286		
	45	이력제관리 법안 단체 지도 감독	하	0.7%	222		
	46	중축 수출인 관리에 관한 사항	하	0.6%	191		
	47	가축개량 관련 법안 단체 지도 감독	하	0.4%	127		
	48	축산식품산업, 식육·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하	0.3%	95		
	-	50	처리과공통	-	16.0%	5,083	

### ③ 축산환경자원과

〈표 3-163〉 축산환경자원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축산환경자원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9.9%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상	8.9%	2,298
		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상	8.9%	2,298
		3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상	7.2%	1,859
		4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상	6.5%	1,679
	II	5	「초지법」 운용 및 개정	상	4.9%	1,265
		6	사료관리법령 운용 및 제도개선	상	4.9%	1,265
		7	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상	4.2%	1,085
		8	축산환경 정책기획	상	4.1%	1,059
		9	사료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업무	상	3.7%	956
		10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	상	3.1%	801
		11	가축분뇨 관련 법령의 운용	상	2.6%	671
		12	축산환경 컨설팅,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상	2.6%	671
		13	양분관리제 및 경축순환농업 종합대책 수립	상	2.5%	646
		14	퇴비 부숙도등 퇴액비품질관리	상	2.5%	646
		15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상	2.4%	620
		16	친환경축산교육·홍보사업	상	2.4%	620
	IV	17	가축분뇨 처리·이용 대책 수립	중	1.8%	465
		18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 관리	중	4.5%	1,162
		19	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	중	3.7%	956
		20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및 관리	중	2.6%	671
		21	산지생태축산 교육·홍보사업	중	1.9%	491
		2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등 자원화	중	1.9%	491
		24	축산분야 미세먼지 대응	중	1.9%	491
		25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중	1.5%	387
		26	사료공장 HACCP 운용	중	1.4%	362
		27	사료원료 할당, 양허관세 운용	중	1.4%	362
		28	축산환경 관련 R&D 연구	중	0.9%	232
		29	가축분뇨 통계관리	중	0.2%	52
		30	가축분뇨처리 표준설계 및 관련기술 평가	하	0.9%	232
		31	사료시험검사기관 운용	하	0.9%	232
		32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하	0.2%	52
		-	33	처리과 공통	-	2.9%

바) 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과

<표 3-164> 방역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역정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60.0%가 IV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5.7% 존재함 (업무비중)</li> </ul>	III	1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 개정·운동	중	5.7%	1,771	
	2	방역 교육홍보 기획	중	4.4%	1,367		
	3	시도 가축방역사업 집행 및 결산	중	4.1%	1,274		
	4	방역분야 연구개발	중	3.7%	1,150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도감독	중	3.7%	1,150		
	6	가축방역 사업평가 및 포상	중	3.0%	932		
	7	표준진료제	중	2.6%	808		
	8	가축방역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중	2.6%	808		
	9	가축방역사업 운영 지도 및 제도개선	중	2.3%	715		
	10	동물보건사	중	2.3%	715		
	11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운용	중	2.2%	684		
	12	중단기방역발전기본계획 수립	중	2.1%	653		
	13	수의사법령 개정	중	2.1%	653		
	14	방역분야 주요업무계획수립	중	2.0%	622		
	15	방역분야 국정과제	중	1.9%	590		
	16	시도가축방역사업시행지침 관리·운동	중	1.9%	590		
	17	가축전염병관리대책 수립	중	1.6%	497		
	18	방역분야 남북협력사업	중	1.6%	497		
	19	수의사법	중	1.6%	497		
	20	방역분야의 제도개선·규제완화	중	1.5%	466		
	21	가축방역 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시행	중	1.3%	404		
	22	방역분야 조직·인력관리	중	1.2%	373		
	23	가축방역심의회 운용	중	1.2%	373		
	24	타 법령표에 의한 방역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중	1.2%	373		
	25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업무	중	1.2%	373		
	26	동물위생시험소법관련 업무	중	1.1%	342		
	27	공중방역수의사법	중	1.1%	342		
	28	방역수립(가축질병 상황실 운영 범부처영성회의 준비) 업무	중	1.1%	342		
	29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개정	중	1.0%	238		
	30	가축방역협의회	중	1.0%	238		
	31	대한수의사회 지도감독	중	0.8%	249		
	32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중	0.8%	249		
-	33	처리과공통	-	34.1%	10,598		



## ② 구제역방역과

〈표 3-165〉 구제역방역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구제역방역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23.4%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I</p> <p>II</p> <p>IV</p>	1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사슴모성소모성질염 등 방역대책 추진	상	12.6%	3,660	
		2	구제역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	상	5.9%	1,714	
		3	소독관리 전반	상	5.2%	1,510	
		4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 추진	상	4.3%	1,249	
		5	살처분보상금 예산 집행 및 운용	상	2.5%	726	
		6	구제역·AI 백신 대책 수립·운영	상	2.5%	726	
		7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해 백신제조시설 구축사업 지원	상	2.2%	639	
		8	구제역·AI 백신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	상	2.2%	639	
		9	가축방역관 및 축산농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관리	상	1.4%	407	
		10	돼지농장 울타리 등 방역시설 개보수	상	1.3%	378	
		11	국내 대가축(소, 말 등) 방역대책 수립·추진	중	3.4%	988	
		12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관리 업무	중	2.5%	726	
		13	방역시설 지원 사업 추진(CCTV 등 방역인프라구축 지원)	중	2.5%	726	
		14	살처분매몰비지원	중	2.5%	726	
		15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 전반	중	2.5%	726	
		16	가축방역 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시행	중	2.4%	697	
		17	질병관리 등급제 운영	중	1.8%	523	
		19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지원	중	1.3%	378	
		20	중가축(돼지, 사슴, 양 등) 방역대책	중	1.2%	349	
		21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 운용	중	0.9%	261	
		22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돼지열병 관련 고시 등 규정 운영	중	0.9%	261	
		23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운용	중	0.7%	203	
		24	중가축 농장 위생관리	중	0.2%	58	
		25	대가축 농장 위생관리	하	0.9%	261	
		26	AI 백신 개발 및 국내 제조회사 관리 업무	하	0.4%	116	
		27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운영	하	0.3%	87	
		28	중앙집검반 운영	하	0.3%	87	
		29	대가축 농장 위생관리	하	0.9%	261	
		30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돼지열병 관련 고시 등 규정 운영	중	0.9%	261	
		31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운용	중	0.7%	203	
		32	AI 백신 개발 및 국내 제조회사 관리 업무	하	0.4%	116	
		33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 운영	하	0.3%	87	
		34	중앙집검반 운영	하	0.3%	87	
		35	중가축 농장 위생관리	중	0.2%	58	
		-	36	처리과 공통	-	31.5%	9,149

### ③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표 3-166〉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5.6%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AI 방역대책 수립·추진	상	10.0%	2,497
		2	축산차량 통제및관리	상	7.8%	1,948
		3	KAHIS 등 가축방역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상	6.3%	1,573
		4	AI 긴급행동지침(SOP) 운용	상	5.6%	1,398
		5	통제초소 관리 운영	상	5.5%	1,373
	II	6	AI 방역실시요령 등 규정 운용	상	4.7%	1,174
		7	축사체처리지원사업	상	4.7%	1,174
		8	동물용의약품산업지원	상	4.3%	1,074
		9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규운영	상	3.7%	924
		10	소가축질병 방역	상	3.7%	924
		11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	상	3.4%	849
		12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 운영	상	3.1%	774
		13	가축살처분인력 및 매몰지사후관리	상	3.0%	749
		14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	상	3.0%	749
		15	동물용의약품등록규칙개정	상	2.0%	499
	IV	16	꿀벌 질병 방역	중	3.4%	849
		17	AI 비상훈련(CPX) 추진	중	2.9%	724
		18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중	2.3%	574
		19	동물용의약품 항생제 내성관리	중	1.9%	474
		20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 지원	중	1.5%	375
		21	축 질병 치료 보험	중	1.5%	375
		22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령개정	하	1.1%	275
	-	23	처리과공통	-	14.6%	3,646

사) 식품산업정책관

① 식품산업정책과

<표 3-167> 식품산업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산업정책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16.1%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 (업무비중)</li> </ul>	I	1	식품기술개발(R&D) 및 지원업무	상	8.7%	2,579	
		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상	7.4%	2,194	
	II	3	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상	3.2%	949	
		4	산학연 연계 식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상	2.6%	771	
		5	식품산업관련 국정과제·공약·정책평가	상	2.6%	771	
		6	식품산업진흥법령 운용	상	2.4%	711	
		7	국내외 식품 시장동향 및 현황조사	상	1.9%	563	
		8	식품관련 제도 및 규제개혁	상	0.1%	30	
	IV	9	식품,외식분야 물가 관리	중	3.9%	1,156	
		10	식품의 FTA, WTO/DDA 협상 대응	중	3.7%	1,097	
		11	푸드테크스타트업등 신산업발굴 및 육성	중	2.2%	652	
		12	식품산업정책관실연구용역	중	2.2%	652	
		13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	중	2.0%	593	
		14	식품산업 통계, 정보분석 및 제공	중	1.6%	474	
		15	CODEX 등 국제식품규격 대응	중	1.2%	356	
		16	가공식품KS 표준	중	1.2%	356	
		17	식품표준화 사업	중	1.2%	356	
		18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운영	중	1.2%	356	
		19	대한민국식품대전 행사 추진	중	1.2%	356	
		20	식품외식일자리 업무	중	1.1%	326	
		21	식품산업 교육, 훈련 지원 업무	중	0.9%	267	
		22	식품외식전망대회추진	중	0.9%	267	
		23	농식품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사업추진	중	0.8%	237	
		24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운영	하	1.9%	563	
	-	25	처리과공통	-	43.9%	13,015	

## ② 식품산업진흥과

〈표 3-168〉 식품산업진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산업진흥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4.3%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li> </ul> <p>(업무비중)</p>	I	1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상	7.5%	1,193	
		2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	상	6.9%	1,097	
		3	전통주산업육성지원	상	5.6%	891	
	II	4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상	4.9%	779	
		5	주류관련 법제 정비 및 규제개선	상	4.3%	684	
		6	전통주등의 산업진흥	상	4.3%	684	
		7	식품산업진흥 관련 기획	상	3.7%	588	
		8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 운용	상	3.7%	588	
		9	식품외식종합자금운용	상	2.8%	445	
		10	전통주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상	2.7%	429	
		11	전통식품산업 육성 지원	상	2.5%	398	
		12	식품명인 발굴 및 육성	상	1.9%	302	
		13	전통식품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상	1.2%	191	
		14	전통식품명인지정	상	1.2%	191	
		15	술 품질인증 등 고급화 지원	상	1.1%	175	
		IV	16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	3.8%	604
			17	중소식품기업 육성사업 관련 예·결산	중	2.7%	429
			18	식품기업 컨설팅 지원	중	2.6%	413
	19		김치산업육성 지원	중	2.5%	398	
	20		김치산업진흥법 운용	중	2.5%	398	
	21		통합성과관리 등 평가 관리	중	1.9%	302	
	22		설탕할당관세 운영	중	1.6%	254	
	23		식품 제도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중	1.3%	207	
	24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	중	1.2%	191	
	25		전통주관련 단체 지원 및 관리	중	0.7%	111	
	26		전통식품품질인증	중	0.6%	95	
	27		전통식품Codex 규격화추진(소기능: 식품의 규격 기준으로 변경)	중	0.2%	32	
	28		정책실명제(전통발효식품육성)	중	0.2%	32	
	29		우수문화상품 발굴육성	하	0.6%	95	
	-	30	처리과공통	-	23.3%	3,705	

### ③ 외식산업진흥과

〈표 3-169〉 외식산업진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외식산업진흥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1.7%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18.5% 존재함</p> <p>(업무비중)</p>	I	1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상	7.2%	1,191	
		2	한식진흥법 및 하위법령, 고시 등 제·개정, 운용 등	상	6.4%	1,058	
		3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예산,결산	상	6.1%	1,009	
		4	국내외 한식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상	6.0%	992	
		5	외식업체 육성 및 창업 지원	상	6.0%	992	
	II	6	한식정책 기본계획 수립	상	4.5%	744	
		7	음식관광 상품 개발 및 보급	상	4.5%	744	
	III	8	해외 확산 지원	중	7.0%	1,158	
		9	외식물가 모니터링 및 이슈 대응	중	5.8%	959	
		10	푸드페스타&캠페인	중	5.7%	943	
	IV	11	외식분야 식재료 산업 육성 및 유통개선	중	4.6%	761	
		12	외식업체 해외진출 지원	중	4.6%	761	
		13	한식 행사	중	3.9%	645	
		14	외식산업 관련 조사·연구·통계·정보화	중	3.7%	612	
		15	외식산업진흥법령 운용	중	3.7%	612	
		16	한식진흥원 지도·감독	중	3.4%	562	
		17	한식 정보분석 및 콘텐츠 확산	중	3.0%	496	
		18	한식문화관 운영	중	2.4%	397	
		19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중	1.7%	281	
		20	한식 및 외식관련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하	1.2%	198	
	-	21	처리과공통	-	8.6%	1,422	

#### ④ 수출진흥과

<표 3-170> 수출진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수출진흥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49.3%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I	1	농식품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상	4.6%	797	
		2	주요 수출국별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상	4.6%	797	
		3	수출전문조직 육성	상	2.5%	433	
		4	농식품수출대책수립	상	2.3%	399	
		5	수출물류비지원	상	3.8%	659	
		6	농식품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상	3.1%	537	
		7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수출 효율화 방안 마련	상	4.5%	780	
		8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적용 대응	상	1.0%	173	
		9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상	6.0%	1,040	
		10	수출농식품현지화·상품화·채외공관 연계사업	상	2.5%	433	
		11	온라인모바일마케팅	상	3.5%	607	
		12	미래클K-Food 프로젝트	상	0.6%	104	
		1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사업(용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상	2.3%	399	
		14	수출전문단지 지정·운영 및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상	2.3%	399	
		15	수출 관련 R&D 지원	상	1.3%	225	
		16	해외인중수출보험통관 지원, 수출물류비 및 공동항공물류지원, 수출전문인력 육성	상	1.3%	225	
	17	농식품수출통계 및 동향 분석	상	1.0%	173		
	18	농식품해외시장지출정보분석	상	1.0%	173		
	19	해외 정보조사, 해외 비관세 장벽 조사 및 검토	상	1.1%	191		
	20	수출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상	2.5%	433		
	21	농산물전문생사단지 활성화지원	상	2.0%	347		
	22	해외 식품인증 지원	상	1.3%	225		
	23	푸드티어업체 지원	상	1.3%	225		
	24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관련 가공식품 인준관리 대응 지원	상	0.8%	139		
	25	해외 식품인증지원센터운영	상	1.3%	225		
	26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공급체인 시스템 구축	상	2.5%	433		
	27	해외인테이션운영 및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사업	상	3.8%	659		
	28	해외 박람회 및 바이어거래알선 사업	상	3.8%	659		
	29	지자체 공동마케팅 추진	상	3.5%	607		
	30	대중국 수출 전략품복합성사업	상	1.3%	225		
	31	민간 기업(업체·바이어)대상 공모사업	상	3.8%	659		
	32	K-FOOD FAIR 개최	상	2.5%	433		
	33	미관협력 특화사업추진	상	3.8%	659		
	34	국내외 농식품홍보과운영	상	2.0%	347		
	35	미디어 마케팅	상	2.0%	347		
	36	국가별소비자체험행사추진	상	1.4%	243		
	37	수출 서도조직 및 협의회 육성	상	2.2%	381		
	38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상	0.5%	87		
	39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파견 및 운영	상	1.2%	208		
	40	기타 신시장 진출업체 시장개척 지원	상	1.2%	208		
	-	41	처리과공통	-	6.0%	1,040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표 3-17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6.6%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 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li> </ul> <p>(업무비중)</p> <p>(중요도)</p>	I	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운영 및 지도·감독	상	6.8%	1,093	
		2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세부사업계획 수립	상	6.5%	1,044	
		3	기능성식품제형센터구축	상	6.3%	1,012	
		4	청년식품창업허브구축	상	6.3%	1,012	
		5	가정편의식(HMR) 기술지원센터 구축	상	5.7%	916	
		6	농식품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기반구축	상	5.1%	819	
	II	7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관계기관 회의	상	4.9%	787	
		8	국정과제 등 업무보고	상	4.3%	691	
		9	청년식품창업Lab 운영·관리	상	4.2%	675	
		10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 세부계획	상	4.1%	659	
		11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상	3.2%	514	
		12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상	2.9%	466	
	IV	1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회 운영·관리	중	3.4%	546	
		14	식품벤처센터 운영·관리	중	2.9%	466	
		15	산업단지 조성·관리	중	2.9%	466	
		16	국내외 포럼 및 심포지엄 개최	중	2.3%	370	
		17	산업단지 입주환경 조성	중	1.5%	241	
		18	산체클러스터조성사업계획수립	중	1.5%	241	
		19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운영 및 관리	하	1.1%	177	
	-	20	처리과 공통	-	24.1%	3,872	

# 아) 유통소비정책관

## ① 유통소비정책과

<표 3-172> 유통소비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유통소비정책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52.6%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II</p>	1	도매유통활성화사업	상	3.9%	1,252	
		2	농산물 유통정책 기획 및 조정	상	3.7%	1,188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운용	상	3.3%	1,059	
		4	축산기금활성 및 운용, 결산, 평가, 예산관리	상	2.7%	867	
		5	업무보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제 관리	상	2.7%	867	
		6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법률 운용	상	2.7%	867	
		7	원산지표시제도 정책 수립	상	2.7%	867	
		8	농산품이력추적관리	상	2.3%	738	
		9	농안기금운용계획 수립	상	2.3%	738	
		10	업무보고서 작성 및 추진실적 제출	상	2.1%	674	
		11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및 관리	상	2.0%	642	
		1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	상	2.0%	642	
		13	원예농산물 산지조직화 정책	상	2.0%	642	
		14	산지유통조직 선정·지원 및 평가	상	1.7%	546	
		15	원예농산물 자조금정책	상	1.7%	546	
		16	농산물 공동선별 조직 지원	상	1.6%	514	
		17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수립	상	1.5%	482	
		18	자조금사업	상	1.5%	482	
		19	유통광사 지도·감독	상	1.4%	449	
		20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상	1.3%	417	
		21	원예산업 종합계획 선정 및 평가	상	1.3%	417	
		22	[농수산 시소관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용	상	1.3%	417	
		23	농식품유통교육 운영 등	상	1.2%	385	
		24	농식품공통경영체 육성	상	1.2%	385	
		25	비축기지 운영 관리	상	0.7%	225	
		26	계획수립 및 사업지 선정	상	0.7%	225	
		27	사업시행 및 운영평가	상	0.7%	225	
		28	농산물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관리	상	0.4%	128	
		29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중	2.3%	738	
		30	도매시장 평가	중	2.3%	738	
		31	국가인증지원사업	중	1.6%	514	
		32	농산물산지인증제도 홍보	중	1.3%	417	
		33	지리정보시스템 등 특 관리	중	1.3%	417	
		34	산지유통종합자금 운용	중	1.3%	417	
		35	비축사업 예산운용	중	1.3%	417	
		36	유통기금운용	중	1.1%	353	
		37	엑스포 참가기관 제도	중	1.1%	353	
		38	원예농산물 추산지 제도	중	0.9%	289	
		39	유통구조개선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 소비촉진	중	0.7%	225	
		40	농산물(채소·특작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0.7%	225	
		41	도사지역 핵심유산지 지원사업 대응	중	0.6%	193	
		42	농산물 경쟁거래 관련	중	0.5%	161	
		43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중	0.5%	161	
		44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중	0.4%	128	
		45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중	0.4%	128	
		46	유통교육기관 교육심사	중	0.3%	96	
		47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FTA 업무	중	0.3%	96	
		48	농산품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사후관리	중	0.3%	96	
		49	원예농산물 육성사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중	0.3%	96	
		50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중	0.3%	96	
		51	정부비축사업 평가	중	0.1%	32	
		52	[환경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운용	중	0.1%	32	
		53	시군유통회사	하	0.4%	128	
		54	유통교육기관 선정	하	0.3%	96	
		55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하	0.3%	96	
		56	비축기지 광역화 현대화사업	하	0.1%	32	
		57	농산물등급 품위표준코드 및 RFID정밀	하	0.1%	32	
		58	수확관리기술 표준 매뉴얼 작성	하	0.1%	32	
		59	처리과공률	-	-	28.1%	8,379



## ②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표 3-173〉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43.4%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li> </ul>	<p>(업무비중)</p>	I	1	농식품바우처운영관리	상	9.2%	2,287
			2	GAP 추진, 제도개선	상	8.8%	2,187
			3	농산물직거래, 로컬푸드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운영	상	7.9%	1,964
			4	식생활교육 및 홍보	상	6.2%	1,541
			5	로컬푸드공급체계 구축 및 공급 확대	상	5.9%	1,466
			6	공공급식 활성화 및 지원	상	5.4%	1,342
		II	7	소비자정책 수립	상	4.6%	1,143
			8	식생활지침 및 교육콘텐츠개발·보급	상	4.5%	1,118
			9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상	2.9%	721
			10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상	2.5%	621
			11	농산물품질관리법 운용	상	2.5%	621
			12	농산물 사이버거래 기반 구축	상	2.5%	621
			13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상	2.5%	621
			1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상	2.1%	522
			1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운용	상	2.1%	522
			16	소비자 유통시설 지원	상	0.8%	199
		IV	17	농식품소비정보조사	중	4.1%	1,019
			18	공공급식 로컬푸드공급 선도 모델 발굴	중	3.8%	944
			19	로컬푸드급식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운영	중	2.9%	721
			20	급식산업 육성 사업 발굴 운영	중	2.5%	621
			21	국가·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교육·홍보	중	2.5%	621
			22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중	2.1%	522
			2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및 관리	중	1.7%	423
			24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중	1.7%	423
			25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육성	중	1.6%	398
			26	소비자유통활성화	중	0.8%	199
			27	직거래 매취자금	중	0.8%	199
			28	식생활교육지원법 운용	중	0.8%	199
			29	급식사업 거버넌스구축 운영	하	1.3%	323
			30	공공급식 관련 법률	하	1.3%	323
			-	31	처리과공통	-	1.7%

### ③ 원예산업과

<표 3-174> 원예산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원예산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48.9%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조미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중요도	5.8%	1,557	
	2	업근채류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중요도	5.7%	1,530		
	3	농지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중요도	4.1%	1,100		
	4	채소가격안정제 운영	중요도	4.1%	1,100		
	5	인산사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중요도	2.9%	778		
	6	특용작물(자, 버섯, 약용 등) 소비촉진 교육·홍보	중요도	2.5%	671		
	7	자 사업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	중요도	2.5%	671		
	8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중요도	2.5%	671		
	9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특별 대책반 운영	중요도	2.5%	671		
	10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 수립	중요도	2.5%	671		
	11	조미채소류의 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중요도	2.5%	671		
	12	농산물 수급안정 운영 및 적당기관 관리	중요도	1.7%	456		
	13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기모제충	중요도	1.7%	456		
	14	인산사업 수급관리 및 운영	중요도	0.3%	81		
	15	인산사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중요도	1.7%	456		
	16	인산사업법·제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도	1.7%	456		
	17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 분석	중요도	1.7%	456		
	18	조미채소류TRO 운영	중요도	1.7%	456		
	19	조미채소류수급관리운영	중요도	1.7%	456		
	20	조미채소류의 수매 및 비축사업 추진	중요도	1.7%	456		
	21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운영	중요도	1.6%	429		
	22	인산사업 수급안정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도	1.2%	322		
	23	인산사업 수급안정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도	1.2%	322		
	24	인산사업 통계조사	중요도	1.1%	295		
	25	자 사업안 운영	중요도	0.9%	242		
	26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운영	중요도	0.9%	242		
	27	고추비기림재배사업지원	중요도	0.8%	215		
	28	조미채소류수급안정 육성	중요도	0.8%	215		
	29	업근채류수매비축	중요도	0.5%	134		
	30	특용작물(자, 버섯, 약용 등) 생산·유통·가격·수출 등 산업 육성	중요도	3.4%	912		
	31	특용작물(자, 버섯, 약용 등) 산업 통계조사	중요도	2.3%	617		
	32	농산물 수급안정위원회 운영	중요도	2.2%	590		
	33	자 관련 지자체 지원 및 상호협력	중요도	1.7%	456		
	34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운영	중요도	1.7%	456		
	35	특용작물 수급안정사업 운영	중요도	1.7%	456		
	36	버섯류의 수급 및 경영에 관한 사항	중요도	1.2%	322		
	37	자 사업발전 협의회 운영	중요도	0.9%	242		
	38	특용작물사업 추진	중요도	0.9%	242		
	39	특용작물사업 육성	중요도	0.9%	242		
	40	기공사업 추진	중요도	0.9%	242		
	41	특용작물 TRO운영	중요도	0.9%	242		
	42	특용작물 수매 및 저장 등에 관한 사항	중요도	0.9%	242		
	43	조미채소류 수급안정사업 지원	중요도	0.8%	215		
	44	조미채소류생산, 가공 및 수출입 관리	중요도	0.8%	215		
	45	양념채소 일탄	중요도	0.8%	215		
	46	인산 소비촉진 교육·홍보	중요도	0.7%	188		
	47	인산 특별기금관리	중요도	0.7%	188		
	48	버섯배지 재활용사업 운영	중요도	0.6%	161		
	49	업근채류수급관리 및 운영	중요도	1.7%	456		
	50	채소류 생산통계 조사 및 관리	중요도	0.3%	81		
	51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운영	중요도	0.2%	54		
	52	특용작물(자, 버섯 등) 저수급단체 설립·운영	중요도	1.5%	403		
	53	인산사업 육성사업 운영	중요도	0.5%	134		
	54	인산사업 육성사업 운영	중요도	0.3%	81		
	5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운영	중요도	0.3%	81		
	56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운영	중요도	0.2%	54		
	-	57	처리과 공통	-	10.6%	2,845	

#### ④ 원예경영과

<표 3-175> 원예경영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원예경영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50.4%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원예경영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50.4%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II	1	과수 재해업무	상	4.0%	1,089
			2	시설원에 현대화 및 경쟁력 제고 대책	상	4.0%	1,089
			3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상	3.2%	871
			4	지역별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	상	3.1%	844
			5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운영	상	3.1%	844
			6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상	2.7%	735
			7	시설원에 에너지융효율화 사업	상	2.7%	735
			8	화훼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운영	상	2.6%	708
			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상	2.6%	708
			10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운영	상	2.3%	626
			11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에 관한 시행(생산, 유통, 기타 지원)	상	2.3%	626
			12	과수통계	상	2.3%	626
			13	과실계막출하지원	상	2.2%	599
			14	과실수급	상	2.2%	599
			15	시설원에 수급안정사업	상	1.5%	408
			16	시설원에 재해업무	상	1.5%	408
			17	시설원에 자조금	상	1.5%	408
			18	화훼 생산자조직의 육성 및 자조금지원·관리	상	1.5%	408
			19	화훼류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상	1.5%	408
			20	화훼류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상	1.5%	408
			21	유통협약·명령	상	1.2%	327
			22	시설채소 수출확대	상	0.9%	245
		23	과수수출	상	4.0%	1,089	
		24	과수 기획	상	3.9%	1,062	
		25	FTA 대응 및 과수 홍보 소비촉진	상	2.3%	626	
		26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사업추진	상	2.3%	626	
		27	과수폐업지원	상	2.3%	626	
		28	시설원에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운영	상	2.0%	544	
		29	화훼농가 및 전문단지 육성에 관한 사항	상	1.7%	463	
		30	과수인바	상	1.5%	408	
		31	과수브랜드	상	1.5%	408	
		32	과수자조금	상	1.5%	408	
		33	시설원에 통계	상	0.9%	245	
		34	시설원에 단체 관리	상	0.9%	245	
		35	과수경쟁력제고대책수립·추진	상	0.8%	218	
		36	과수경영화	상	0.8%	218	
		37	화훼품종육성 및 보급과 관련한 사항	상	0.8%	218	
		38	화훼의 재해대책 추진	상	0.8%	218	
		39	시설원에 FTA 국내보완대책	상	0.6%	163	
		40	기타 시설원에 정책사업 추진	상	0.5%	136	
		41	화훼 생산 및 유통 등 통계 생산·관리	상	0.3%	82	
		42	화훼 관련 단체 관리	상	0.8%	218	
		43	화훼공판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상	0.8%	218	
		44	과수 유통정보생산지원	상	0.8%	218	
		45	과수 무생사단위 조성	상	0.8%	218	
		46	과수 관련 협회에 관한 사항	상	0.6%	163	
-	화훼 관련 국제행사 업무	하	0.4%	109			
-	저리과공통	-	-	16.0%	4,355		

⑤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표 3-176>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62.4%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도입 및 운영 관리	상	7.6%	1,088	
		2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도입 관련 업무	상	5.9%	845	
		3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 및 운용	상	5.5%	788	
		3	계란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상	4.3%	616	
		4	축산물위생관리 대책수립 및 추진	상	4.1%	587	
		5	농산물안전성조사	상	3.9%	559	
		6	농산물 안전 관련 교육홍보 및 지도	상	3.7%	530	
		7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상	3.7%	530	
		8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업무	상	3.6%	516	
		9	HACCP 제도 확대 및 운용	상	3.2%	458	
		10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교육홍보	상	2.7%	387	
		11	농산물 안전관련 협의체 대응	상	2.7%	387	
		12	축산물위생제도 운용	상	1.7%	243	
		13	생산단계 농장, 도축장, 집유장HACCP 제도 운용	상	4.4%	630	
		14	축산물 안전관리 교육·홍보	상	4.0%	573	
		15	도축장, 집유장HACCP 조사·평가	상	4.0%	573	
	16	도축검사운영 및 축산물 HACCP 지원 사업	상	3.2%	458		
	17	도축검사운영사업 및 축산물HACCP지원사업 관련 예산 수립, 집행 관리	상	3.1%	444		
	18	HACCP 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상	3.1%	444		
	19	농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	상	2.7%	387		
	20	축산물 위생 관련 소비자 협력 사업	상	2.4%	344		
	21	농식품안전정보관리	상	1.9%	272		
	22	오염농경지환경정밀조사	중	1.9%	272		
	23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중	1.7%	243		
	24	감사관 감람 책임의에대한지도감독 교육 인력양성및운용	중	1.7%	243		
	25	도축장 및 집유장의위생감시	중	1.5%	215		
	26	식품위생법 및 국제기준(Codex) 제·개정 대응	중	1.3%	186		
	2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련 생산단계 HACCP 지도감독	중	1.3%	186		
	28	축산물 검사 관련 식품안전일일상황보고	중	0.9%	129		
	29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 통계 관리	중	0.9%	129		
	30	안전성 국제동향 파악	중	0.7%	100		
	31	농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	중	0.7%	100		
	32	식품안전개선대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중	0.6%	86		
-	33	처리과공통	-	5.4%	773		

자) 농업생명정책관

① 농산업정책과

<표 3-177> 농산업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농산업정책과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3.8%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 (업무비중)</p>	<p>III</p> <p>I</p> <p>IV</p> <p>II</p>	<p>I</p> <p>II</p> <p>IV</p>	1	농식품벤처육성 지원	상	7.3%	2,014
			2	스마트농업 대응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상	6.6%	1,820
			3	농식품바이오산업 대응	상	4.6%	1,269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련 업무	상	4.4%	1,214
			5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	상	4.1%	1,131
			6	농업생명정책관실 주요업무 계획 수립	상	3.8%	1,048
			7	농업생명정책관실 법령	상	3.4%	938
			8	규제개혁 및 홍보 관련 업무	상	3.1%	855
			9	농식품분야 혁신성장 추진관련	상	3.1%	855
			10	농식품ICT 융복합 현장지원 정책수립	상	2.7%	745
			11	스마트팜기자재 수출 및 해외 진출	상	2.1%	579
			12	농식품창업 콘테스트 추진	상	1.4%	386
			13	농식품전문 클라우드펀딩활성화 지원	상	0.6%	165
			14	농식품벤처창업 인턴제지원	상	0.5%	138
			15	스마트팜관련 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관리	중	4.7%	1,296
			16	농식품ICT 융복합 교육·홍보	중	3.0%	827
			17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운영	중	3.7%	1,021
			18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중	3.6%	993
			19	부처 및 부내, 소속기관 협력	중	2.9%	800
			20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 관리	중	2.7%	745
			21	스마트팜빅데이터 수집·활용	중	2.5%	690
			22	농식품ICT 기자재, 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	중	2.3%	634
			23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	중	3.1%	855
			24	농업생명정책관실 정책연구용역	중	1.8%	496
			25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 및 운영	중	1.7%	469
			26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중	1.7%	469
			27	스마트팜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중	1.6%	441
			28	스마트팜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 검토 및 협조	중	1.6%	441
			29	스마트팜통계 및 실태조사	중	1.6%	441
			30	농업생명정책관실 및 스마트팜관련 국제협력	중	1.2%	331
			31	농식품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중	1.0%	276
			32	기술개발사업 선정 및 지도관리	중	0.9%	248
			33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중	0.8%	221
			34	농식품벤처·창업기업 기술평가 지원	중	0.4%	110
			-	처리과공통	-	9.5%	2,620

## ② 과학기술정책과

〈표 3-178〉 과학기술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과학기술정책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70.3%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하                      중                      상                      (중요도)</p>	I	1	농식품R&D 16개 사업 관리	상	8.4%	1,954
			2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운영	상	7.1%	1,652
			3	국가지식재산	상	4.9%	1,140
			4	도시농업 정책수립 및 시행	상	3.8%	884
			5	농림 기술 성장기계획	상	3.6%	838
			6	IT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운영	상	3.5%	814
			7	농림 RD예산(결산, 회계, 예산)	상	3.2%	745
			8	농림축산식품 r&d정책 및 기획	상	3.2%	745
			9	다부처공동기획(사회문제 해결과제 등) 대응 및 사업운영	상	2.7%	628
			10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대응	상	2.4%	558
			11	포스트게놈 시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자 연구개발사업	상	2.3%	535
		12	농기행지도간독	상	2.3%	535	
		13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상	2.3%	535	
		14	농정현안 대응 R&D 중장기 추진 계획 마련 및 대응	상	2.3%	535	
		15	연도별 농림과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상	2.3%	535	
		16	R&D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운영	상	2.2%	512	
		17	국가연구개발사업	상	2.0%	465	
		18	과학기술관계 장과의 관려사항	상	1.9%	442	
		19	국가과학기술 지문회의 관려사항	상	1.9%	442	
		20	농식품부 R&D 사업운영계획 수립	상	1.9%	442	
		21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운용	상	1.7%	396	
		22	부처 및 부내 소속기관 협력	상	1.7%	396	
		23	기술제도(후령, 예규 지적)	상	1.6%	372	
		24	기술개발사업 선정 및 지도관리	상	1.4%	326	
		25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상	1.4%	326	
		26	신규사업 기획	상	1.4%	326	
		27	R&D 제재조치(부실학회, 복제경등)	상	1.3%	302	
		28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상	1.3%	302	
		29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 운영	상	1.2%	279	
		30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기획 및 대응	상	1.2%	279	
		31	기술제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	1.1%	256	
		32	농림기술개발사업 개선	상	1.1%	256	
		33	시기술인증 및 녹색인증 운용	상	1.0%	233	
		34	농식품R&D 신규과제 기획	상	1.0%	233	
		35	국가 연구개발 운영 규정 개정	상	1.0%	233	
		36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상	1.0%	233	
		37	민간·지역 R&D 활성화	상	0.8%	186	
		38	산업기술보안	상	0.4%	93	
		39	도시농업협의회 운영	상	1.0%	233	
		40	농식품연구성과 후속지원	상	1.0%	233	
		41	도시농업 관리단체	상	0.9%	209	
		42	한일 농림수산물 수출협력위원회	상	0.6%	140	
		43	기술성과 관리	중	0.5%	116	
		44	국제협력	중	0.5%	116	
		45	기술개발 완료과제활용	중	0.2%	47	
		-	46	처리과공통	-	-	9.5%

### ③ 친환경농업과

〈표 3-179〉 친환경농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친환경농업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8.3%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중요도)</p>	<p>I</p> <p>II</p> <p>IV</p>	1	친환경농어업법령제·개정	상	6.1%	1,456	
		2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	상	5.3%	1,265	
		3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상	5.3%	1,265	
		4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사업	상	4.8%	1,146	
		5	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	상	4.5%	1,074	
		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상	4.2%	1,003	
		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및 관리	상	4.1%	979	
		8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 및 단체	상	3.6%	859	
		9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등 국제 업무	상	1.1%	263	
		10	친환경농업직불제신청 및 집행관리	상	1.7%	406	
		11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 및 생산 유통 활성화	상	1.4%	334	
		12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및 관리	상	1.4%	334	
		13	유기·무농약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관리	상	1.3%	310	
		1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상	2.2%	549	
		15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상	1.2%	263	
		1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상	0.7%	167	
		17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및 관리	중	4.1%	979	
		18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위생 및 품질관리	중	3.7%	883	
		19	자조금관리	중	3.2%	764	
		20	국정과제 및 성과 평가에 관련한 사항	중	2.9%	692	
		21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조사	중	2.6%	621	
		22	친환경농업직불제이행 관리	중	2.4%	573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및 쇼핑몰 관리	중	2.4%	573	
		2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운영	중	2.3%	549	
		25	유기농식품온라인 거래 지원	중	2.3%	549	
		26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	중	2.3%	549	
		27	허용물질 및 유기농업자재 관리	중	2.2%	525	
		28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관리	중	1.4%	334	
		29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관리	중	1.3%	310	
		30	친환경농자재지원	중	0.7%	167	
		31	친환경인증기관 관리	하	1.8%	430	
		32	친환경농업교육훈련지원	하	1.1%	263	
		33	인증사업자 교육 운영	하	0.9%	215	
		34	친환경농업 기초통계 관리	하	0.9%	215	
		35	친환경농업육성계획추진실적	하	0.7%	167	
		-	37	처리과공통	-	11.9%	2,841



#### ④ 종자생명산업과

〈표 3-180〉 종자생명산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종자생명산업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53.2%가 I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I	1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추진	상	7.4%	1,451
		2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운용	상	7.1%	1,392
		3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운영	상	4.9%	961
		4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상	3.9%	765
		5	종자위원회 및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운영	상	3.7%	725
		6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상	3.6%	706
		7	농업생명산업 관련 사업 추진	상	3.4%	667
		8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상	2.8%	549
		9	곤충산업육성	상	2.5%	490
		10	농업생명자원법 및 하위 법령 운용 및 제개정	상	2.6%	510
		11	양잠산업 육성	상	2.6%	510
		12	종자생산 및 보급	상	2.6%	510
		13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대응	상	2.2%	431
		14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상	2.0%	392
		15	농업 분야 생명공학 육성 계획 수립	상	1.9%	372
		16	곤충산업 육성·지원	상	1.9%	372
		17	FAO 식량농업유전자원 위원회 대응	상	1.8%	353
		18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농업 분야 대응	상	1.8%	353
		19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운영	상	1.8%	353
		2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운영	상	1.7%	333
		21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상	1.7%	333
		22	양잠산업 육성·지원	상	1.5%	294
		23	종자 수출진흥 및 수입	상	1.3%	255
		24	곤충산업 실태조사(연간)	상	1.0%	196
		25	국제종자박람회개최 등 종자산업 홍보	중	4.9%	961
		26	국립종자원 지도·감독	중	2.6%	510
		27	종자·육묘단체 관리 및 지원	중	2.0%	392
		28	곤충·양잠관련 민간협회 지도·감독	중	1.9%	372
		29	농업생명자원 관계 기관 관리	중	1.7%	333
		30	UPOV 등 국제협력 사항	중	1.3%	255
		31	유전자원법에 따른 농업 분야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지원	중	1.2%	235
		32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중	1.2%	235
		33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운영	중	1.0%	196
		34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 관리 계획 수립	중	0.9%	176
		35	농업 분야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 수립	중	0.9%	176
		36	기능성 양잠 관련 통계	중	0.8%	157
		-	37	처리과공통	-	11.9%



⑤ 동물복지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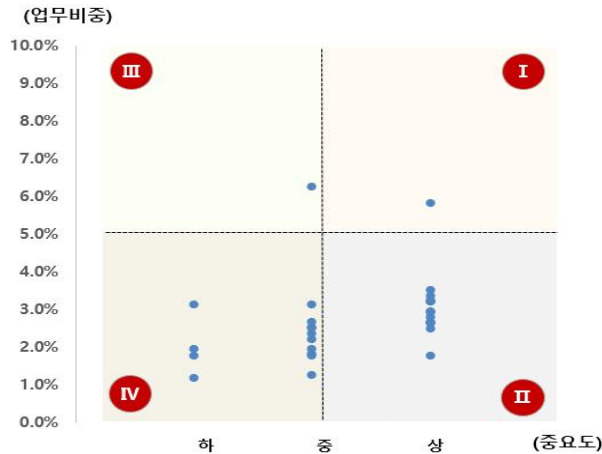
<표 3-181> 동물복지정책과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p>• 동물복지정책과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9.9%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존재하지 않음</p> <p>(업무비중)</p> <p>하                      중                      상                      (중요도)</p>	I	1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운용	상	10.1%	2,017	
		2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상	8.0%	1,598	
		3	동물복지 정책	상	7.6%	1,518	
		4	반려동물 안전관리	상	5.2%	1,039	
		5	반려동물 산업 관리	상	5.1%	1,019	
	II	6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상	3.9%	779	
		7	동물등록제 활성화	상	2.9%	579	
	IV	8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중	4.9%	979	
		9	반려동물 사료 법령 운용	중	3.9%	779	
		10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기준 등 관리	중	3.6%	719	
		11	사실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	중	3.4%	679	
		12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에·결산 및 집행	중	3.1%	619	
		13	반려동물 관련 산업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중	2.9%	579	
		14	윤리적 동물실험	중	2.8%	559	
		15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중	2.8%	559	
		16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2.4%	479	
		17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	2.2%	439	
		18	반려동물 관련 자격 지도·감독	중	1.9%	379	
		19	동물보호 단체 및 협회 등의 지도·감독	하	2.5%	499	
		20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 및 정기점검	하	1.7%	340	
		-	21	처리과공통	-	19.1%	3,815

## ⑥ 농기자재정책팀

〈표 3-182〉 농기자재정책팀 단위업무별 중요도 및 비율

업무비중 및 중요도 분포도	영역	NO	단위업무	중요도	업무비중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자재정책팀의 단위업무(공통업무 제외) 중 37.3%가 I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효율화 대상인 III영역의 단위업무는 6.3% 존재함</li> </ul>	I	1	농약관리법령 운용	상	5.8%	872	
		2	유기질비료보조	상	3.5%	526	
		3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상	3.4%	511	
		4	토양개량제 지원	상	3.2%	481	
		5	농업용 면세유지원	상	3.2%	481	
		6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상	3.2%	481	
		7	흙의 날 행사 개최	상	2.9%	436	
		II	8	농업기계화촉진법 운용 및 제도개선	상	2.9%	436
			9	비료관리법 운용 및 개정	상	2.8%	421
			10	농기계 관련 법령운용 및 제도개선	상	2.7%	406
			11	비료의 품질관리	상	2.6%	391
			12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상	2.6%	391
			13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	상	2.5%	376
			14	비료 오염원 관리	상	1.8%	271
	III		15	농약관련 예산 운용	중	6.3%	947
			16	농약안전사용교육 추진	중	3.1%	466
			17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세제지원	중	2.7%	406
		18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중	2.5%	376	
		19	농업기계 세제지원	중	2.5%	376	
		20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중	2.3%	346	
		IV	21	비료정책 및 제도개선	중	2.2%	331
			22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중	2.0%	301
			23	농업기계 검정제도	중	1.8%	271
			24	토양 양분관리	중	1.8%	271
			25	농업기계 안전제도	중	1.3%	195
			26	농약 가격표시제	하	3.1%	466
			27	농업기계박람회 지원	하	2.0%	301
			28	비료관련 협회, 단체	하	1.7%	256
			29	비료 관련 해외협력	하	1.2%	180
			-	30	처리과공통	-	20.4%



## 나. 교차분석 효율화 반영 적정인력 산정 결과

### 가) 국 단위 분석 결과

□ 농촌정책국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7.2명(현원 대비 7.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83〉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농촌정책과		27,826	27,826		13	14.9	1.9
지역개발과		21,247	21,247		10	11.4	1.4
농촌사회복지과	1,937	14,897	14,742	-155	7	7.9	0.9
농촌산업과		23,230	23,230		11	11.1	0.1
농촌여성정책팀	614	12,281	12,232	-49	6	6.6	0.6
농촌재생에너지팀	4,632	16,196	15,825	-371	8	8.5	0.5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추진팀	1,769	10,228	10,086	-142	5	5.4	0.4
<b>합계</b>	<b>8,952</b>	<b>125,905</b>	<b>125,189</b>	<b>-716</b>	<b>60</b>	<b>67.2</b>	<b>7.2</b>

□ 농업정책국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8.2명(현원 대비 8.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84>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농업정책과	4,035	28,616	28,293	-323	14	15.2	1.2
농지과		26,471	26,471		12	14.2	2.2
경영인력과		24,104	24,104		11	12.9	1.9
농업금융정책과		27,689	27,689		13	14.9	1.9
재해보험정책과	3,718	20,885	20,588	-297	10	11.0	1.0
<b>합계</b>	<b>7,752</b>	<b>127,765</b>	<b>127,145</b>	<b>-620</b>	<b>60</b>	<b>68.2</b>	<b>8.2</b>

□ 식량정책관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5.6명(현원 대비 7.6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85>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식량정책과		22,820	22,820		11	12.2	1.2
식량산업과		25,734	25,734		12	13.8	1.8
농기소득인정추진단		16,606	16,606		8	8.9	0.9
농업기반과		26,342	26,342		13	14.1	1.1
간척지농업과		22,820	22,820		11	12.2	1.2
<b>합계</b>		<b>122,261</b>	<b>122,261</b>		<b>58</b>	<b>65.6</b>	<b>7.6</b>

□ 국제협력국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2.9명(현원 대비 6.9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86>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국제협력총괄과	1,907	34,050	33,897	-153	15	18.2	3.2
농업통상과	887	17,738	17,667	-71	9	9.5	0.5
검역정책과		24,127	24,127		11	12.9	1.9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2,795	23,100	22,876	-224	11	12.3	1.3
<b>합계</b>	<b>5,589</b>	<b>99,015</b>	<b>98,568</b>	<b>-447</b>	<b>46</b>	<b>52.9</b>	<b>6.9</b>

□ 축산정책국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1.2명(현원 대비 7.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87>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축산정책과		37,928	37,928		17	20.3	3.3
축산경영과		31,768	31,768		15	17.0	2.0
축산환경자원과		25,825	25,825		12	13.9	1.9
<b>합계</b>		<b>95,521</b>	<b>95,521</b>		<b>44</b>	<b>51.2</b>	<b>7.2</b>

□ 방역정책국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5.6명(현원 대비 7.6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88>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방역정책과	1,771	31,078	30,936	-142	14	16.6	2.6
구제역방역과		29,045	29,045	0	13	15.6	2.6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4,972	24,972	0	11	13.4	2.4
<b>합계</b>	<b>1,771</b>	<b>85,095</b>	<b>84,953</b>	<b>-142</b>	<b>38</b>	<b>45.6</b>	<b>7.6</b>

□ 식품산업정책관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1.1명(현원 대비 5.1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89>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식품산업정책과		29,646	29,646	0	14	15.9	1.9
식품산업진흥과		15,902	15,902	0	8	8.5	0.5
외식산업진흥과	3,060	16,538	16,293	-245	8	8.7	0.7
수출진흥과		17,332	17,332	0	8	9.3	1.3
국가식품 클러스터추진팀		16,068	16,068	0	8	8.6	0.6
<b>합계</b>	<b>3,060</b>	<b>95,486</b>	<b>95,241</b>	<b>-245</b>	<b>46</b>	<b>51.1</b>	<b>5.1</b>

□ 유통소비정책관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 시간 적용 시 67.2명(현원 대비 8.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0>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유통정책과		32,103	32,103		15	17.2	2.2
식생활소비급식 진흥과		24,855	24,855		12	13.3	1.3
원예산업과		26,838	26,838		12	14.4	2.4
원예경영과		27,218	27,218		13	14.6	1.6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14,321	14,321		7	7.7	0.7
<b>합계</b>		<b>125,335</b>	<b>125,335</b>		<b>59</b>	<b>67.2</b>	<b>8.2</b>

□ 농업생명정책관의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 시간 적용 시 69.3명(현원 대비 9.3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1> 중요도·업무비중 교차분석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 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기능 조정 시간			
농산업정책과		27,583	27,583	0	13	14.8	1.8
과학기술정책과		23,266	23,266	0	11	12.5	1.5
친환경농업과		23,872	23,872	0	11	12.8	1.8
종자생명산업과		19,604	19,604	0	9	10.5	1.5
동물복지정책과		19,972	19,972	0	9	10.7	1.7
농기자재정책팀	947	15,035	14,959	-76	7	8.0	1.0
<b>합계</b>	<b>947</b>	<b>129,332</b>	<b>129,256</b>	<b>-76</b>	<b>60</b>	<b>69.3</b>	<b>9.3</b>

#### (4) 2-3안 기능 동태성\_공통업무 효율화

##### 가. 공통업무 효율화 개요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업무는 각 조직의 역할 대비 비본원적 업무에 해당하여 조직 차원에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산화, 중복업무 통합 등을 통해 투입되는 업무량을 절감하여 본원적 업무의 투입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율화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공통업무의 단위 업무 활동량에 따라 10%(Low), 20%(Middle), 30%(High)수준으로 효율화를 위한 업무량 절감 수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의 경우 중간 수준인 20%를 의도적인 목표 절감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하였음

<표 3-192> 국 단위 조직별 공통업무 현황 및 공통업무 유형

효율화 가능 활동유형			[농식품부 공통업무 현황]		
구분	내용	주요활동	공통업무 (소분류)	업무시간	비중
검수/확인	업무협의 및 업무지시	자료제출	기록관리	7,790	4.0%
연간계획(방안) 수립	사후관리, 하자보수	지도, 감독	물품관리	3,700	1.9%
월간계획(방안) 수립	상담및응대	점검/순찰 (시설물 및 물품)	민원관리	15,384	7.9%
구매,구입	서류정리	청소 및 정리정돈	보안관리	8,763	4.5%
교육	선별 및 신청	출장 및 방문	서무	60,953	31.3%
공지,통보	설계	평가 및 실사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46,153	23.7%
계약체결	연구 및 조사	회의 및 행사 진행	예산회계	23,758	12.2%
결재	일지작성	회의참석	지도감사	4,868	2.5%
자료작성(각종 문서 등)	업무조정	Data 및 Report 출력	기타	23,369	12.0%
기계/설치설치 및관리	자금배정 및 운용	Data입력 및 관리	<b>합계</b>	<b>194,738</b>	<b>100.0%</b>
경비정산 및 지급	자료검토	Data정확성 확인			
문서수발	자료취합 및 정리	Program개발			
보고	자료요청 및 접수	System유지 보수			

Arthur Andersen FTE DB Bench-marking에 따라  
공통업무를 효율화 대상으로 정의하여 이에 따른  
목표 절감 수준을 20%(Middle)로 적용함

※ Arthur Andersen FTE DB Bench-marking에 따르면 전사 반복적 업무는 단위 업무의 활동량에 따라 10%(Low), 20%(Middle), 30%(High) 수준으로 절감 가능함



## 나. 공통업무 효율화 반영 적정인력 산정 결과

### 가) 국 단위 분석 결과

□ 농촌정책국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4.0명(현원 대비 4.0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3〉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업역사 문화전시 체험관추 진팀	3,621	20%	10,228	724	9,504	5	5.1	0.1
농촌사회 복지과	4,648	20%	14,897	930	13,967	7	7.5	0.5
농촌산업과	7,062	20%	23,230	1,412	21,818	11	11.7	0.7
농촌여성 정책팀	221	20%	12,281	44	12,237	6	6.6	0.6
농촌재생 에너지팀	1,701	20%	16,196	340	15,856	8	8.5	0.5
농촌정책과	10,880	20%	27,826	2,176	25,650	13	13.8	0.8
지역개발과	5,057	20%	21,247	1,011	20,236	10	10.9	0.9
<b>합계</b>	<b>33,189</b>	<b>20%</b>	<b>125,905</b>	<b>6,638</b>	<b>119,267</b>	<b>60</b>	<b>64.0</b>	<b>4.0</b>

□ 농업정책국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6.2명(현원 대비 6.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4>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업금융 정책과	4,319	20%	27,689	864	26,825	13	14.4	1.4
농업정책과	5,695	20%	28,616	1,139	27,477	14	14.7	0.7
농지과	5,082	20%	26,471	1,016	25,455	12	13.7	1.7
재해보험 정책과	2,694	20%	20,885	539	20,346	10	10.9	0.9
<b>합계</b>	<b>21,864</b>	<b>20%</b>	<b>127,765</b>	<b>4,373</b>	<b>123,392</b>	<b>60</b>	<b>66.2</b>	<b>6.2</b>

□ 식량정책관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2.4명(현원 대비 4.4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5>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가소득안 정추진단	4,783	20%	16,606	957	15,649	8	8.4	0.4
농업기반과	8,614	20%	26,342	1,723	24,619	13	13.2	0.2
식량산업과	1,904	20%	25,734	381	25,353	12	13.6	1.6
식량정책과	9,874	20%	30,759	1,975	28,784	14	15.4	1.4
<b>합계</b>	<b>29,693</b>	<b>20%</b>	<b>122,261</b>	<b>5,939</b>	<b>116,322</b>	<b>58</b>	<b>62.4</b>	<b>4.4</b>

□ 국제협력국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1.3명(현원 대비 5.3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6>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량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검역정책과	2,268	20%	24,127	454	23,673	11	12.7	1.7
국제협력 총괄과	9,262	20%	34,050	1,852	32,198	15	17.3	2.3
농업통상과	2,129	20%	17,738	426	17,312	9	9.3	0.3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과	3,673	20%	23,100	735	22,365	11	12.0	1.0
<b>합계</b>	<b>17,331</b>	<b>20%</b>	<b>99,015</b>	<b>3,466</b>	<b>95,549</b>	<b>46</b>	<b>51.3</b>	<b>5.3</b>

□ 축산정책국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9.7명(현원 대비 5.7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7>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량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축산경영과	5,083	20%	31,768	1,017	30,751	15	16.5	1.5
축산정책과	8,458	20%	37,928	1,692	36,236	17	19.4	2.4
축산환경 자원과	749	20%	25,825	150	25,675	12	13.8	1.8
<b>합계</b>	<b>14,290</b>	<b>20%</b>	<b>95,521</b>	<b>2,858</b>	<b>92,663</b>	<b>44</b>	<b>49.7</b>	<b>5.7</b>

□ 방역정책국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3.1명(현원 대비 5.1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8>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구제역방역과	9,149	20%	29,045	1,830	27,215	13	14.6	1.6
방역정책과	10,629	20%	31,078	2,126	28,952	14	15.5	1.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3,646	20%	24,972	729	24,243	11	13.0	2.0
<b>합계</b>	<b>23,424</b>	<b>20%</b>	<b>85,095</b>	<b>4,685</b>	<b>80,410</b>	<b>38</b>	<b>43.1</b>	<b>5.1</b>

□ 식품산업정책관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8.8명(현원 대비 2.8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199>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수출진흥과	1,040	20%	17,332	208	17,124	8	9.2	1.2
식품안전진흥과	3,705	20%	15,902	741	15,161	8	8.1	0.1
식품안전정책과	13,015	20%	29,646	2,603	27,043	14	14.5	0.5
외식안전진흥과	1,422	20%	16,538	284	16,254	8	8.7	0.7
국가식품클러스터 스타추진팀	3,872	20%	16,068	774	15,294	8	8.2	0.2
<b>합계</b>	<b>23,054</b>	<b>20%</b>	<b>95,486</b>	<b>4,611</b>	<b>90,875</b>	<b>46</b>	<b>48.8</b>	<b>2.8</b>

□ 유통소비정책관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5.4명(현원 대비 6.4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00>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농축산물 위생품질 관리팀	773	20%	14,321	155	14,166	7	7.6	0.6
식생활소비 급식진흥과	423	20%	24,855	85	24,770	12	13.3	1.3
원예경영과	4,355	20%	27,218	871	26,347	13	14.1	1.1
원예산업과	2,845	20%	26,838	569	26,269	12	14.1	2.1
유통정책과	8,379	20%	32,103	1,676	30,427	15	16.3	1.3
<b>합계</b>	<b>16,774</b>	<b>20%</b>	<b>125,335</b>	<b>3,355</b>	<b>121,980</b>	<b>59</b>	<b>65.4</b>	<b>6.4</b>

□ 농업생명정책관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7.8명(현원 대비 7.8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01>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공통업무	효율화						
과학기술정책과	2,210	20%	23,266	442	22,824	11	12.2	1.2
농자재정책팀	3,067	20%	15,035	613	14,422	7	7.7	0.7
농산업정책과	2,262	20%	27,583	452	27,131	13	14.6	1.6
동물복지정책과	3,815	20%	19,972	763	19,209	9	10.3	1.3
중생명산업과	2,333	20%	19,604	467	19,137	9	10.3	1.3
친환경농업과	1,432	20%	23,872	286	23,586	11	12.7	1.7
<b>합계</b>	<b>15,119</b>	<b>20%</b>	<b>129,332</b>	<b>3,024</b>	<b>126,308</b>	<b>60</b>	<b>67.8</b>	<b>7.8</b>

## 나) 분석 종합 결과

□ 비본원적 업무인 공통업무 효율화를 적용한 인력산정 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18.7명(현원 대비 47.7명 부족)으로 나타남

□ 다만, 이는 부 차원에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통업무 효율화 추진이 전제되는 목표절감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함

〈표 3-202〉 공통업무 효율화 적용 적정인력 산정 결과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공통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H)			현원 (명)	인력산정 결과(명)	필요 인원(명)
	공통 업무	효율화	추정 근로시간	공통 업무 효율화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촌정책국	33,189	20%	125,905	6,638	119,267	60	64.0	4.0
농업정책국	21,864	20%	127,765	4,373	123,392	60	66.2	6.2
식량정책관	29,693	20%	122,261	5,939	116,322	58	62.4	4.4
국제협력국	17,331	20%	99,015	3,466	95,549	46	51.3	5.3
축산정책국	14,290	20%	95,521	2,858	92,663	44	49.7	5.7
방역정책국	23,424	20%	85,095	4,685	80,410	38	43.1	5.1
식품산업 정책관	23,054	20%	95,486	4,611	90,875	46	48.8	2.8
유통소비 정책관	16,774	20%	125,335	3,355	121,980	59	65.4	6.4
농업생명 정책관	15,119	20%	129,332	3,024	126,308	60	67.8	7.8
<b>총 합계</b>	<b>194,738</b>	<b>20%</b>	<b>1,005,715</b>	<b>38,948</b>	<b>966,767</b>	<b>471</b>	<b>518.7</b>	<b>47.7</b>

-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 2) 표준근로시간 : 1,864(H)
- 3) 공통업무 효율화 시간은 공통업무 시간 중 20% 비중 적용시간
- 4) 조정근로시간(인력산정 기준시간)= 추정근로시간-공통업무 효율화시간

## (5) 3안 업무강도 반영 적정인력 산정 결과

### 가. 업무강도 분석 방법

#### 가) 정성 평가 방법

- 질적 관점 난이도를 고려한 업무강도 평가를 위하여 국 단위 대상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 요인 6개를 선별하였으며,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상대적 업무강도는 621~786점 분포로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남
- 국 단위 조직별 업무강도의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여유율(+8%~-8%) 수준을 차등하여 반영함

〈표 3-203〉 정성적 업무강도 영향요인 분석

[업무 밀도에 대한 가중치 적용]

구분	① 전문성 정도	② 관리기술 요구수준	③ 대인관계 요구수준	④ 창조성과 독창성 요구수준	⑤ 권한과 책임의 수준	⑥ 직무 성과의 영향력
가중치 적용	25	20	20	10	10	15
	10	15	10	25	15	25
	25	20	15	20	10	10
	30	10	10	20	15	15
	20	10	20	10	10	30
	20	10	10	10	30	20
	30	30	10	10	10	10
	10	10	20	15	20	25
25	10	10	15	15	25	
	X	X	X	X	X	X

1,000점 기준 환산

국 단위 조직별 6개 평가요인 산술평균

[상대적 질적 업무강도 평가 값]

직무	직무가치	업무강도 적용비율
유통소비정책관	786.409	108%
방역정책국	785.714	106%
식량정책관	761.817	104%
농촌정책국	751.290	102%
농업정책국	750.298	100%
축산정책국	727.551	98%
농업생명정책관	720.734	96%
식품산업정책관	638.988	94%
국제협력국	621.230	92%

※ 2020. 5.27, 5.29 국 단위 부서별 주무과장 인터뷰를 통해 직접 조사 및 결과 분석한 결과임

## 나) 정량 평가 방법

- 한편, 농식품부는 국 단위 조직의 역할이 정책수립 및 집행으로 유사성이 존재하여 주요 역할 관련 업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산출물을 적용하여 정량적 업무강도를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정량적 업무강도 영향요인은 빈도 수 또는 규모로 난이도 고려가 불가하여 질적 평가와 병행한 상호 보완적 활용이 바람직함

〈표 3-204〉 정량적 업무강도 영향요인 분석

**[정량적 업무강도 영향 요인]**

정책수립	정책집행 및 관리	대외협력	예산관리	법령 제개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건수(6)</li> <li>• 주요 정책수립 건수(3)</li> <li>• 대통령 지시사항 건수(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개최 건수(9)</li> <li>• 회의 개최 건수(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간 회의/위원회 개최 건수(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규모(8)</li> <li>• 예산사업 건수(6)</li> <li>• 신규사업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제개정 건수(8)</li> <li>• 소관 법령 수(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처리 건수(5)</li> <li>• 기피부서</li> </ul>

※ 2020. 4. 20~29 국 단위 부서별 서면인터뷰 결과, 괄호 안은 빈도 수입

		업무강도									
		← 강					→ 약				
정책수립	국정과제 개수	농촌정책국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업생명정책관실	농업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실	식량정책관실	축산정책국	방역정책국	국제협력국	
		51	43	42	29	26	25	19	16	2	
정책집행 및 관리	정부위원회 개최 건수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방역정책국	농업생명정책관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식량정책관실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실	
		9	6	6	6	5	4	3	2	2	
대외협력	범부처회의체 대응 건수	국제협력국	식량정책관실	방역정책국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촌정책국	농업생명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업정책국	축산정책국	
		62	27	23	18	15	15	9	6	3	
예산관리	예산규모 (억원)	식량정책관실	농업정책국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업생명정책관실	축산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실	방역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협력국	
		132,680	75,360	26,296	22,353	12,498	7,983	7,327	6,762	3,235	
법령제개정	법령제개정 횟수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실	농업생명정책관실	농촌정책국	축산정책국	유통소비정책관실	방역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실	국제협력국	
		84	81	74	54	45	42	36	22	20	
기타	민원처리 건수	농업정책국	농업생명정책관실	축산정책국	식량정책관실	유통소비정책관실	방역정책국	농촌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실	국제협력국	
		2,319	1,656	590	476	308	307	294	113	21	

\* 2019.1~12 국 단위 조직별 주요 역할 대비 산출

- 정량 요인은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아 업무강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담보할 수 없어 질적평가를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반영하거나 20% 내외의 적정 가중치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량 요인은 1차적으로 도출한 요인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도자료 및 브리핑 건수와 예산 내 운영사업 개수 2가지를 선정하였음
- 각 조직의 역할과 관련된 업무 산출물에 해당하는 국정과제 건수, 정부위원회 개최 건수, 범부처 회의체 대응 건수, 예산 규모, 법령 제개정 횟수, 민원처리 건수를 1차적으로 정량 요인으로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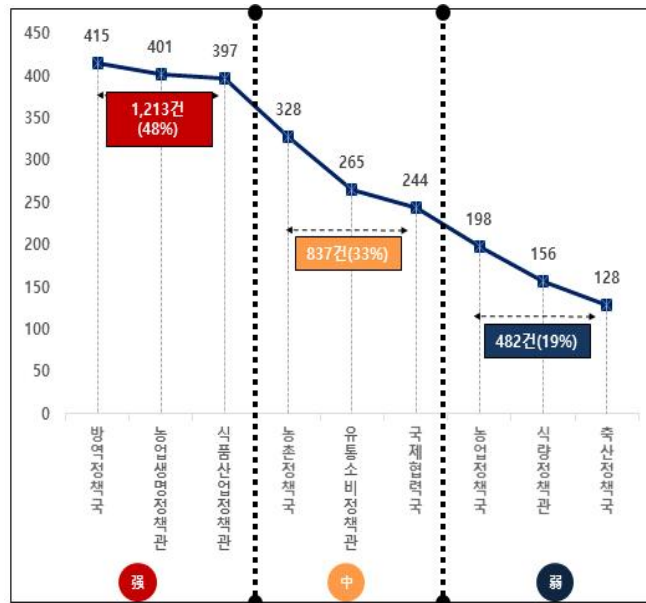


○ 다만, 실제 업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해 보도자료 및 브리핑 건수를 추가로 도출하고, 예산 규모는 예산 내 운영사업 개수로 대체하여 업무강도 영향요인 2가지를 선정하였음

□ 영향요인 중 양적 관점을 고려한 업무강도 평가를 위하여 보도자료 및 브리핑 건수를 집계하였으며, 편차 수준을 고려하여 국 단위 조직을 강, 중, 약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여유율 수준을 차등(강 : 108%, 중: 100%, 약 : 92%)하여 반영함

<표 3-205> 보도자료 및 브리핑 건수 합계

보도자료 및 브리핑 건수 합계		
구분	총 건수	순위
농촌정책국	328건	4
농업정책국	198건	7
식량정책관	156건	8
국제협력국	244건	6
축산정책국	128건	9
방역정책국	415건	1
식품산업정책관	397건	3
유통소비정책관	265건	5
농업생명정책관	401건	2



- 보도건수 및 브리핑 건수는 각 과의 건수를 취합하여 산출함
- 총 건수는 128-415건으로 구분되어 지며, 평균 281건을 시행하고 있음
- 1영역은 방역정책국, 농업생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총 1,213건 진행
- 2영역은 농촌정책국, 유통소비정책관, 국제협력국으로 총 837건으로 진행
- 3영역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국으로 482건으로 진행

□ 또한 업무강도 영향요인 중 예산 규모보다 예산별 운영사업 개수가 업무강도 영향도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집계하였으며, 편차 수준을 고려하여 국 단위 조직을 강, 중, 약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여유율 수준을 차등(강 : 108%, 중: 100%, 약 : 92%)하여 반영함

<표 3-206> 2020년 예산별 운영 사업 개수

2020년 예산 및 사업현황 개수		
구분	총 건수	순위
농촌정책국	33개	3
농업정책국	32개	4
식량정책관	27개	5
국제협력국	6개	9
축산정책국	23개	6
방역정책국	8개	8
식품산업정책관	16개	7
유통소비정책관	35개	2
농업생명정책관	51개	1



- 예산 규모보다 '사업개수'가 업무강도 영향의 개연성이 존재하여 국별 운영사업 개수를 집계함
- 1영역은 농업생명정책관
- 2영역은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 3영역은 방역정책국, 국제협력국

## 나. 업무강도 반영 적정인력 산정 결과

### 가) 분석 종합 결과

□ 업무량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부서별 편차가 존재하는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39.9명(현원 대비 68.9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07〉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농촌정책국	4	102%	중	100%	중	100%	125,905	127,919	60	68.6	8.6
농업정책국	5	100%	약	92%	중	100%	127,765	126,743	60	68.0	8.0
식량정책관	3	104%	약	92%	중	100%	122,261	125,195	58	67.2	9.2
국제협력국	9	92%	중	100%	약	92%	99,015	91,886	46	49.3	3.3
축산정책국	6	98%	약	92%	중	100%	95,521	93,228	44	50.0	6.0
방역정책국	2	106%	강	108%	약	92%	85,095	89,180	38	47.8	9.8
식품산업정책관	8	94%	강	108%	중	100%	95,486	91,667	46	49.2	3.2
유통소비정책관	1	108%	중	100%	중	100%	125,335	133,356	59	71.5	12.5
농업생명정책관	7	96%	강	108%	강	108%	129,332	127,263	60	68.3	8.3
<b>총 합계</b>							<b>1,005,715</b>	<b>1,006,437</b>	<b>471</b>	<b>539.9</b>	<b>68.9</b>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2) 표준근로시간 : 1,864(H)

3) 정성 80%, 정량 20%(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비율로 여유율 수준인 -8% ~ +8%을 차등하여 적용함

## 나) 국 단위 분석 결과

□ 농촌정책국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8.6명 (현원 대비 8.6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08>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농촌정책과	4	102%	중	100%	중	100%	27,826	28,271	13	15.2	2.2
지역개발과	4	102%	중	100%	중	100%	21,247	21,587	10	11.6	1.6
농촌사회복지과	4	102%	중	100%	중	100%	14,897	15,135	7	8.1	1.1
농촌산업과	4	102%	중	100%	중	100%	23,230	23,602	11	12.7	1.7
농촌여성정책팀	4	102%	중	100%	중	100%	12,281	12,477	6	6.7	0.7
농촌재생에너지팀	4	102%	중	100%	중	100%	16,196	16,455	8	8.8	0.8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4	102%	중	100%	중	100%	10,228	10,392	5	5.6	0.6
<b>합계</b>	<b>4</b>	<b>102%</b>	<b>중</b>	<b>100%</b>	<b>중</b>	<b>100%</b>	<b>125,905</b>	<b>127,919</b>	<b>60</b>	<b>68.6</b>	<b>8.6</b>

□ 농업정책국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8.0명 (현원 대비 8.0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09>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농업정책과	5	100%	약	92%	중	100%	28,616	28,387	14	15.2	1.2
농지과	5	100%	약	92%	중	100%	26,471	26,259	12	14.1	2.1
경영인력과	5	100%	약	92%	중	100%	24,104	23,911	11	12.8	1.8
농업금융정책과	5	100%	약	92%	중	100%	27,689	27,467	13	14.7	1.7
재해보험정책과	5	100%	약	92%	중	100%	20,885	20,718	10	11.1	1.1
<b>합계</b>	<b>5</b>	<b>100%</b>	<b>약</b>	<b>92%</b>	<b>중</b>	<b>100%</b>	<b>127,765</b>	<b>126,743</b>	<b>60</b>	<b>68.0</b>	<b>8.0</b>

□ 식량정책관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7.2명 (현원 대비 9.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10>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식량정책과	3	104%	약	92%	중	100%	30,759	31,497	14	16.9	2.9
식량산업과	3	104%	약	92%	중	100%	25,734	26,352	12	14.1	2.1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104%	약	92%	중	100%	16,606	17,005	8	9.1	1.1
농업기반과	3	104%	약	92%	중	100%	26,342	26,974	13	14.5	1.5
간척지농업과	3	104%	약	92%	중	100%	22,820	23,368	11	12.5	1.5
<b>합계</b>	<b>3</b>	<b>104%</b>	<b>약</b>	<b>92%</b>	<b>중</b>	<b>100%</b>	<b>122,261</b>	<b>125,195</b>	<b>58</b>	<b>67.2</b>	<b>9.2</b>

□ 국제협력국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9.3명 (현원 대비 3.3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11>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국제협력총괄과	9	92%	중	100%	약	92%	34,050	31,598	15	17.0	2.0
농업통상과	9	92%	중	100%	약	92%	17,738	16,461	9	8.8	-0.2
검역정책과	9	92%	중	100%	약	92%	24,127	22,390	11	12.0	1.0
동아시아자유무역 협정과	9	92%	중	100%	약	92%	23,100	21,437	11	11.5	0.5
<b>합계</b>	<b>9</b>	<b>92%</b>	<b>중</b>	<b>100%</b>	<b>약</b>	<b>92%</b>	<b>99,015</b>	<b>91,886</b>	<b>46</b>	<b>49.3</b>	<b>3.3</b>

□ 축산정책국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50.0명 (현원 대비 6.0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12>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축산정책과	6	98%	약	92%	중	100%	37,928	37,018	17	19.9	2.9
축산경영과	6	98%	약	92%	중	100%	31,768	31,006	15	16.6	1.6
축산환경자원과	6	98%	약	92%	중	100%	25,825	25,205	12	13.5	1.5
<b>합계</b>	<b>6</b>	<b>98%</b>	<b>약</b>	<b>92%</b>	<b>중</b>	<b>100%</b>	<b>95,521</b>	<b>93,228</b>	<b>44</b>	<b>50.0</b>	<b>6.0</b>

□ 방역정책국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7.8명 (현원 대비 9.8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13>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방역정책과	2	106%	강	108%	약	92%	31,078	32,570	14	17.5	3.5
구제역방역과	2	106%	강	108%	약	92%	29,045	30,439	13	16.3	3.3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2	106%	강	108%	약	92%	24,972	26,171	11	14.0	3.0
<b>합계</b>	<b>2</b>	<b>106%</b>	<b>강</b>	<b>108%</b>	<b>약</b>	<b>92%</b>	<b>85,095</b>	<b>89,180</b>	<b>38</b>	<b>47.8</b>	<b>9.8</b>



□ 식품산업정책관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49.2명(현원 대비 3.2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14>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식품산업정책과	8	94%	강	108%	중	100%	29,646	28,460	14	15.3	1.3
식품산업진흥과	8	94%	강	108%	중	100%	15,902	15,266	8	8.2	0.2
외식산업진흥과	8	94%	강	108%	중	100%	16,538	15,876	8	8.5	0.5
수출진흥과	8	94%	강	108%	중	100%	17,332	16,639	8	8.9	0.9
국산식품유통촉진팀	8	94%	강	108%	중	100%	16,068	15,425	8	8.3	0.3
<b>합계</b>	<b>8</b>	<b>94%</b>	<b>강</b>	<b>108%</b>	<b>중</b>	<b>100%</b>	<b>95,486</b>	<b>91,667</b>	<b>46</b>	<b>49.2</b>	<b>3.2</b>

□ 유통소비정책관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71.5명(현원 대비 12.5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15>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유통정책과	1	108%	중	100%	중	100%	32,103	34,158	15	18.3	3.3
식생활소비진흥과	1	108%	중	100%	중	100%	24,855	26,446	12	14.2	2.2
원예산업과	1	108%	중	100%	중	100%	26,838	28,556	12	15.3	3.3
원예경영과	1	108%	중	100%	중	100%	27,218	28,960	13	15.5	2.5
농축산물위생 품질관리팀	1	108%	중	100%	중	100%	14,321	15,238	7	8.2	1.2
<b>합계</b>	<b>1</b>	<b>108%</b>	<b>중</b>	<b>100%</b>	<b>중</b>	<b>100%</b>	<b>125,335</b>	<b>133,356</b>	<b>59</b>	<b>71.5</b>	<b>12.5</b>

□ 농업생명정책관의 업무강도를 적용한 인력산정결과, 표준근로시간 적용 시 68.3명(현원 대비 8.3명 부족)으로 나타남

<표 3-216> 업무 강도 적용 적정 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부서	정성		정량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밀도(80%)		홍보건수 (10%)		사업개수 (10%)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업무 밀도 순위	조정률	수준	조정률	수준	조정률					
농산업정책과	7	96%	강	108%	강	108%	27,583	27,142	13	14.6	1.6
과학기술정책과	7	96%	강	108%	강	108%	23,266	22,894	11	12.3	1.3
친환경농업과	7	96%	강	108%	강	108%	23,872	23,490	11	12.6	1.6
종자생명산업과	7	96%	강	108%	강	108%	19,604	19,290	9	10.3	1.3
동물복지정책과	7	96%	강	108%	강	108%	19,972	19,652	9	10.5	1.5
농기자재정책팀	7	96%	강	108%	강	108%	15,035	14,794	7	7.9	0.9
<b>합계</b>	<b>7</b>	<b>96%</b>	<b>강</b>	<b>108%</b>	<b>강</b>	<b>108%</b>	<b>129,332</b>	<b>127,263</b>	<b>60</b>	<b>68.3</b>	<b>8.3</b>

### 3) 업무량 기반 적정인력 산정 종합 분석 결과

#### (1) 적정인력 산정 종합 분석 결과

- 업무량 기반 적정인력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단편적 적용을 지양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량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양적 관점의 과거에 투입된 업무량에 미래에 발생할 기능 동태적 이슈를 추가 반영하고, 본원적 업무 강화를 위한 효율화의 고려 뿐 아니라 질적 관점의 업무강도 요인을 적용하여 종합적 업무량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 특히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단편적 요인에 근거한 인력산정 분석보다, 복합적 업무량 분석에 기반한 인력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농식품부의 적정인력은 526.0명(현원 대비 55.0명 부족)으로 나타나 부의 본원적 역할 수행과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5명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217〉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종합 결과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촌정책국	127,919	6,642	2,182	716	125,905	122,743	60	65.8	5.8
농업정책국	126,743	4,373	1,806	620	127,765	123,556	60	66.3	6.3
식량정책관	125,195	5,939	2,121	0	122,261	121,378	58	65.1	7.1
국제협력국	91,886	3,466	742	447	99,015	88,714	46	47.6	1.6
축산정책국	93,228	2,858	924	0	95,521	91,294	44	49.0	5.0
방역정책국	89,180	4,685	1,191	142	85,095	85,544	38	45.9	7.9
식품산업정책관	91,667	4,611	1,053	245	95,486	87,864	46	47.1	1.1
유통소비정책관	133,356	3,355	2,038	0	125,335	132,040	59	70.8	11.8
농업생명정책관	127,263	3,024	3,136	76	129,332	127,299	60	68.3	8.3
<b>총 합계</b>	<b>1,006,437</b>	<b>38,953</b>	<b>15,193</b>	<b>2,246</b>	<b>1,005,715</b>	<b>980,431</b>	<b>471</b>	<b>526.0</b>	<b>55.0</b>

- 1) 추정근로시간 : 19년 1월~12월 실제근무시간(OT포함, 휴가 제외)
- 2) 표준근로시간 : 1,864(H)
- 3) 조정근로시간(인력산정 기준시간) = 업무강도 - 공통업무효율화 + 기능조정 - 연구팀효율화

## (2) 국 단위 적정인력 산정 종합 분석 결과

□ 농촌정책국은 현원 대비 5.9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0.2~1.5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18〉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촌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10,392	724	77	142	10,228	9,602	5	5.2	0.2
농촌사회복지과	15,135	930	0	155	14,897	14,051	7	7.5	0.5
농촌산업과	23,602	1,417	372	0	23,230	22,557	11	12.1	1.1
농촌여성정책팀	12,477	44	541	49	12,281	12,926	6	6.9	0.9
농촌재생에너지팀	16,455	340	180	371	16,196	15,924	8	8.5	0.5
농촌정책과	28,271	2,176	224	0	27,826	26,319	13	14.1	1.1
지역개발과	21,587	1,011	789	0	21,247	21,364	10	11.5	1.5
<b>합계</b>	<b>127,919</b>	<b>6,642</b>	<b>2,182</b>	<b>716</b>	<b>125,905</b>	<b>122,743</b>	<b>60</b>	<b>65.8</b>	<b>5.8</b>

□ 농업정책국은 현원 대비 6.3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0.7~1.6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19>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경영인력과	23,911	815	402	0	24,104	23,499	11	12.6	1.6
농업금융정책과	27,467	864	44	0	27,689	26,648	13	14.3	1.3
농업정책과	28,387	1,139	436	323	28,616	27,361	14	14.7	0.7
농지과	26,259	1,016	186	0	26,471	25,429	12	13.6	1.6
재해보험정책과	20,718	539	737	297	20,885	20,619	10	11.1	1.1
<b>합계</b>	<b>126,743</b>	<b>4,373</b>	<b>1,806</b>	<b>620</b>	<b>127,765</b>	<b>123,556</b>	<b>60</b>	<b>66.3</b>	<b>6.3</b>

□ 식량정책관은 현원 대비 7.1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0.8~2.5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20>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량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간척지농업과	23,368	904	66	0	22,820	22,530	11	12.1	1.1
농가소득안정추진 단	17,005	957	306	0	16,606	16,354	8	8.8	0.8
농업기반과	26,974	1,723	415	0	26,342	25,667	13	13.8	0.8
식량산업과	26,352	381	971	0	25,734	26,941	12	14.5	2.5
식량정책과	31,497	1,975	364	0	30,759	29,887	14	16.0	2.0
<b>합계</b>	<b>125,195</b>	<b>5,939</b>	<b>2,121</b>	<b>0</b>	<b>122,261</b>	<b>121,378</b>	<b>58</b>	<b>65.1</b>	<b>7.1</b>

□ 국제협력국은 현원 대비 1.6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농업통상과는 0.4명의 효율화가 가능하고 그 외 0.1~1.0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21>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국제협력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검역정책과	22,390	454	385	0	24,127	22,321	11	12.0	1.0
국제협력총괄과	31,598	1,852	0	153	34,050	29,593	15	15.9	0.9
농업통상과	16,461	426	78	71	17,738	16,042	9	8.6	-0.4
동아시아자유무역 협정과	21,437	735	279	224	23,100	20,757	11	11.1	0.1
<b>합계</b>	<b>91,886</b>	<b>3,466</b>	<b>742</b>	<b>447</b>	<b>99,015</b>	<b>88,714</b>	<b>46</b>	<b>47.6</b>	<b>1.6</b>

□ 축산정책국은 현원 대비 5.0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1.1~2.3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22>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축산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축산경영과	31,006	1,017	0	0	31,768	29,989	15	16.1	1.1
축산정책과	37,018	1,692	567	0	37,928	35,894	17	19.3	2.3
축산환경자원과	25,205	150	356	0	25,825	25,412	12	13.6	1.6
<b>합계</b>	<b>93,228</b>	<b>2,858</b>	<b>924</b>	<b>0</b>	<b>95,521</b>	<b>91,294</b>	<b>44</b>	<b>49.0</b>	<b>5.0</b>



□ 방역정책국은 현원 대비 7.9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2.3~3.0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23〉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방역정책국)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구제역방역과	30,439	1,830	507	0	29,045	29,116	13	15.6	2.6
방역정책과	32,570	2,126	0	142	31,078	30,302	14	16.3	2.3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6,171	729	684	0	24,972	26,126	11	14.0	3.0
<b>합계</b>	<b>89,180</b>	<b>4,685</b>	<b>1,191</b>	<b>142</b>	<b>85,095</b>	<b>85,544</b>	<b>38</b>	<b>45.9</b>	<b>7.9</b>

□ 식품산업정책관은 현원 대비 1.1명이 필요하며, 식품산업진흥과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이 각각 0.1명과 0.2명의 효율화가 가능하고 그 외 0.4~1.1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24〉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식품산업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수출진흥과	16,639	208	548	0	17,332	16,979	8	9.1	1.1
식품산업진흥과	15,266	741	229	0	15,902	14,754	8	7.9	-0.1
식품산업정책과	28,460	2,603	149	0	29,646	26,007	14	14.0	0.0
외식산업진흥과	15,876	284	303	245	16,538	15,650	8	8.4	0.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15,425	774	-177	0	16,068	14,474	8	7.8	-0.2
<b>합계</b>	<b>91,667</b>	<b>4,611</b>	<b>1,053</b>	<b>245</b>	<b>95,486</b>	<b>87,864</b>	<b>46</b>	<b>47.1</b>	<b>1.1</b>

□ 유통소비정책관은 현원 대비 11.8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1.2~3.3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25〉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유통소비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농축산물위생품질 관리팀	15,238	155	280	0	14,321	15,362	7	8.2	1.2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6,446	85	565	0	24,855	26,926	12	14.4	2.4
원예경영과	28,960	871	526	0	27,218	28,615	13	15.4	2.4
원예산업과	28,556	569	501	0	26,838	28,488	12	15.3	3.3
유통정책과	34,158	1,676	167	0	32,103	32,649	15	17.5	2.5
<b>합계</b>	<b>133,356</b>	<b>3,355</b>	<b>2,038</b>	<b>0</b>	<b>125,335</b>	<b>132,040</b>	<b>59</b>	<b>70.8</b>	<b>11.8</b>

□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원 대비 8.3명이 필요하며, 소속 과 단위 부서별로 0.7~1.7명의 필요인력 편차가 존재함

〈표 3-226〉 업무량 분석 종합 적정인력 산정 결과(농업생명정책관)

부서	업무량 조정기준				추정근로시간 (H)		현원 (명)	인력 산정 결과 (명)	필요 인원 (명)
	업무 강도	공통 업무 효율화	기능 조정	연구팀 효율화	추정 근로 시간	조정 근로 시간			
과학기술정책과	22,894	442	1,126	0	23,266	23,578	11	12.6	1.6
농기자재정책팀	14,794	613	213	76	15,035	14,319	7	7.7	0.7
농산업정책과	27,142	452	633	0	27,583	27,323	13	14.7	1.7
동물복지정책과	19,652	763	308	0	19,972	19,198	9	10.3	1.3
종자생명산업과	19,290	467	298	0	19,604	19,122	9	10.3	1.3
친환경농업과	23,490	286	557	0	23,872	23,760	11	12.7	1.7
<b>합계</b>	<b>127,263</b>	<b>3,024</b>	<b>3,136</b>	<b>76</b>	<b>129,332</b>	<b>127,299</b>	<b>60</b>	<b>68.3</b>	<b>8.3</b>

□ 종합 결과와 같이 각 조직 단위별 양적·질적 업무량에 따른 적정인력 편차가 존재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 단위 또는 계 단위의 세부 조직 간 인력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유통소비정책관이 11.8명으로 현원 대비 가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생명정책관 8.3명, 방역정책국 7.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식품산업정책관과 국제협력국은 각각 1.1명, 1.6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필요 인력 규모의 국 단위 조직별 편차가 존재하며, 과 단위 조직의 경우 농업통상과 0.4명, 식품산업진흥과 0.1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0.2명의 소폭 효율화가 가능함

□ 다만, 현재도 표준근로시간 대비 투입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상황으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IV. 자체 조직진단 평가

### 1. 자체 조직진단 관련 제언

- 농식품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인력 개선(안)은 하기 <표 4-1>과 같이 도출되었음
- 대부분의 단위조직이 업무 기능강화의 사유로 조직신설과 전담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
- 다만,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근거 및 논리적인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4-1> 자체 조직진단 결과

기능 및 조직		인력	기능재설계 방향			사유 및 주요내용
기능 (대기능)	관련조직 (실국·1차소속)	기준 정원	강화	유지	축소	
농촌정책	농촌정책국	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효율적인 컨트론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확대 필요</li> <li>◦ 농촌협약의 시범도입, 안정적 정착, 지역개발 외 농업·농촌분야로의 도입 확대를 위해 전담인력 증원 필요</li> <li>◦ 농촌태양광 사업을 통한 수익이 지역주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할 필요</li> </ul>
농업정책	농업정책국	5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8.5)에 따른 농업인안전재해 예방 업무 전담인력 증원 필요</li> <li>◦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과 정원 확대</li> </ul>
농림연구 정책	농업생명 정책관	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사업(국가표준, 지역특화임대형, 기존농참 여단지, 빅데이터센터, 플랫폼구축) 및 관련 정책 확대 추진을 위한 인력 및 기구 보강 필요</li> <li>* 사업: ( '19) 5개 사업 527억원 → 8개 사업 1,022억원(94%증)</li> <li>◦ 농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총괄 기능 수행인력 필요</li> <li>◦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의 대상 대폭확대에 따른 대응인력 보강 필요</li> </ul>

기능 및 조직		인력	기능재설계 방향			사유 및 주요내용
기능 (대기능)	관련조직 (실국·1차소속)	기준 정원	강화	유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액기구인 농기자재정책팀의 정책예산·세제 지원 확대 및 신규 업무 수요 발생으로 정식 직제로 확대 개편 필요</li> </ul>
식량정책	식량정책관	5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국제교역 증가 등에 따른 병해충 발생 가능성 확대로 총괄조정, 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해 식물방역전담 기구 신설 필요</li> <li>공익형 직불제 추진에 따라 직불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심의, 기금의 운영, 강화된 준수 의무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추가 발굴, 농업인 교육 등 확대된 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li> </ul>
국제농업 통상협력	국제협력국	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영향,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이끌기 위해 SPS 협상 기능 강화 필요</li> <li>각국의 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출 관련 통보에 대한 대응 인력 필요</li> </ul>
축산정책	축산정책국	4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9.8.27) 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종장기 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양봉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li> <li>분뇨 악취 민원 증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축산(분뇨) 지목 등 이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운영 필요</li> <li>국내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이 먹는 펫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 산업적 육성 필요</li> <li>시 미발생 등에 따른 가금분야 기능 일부축소에 따라 가금기반과 가금유통계를 통합운영하고 감축인력을 현안과제인 무허가 축사에 재배치 추진</li> </ul>
	방역정책국	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SF 방역 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 및 인력 증원 필요</li> <li>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 도입 및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에 따른 진료 표준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필요</li> </ul>
식품산업 정책	식품산업정책 관실	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효식품 R&amp;D센터 건립 및 장류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 제기</li> <li>장류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19.9월)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 및 보호 정책 발굴 필요</li> </ul>
농산물 유통	유통소비 정책관실	5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먹거리 관련 이슈의 통합 관리</li> </ul>

기능 및 조직		인력	기능재설계 방향			사유 및 주요내용
기능 (대기능)	관련조직 (실국·1차소속)	기준 정원	강화	유지	축소	
						<p>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1명 인원이 세부전략수립, 교육·홍보, 재정지원, 실적점검·관리, 관련 법 제·개정 등 업무를 하고 있어 실무인력 증원 필요</li> <li>◦급식진흥 법령 제정 및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li> <li>◦푸드플랜 및 농산물 직거래 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먹거리 전담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배치</li> </ul>
농산물 품질관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1,43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조사, 재배환경 위험평가, 친환경인증, 유기농업자재, 사료, LMO, 원산지 등 농축산물 품질관리 강화</li> <li>◦지원 사무소의 업무량 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기능간 재배치 추진</li> </ul>
농업과학	농업생명 정책관실	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환경·생태 보전 및 공익적 기능 강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기관 관리·감독, 인증농산물 소비·홍보 촉진 등을 위해 유지 필요</li> <li>◦농업 경영에 있어 필수재인 농기자재(농약, 비료)의 비용 절감 및 안전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기능 유지 필요</li> <li>◦육묘산업육성 및 고품질 우량묘 공급의 선진육묘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운영 인력 필요</li> </ul>
농림축산 검역	농림축산 검역본부	27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역, 해외여행 증가로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가축질병, 식물병해충 유입 우려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li> <li>-현장검역, 예찰방제 등 대국민 직접 분야를 중심으로 기구·인력 보강</li> <li>◦동물복지축산,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및 관련 정책개선 요구 등에 대응할 전담 기구 필요</li> <li>◦일부 사무소의 시험분석 분야 기능 쇠퇴에 따라 해당정원을 예찰방제 분야에 재배치</li> </ul>
농림행정 지원	정책기획관실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과제(4차산업혁명 선도기반 마련) 수행 및 농어업인 삶의 질 법 내에 “농업농촌 공간 정보 등의 종합정보 체계 구축” 근거 마련(‘18.12)에 따라 “농식품 빅데이터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 필요</li> <li>*행안부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19)으로 공공 민의 빅데이터 관련 조직 신설 근거 마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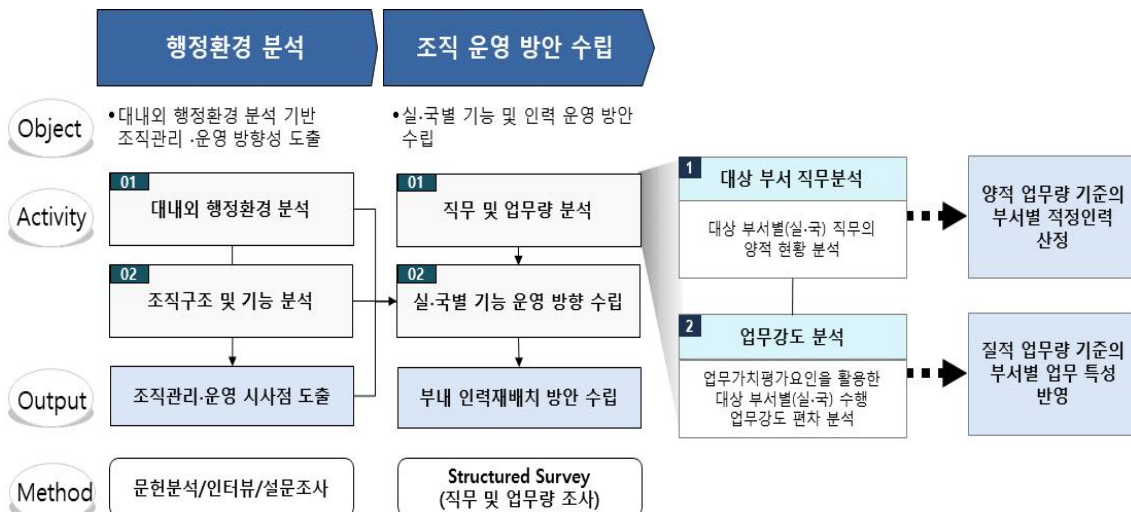
기능 및 조직		인력	기능재설계 방향			사유 및 주요내용
기능 (대기능)	관련조직 (실국·1차소속)	기준 정원	강화	유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원발의 법안대응, 하위법령 정비 등 증가하는 행정입법 지원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 필요</li> </ul>
	비상기획관실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인 을지연습 등 이외에 폭염, 지난 등 국가재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부내 국가 재난 업무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 필요</li> </ul>
	대변인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정책방향 및 정책성과 홍보 및 국민과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행 조직 및 기능 유지 필요</li> </ul>
	감사관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대상기관 증가 및 감찰업무의 질적양적 수준 확대와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감사업무 및 공직기강확립 업무 수행을 위해 현행 조직 유지</li> </ul>
	운영지원	2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에게 질 좋은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 구성원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역량 개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공직사회의 인정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일과 삶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해 현행 기능과 인력 유지 필요</li> <li>◦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라 늘어난 공무원 등 근로자 노무관리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필요</li> <li>◦다만, 기능이 쇠퇴되어 미채용중인 인사기록 분야 전문경력관 정원은 순감하여 운영</li> </ul>
농업인력 양성	한국 농수산대학	1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계적인 농수산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 등 우수 청년 유입과 성공적인 농촌 정착 지원체계 구축 필요</li> <li>◦국내·외 농산업 최신 트렌드 및 미래 수요를 반영한 학과 신설(4개), 농수산업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기존 학과 분과(4개 학과 → 8개 학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규모의 조교인력 확보 필요</li> <li>◦입학지원 급감과 청년농업인 양성 등 한농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적극 대응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사관리 및 홍보 기능 전담인력 필요</li> <li>◦농업·농촌 현장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전문기술 활용 중심의 새로운 실무 교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실습) 환경을 구축 운영할 전담 실무인력 보강 필요</li> </ul>
농업연수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 농업 및 식품 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기능 유지 필요</li> </ul>

기능 및 조직		인력	기능재설계 방향			사유 및 주요내용
기능 (대기능)	관련조직 (실국·1차소속)	기준정원	강화	유지	축소	
종자관리	국립종자원	20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불량 종자·묘의 유통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종자 유통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종자유통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현장대응 강화 필요</li> <li>◦종자 및 농생명산업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의 교육인원 및 과정이 증가됨에 따라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li> <li>◦과수모목산업선진화대책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 등 안정적, 효율적인 국가 종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종자검정연구센터의 정규화 필요</li> <li>◦마무리 단계인 정선시설현대화 인력을 종자생명분야 전문인력 양성분야에 재배치</li> </ul>

□ 특히, 인력 증원의 논리적 구조는 대내외적인 환경적인 상황적 요인의 고려와 이에 따른 업무량 변동에 기반한 양적 요소와 업무난이도 및 업무밀도를 고려한 질적 요소를 포함하여 부서별 인력의 과부족 근거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의 방법론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함에 따라, 향후 조직진단의 소요정원 산출 시 이를 내부화하여 필요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1〉 조직진단 방법론





## 2. 소요정원 요구서 관련 제언

- 농식품부의 소요정원 요구서 검토결과, 현황, 필요성, 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참고자료로 구성된 전반적인 항목 구조는 이견 없음
- 다만, 과별 제시된 소요정원 요구서를 항목 구조별로 기술된 내용을 내용 적합성과 구조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소요정원 요구서의 제시된 6개 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1) 소요정원 요구별 검토 의견

#### (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정규조직 전환

〈표 4-2〉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1

구분	내용				
1.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와 같은 관점 서술 고려. 특히 향후 업무 예측 부분을 포함하는 방안 고려</li> <li>① 농협 경제사업 및 한시정원 운용 배경</li> <li>① 업무 현황 및 업무 특성</li> <li>① 향후 업무 예측(업무 연속성 관점)</li> </ul>				
2.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규조직 전환의 당위성이 강하게 어필될 필요</li> <li>• 단 이 부분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서술</li> <li>• 예컨대 농협 경제사업이 국가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여 업무의 지속성과 강화 필요성을 서술</li> <li>• 필요성 서술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구성 고려</li> <li>① 농협 경제사업 성과의 영향력</li> <li>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업무 지속성과 강화 필요 관점)</li> </ul>				
3. 요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 내용 명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As-is To-be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AS-IS</th> <th style="width: 50%;">TO-BE</th> </tr> </thead> <tbody> <tr> <td>한시정원 2명</td> <td>정규조직 전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시적으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규조직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li> <li>① As-is : 한시정원 2명 유지 시 우려사항을 서술 제시(매우 우려됨의 관점 서술)</li> <li>① To-be : 정규조직 전환 시의 기대효과를 서술 제시(한시정원 2명 유지 시의 우려사항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상반적 관점에서 서술)</li> </ul>	AS-IS	TO-BE	한시정원 2명	정규조직 전환
AS-IS	TO-BE				
한시정원 2명	정규조직 전환				

4.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수 변동은 아니므로 업무량 등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움</li> <li>•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예컨대 농협 경제사업 관련 업무가 중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과거부터(16년 이후) 예측되는 중기 미래까지(21년 이후 2차 계획 등) 연도별 업무, 예산 등을 시계열적인 표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li>• 또한 유사 사례 또는 전례를 제시하여 논리를 보강하는 방안 고려</li> </ul>
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 업무의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분리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투입 측면에서 업무의 전문성 축적</li> <li>① 과정 측면에서 책임관리 효과</li> <li>① 산출 측면에서 업무 성과의 영향력</li> <li>• 이와 더불어 단기 측면과 장기 측면의 구조로 효과를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단기 : 업무의 운영의 효과성, 정책 등 외부환경 대응의 적시성</li> <li>① 장기 :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의 활성화와 영향력</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 예컨대 유사 사례의 상세 내용 제시</li> </ul>

##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가능 강화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전담인력 증원

〈표 4-3〉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2

구분	내용
1.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와 같은 향후 업무 운영 및 예측 부분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방안 고려</li> <li>- 현재 ASF 방역 인력에 따른 방역 대응 업무 내용 및 구조</li> </ul>
2.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서술</li> <li>• 이 부분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서술</li> <li>• ASF 방역관리가 국가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여 대응 업무의 지속성과 강화 필요성을 서술</li> <li>• 필요성 서술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구성 고려</li> <li>① ASF 발생 및 피해액 가중 개연성(타 국가 ASF 발생에 따른 손실 및 사회적 비용 제시)</li> <li>② 현재 대응 부족 업무 및 향후 추가 발생될 업무에 대한 내용 예측</li> <li>② 부서 내 기능을 신설하여 현재 인력으로 재배치의 한계(현재 인력의 총 업무량 대비 현재 총업무량 과다) 및 애로</li> </ul>
3. 요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 내용 명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As-is To-be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ul>

	AS-IS	TO-BE
	정원 12명	정원 14명(+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시적으로 ASF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li> <li>① As-is : 현재 정원 12명 유지 시 우려사항을 서술 제시(업무기능 및 관리 저하에 따른 위험요소 우려됨의 관점 서술)</li> <li>① To-be : 인력 증원 시의 기대효과를 서술 제시(현재 정원 12명 유지 시의 우려사항을 인력 증원(+2명)으로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상반적 관점에서 서술)</li> </ul>	
4.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원 증원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업무량 관점에서 보완 서술하여 정량적 논리 확보하는 방안 고려</li> <li>인원 증원은 현재 업무량과 기능 신설에 따라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추가될 것인지 산출 결과 제시(예측되는 업무량/표준근무시간=적정인력 추가 2명)</li> <li>이로 인해 현재 인원 12명에서 추가 2명이 필요하다는 업무량 기반의 필요인력을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 제고 필요</li> </ul>	
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 업무의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분리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투입 측면에서 업무의 전문성 축적</li> <li>① 과정 측면에서 업무운영 효과성</li> <li>① 산출 측면에서 업무 성과의 영향력</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 특히, 업무량 기반의 인원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 및 결과의 상세 내용 제시</li> </ul>	

### (3) 첨단농기자재 관리 기능 확충 등을 위한 첨단농기자재정책과 신설

<표 4-4>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3

구분	내용
1.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와 같은 관점 서술 고려. 특히 향후 업무 운영 및 예측 부분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방안 고려</li> <li>① 농기자재정책팀 구성 및 인력 운용 배경</li> <li>① 향후 업무 예측(업무 연속성 관점)</li> </ul>
2.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적인 부분으로 정규조직 전환 및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서술</li> <li>이 부분은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서술</li> <li>농기자재 산업이 국가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함과 더불어 정책적 대응 및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서술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구성 고려</li> </ul>

	<p>① 농기자재 산업의 업무 연속성과 중요성 확대에 의한 농기자재 산업의 정책 대응 및 활성화 필요성</p> <p>② 현재 대응 부족 업무 및 향후 추가 발생될 업무에 대한 내용 예측</p> <p>② 현재 조직 형태 및 인력으로 재배치의 한계(현재 인력의 총 업무량 대비 현재 총업무량 과다) 및 애로=&gt;다소 미시적 관점이나, '신설' 특성 상 제시</p>				
3. 요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 내용 명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As-is To-be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AS-IS</th> <th style="width: 50%;">TO-BE</th> </tr> </thead> <tbody> <tr> <td>농기자재정책팀 7명</td> <td>첨단농기자재정책과 11명(+4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시적으로 농기자재 산업의 정책 대응 및 활성화를 위해 첨단농기자재정책과 신설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li> </ul> <p>① As-is : 현재 조직구조 및 정원 7명 유지 시 우려사항을 서술 제시(업무기능 및 관리 저하에 따른 위험요소 우려됨의 관점 서술)</p> <p>① To-be : 과 신설 및 인력 증원 시의 기대효과를 서술 제시(현재 조직구조 및 정원 7명 유지 시의 우려사항을 과 조직 신설 전환(첨단농기자재정책과) 및 인력 증원(+4명)으로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상반적 관점에서 서술)</p>	AS-IS	TO-BE	농기자재정책팀 7명	첨단농기자재정책과 11명(+4명)
AS-IS	TO-BE				
농기자재정책팀 7명	첨단농기자재정책과 11명(+4명)				
4.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예컨대 농기자재 산업 관련 업무가 중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과거부터 예측되는 중기 미래까지 연도별 업무, 예산 등을 시계열적인 표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li>또한, 과 조직으로 전환 신설에 대한 유사 사례 또는 전례를 제시하여 논리를 보강하는 방안 고려</li> <li>인원 증원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업무량 관점에서 서술하여 정량적 논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li> <li>인원 증원은 현재 업무량과 추가 업무량 산출 결과가 제시되고 이로 인한 업무량 기반의 필요인력을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 제고 필요(예측되는 업무량/표준근무시간=적정인력 추가 4명)</li> </ul>				
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 업무의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분리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ul> <p>① 투입 측면에서 업무의 전문성 축적</p> <p>① 과정 측면에서 책임관리 효과</p> <p>① 산출 측면에서 업무 성과의 영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는 단기 측면과 장기 측면의 구조로 효과를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ul> <p>① 단기 : 업무의 운영의 효과성, 정책 등 외부환경 대응의 적시성</p> <p>① 장기 :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의 활성화와 영향력</p>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유사 사례 등) 제시. 특히, 업무량 기반의 인원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 및 결과의 상세 내용 제시</li> </ul>				

#### (4) 동물보건사 육성관리 및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를 위한 인력 증원

〈표 4-5〉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4

구분	내용				
1.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와 같은 관점 서술 고려. 특히 향후 업무 운영 및 예측 부분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방안 고려</li> <li>① 현재 동물진료 자격 및 진료표준 관련 인력에 따른 업무 내용 및 구조</li> <li>① 향후 업무 예측(업무 연속성과 업무 확대 관점)</li> </ul>				
2.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적인 부분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서술</li> <li>동물진료 자격 및 진료 표준화의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대응 업무의 연속적 업무량 가중</li> <li>필요성 서술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구성 고려</li> <li>① 동물진료 자격 및 진료 표준화의 수요 증가로 현재 대응 부족 업무 및 향후 추가 발생될 업무에 대한 내용 예측</li> <li>② 현재 조직 형태 및 인력으로 재배치의 한계(현재 인력의 총 업무량 대비 현재 총업무량 과다) 및 애로</li> </ul>				
3. 요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 내용 명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As-is To-be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ul> <table border="1" data-bbox="475 1021 1302 1084"> <thead> <tr> <th data-bbox="475 1021 890 1050">AS-IS</th> <th data-bbox="890 1021 1302 1050">TO-BE</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5 1050 890 1084">겸직 1명</td> <td data-bbox="890 1050 1302 1084">동물진료계 2명(+2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시적으로 동물진료 자격 및 진료 표준화의 대응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li> <li>① As-is : 현재 조직구조 및 겸직 인력 유지 시 우려사항을 서술 제시(업무기능 및 관리 저하에 따른 위험요소 우려됨의 관점 서술)</li> <li>① To-be :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시의 기대효과를 서술 제시(현재 조직구조 및 겸직 인력 유지 시의 우려사항을 전담조직(동물진료계) 신설 및 인력 증원(+2명)으로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상반적 관점에서 서술)</li> </ul>	AS-IS	TO-BE	겸직 1명	동물진료계 2명(+2명)
AS-IS	TO-BE				
겸직 1명	동물진료계 2명(+2명)				
4.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예컨대 동물 진료 자격 및 표준화 관련 관련 업무가 중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과거부터 예측되는 중기 미래까지 연도별 업무, 예산 등을 시계열적인 표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li>또한,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유사 사례 또는 전례를 제시하여 논리를 보강하는 방안 고려</li> <li>인원 증원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미시적(업무량) 관점에서 서술</li> <li>인원 증원은 현재 업무량과 추가 업무량 산출 결과가 제시되고 이로 인한 업무량 기반의 필요인력을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 제고 필요(예측되는 업무량/표준근무시간=적정인력 2명)</li> <li>※ 표준근무시간 2,000시간은 일반적 수준에 비해 과다한 수준임. 실제</li> </ul>				

	2019년 공휴일 제외 및 여유율 차감 등을 고려할 필요
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 업무의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분리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투입 측면에서 업무의 전문성 축적</li> <li>① 과정 측면에서 책임관리 효과</li> <li>① 산출 측면에서 업무 성과의 영향력</li> <li>이와 더불어 단기 측면과 장기 측면의 구조로 효과를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단기 : 업무의 운영의 효과성, 정책 등 외부환경 대응의 적시성</li> <li>① 장기 :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의 활성화와 영향력</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유사 사례 등) 제시. 특히, 업무량 기반의 인원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 및 결과의 상세 내용 제시</li> </ul>

### (5) 법제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법제지원계 신설

〈표 4-6〉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5

구분	내용				
1.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와 같은 관점 서술 고려. 특히 향후 업무 운영 및 예측 부분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방안 고려</li> <li>① 법제·자문업무 및 대응인력 운용 배경</li> <li>① 업무 현황 및 업무 특성</li> <li>① 향후 업무 예측(업무 연속성 관점)</li> </ul>				
2.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적인 부분으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서술</li> <li>이 부분에서는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서술</li> <li>입법수요 증가와 연계된 법제업무의 증가로 대응 업무의 연속적 업무량 가중</li> <li>필요성 서술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구성 고려</li> <li>① 입법수요 증가로 현재 법제업무 및 법령해석 대응 부족 업무 및 향후 추가 발생될 업무에 대한 내용 예측</li> <li>② 현재 조직 대응 및 인력의 한계(전담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 운영 및 지원 한계) 및 애로=&gt;신설은 증원보다 다소 부담이 큰 사항으로 미시적 측면 논리 제시</li> </ul>				
3. 요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 내용 명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As-is To-be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AS-IS</th> <th>TO-BE</th> </tr> </thead> <tbody> <tr> <td>담당인력 없음</td> <td>법제지원계 2명(+2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시적으로 법제 및 법률자문 업무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li> </ul>	AS-IS	TO-BE	담당인력 없음	법제지원계 2명(+2명)
AS-IS	TO-BE				
담당인력 없음	법제지원계 2명(+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As-is : 현재 조직구조의 겸직 인력 유지 시 우려사항을 서술 제시(업무기능 및 관리 저하에 따른 위험요소 우려됨의 관점 서술)</li> <li>① To-be :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시의 기대효과를 서술 제시(현재 조직구조 유지 시의 우려사항을 전담조직(법제지원계) 신설 및 인력 증원(+2명)으로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상반적 관점에서 서술)</li> </ul>
4.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예컨대 법제 및 법률자문 업무가 중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과거부터 예측되는 중기 미래까지 연도별 업무, 예산 등을 시계열적인 표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li>• 인원 증원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미시적(업무량) 관점에서 서술</li> <li>• 인원 증원은 현재 업무량과 추가 업무량 산출 결과가 제시되고 이로 인한 업무량 기반의 필요인력을 제시하여 논리적 타당성 제고 필요</li> </ul>
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 업무의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분리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투입 측면에서 업무의 전문성 축적</li> <li>① 과정 측면에서 책임관리 효과</li> <li>① 산출 측면에서 업무 성과의 영향력</li> <li>• 이와 더불어 단기 측면과 장기 측면의 구조로 효과를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단기 : 업무의 운영의 효과성, 정책 등 외부환경 대응의 적시성</li> <li>① 장기 : 산업적 측면의 활성화와 영향력</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제시. 특히, 업무량 기반의 인원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 및 결과의 상세 내용 제시</li> </ul>

## (6) 공무원 등 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

〈표 4-7〉 소요정원 요구 검토 의견6

구분	내용
1.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와 같은 관점 서술 고려. 특히 향후 업무 운영 및 예측 부분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방안 고려</li> <li>① 현재 각 기관별 공무원 근로자 노무관리 인력에 따른 업무 내용 및 구조</li> <li>① 향후 업무 예측(업무 연속성과 업무 확대 관점)</li> </ul>
2.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조직별(본부, 검역본부, 농관원)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서술하고, 공무원 등 근로자 노무 관련 법률 이행사항 수행과 대응 업무의 연속적 업무량 가중을 제시</li> <li>• 필요성 서술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구성 고려</li> <li>① 각 조직별 노동분쟁 대응 및 단체교섭 등의 현재 대응 부족 업무 및</li> </ul>

	<p>향후 추가 발생될 업무(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 예측</p> <p>② 현재 각 조직별 인력으로 업무 대응의 한계(추가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 운영 및 지원 한계) 및 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 내용 명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As-is To-be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li> </ul>				
3. 요구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AS-IS</th> <th style="width: 50%;">TO-BE</th> </tr> </thead> <tbody> <tr> <td>본부, 농관원 겸직 각 1명 검역본부 정원 1명</td> <td>기관별(본부1명, 검역본부1명, 농관원1명) 각 1명 증원 (+3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시적으로 근로자 노무 관련 법률 이행사항 수행과 대응 업무를 위해 기관별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li> <li>① As-is : 현재 기관별 인력 유지 시 우려사항을 서술 제시(업무기능 및 관리 저하에 따른 위험요소 우려됨의 관점 서술)</li> <li>① To-be : 기관별 인력 증원 시의 기대효과를 서술 제시(현재 기관별 인력 유지 시의 우려사항을 인력 증원(+3명)으로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상반적 관점에서 서술)</li> </ul>	AS-IS	TO-BE	본부, 농관원 겸직 각 1명 검역본부 정원 1명	기관별(본부1명, 검역본부1명, 농관원1명) 각 1명 증원 (+3명)
AS-IS	TO-BE				
본부, 농관원 겸직 각 1명 검역본부 정원 1명	기관별(본부1명, 검역본부1명, 농관원1명) 각 1명 증원 (+3명)				
4.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원 증원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미시적(업무량) 관점에서 서술</li> <li>인원 증원은 현재 업무량과 추가 업무량 가산 결과 본 업무에 투입되는 업무량이 산출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량 기반의 필요인력을 제시하여 증원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제고 필요(예측되는 업무량/표준근무시간=적정인력)</li> </ul>				
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 업무의 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분리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투입 측면에서 업무의 전문성 축적</li> <li>① 과정 측면에서 책임관리 효과</li> <li>① 산출 측면에서 업무 성과의 영향력</li> <li>이와 더불어 단기 측면과 장기 측면의 구조로 효과를 서술하는 방안 고려</li> <li>① 단기 : 업무의 운영의 효과성, 정책 등 외부환경 대응의 적시성</li> <li>① 장기 :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의 활성화와 영향력</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제시. 특히, 업무량 기반의 인원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 및 결과의 상세 내용 제시</li> </ul>				

### 3. 조직·기능 재설계 위한 제언

#### 1) 조직진단 당위성 강화 방안

- 농식품부의 자체 조직진단의 방법론 구조화를 통하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소요정원 요구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농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영역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조직구조 상의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하고, 조직의 미션 달성과 조직 기능이 극대화할 수 조직구조 개편안을 선제적으로 도출한 후, 이에 따른 적정 인력의 배치가 논리적인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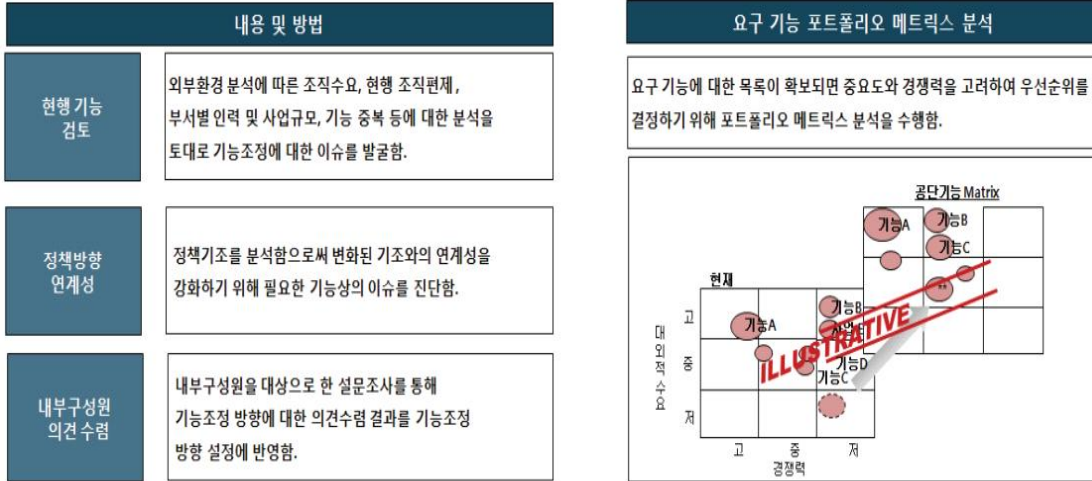
〈그림 4-2〉 조직진단 프로세스



Phase 1. 직무 분석	Phase 2. 기능 분석	Phase 3. 조직개편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특성에 따른 업무량 평가</li> <li>• 업무유형별 적정인력 규모 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기초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직무조사(전직원)</li> <li>- 직무 대분류별 인력규모 산출</li> </ul> </li> <li>• 직무기술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량 및 직무특성 조사</li> <li>- 업무 우선순위 조사</li> </ul> </li> <li>• 업무량 산정 및 직무특성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별 업무량 및 우선순위 파악</li> <li>- 투입인력 산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기능 상세 조정안 복수 도출</li> <li>• 평가기준을 토대로 최종안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조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기능 및 신규 수요 검토</li> <li>- 기능효율성 평가</li> <li>- 정책중요도 등에 의거 확대, 유지, 축소</li> <li>- 복수의 기능 재설계안 도출</li> </ul> </li> <li>• 기능조정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목적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li> <li>- 최종 조직 재설계안 도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조직재설계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재설계에 따른 산정인력 재배치</li> <li>• 현 인력 범위 내 부서간 적정인력 제시</li> <li>• 인력관리 위한 업무별 정원비율 제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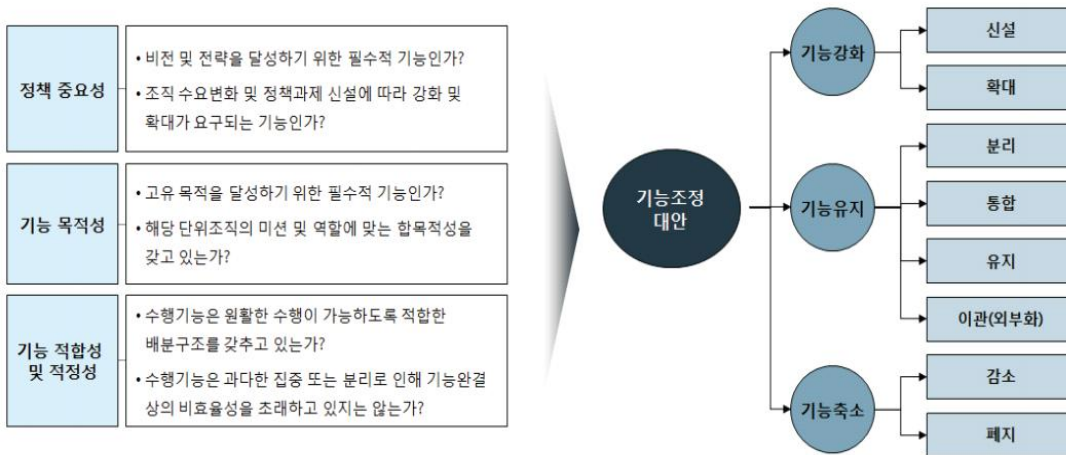
- 행정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Top-down 관점과 직무분석과 기능분석의 Bottom-up 관점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조직개편안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인 정원산정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리적 구조임
- 더불어, 기능조정 부문에서 분석을 위해 현행 기능검토, 정책방향의 연계성,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과 함께 한정된 조직자원(인력)활용을 위한 요구기능에 중요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3> 기능연계 매트릭스 분석



- 또한, 기능 재조정 준거를 정책 중요성, 기능 목적성, 기능 적합성 및 적정성의 구조로 분류하여 서술 시 논리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음

<그림 4-4> 기능 재조정 준거 구조



## 2) 소요정원 논리 강화 방안

- 소요정원 요구서의 현황, 필요성, 요구내용, 산출근거, 기대효과, 참고자료의 5개 항목 구조별로 기술된 내용을 내용 적합성과 구조적 타당성을 고려한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1) 현황 분석 부문

- 현황 부문의 경우, 대외적인 환경, 정책 등의 변화와 더불어 업무 발생 배경, 현황 및 특성의 경우 잘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 인력별 업무분장과 향후 업무 운영 및 예측 부문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아래 2가지 관점으로 구조화하여 서술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현재 운영 인력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운영 구조
  - 둘째, 업무 연속성과 업무 확대 관점의 향후 업무 예측

### (2) 요구 필요성 부문

- 필요성 부문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정규조직 전환, 조직 신설 및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서술하되, 거시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제언함
- 예컨대 국가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제시와 더불어 정책적 대응 및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 확대에 대한 필요성 관련 기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성 서술 구조를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순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산업의 업무 연속성과 중요성 확대에 인한 정책 대응 업무의 필요성
  - 둘째, 현재 대응이 불충분한 업무 및 향후 추가 발생될 업무에 대한 내용 예측
  - 셋째, 현재 조직 형태 및 인력의 재배치 한계 및 애로

### (3) 요구내용 부문

- 미시적으로 업무기능 강화 등 업무개선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인력요구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요구내용 명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As-is vs To-be로 제시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음
  - As-is의 관점에서는 현재 조직구조 및 인력 유지 시 우려 사항을 서술하여 제시하고, 업무 기능 및 관리 저하에 따른 위험요소가 우려됨의 서술
  - To-be의 관점에서는 조직구조 변경,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시의 기대효과를 서술 제시하며, As-is의 우려 사항을 조직구조 변경,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으로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상반적 관점에서 서술

### (4) 산출근거 부문

- 산출근거 부문은 소요정원 요구의 2가지 유형별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한시 정원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조직 및 기능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의 경우임
  - 한시 정원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첫째,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과거부터 예측되는 미래까지 연도별 업무, 예산 등을 시계열적 표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둘째, 정규조직 전환에 대한 유사 사례 또는 전례를 제시하여 논리를 보강하는 2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조직 및 기능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의 경우는 현재 인력의 재배치 한계, 즉 현재 인력의 총 업무량 대비 현재 총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하며, 인력보강에 대한 당위성을 미시적(업무량) 관점에서 기술하여야 함
- 즉, 인원 증원은 첫째, 현재 업무량과 추가 발생 예측되는 업무량 산출 결과가 제시되고, 둘째, 이로 인한 업무량 기반의 필요인력을 제시하는 정량적인 논리적 타당성의 근거가 필요함

## (5) 기대효과 부문

- 기대효과 부문은 조직 신설, 인력 보강 등의 효과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투입, 과정, 산출의 관점에서의 업무 질적 기대효과를 아래와 같이 분리 서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투입 측면에서 업무의 전문성 축적
  - 둘째, 과정 측면에서 책임관리 효과
  - 셋째, 산출 측면에서 업무 성과의 영향력
- 또한, 단기 측면과 장기 측면의 단계적 구조로 효과를 서술하는 방안을 고려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업무의 운영의 효과성, 정책 등 외부환경 대응의 적시성 강화
  - 장기적으로는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의 활성화와 영향력 확대

## 3) 조직 및 인력 수요 제언

- 상기 소요정원 항목 개선의 관점을 농식품부의 6개 주요 사항에 대입하여 검토하고 조직 및 인력 수요 관련 제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정규조직 전환

#### 가. 현황 및 필요성

- 농협법 개정( '11.3월)에 따른 농협사업구조개편 및 농식품부-농협 간 MOU 체결( '12.5월)에 따라 수립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세부이행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한시 정원을 운용 중임
-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행 후속조치, 농협법 개정( '16.12월)에 따른 농협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점검 의무화, 농협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20개소) 관리·감독 업무 증가 등으로 정규조직 인력이 필요함

## 나. 소요정원 산출근거

- 한시조직(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농협 경제사업의 연속적·전문적 점검·평가 관리로 경제사업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고, 농협법 개정('16.12월) 및 자회사 수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업무 대응이 필요함

## 다. 기대효과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정규조직 전환의 기대효과는 농협경제사업 담당업무의 정규조직화로 담당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농협 본연의 역할 확대가 실현 가능함
- 산지유통 규모화·전문화, 농·축산물 유통 계열화를 통해 농협경제지주의 조합 농축산물 책임판매 증가 및 경제사업 규모 확대
- 약정조합원 육성, 도시농협 판매기능 강화, 경제지주-조합 간 경제사업 연계 강화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적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실현 가능함

##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가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전담인력 증원

### 가. 현황 및 필요성

- 구제역·AI가 지속발생하고 있고 '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됨
- '18년부터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주변국가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사전 예방, 발생시 신속대 및 안정적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ASF는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AI와 달리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구제역과 달리 백신도 없어 선제적 모니터링과 상시 방역대책 추진이 중요함

## 나. 소요정원 산출근거

- ASF 방역조치 총괄·SOP운용, 소독·백신·예찰·점검 등 업무에 따른 2명(5급 1명, 6급 1명)의 인력 보강이 필요함

## 다. 기대효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전담인력 증원의 단기적인 기대효과는 '19년 최초 발생한 ASF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ASF 방역의 체계화 및 지속 제도개선·현장 적용을 통해 ASF 재발생을 방지하여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3) 첨단농기자재 관리 기능 확충 등을 위한 첨단농기자재정책과 신설

#### 가. 현황 및 필요성

- ' 15.1월 농기자재정책팀이 신설되었으나, 현원으로는 대규모 예산·세제지원을 운영함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절차현장점검, 다수의 민원 등으로 중앙부처 본연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함
  - 중앙부처는 관련 업무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발굴, 관련 산업(농기계 2.0, 비료 1.9, 농약 1.5 등 총5.4조원 산업 담당)의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하나, 현재의 조직·인력으로는 한계가 발생함
- 재정사업 운영 및 민원 업무 처리의 과중으로 긴급한 현안 등의 적기 대응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기획·제도 담당과 사업 담당 인력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비료·농기계 분야 산업확대에 따른 제도개선 수요가 증가함
  - 농업기계 산업의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첨단농업기계화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함
  - 환경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료 품질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비료 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가 필요함

## 나. 소요정원 산출근거

- 첨단농기자재정책과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팀장 인력을 과장 직위로 직급 상향이 필요함(4.5급→4급)
-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 첨단 농업기계화, 농업기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 마련을 위한 농기계제도계 신설이 필요함(5급1, 6급1)
- 비료원료의 다양화·환경문제 등 비료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비료제도계 신설이 필요함

## 다. 기대효과

- 첨단농기자재 관리 기능 확충 등을 위한 첨단농기자재정책과 신설의 기대효과는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농업기계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 농업기계 산업을 육성하여 고품질·고성능 농업기계 보급 및 국내 농업기계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첨단농업기계화를 구현할 수 있음

## (4) 동물보건사 육성·관리 및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를 위한 인력 증원

### 가. 현황 및 필요성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 등으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 지속적으로 확대됨
- 다만, 동물진료 행위는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만 할 수 있어, 동물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물간호 민간자격자 등은 비진료 업무만을 수행함
- 더불어 동물병원 진료에 대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 나. 소요정원 산출근거

-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5급 1명), 동물보건사 등 전문인력 육성·관리(7급 1명) 인력 2명의 보강이 필요함

## 다. 기대효과

- 동물보건사 육성·관리 및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를 위한 인력 증원의 기대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원활한 시행 및 내실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계시로 동물병원별 편차, 과잉청구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물진료 보조인력 전문성 향상, 동물병원 진료 개선으로 소비자 요구 충족 및 동물병원 공정경쟁으로 동물진료 산업이 발전될 수 있음

## (5) 법제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법제지원계 신설

### 가. 현황 및 필요성

- 국회의원 발의법안 대응, 하위법령 정비 및 규제심사 등 행정입법 지원업무의 종류와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 법치행정 강조로 법령 해석·적용·집행에 이르기까지 적법절차 준수가 요구되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지원이 요구됨

## 나. 소요정원 산출근거

- 법제·법무행정 지원에 관한 업무수요는 연중 수시로 골고루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 전담기구(계)가 없어 업무체계화 및 전문화에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업무의 독자성을 감안하고, 전문화·체계화를 위해 별도 계를 신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법제 및 법무행정 지원계 신설이 필요함

## 다. 기대효과

- 법제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법제지원계 신설의 기대효과는 부내 법제수요에 대해 전문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으로, 행정입법 전반의 품질 제고 및 국회 의원입법 관련 대응력이 강화됨
- 또한, 농업·농촌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집행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적법절차 준수

## (6) 공무원 등 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

### 가. 현황 및 필요성

-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 등 요구가 대폭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인력 부족 및 어려움이 발생함
-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 등 신규업무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함

### 나. 소요정원 산출근거

- 노동분쟁 대응 및 단체교섭을 위한 전문인력 증원 필요함에 따라 2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함

## 다. 기대효과

- 공무원 등 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의 기대효과는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단체협약 체결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이 가능함
- 또한, 공무원 등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 7) 농업인 의료보건안전 업무 기능 일원화

### (1) 현황 및 필요성

- 농업인 의료보건안전 업무는 의료취약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안정을 지원하는 업무이나 농촌사회복지과, 재해보험정책과 등 다수의 과가 전담하여 정책지원의 중복 및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의료보건안전 업무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함

### (2) 소요정원 산출근거

- 현재 농업인 의료보건 및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촌사회복지과, 재해보험정책과, 여성농업인정책팀 3개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 의료보건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업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농업인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에 관한 사항의 업무 기능을 일원화된 주체에 의한 정책 집행이 필요함

### (3) 기대효과

- 업무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및 집행 효율성이 증가함
- 다수 과의 집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의 통합 가능성으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 가능함